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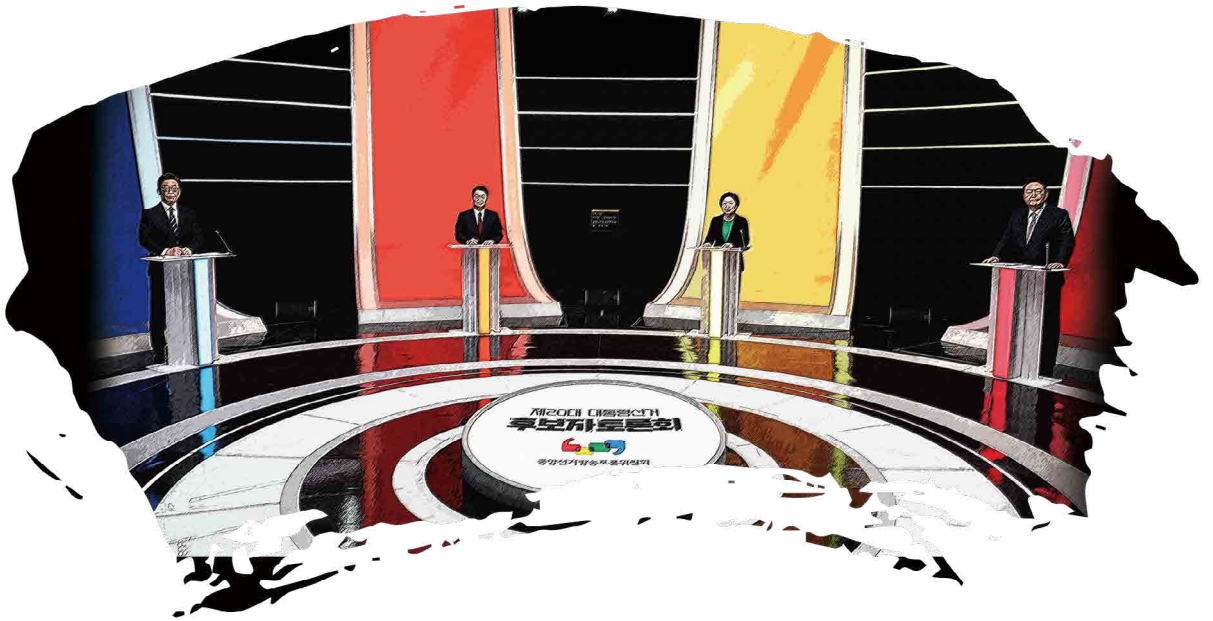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4-220016-13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발간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4번째 대통령선거였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층 유권자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후보들의 정책 및 자질 검증에 대한 유권자들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들이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자질 등을 비교·평가하여 후보자 선택에 있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TV 토론회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주관의 양자토론은 법원 판결로 개최 무산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가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이번 선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총 4회의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대과없이 치를 수 있었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21일 토론회의 중계의무 방송사 확대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등을 개정·정비하여 선거방송토론 관리체제 등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여건 속에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기회, 유권자에게는 선거 정보의 알권리 보장을 목표로 역동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작년 하반기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 모니터링 및 세미나 개최 등 토론 진행방식 관련 연구·검토로 후보자들의 공약 및 자질 검증 강화를 위해 ‘주도권토론’ 방식을 활용하는 등 토론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화상연결 방식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후보자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려 하였습니다. 셋째, 복지TV와 협업하여 국내 선거방송토론 최초로 후보자별 수어통역방송을 생중계로 실시하는 등 청각장애 선거인의 시청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가 실시된 해에 선거방송토론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료로 남기기 위해 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본 백서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조성 등 준비 과정, 토론회 개최 관련 관리상황, 선거방송토론 관련 연구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기된 문제점 등 앞으로 선거방송토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과 과제도 담겨있습니다.

본 백서가 선거방송토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께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백서 발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조용구**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사진으로 보는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율적 운영방안' 선거방송토론 세미나(2021. 11. 5.)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율적 운영방안' 선거방송토론 세미나(2021. 11. 5.)



≡ 전문위원회의(2022. 1. 4.)



≡ 전문위원회의(2022. 2. 8.)



⋈ 준비소위원회의(2021. 12. 1.)



⋈ 준비소위원회의(2022. 1. 13.)

준비소위원회의(2022. 2. 9.) ⋈





⌘ 제10차 위원회의(2021. 12. 3.)



제1차 위원회의(2022. 1. 7.) ⌘



⌘ 제4차 위원회의(2022. 1. 28.)



« 제7차 위원회의(2022. 2. 18.)



« 제8차 위원회의(2022. 2. 23.)



« 제9차 위원회의(2022. 2. 28.)





« 1차 정책토론회 설명회(2021. 12. 8.) »



2차 정책토론회 설명회(2022. 1. 11.) »

3차 정책토론회 설명회(2022. 1. 27.) »





⌘ 초청 후보자토론회 설명회(2022. 2. 17. 10:00)



⌘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설명회(2022. 2. 17. 14:00)





제1차 정책토론회(2021. 12. 16. KBS)





제2차 정책토론회(2022. 1. 18. MBC)





제3차 정책토론회(2022. 2. 3. SBS)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2022. 2. 21. 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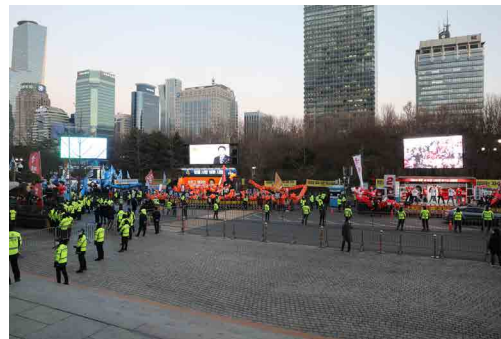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2022. 2. 25. SBS)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2022. 3. 2. KBS)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2022. 2. 22. MBC)





언제 개최 하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2021. 12. 16.(목) 10:00-12:00
- KBS1-MBC 동시 생중계
- 네이버TV·카카오TV·유튜브·생중계

만약 생활승을 놓치셨다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www.debats.go.kr



어느 정당이 참여하나요?


초청정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 정당 창당, 정당별 의석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재선정




참여정당 기준이 있나요?

-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득표한 정당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제1항)



정당정책토론회 어떻게 진행될까요?

- ① 개최일시·장소 결정 (공영방송사와 연계방송 일시 협의)
- ② 토론의제 수집 (정당, 자문위원, 시민단체 등 추천, 여론조사 실시)
- ③ 토론주제(질문사항)-진행방식-사회자 결정
- ④ 토론자 선정 (각 정당에서 토론자 선정후, 홍보)
- ⑤ 질문사항 결정, 개최 공표 및 홍보
- ⑥ 설명회 개최 (주제, 진행방식 등 안내)
- ⑦ 토론회 개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보기 www.debats.go.kr /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은?



- ① 국회 5석 이상 의석 보유 정당 후보자
- ② 직전선거 3%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 ③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이상 후보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주요일정!



구분	토론분야	개최일시	중계방송사
1차	경제분야	2. 21.(월) 20:00	KBS · MBC · SBS
2차	정치분야	2. 25.(금) 20:00	
3차	사회분야	3. 2.(수) 20: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는?

※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분야	개최일시	중계방송사
국정 전반	2. 22.(화) 23:00	KBS · MBC · SBS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비교·검증할수 있는 시간 **'후보자토론회!'**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www.debates.go.kr | youtube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nec.go.kr)
-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정책·공약마당 (policy.nec.go.kr)
-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확인

선거통계시스템 (info.nec.go.kr)
- 후보자 정보, 투표표 결과 제공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자세히 알아보기 카드뉴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및 참석 후보자

debates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대상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	--	--	--

초청 외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오준호 (민주노동당)	 허경량 (신당)	 이학송 (자유한국당)	 속순호 (자유한국당)	 김용연 (새로운미래)
 김경태 (민주유신당연합)	 조원진 (우리미래)	 김재연 (연호당)	 이경희 (통합한국당)	 김민찬 (민주연합당)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토론회 참가자격

- 국회 5석 이상 의석 보유 정당 후보자
-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를 5% 이상 후보자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회 개최(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82조의2제4항, 제5항 참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초청 1차 | 경제 | 1.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2.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초청 2차 | 정치 | 1. 권력 구조 개편
2.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초청 3차 | 사회 | 1.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2. 인구 절벽 대응 방안

※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 공약 발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일정

초청대상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구분	토론분야	개최일시	중계방송사
1차	경제분야	2. 21.(월) 20:00	KBS · MBC · SBS
2차	정치분야	2. 25.(금) 20:00	
3차	사회분야	3. 2.(수) 20:00	

초청 외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토론분야	개최일시	중계방송사
국정 전반	2. 22.(화) 23:00	KBS · MBC · SBS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 정책선거의 중심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보기 www.debats.go.kr/ | YouTube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및 참석 후보자 카드뉴스



알고 보면 재미있는 후보자토론회 카드뉴스

확!바뀐 선거운동

- 운동장에서 TV로 -



모두 운동장으로 모여라

불과 20여년전만해도 각 당의 후보자들이 학교, 공터 등 공개된 장소에 모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87년 안중을합에서 진행된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후보자간의 합의가 어려워 토론회는 성사되지 못하였고, **'관공합합'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대담회를 개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관공합합: 언론인들로 조직된 연구·전력단체



획1 바뀐 선거운동 카드뉴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제1차 후보자토론회**

- 개최일시: 2022. 2. 21.(월) 20:00
- 중계방송: MBC·KBS1·SBS
- 토론주제 (경제분야)
 1.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2.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다시보기 www.debates.go.kr | YouTube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 개최일시: 2022. 2. 22.(화) 23:00
- 중계방송: MBC·KBS1·SBS
- 토론주제: 후보자 공약발표

다시보기 www.debates.go.kr | YouTube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후보자토론회**

- 개최일시: 2022. 2. 25.(금) 20:00
- 중계방송: SBS·KBS1·MBC
- 토론주제 (정치분야)
 1. 권력 구조 개편
 2.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다시보기 www.debates.go.kr | YouTube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후보자토론회**

- 개최일시: 2022. 3. 2.(수) 20:00
- 중계방송: KBS1·MBC·SBS
- 토론주제 (사회분야)
 1.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2.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다시보기 www.debates.go.kr | YouTube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토론회 일정

시도명	선거구명	초청대상	방송일시	중계방송사명
서울특별시	동호구	초청	2022. 03. 01. (화) 20:00	SBS, 유튜브 (주)네이버 서울선거
		초청외	2022. 03. 01. (화) 21:30	SBS, 유튜브 (주)네이버 서울선거
	서초구갑	초청	2022. 2. 25.(금) 22:00	HGN시초방송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초청외	2022. 2. 25.(금) 23:20	HGN시초방송
		초청	2022. 2. 25.(화) 17:10	대구문화방송
경기도	안성시	초청외	2022. 2. 22.(화) 18:20	대구문화방송
		초청	2022. 2. 24.(목) 21:00	SBS, 유튜브, 드림방송
충청북도	청주시남일구	합동	2022. 2. 24.(목) 22:30	MBC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는 합동방송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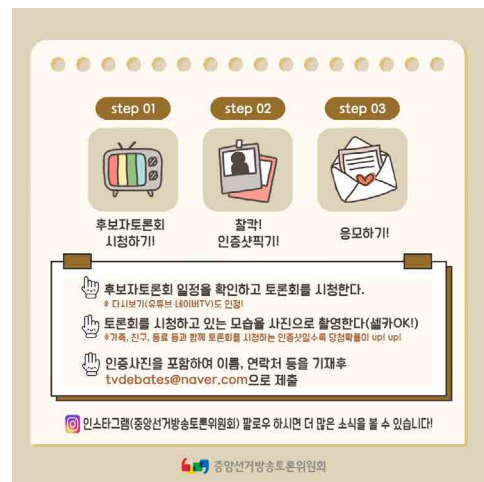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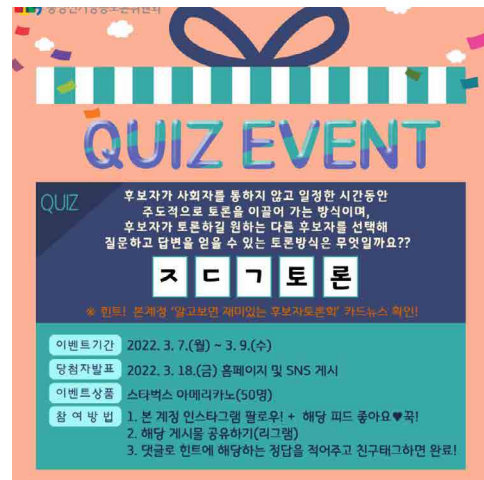
⌘ 다시보기 서비스 등 안내



⌘ 초성퀴즈



⌘ 후보자토론회 인증샷 이벤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대표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 담당안내 및 위원명단상호 ☎ 1390 (유료)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초청 1차(경제분야) 초청 2차(정치분야) 초청 3차(사회분야) 초청 외(국정전반)

|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정치분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후보자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2차 후보자토론회 (정치분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후보자토론회
(후보자별 수어통역 시범제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후보자별 수어통역)

채널
바로가기

메인페이지
YouTube
네이버TV

127 vjhr/ua0T1ua00?_php?u001a=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대표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 담당안내 및 위원명단상호 ☎ 1390 (유료)

2022년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경기도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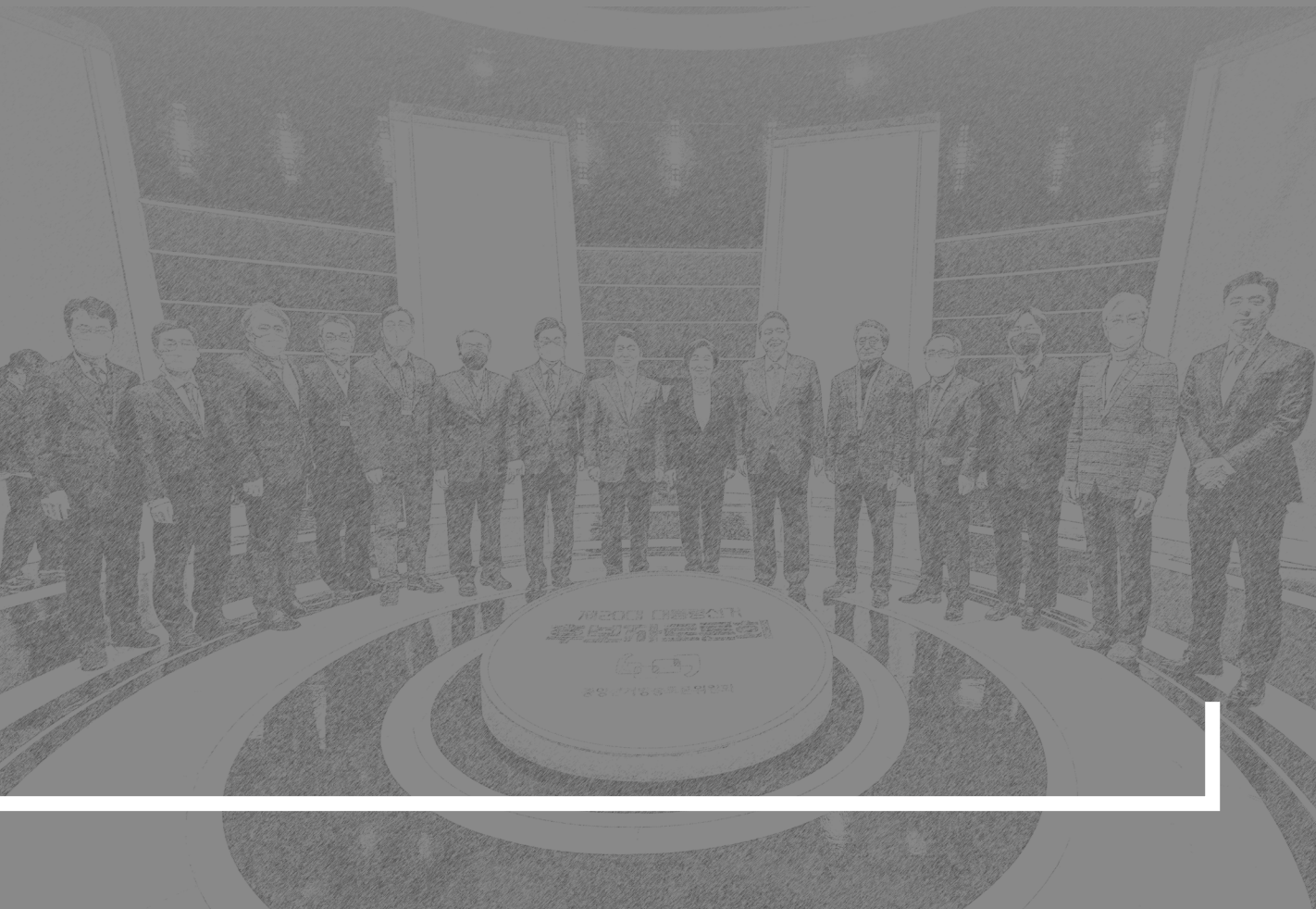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외)

채널
바로가기

메인페이지
YouTube
네이버TV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CONTENTS

> 발간사

> 사진으로 보는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제1장 | 개 관 53



제2장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조성 57

제1절 토론회 관리체제 구축 58

1. 선거방송토론 법규 등 개정 58
2. 관리단 편성 등 조직 정비 60
3. 위원 관리 및 위원회의 운영 60
4. 전문위원회 및 준비소위원회 운영 62

제2절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65

1.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65
2.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66
3. 토론회 질서유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69

제3절 유권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환경 조성 70

1. 후보자 공약·정책·자질 검증을 위한 토론회 진행방식 연구·검토 70
2.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활용 72
3.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및 홍보 이벤트 73
4.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후보자별 수어통역(복지TV) 생중계 실시 77



제3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79



제1절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80
1. 개요	80
2. 토론회 관리	81
1) 위원회의 등 운영	81
2)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82
3) 초청대상 정당 선정	82
4) 토론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	84
5)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92
6) 사회자 선정	96
7) 설명회 개최	96
8) 토론회장 설비 및 토론회 진행	97
9)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100
10) 시청률	100
제2절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103
1. 개요	103
2. 토론회 관리	104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104
2)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106
3) 사회자 선정	111
4) 토론주제 선정	113
5)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127
6) 설명회 개최	129
7) 질문사항 선정	131
8) 토론회장 설비 및 질서유지	132
9) 토론회 진행	138
10)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144
11) 토론회 홍보	145
12) 시청률	147
제3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149
1. 개요	149
2. 토론회 등 관리	149
1) 개최 현황	149
2) 토론회 관리 및 지원	150

CONTENTS

제4장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등 153



제1절 2021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개최	154
1. 개요	154
2. 발제문	155
제2절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	196
1. 개요	196
2. 주요 결과	198
제3절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214
1. 개요	214
2. 용역결과 요약보고서	223
제4절 후보자토론회 관련 제언	236
1. 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방송토론에 대한 평가와 제언(권영준 위원) ..	236
2. 20대 대통령선거와 토론 프로그램 독립성(MBC 김재영 위원)	246
3. 제20대 대통령선거 TV토론(KBS 최성민)	254
4. 대선 선거방송토론 제작 후기: 각 요소별 평가를 중심으로(SBS 신진수) ..	264

부록



1. 주요업무 추진 연표	274
2. 토론진행표	275
1) 정책토론회	275
2) 후보자토론회	278
3. 보도자료 제공 현황	282
4. 주요 언론보도 현황	299
5. 관련 법규	323

표목차

제2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조성	57
〈표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현황	58
〈표 2-2〉 관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59
〈표 2-3〉 위원 구성 현황	61
〈표 2-4〉 위원회의 개최 현황	61
〈표 2-5〉 전문위원 현황	63
〈표 2-6〉 전문위원회의 개최 현황	63
〈표 2-7〉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64
〈표 2-8〉 준비소위원회의 개최 현황	64
〈표 2-9〉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현황	65
〈표 2-10〉 공영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현황	66
〈표 2-11〉 방송 3사 업무협의회 개최 현황	66
〈표 2-12〉 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 운영기준 등 합의 내용	67
〈표 2-13〉 방송제작실무회의 개최 현황	68
〈표 2-14〉 질서유지 관련 관계자회의 개최 현황	69
〈표 2-15〉 진행방식 관련 개선방안 주요내용	71
〈표 2-16〉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 개요	73
〈표 2-17〉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조회수(3. 9. 기준)	73
〈표 2-18〉 2022년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조회수(3. 9. 기준)	74
〈표 2-19〉 후보자별 수어통역방송 실시 현황	77
제3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79
〈표 3-1〉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80
〈표 3-2〉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83
〈표 3-3〉 정당별 직전선거 득표율 현황	83
〈표 3-4〉 참석 토론자 현황	84
〈표 3-5〉 정책토론회 의제선정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개요	85
〈표 3-6〉 제1차 정책토론회(경제·과학·기술 분야)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주요결과 ..	86
〈표 3-7〉 제2차 정책토론회(사회·복지·노동 분야)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주요결과 ..	88

CONTENTS

〈표 3-8〉 제3차 정책토론회(정치·외교·안보 분야)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주요결과	90
〈표 3-9〉 정책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현황	91
〈표 3-10〉 정책토론회 주제별 질문요지 선정 현황	92
〈표 3-11〉 제1차 정책토론회 진행방식	93
〈표 3-12〉 제2차 정책토론회 진행방식	94
〈표 3-13〉 제3차 정책토론회 진행방식	95
〈표 3-14〉 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97
〈표 3-15〉 역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100
〈표 3-16〉 정책토론회 실시간 및 다시보기 조회수 현황	101
〈표 3-17〉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103
〈표 3-18〉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105
〈표 3-19〉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현황	106
〈표 3-20〉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개요	107
〈표 3-21〉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108
〈표 3-22〉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108
〈표 3-23〉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109
〈표 3-24〉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111
〈표 3-25〉 분야별 토론의제 개발 총괄표	114
〈표 3-26〉 후보자토론회 의제선정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개요	116
〈표 3-27〉 경제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116
〈표 3-28〉 정치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119
〈표 3-29〉 사회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122
〈표 3-30〉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현황	126
〈표 3-31〉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결과	127
〈표 3-32〉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128
〈표 3-33〉 정당별 직전선거의 득표율 현황	128
〈표 3-34〉 후보자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	129
〈표 3-35〉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130
〈표 3-36〉 초청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추첨 결과	130
〈표 3-37〉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추첨 결과	130

〈표 3-38〉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관련 회의개최 현황	131
〈표 3-39〉 후보자토론회 주제별 질문요지 등 선정 현황	132
〈표 3-40〉 후보자토론회 상황별 사회자 멘트 예시	139
〈표 3-41〉 후보자토론회 보도자료 제공 내역	145
〈표 3-42〉 후보자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 내역	146
〈표 3-43〉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147
〈표 3-44〉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147
〈표 3-45〉 후보자토론회 유튜브 등 조회수 현황	148
〈표 3-4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149
〈표 3-4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한국선거방송 편성 현황	150

제4장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등 153

〈표 4-1〉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참여자 현황	155
〈표 4-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156
〈표 4-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개요	157
〈표 4-4〉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토론회 개최 현황(분석대상)	158
〈표 4-5〉 분석대상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개요	158
〈표 4-6〉 제19대 토론회와 제20대 경선 토론회의 진행방식 비교	160
〈표 4-7〉 SBS 주도권토론 운영현황	162
〈표 4-8〉 제19대 토론회와 제20대 경선 토론회의 일대일 정책토론방식 현황	163
〈표 4-9〉 MBN 주도권토론 운영 현황	165
〈표 4-10〉 토론의제 개발 참여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단 명단	196
〈표 4-11〉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조사설계	214
〈표 4-12〉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사전조사)	215
〈표 4-13〉 후보자토론회 횟수의 적정성	215
〈표 4-14〉 적절한 후보자토론회 횟수	216
〈표 4-15〉 후보자토론회의 시간(사후조사)	216
〈표 4-16〉 후보자토론회 참여 후보 범위에 대한 선호도(사후조사)	216
〈표 4-17〉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만족도(사후조사)	216
〈표 4-18〉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사후조사)	217

CONTENTS

〈표 4-19〉 상호토론 방식 선호도(사후조사)	217
〈표 4-20〉 후보자토론회 관심도(사후조사)	218
〈표 4-21〉 타 정보매체 대비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사후조사)	218
〈표 4-22〉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사후조사)	218
〈표 4-23〉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사후조사)	218
〈표 4-24〉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여부(사후조사)	219
〈표 4-25〉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의 범위	225
〈표 4-26〉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27
〈표 4-27〉 제19대·제20대 대통령선거 캠페인 기간과 후보자토론회 횟수	247
〈표 4-28〉 방송3사 합동초청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249
〈표 4-29〉 제20대 대통령선거 TV토론 실시 개요	254
〈표 4-30〉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TV토론 시청률	255
〈표 4-31〉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내역	256
〈표 4-32〉 초청 3차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오프닝 구성과 내용	259
〈표 4-33〉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TV토론 시청률	261
〈표 4-34〉 방송3사 합동초청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실시 내용	261
〈표 4-35〉 방송3사 합동초청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262

그림목차

제2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조성	57
[그림 2-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 현황	60
[그림 2-2] 진행방식 연구·검토 과정	70
[그림 2-3] 국민인터뷰 영상	72
[그림 2-4] 토론회 다시보기 페이지	74
[그림 2-5] 카드뉴스	75
[그림 2-6] 토론회 관련 이벤트	76
[그림 2-7] 'SBS 모닝와이드' 방영	76
[그림 2-8] 후보자별 수어통역 실시	77
제3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79
[그림 3-1]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관련 회의 개최	81
[그림 3-2] 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96
[그림 3-3] 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97
[그림 3-4] 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 현황	98
[그림 3-5] 정책토론회 구조물 등 설비 현황	98
[그림 3-6] 정책토론회 토론시간관리 모니터 설비 현황	99
[그림 3-7] 정책토론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실시 현황	100
[그림 3-8] 정책토론회 관련 중앙토론회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	101
[그림 3-9] 정책토론회 유튜브 및 네이버TV 중계화면	102
[그림 3-10] 국민인터뷰 '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영상	110
[그림 3-11]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112
[그림 3-12] 경제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118
[그림 3-13] 정치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122
[그림 3-14] 사회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125
[그림 3-15]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2022. 2. 17.)	131
[그림 3-16] 후보자토론회 스튜디오 설비 현황	133
[그림 3-17] 후보자토론회 구조물 및 소품 활용	134
[그림 3-18] 후보자토론회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설비 현황	135
[그림 3-19]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세트 설비 현황	135

CONTENTS

[그림 3-20] 후보자토론회 기자석 설비 현황	136
[그림 3-21] 후보자토론회 토론회장 출입 통제 현황	137
[그림 3-22] 후보자토론회 외부 현장 질서유지 현황	138
[그림 3-23]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진행	141
[그림 3-24]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진행	142
[그림 3-25]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진행	143
[그림 3-26]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진행	143
[그림 3-27]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실시	144
[그림 3-28] 후보자토론회 복지TV 후보자별 1:1 수어통역방송 실시	145
[그림 3-29] 후보자토론회 개최 홍보 및 시청 이벤트 실시	146
[그림 3-30] 후보자토론회 관련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147
[그림 3-3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특집페이지 개설	151

제4장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등 153

[그림 4-1]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진행	154
[그림 4-2]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UCC 동영상 질문	184
[그림 4-3] 2012년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질문공모	185
[그림 4-4]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및 TV토론 모니터단 모집	185
[그림 4-5] 2016년 미 대선 1차 토론-스탠딩 토론	186
[그림 4-6] 2012년 미 대선 3차토론(오바마vs롬니)	187
[그림 4-7] 2016년 미 대선 3차토론(힐러리vs트럼프)	187
[그림 4-8] 2008년 미 대선 2차 토론-오바마 vs 매케인, 타운홀 방식	187
[그림 4-9] 2019년 총선 앞두고 보리스 존슨 총리 VS 제레미 코빈 야당 당수 토론 ...	188
[그림 4-10] MBC 100분토론 - 정동영 후보 편	190
[그림 4-11] 2007년 이명박 후보 편 - KBS '질문있습니다'	191
[그림 4-12]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청중 참여 현황(JTBC) ...	195
[그림 4-13]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장면	195
[그림 4-14] 역대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평가 추이	217
[그림 4-15]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선거 관심도의 변화(사후조사)	219

[그림 4-16]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의 선거 관련 대화	220
[그림 4-17]	후보자토론회 시청 전후의 정치적 효능감(사전/사후조사)	220
[그림 4-18]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정책공약·정책수행능력 비교에 미친 영향	221
[그림 4-19]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변화(사전/사후조사)	222
[그림 4-20]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 비교(사후조사)	222
[그림 4-21]	후보자토론회가 후보 지지에 미친 영향(사후조사)	223
[그림 4-22]	제1차 정책토론회 방송 화면(2021. 12. 16. / KBS 1TV)	255
[그림 4-23]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2022. 3. 2. / KBS)	257
[그림 4-24]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2022. 3. 2. / KBS TS-4) 미술기획안 - KBS아트비전	258
[그림 4-25]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세트 제작 과정(KBS TS-4)	258
[그림 4-26]	복지TV 방송화면(2022. 2. 25.)	260
[그림 4-27]	방송3사 합동초청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세트(KBS TS-15)	262
[그림 4-28]	정책토론회 SBS 목동사옥 대기실 배치도	265
[그림 4-29]	후보자토론회 SBS 상암사옥 대기실 배치도	265
[그림 4-30]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세트의 모습(2022. 2. 25. SBS)	266
[그림 4-31]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카메라 배치도(2022. 2. 25. SBS)	270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제 1 장

개 관





제1장 개 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총 3회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 1회를 포함하여 총 7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정치경험이 없는 이른바 신인 정치인이 출마한 가운데, 여야 유력 후보자간 초반빙 점전 상황으로 역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 후보자 검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토론회는 후보자 자신의 국가비전, 정책, 정치적 신념 등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고, 동시에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꾀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후보자 선택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후보자토론회는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토론회 중계방송의 의무가 공영방송사로 되어 있던 조항이 2022년 1월 21일 개정되어 토론회 의무중계 방송사의 범위가 지상파방송사업자까지로 확대되어 KBS, MBC, SBS가 정책토론회(3회)와 초청 후보자토론회(3회)를 각각 1회씩 중계주관하였다. 또한,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 재외선거인을 위한 국제방송, 인터넷언론사, 중앙토론회·중앙선관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는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 정당의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차수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시청 조회수가 총 7,967,551회를 기록하는 등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아,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시청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및 주요 정당의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토론회 등을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는 후보자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처음으로 ‘주도권토론’ 방식 등을 활용하여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진행방식을 구성하였다.

또한, 복지TV와 협력하여 국내 선거방송토론 최초로 후보자별 1:1 수어통역이 배치된 토론회 방송을 전국 동시 생중계로 실시함으로써 청각장애 선거인의 시청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여 관련 단체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오미크론 대확산 상황 속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코로나19에 확진 될 경우를 대비하여 토론회의 화상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및 유권자의 균형적인 선거정보 획득 보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반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책토론회는 주 시청시간대에 중계방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오전 10시부터 개최한 점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하며, 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시 공정성 등의 검증 방법, 토론회 진행 시 사회자의 역할과 토론방식별 세부규칙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선거방송토론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 개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의 개관, 제2장은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조성에 관해 기술하였으며, 토론회 관리체제 구축,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유권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관리 및 개최 전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제4장은 선거방송토론 관련 연구에 관한 내용으로, 세미나 발제문, 토론의제개발 연구용역과 후보자 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주요결과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에 참여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및 방송관계자의 소회 또는 개선방안 등 제언을 포함하였다.

이 백서의 부록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주요업무 추진 연표, 토론회 진행표, 보도자료, 토론회 관련 주요 언론기사 현황,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수록하였다.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제2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조성

제1절 토론회 관리체제 구축

제2절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제3절 유권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환경 조성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제2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 조성

제1절 토론회 관리체제 구축

1. 선거방송토론 법규 등 개정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21일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되어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권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의무 방송사가 지상파방송사로 확대되었다.

〈표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현황

조문	개정전	개정후
제8조의7제2항 (선거방송토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토론회 위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사(KBS, MBC) 각 1명 • 시·도토론회 위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사(KBS, MBC) 각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토론회 위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사(KBS, MBC), <u>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u> 각 1명 • 시·도토론회 위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사(KBS, MBC), <u>지상파방송사</u> 각 1명
제82조의2제10항 (선거방송토론 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사(KBS,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사(KBS, MBC), <u>지상파방송사</u>

관련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일부개정되었다. 법 제8조의 7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하고,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회원수가 많은 단체로 한다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 정의를 규칙 제2조의2(지상파방송 등의 범위)¹⁾에 신설하였다. 시·도별 위원 추천 대상 지상파방송사 현황도 규칙 제6조의

1)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

2(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²⁾에 신설하였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을 일부개정 고시³⁾(2021. 9. 23.)하였다. 제명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으로 변경하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및 「정당법」 제39조의 정책토론회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른 실무적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토론회 관리 여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 관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1조)
제명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및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
- 나. 정보 교환 제한 확대 및 진행방식 변경 사유 추가(안 제3조·제4조)
질문자의 정보·의견 교환 제한을 정책토론회 토론회자 및 그 관계자까지 확대하고, 제13조 대통령선거 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 특례사항을 제4조제2항으로 이동하며, 진행방식 공표 후 초청 정당의 변경, 토론회자 불참 시 진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다. 토론회장 설비 안내사항 등 규정 정비(안 제6조)
토론회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음향·영상 장비목록 등 안내사항을 삭제하고, 토론회장 설비 시 공평한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무대 설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라. 토론회자의 착용·부착물 명확화(안 제8조)
토론회에서 토론회자가 착용·부착할 수 있는 표시물 등을 명확히 함.
- 마. 용어 현행화 및 녹화방송 자막 안내 근거 마련(안 제11조)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담·토론회를 녹화방송으로 방영하는 경우 방영 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시 자막 안내 가능하도록 함.
- 바. 다시보기 서비스 기간 확대(안 제12조)
다시보기의 종료시점을 삭제하여 선거일 후에도 시청 가능하도록 함.

조직개편에 따른 규칙⁴⁾ 및 관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업무처리 사항 등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을 개정(2021. 11. 3.)하였다.

공사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 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말한다.

2) 법 제8조의7제2항제1의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도토론회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간 합의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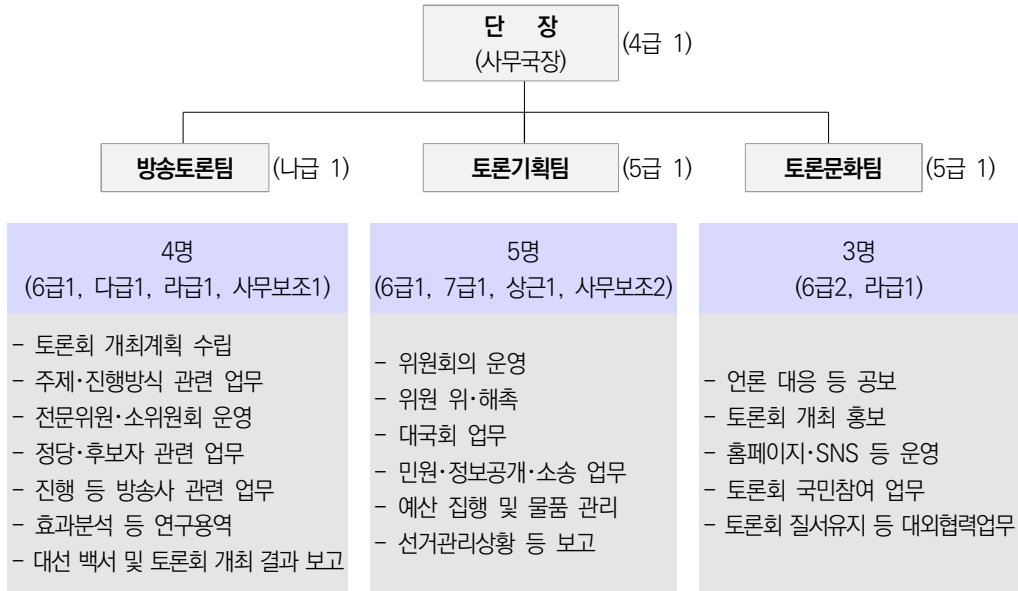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21-1호, 대한민국 『관보』 제20090호 2021. 9. 23.(목)

4)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으로 구·시·군토론회위원회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직위가 종전 지도홍보과장에서 선거과장으로 변경(제21조제2항)

2. 관리단 편성 등 조직 정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9일(대통령선거일)까지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을 편성하였다. 방송토론팀은 토론회 개최 업무, 토론기획팀은 위원회의 운영 등 기획 및 지원업무, 토론문화팀은 토론회 공보·홍보업무 등 대외협력 업무를 전담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현원은 12명이었으나, 선거관리인력 6급 직원 1명을 파견받고,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보조 3명을 단기채용하여 총 16명이 이번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 관리의 실무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림 2-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 현황



3. 위원 관리 및 위원회의 운영

1) 위원 관리

「공직선거법」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개정된 법 시행일(2022. 1. 21.)부터 30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위원은 임기만료되고 사직원 제출이 있었던 바, 추천기관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였다. 대통령 선거일 기준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 위원 구성 현황

(2022. 3. 9. 기준)

구분	성명	직업	추천기관
위원장	최은수 ⁵⁾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관위
위원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	시민단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의힘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중앙선관위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함철	KBS 이사회 사무국장	공영방송사(KBS)
	김재영	MBC 시사교양 3부 부장	공영방송사(MBC)
	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을 변호사	법조계
	유기철	언론인	더불어민주당
	고철종	SBS 논설위원실장	한국민영방송협회

2) 위원회의 운영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초청 후보자, 사회자, 주제 및 진행방식, 질문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개최 준비 과정에서 총 13회의 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처리안건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 위원회의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처리 안건 등	
9차	2021. 11. 12.(금) 17:00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 1차 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10차	2021. 12. 3.(금) 09:30	의결사항	• 1차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5) 최은수 위원장은 대통령선거 이후 2022년 3월 22일에 임기만료되었고, 조용구 위원장이 2022년 3월 25일 호선됨.

구 분	개최일시	처리 안건 등	
11차	2021. 12. 13.(월) 09:30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 2차 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1차	2022. 1. 7.(금) 09:30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결정 • 2차 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 3차 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2차	2022. 1. 14.(금) 17:00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3차	2022. 1. 24.(월) 09:30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정책토론회 개최장소 및 중계방송사 변경 • 3차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결정 • 3차 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 후보자토론회 개최장소 및 중계방송사 변경
4차	2022. 1. 28.(금) 09:30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5차	2022. 2. 11.(금) 09:30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토론회 주제 선정
6차	2022. 2. 15.(화) 09:30	보고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 후보자 확진 시 토론회 참석 관련 검토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 • 후보자토론회 초청후보자 선정
7차	2022. 2. 18.(금) 09:30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코로나19 확진 시 토론회 참여에 관한 결정 •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8차	2022. 2. 23.(수) 16:00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9차	2022. 2. 28.(월) 09:30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4. 전문위원회 및 준비소위원회 운영

1) 전문위원회의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자문위원등)에 따라 전문위원을 두고,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문위원은 토론회 준비 및 진행, 평가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방송전문가,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표 2-5〉 전문위원 현황

(2022. 3. 9. 기준)

성명	경력	비고
이영배	JTBC 보도제작국 부국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익상	서일대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교수	
장혜영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태양식	SBS 보도영상본부장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정지은	EBS 제작위원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한성일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고범준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총 4회 개최되었다.

〈표 2-6〉 전문위원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시	회의내용	비고
2021. 11. 30.(화) 10:30	• 1차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검토	
2022. 1. 4.(화) 09:30	• 2차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검토 •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검토	
2022. 1. 20.(목) 09:30	• 3차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검토	
2022. 2. 8.(화) 09:30	• 후보자토론회 주제 검토	

2) 준비소위원회의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소위원회)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 준비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지명으로 상임위원, 학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 추천 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고,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 사회자 등 토론회 진행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표 2-7〉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2022. 3. 9. 기준)

구성 위원	운영기간	직 무
임정열 ⁶⁾ , 신광호 ⁷⁾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시(2021.11.12.) ~후보자토론회 종료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식 검토 • 토론주제 검토 • 질문사항 검토 • 사회자 검토 • 그 밖에 토론 진행 관련 사항
박주연(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⁸⁾		
유홍식(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함 철(KBS 이사회 사무국장)		
김재영(MBC 시사교양 3부 부장)		

준비소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준비과정에서 구성하여 후보자토론회 종료시까지 운영되었다. 준비소위원회는 총 10회 개최하였고, 이 중에서 토론회의 질문사항 검토를 포함하는 회의에는 사회자도 참석하였다.

〈표 2-8〉 준비소위원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시	회의내용	비고
2021. 12. 1.(수) 10:00	• 1차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사회자 검토	
2021. 12. 10.(금) 09:30	• 1차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2022. 1. 5.(수) 09:30	• 2차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사회자 검토 •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검토	
2022. 1. 13.(목) 09:30	• 2차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2022. 1. 21.(금) 09:30	• 3차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사회자 검토	
2022. 1. 26.(수) 09:30	• 3차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 후보자토론회 의제선정조사 설문항목 검토	
2022. 2. 9.(수) 09:30	•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사회자, 국민인터뷰 검토	
2022. 2. 17.(목) 16:00	•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2022. 2. 21.(월) 09:30	•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2022. 2. 27.(일) 11:00	•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6)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참여함.

7) 2022년 1월 1일자 부임하여 참여함.

8) 학계 추천 박주연 위원은 후보자토론회 종료 이전에 임기 만료(2022.2.19.)됨.

제2절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원활한 진행·개최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후보자토론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11월 16일(화) 국회 인근에서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토론회 개최 관련 안내와 주요 토론형식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고, 토론회 관련 긴급의사소통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후보자토론회 전담 부서 구성으로 인해 담당자 변경의 경우 신속하게 연락체계를 정비하기로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하였다. 업무협의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초청대상 정당 중 5개 정당의 실무책임자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9〉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현황

구분	내용	비고
개최일시	2021. 11. 16.(화) 12:00	
개최장소	국회 인근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임성수 (미래소통국부국장) • 국민의힘: 정우창 (미디어팀장) • 정의당: 최예지 (정책연구위원) • 국민의당: 조은희 (정책실차장) • 열린민주당: 김동식 (기획국차장) • 위원회: 방송토론팀장, 담당 주무관 	민생당 불참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후보자토론회 개요·추진일정 등 안내 • 주요 토론방식 등에 관한 의견수렴 • 정책토론회의 토론자 추천 등 협조사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책토론회임을 고려하여 당대표 등 주요 간부가 참여하게 되면 저녁시간대 확보 및 국민의 관심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당별 주요 간부를 토론자로 추천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원활한 선거방송토론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한 주요 추진일정, 관계 법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였다.

2.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의 원활한 중계방송을 위해 2021년 11월 25일(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영방송관계자와의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개최일정 안내 및 방송편성을 요청하였으며,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관련 개선방안 등에 관한 방송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2-10〉 공영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현황

구분	내용
개최일시	2021. 11. 25.(목) 16:30
개최장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선거방송기획단: 정아연 기자, 유혜진 PD • MBC 시사교양3부: 김재영 부장, 김보람 차장 • 위원회: 사무국장, 방송토론팀장, 담당 주무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정(안) 협의 • 유권자의 시청접근성 확대 방안 • 후보자토론회 관리방안 •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관련 개선방안

한편, 「공직선거법」이 1월중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토론회의 중계업무 방송사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바, SBS 방송관계자를 포함하여 중계주관방송사 선정 등을 위한 방송 3사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표 2-11〉 방송 3사 업무협의회 개최 현황

구분	1차	2차
개최일시	2022. 1. 13.(목) 10:30	2022. 2. 7.(월) 16:00
개최장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회의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선거방송기획단: 최성민 기자 • MBC 시사교양3부: 김재영 부장 • SBS 보도영상본부: 태양식 본부장 • 위원회: 사무국장, 방송토론팀장, 담당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선거방송기획단: 유혜진 PD • MBC 시사교양3부: 김보람 차장, 김혜지 PD • SBS 보도제작팀: 김대철 팀장, 편찬형 PD • 위원회: 방송토론팀장, 토론문화팀장, 담당 주무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 운영 기준 마련 • 2022 양대선거 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 합의 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 설비, 부대시설 사용 및 협조 • 화면구성 등 토론회 제작 방향 • 토론회장 질서유지(출입인원 통제 및 안전검측, 코로나19 관련) • 토론회 수중계 협조 등

첫 번째 회의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기존에 공영 방송사가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중계주관을 해왔던 바, SBS를 포함하여 중계주관방송사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책토론회의 중계주관방송사 순서 등을 포함한 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 운영기준에 방송 3사가 합의하였다. 관련하여 법 시행(2022. 1. 21.) 직후, 토론회의 개최장소 및 중계방송사 변경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표 2-12〉 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 운영기준 등 합의 내용

가. 중계주관방송사 운영기준				
구 분	내 용			
후보자토론회	선거별 토론회를 3회로 구분하여 KBS·MBC·SBS가 순차적으로 중계주관 • 대통령선거: ① 초청 1차·초청 외, ② 초청 2차, ③ 초청 3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① 초청 1차, ② 초청 2차, ③ 초청 외			
정책토론회	• 공직선거법: 3회의 토론회를 KBS·MBC·SBS가 순차적으로 중계주관 • 정당법: 2회의 토론회를 KBS·MBC가 순차적으로 중계주관 ※ SBS는 정당법상 정책토론회 의무중계방송사가 아님.			
나. 2022 양대선거 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 합의				
선거명	토론회 종류	토론회 차수	중계주관방송사	비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 1차·초청 외	MBC	
		초청 2차	SBS	당초 KBS
		초청 3차	KBS	
	정책토론회	제3차	SBS	당초 KBS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	제1차	MBC	
		제2차	SBS	
		제3차	KBS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원활한 중계방송을 위하여 제작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두 번째 방송 3사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방송 3사의 중계방송 및 제작담당자가 직접 참석하여 스튜디오 설비 등 준비부터 토론회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특히, 대통령선거일을 고려하여 토론회 당일 스튜디오 출입통제 및 안전검측 등 현장 질서유지에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협의하였다.

이외에도 토론회 개최 시에 중계주관방송사 관계자와 방송제작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이후에 토론회장 세트설비, 대기실 등 부대시설 사용 협의, 토론회 개최 당일 시간계획 등 토론 진행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 협의하였다.

〈표 2-13〉 방송제작실무회의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자	
정책 토론회	1차	2021. 12. 6.(월) 11:00	KBS 선거방송기획단 회의실(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김병용기자, 박지영PD, 유혜진PD 등 • 위원회: 방송토론팀장, 담당주무관
	2차	2022. 1. 10.(월) 10:30	MBC 시사교양3부 회의실(상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김보람차장, 김성진·김혜지PD 등 • 위원회: 방송토론팀장, 담당주무관
	3차	2022. 1. 25.(화) 10:30	SBS 보도제작팀 회의실(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하승보국장, 정준형 팀장, 신진수 부장, 편찬형 PD, 편상욱 앵커, 이용탁 세트감독 등 • 위원회: 방송토론팀장, 담당주무관
후보자 토론회	1차· 초청 외	2022. 2. 9.(수) 14:00	MBC 시사교양3부 회의실(상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김보람 차장, 김성진 PD, 김혜지 PD, 최주연·고영우 세트감독, 박혜정 AD 등 • 위원회: 방송토론팀장, 토론문화팀장, 담당주무관
	2차	2022. 2. 11.(금) 16:00	SBS 프리즘타워 회의실(상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하승보 국장, 김대철 부장, 편찬형 PD, 이용탁 세트감독, 프리즘타워 보안대장·시설관리팀장 • 위원회: 방송토론팀장, 토론문화팀장, 담당주무관
	3차	2022. 2. 10.(목) 10:30	KBS 선거방송기획단 회의실(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최성민 기자, 유혜진 PD, 장희라 세트감독 • 위원회: 방송토론팀장, 토론문화팀장, 담당주무관

3. 토론회 질서유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경호를 비롯하여 현장 질서유지 등 원활한 관리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송사, 경찰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들과의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표 2-14〉 질서유지 관련 관계자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기관	주요 내용
2022. 1. 25.(화) 10:30	KBS 본관 지하 1층 2회의실	중앙토론회, 서울시선관위, 경찰청(서울시경, 영등포경찰서),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토론회 현장 질서유지 중점 협조사항 안내 • 유관기관별 요청사항 수렴 및 추진 방안 협의 • 토론회장 후보자 대기실 등 방송 시설 및 후보자 동선 확인
2022. 1. 25.(화) 13:30	MBC 경영센터 2층 M라운지	중앙토론회, 서울시선관위, 경찰청(서울시경, 마포경찰서), MBC	
2022. 1. 25.(화) 15:30	SBS 프리즘타워 17층 회의실	중앙토론회, 서울시선관위, 경찰청(서울시경, 마포경찰서), SBS, 에스텍시스템	

후보자토론회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중점 협조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당일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방송국 외곽 주변 구역을 구분하여 후보자별 선거운동구역을 지정⁹⁾하였는데, 이는 경찰청과 방송사 등의 안내와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특히 토론회 개최 당일 방송사 주변 다른 집회 등으로 혼란이 예상되어 질서유지 강화에 대해 경찰청 등에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방송국 출입인원을 통제하고 위원회가 발급한 출입카드를 소지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후보자 안전 등 경호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스튜디오 입구에는 별도의 출입통제시스템과 보안검색대를 설치·운영하였고, 관련하여 방송사에 총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9) 설명회시 후보자토론회 차수별 자리(발언순서) 추첨 결과대로 방송사 주변의 후보자별 선거운동 구역을 지정 하였음.

제3절 유권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환경 조성

1. 후보자 공약·정책·자질 검증을 위한 토론회 진행방식 연구·검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1년 6월부터 연말까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 검증 강화를 위한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해 연구·검토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예상 후보자 수별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22년 1월 8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토론회 진행방식 연구를 시작하였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기준으로 토론규칙을 단순화하여 진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2-2] 진행방식 연구·검토 과정



우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중심으로 언론보도 및 평가 등의 개선사항을 정리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실시하는 경선 후보자토론회의 영상모니터링¹⁰⁾을 통해 주요 토론형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진행사례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방송관계자, 정당관계자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방송토론 세미나를 개최(2021. 11. 5.)하여 주요 토론형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한 세미나의 주요 결과¹¹⁾ 등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관련 개선방안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10) 더불어민주당 13회, 국민의힘 10회, 정당당 4회로 총 27회의 대통령 후보 경선토론회를 모니터링하였음.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 사회자 역할 범위, 자막 등 화면구성, 토론회 방송 진행 전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

11)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 개선(주제별 시간총량제로 변경하고 1회 발언시간을 1분 이내로 권고), 토론회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후보자간 직접 질의응답이 가능한 '주도권토론' 방식 도입 필요, 공약검증토론 시에 PT를 활용하는 방안, 국민인터뷰 영상 계속 활용, 토론분야별 국민질문을 2~3개 선정·활용, 스튜디오에 유권자의 방청 허용(1회 정도), <제4장제1절 세미나 발제문 참조>

〈표 2-15〉 진행방식 관련 개선방안 주요내용

1.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 개선: 전체시간총량제 → 주제별시간총량제
 - 후보자별 잔여발언시간 편차 발생 등으로 주제별시간총량제로 하고, 공통질문의 답변시간은 총량과 별도로 운영
2. 토론회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후보자간 직접 질의응답이 가능한 '주도권토론' 방식 도입 필요
 - 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활용 사례는 없으나, 지역구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선거, 언론사 주관 후보자토론회에서는 보편화된 형식임.
3. 공약검증토론 시에 공약발표 방식 변경: 프레젠테이션(PT) 활용
 - 제19대 대선에서는 A3규격 이내의 판넬 등을 활용하여 대표공약을 발표했던 방식이었으나, 최근의 토론회 진행 흐름을 반영하여 PT형식 도입 가능
4. 후보자의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 전원 차단
 - 발언시간 소진 후 계속 발언하는 후보자에 대한 항의 발생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함.
5. 입식토론 활용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는 제19대 대선 초청 1·3차 후보자토론회에서 최초 도입하였으나, 이미 다른 토론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개선방안 등을 토대로 예상 후보자수별 진행방식 초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와 준비소위원회의 등을 통해 검토하였고, 2022년 제1차 위원회의(2022. 1. 7.)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을 결정·공표하였다. 최종 결정된 진행방식에는 '공약검증토론' 형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선방안이 실제로 적용되었다. 3차례의 토론회 모두 동일하게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과 '주도권토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입식토론, 발언시간 초과시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세미나 진행 시 언급되었던 '국민인터뷰 영상'을 이번 대선에서도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활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를 위해 국민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국민인터뷰 영상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도 활용한 바, 토론회 초반부에 유권자들의 시청 흥미를 유발하고, 토론회의 화면구성에 역동성을 부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림 2-3] 국민인터뷰 영상



촬영 및 제작은 국민인터뷰 방송제작 경험 등을 고려하여 영상촬영 전문업체에 의뢰하였다. 촬영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역, 경복궁, 망원시장, 서울식물원 등¹²⁾에서 길거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토론회 프로그램의 취지, 방송일정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받아 촬영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1:1대면 인터뷰 대상자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터뷰에 응해준 시민들은 총 90여명으로 토론회의 분야별 국민의 생각과 희망 등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서 1차 편집된 영상을 검토하였고, 2차 편집 영상을 준비소위원회(2022. 2. 9.)에서 검토하였으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더 추가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등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2월 12일에 추가촬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최종 1분 이내로 편집된 국민인터뷰 영상을 제6차 위원회의(2022. 2. 15.)에 보고하여 총 4회의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모두 활용하였다.

12)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할기관에 촬영장소 사용 협조를 요청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함.

〈표 2-16〉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 개요

구분	내용
촬영기간	2022. 1. 22.(토) ~ 23.(일) * 추가촬영 2022. 2. 12.(토)
촬영장소	서울역, 경복궁, 망원시장, 서울식물원 등
촬영인원	총 90여명 정도
촬영방식	길거리 인터뷰 촬영 ※ 프로그램의 취지, 방송 일정 등 설명, 촬영 동의 확인
제작방법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
제작내용	분야별 국민의 생각과 희망 등(“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편집내용	성별, 연령대 및 토론분야별 선정된 주제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한편에 7~10명의 인터뷰 내용을 60초 분량으로 편집

3.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및 홍보 이벤트

1) 유튜브·네이버 TV 등 생중계 및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토론회 시청접근성 확대를 위해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특히, 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의 유튜브를 비롯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네이버TV를 통해서도 후보자 토론회 생중계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22년 2월 21일 첫 번째 후보자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선거일(3. 9.)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시청 조회수는 총 7,967,551회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기록을 경신하였다.

〈표 2-17〉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조회수(3. 9. 기준)

(단위: 회)

구분	유튜브						네이버TV	계
	중앙선관위	중앙토론회	(수어통역)	KBS	MBC	SBS		
초청 1차	7,889	7,678	2,134	604,156	522,694	819,895	2,219	1,966,665
초청 2차	15,886	2,386	421	798,958	924,126	902,354	938	2,645,069
초청 3차	236	3,423	304	944,543	1,125,945	483,955	903	2,559,309
초청 외	1,557	1,298	-	120,309	215,335	457,798	211	796,508
계								7,967,551

2022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토론회 및 방송연설회 총 8회 중, 대구 중구남구의 경우 중계주관방송사와 협의가 이루어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로 생중계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표 2-18〉 2022년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조회수(3. 9.기준)

(단위: 회)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구남구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계
초청	초청 외	초청	초청 외	초청	초청 외			
1,172	264	701	461	412	196	358	129	3,693

토론회 개최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다시보기 페이지로 구성하였고, 토론회 개최일정 및 후보자 정보,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중앙선거관위), 이벤트, LIVE 등의 바로가기 배너를 메인에 배치하여 필수 정보들을 우선 제공하였다.

[그림 2-4] 토론회 다시보기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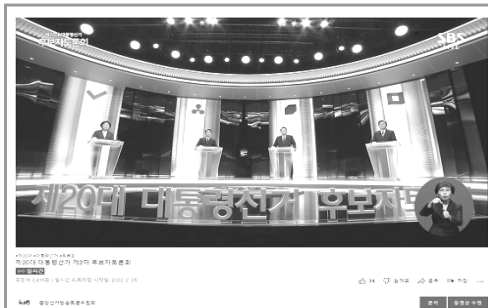


[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페이지 상세화면]

토론회 다시보기 페이지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4회, 재·보궐선거 토론회와 연설회 8회, 복지TV와 협력하여 후보자별 1:1 수어통역 시범 제작 영상 3회를 추가하여 총 15개의 영상을 게시하였다.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네이버TV(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생중계]

또한,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가능하도록 토론회 종료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에 방송용 파일을 송부하였고, 토론회별 각 1회 이상 총 19회 재방송되었다.

2) 인증샷 이벤트 등 홍보활동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위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후보자토론회 관련 주요 내용과 개최일정, 진행방식, 토론회 역사 등 유권자 공감·소통 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였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SNS를 중심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 인증샷 및 초성퀴즈 이벤트를 선거일까지 실시하였다. 토론회 다시보기 안내와 함께 이벤트 실시 내용을 토론회 종료 직전에 자막과 사회자의 멘트로 표출하였고, 네이버의 대통령선거 관련 특집페이지 '후보자토론회' 배너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는 등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였다.

[그림 2-5] 카드뉴스



[그림 2-6] 토론회 관련 이벤트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요청에 의해 2022년 3월 2일 방영하는 'SBS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2차)의 방송 준비 및 진행 과정 등이 소개·방영되었다.

[그림 2-7] 'SBS 모닝와이드'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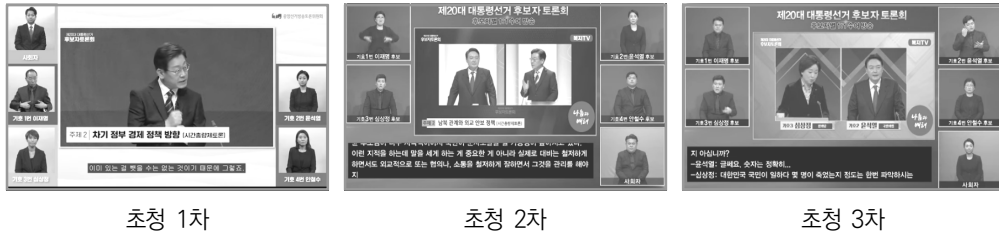
4.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후보자별 수어통역(복지TV) 생중계 실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 선거인들이 후보자토론회를 보다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복지TV와 협업하여 국내 최초로 후보자별 수어통역 방송을 생중계로 실시하였다. 이는 과거 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어통역 방송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던 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자 실시되었다.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복지TV와의 사전 준비 등의 사유로 사회자·후보자별로 각 1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별도 촬영 후 편집절차를 거쳐 수어통역 영상을 제작하여, 한국선거방송으로 녹화중계하고, 토론회 다시보기 영상으로 게시·활용하였다. 초청 2차·3차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별 수어통역을 포함하여 복지TV 채널로 생방송으로 중계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토론회 방송을 시작하면서 사회자의 멘트와 자막으로도 표출하였다.

〈표 2-19〉 후보자별 수어통역방송 실시 현황

구 분	중계방송	비 고
초청 1차	한국선거방송 녹화방송	토론회 다시보기 영상 게시
초청 2차	복지TV 생방송	
초청 3차	복지TV 생방송	

〔그림 2-8〕 후보자별 수어통역 실시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제3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제1절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제2절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제3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제3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제1절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해에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월 1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 3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표 3-1〉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개최일시	2021. 12. 16.(목) 10:00~12:00	2022. 1. 18.(화) 10:00~12:00	2022. 2. 3.(목) 10:00~12:00
개최장소	KBS TS-4 스튜디오 (여의도)	MBC A 스튜디오 (상암)	SBS 7 스튜디오 (목동)
중계주관방송사	KBS	MBC	SBS
중계방송	(생중계) KBS1·MBC· NATV·KTV (녹화방송) 한국선거방송 (실시간중계) 유튜브·네이버 TV·카카오TV	(생중계) MBC·KBS1· NATV·KTV (녹화방송) 한국선거방송 (실시간중계) 유튜브·네이버 TV	(생중계) SBS·KBS1· MBC·NATV·KTV (녹화방송) 한국선거방송 (실시간중계) 유튜브·네이버 TV
토론자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윤창현(국민의힘) 장혜영(정의당) 김근태(국민의당) 강동호(민생당) ※ 열린민주당 불참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원희룡(국민의힘) 배복주(정의당) 구혁모(국민의당) 강동호(민생당) ※ 열린민주당 불참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희룡(국민의힘) 김종대(정의당) 주재우(국민의당) ※ 열린민주당·민생당 불참

구분	1차	2차	3차
사회자	이규원(KBS 아나운서)	허일후(MBC 아나운서)	편상욱(SBS 앵커)
토론분야	경제·과학·기술	사회·복지·노동	정치·외교·안보

토론회에는 법에 규정된 초청기준¹³⁾에 따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민생당)이 초청대상이었으나, 일부 정당은 합당추진(열린민주당), 당내 사정(민생당)으로 토론회에 불참하였다. 토론자로는 토론주제에 전문성을 가진 현역 의원이나 선대위 주요직을 맡은 인물, 정책연구소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2022년 1월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토론회의 의무중계 방송사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계방송사 담당자 등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3차 정책토론회의 중계주관 방송사를 KBS에서 SBS로 교체하고 방송 3사 동시중계로 결정하였다. 또한 유튜브(중앙토론회·중앙선관위) 채널과 네이버TV 등을 통해 실시간 토론회 중계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2. 토론회 관리

1) 위원회의 등 운영

법정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사회자 선정, 질문사항 선정 등 토론회 개최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종합관리계획을 토대로 전문위원회의 3회, 준비소위원회의 6회, 전체위원회의 7회를 개최하여 토론회 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결정하였다.¹⁴⁾

[그림 3-1]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관련 회의 개최



전문위원회의(2022. 1. 4.)



준비소위원회의(2022. 1. 5.)



제1차 위원회의(2022. 1. 7.)

13) 본 백서 82쪽 '3) 초청대상 정당 선정' 참조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연초의 설 연휴(2022. 1. 31. ~ 2. 2.)와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 2. 4. ~ 2. 20.)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영방송사와의 일정 협의를 통해 1차 토론회는 12월 16일(목) KBS TS-4 스튜디오, 2차 토론회는 1. 18.(화) MBC A 스튜디오, 3차 토론회는 2월 3일(목) KBS TS-4 스튜디오로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2022. 1. 21. 시행)으로 토론회의 의무중계 방송사가 확대됨에 따라 중계방송사 담당자 등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3차 정책토론회의 중계주관 방송사를 KBS에서 SBS로 교체하고 방송 3사 동시중계로 결정하였다. 법 개정으로 토론회 제작 및 중계방송에 참여하게 된 SBS와 별도 업무협의를 개최하여 토론회 제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담당 부서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갑작스런 상황에도 무리 없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에 있어 정책토론회 역시 주 시청시간대인 오후 8시에서 오후 11시 사이에 중계방송하도록 규정¹⁵⁾하고 있어, 주요 시간대 편성을 위해 중계방송사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관계자와의 면담 및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편성의 어려움 등 사유를 통보해와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책토론회는 KBS, MBC, SBS 및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의 채널을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됐으며, 한국선거방송은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토론회 차수별로 녹화 및 재방송(1차 16회, 2차 12회, 3차 4회)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중앙토론회·중앙선관위) 채널과 네이버TV 등을 통해 실시간 토론회 중계 및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초청대상 정당 선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른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초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15)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2항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표 3-2〉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 1차 정책토론회

(단위: 석)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의석수	169	103	6	3	3	1	1	9

※ 자료: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의석수 현황'(2021. 11. 11.)

• 2차 정책토론회

(단위: 석)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의석수	169	105	6	3	3	1	1	7

※ 자료: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의석수 현황'(2021. 12. 10.)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표 3-3〉 정당별 직전선거 득표율 현황

정당명 \ 선거별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 5. 9.)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020. 4. 15.)	제7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2018. 6. 13.)
더불어민주당	41.0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33.35 (더불어시민당)	51.42
국민의힘	24.03 (자유한국당 홍준표)	33.84 (미래한국당)	27.76 (자유한국당)
정의당	6.17 (정의당 심상정)	9.67	8.97
국민의당	-	6.79	-
열린민주당	-	5.42	-
민생당	28.17 (국민의당 안철수 21.41 바른정당 유승민 6.76)	2.71	9.33 (바른미래당 7.81 민주평화당 1.52)

※ 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람(p.46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p.194), 제19대 대통령선거총람(p.390)

따라서 법에 따라 초청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6개 정당이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회의 토론회 중 적어도 한 번은 당대표 참석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을 하였으나, 당내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초청대상 정당은 6개 정당이었으나 합당 추진(열린민주당), 당내 사정(민생당)으로 일부 정당은 토론회에 불참하였다. 각 정당은 차수별 토론분야 및 주제와 관련이 있는 현역 의원이나 정책연구소의 전문가 등을 토론자로 추천하였고, 2차 토론회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접어들면서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토론자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표 3-4〉 참석 토론자 현황

구분	정당명	토론자	직위	비고
1차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원내수석부대표	※ 열린민주당 불참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의장	
2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선대위 수석 부분부장	※ 열린민주당 불참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의장	
3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 열린민주당, 민생당 불참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	
	정의당	김종대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	

4) 토론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년 11월 12일 제9차 위원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차수별 토론분야를 ‘경제·과학·기술’(1차), ‘사회·복지·노동’(2차), ‘정치·외교·안보’(3차)로 결정하고 주제선정을 위한 각 분야별 토론의제를 수집하였다. 일반국민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토론의제를 수집하였으며, 정당·학회 및 단체·중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등에게 토론의제 추천을 의뢰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견해와 관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전문위원회의와 준비소위원회의에서 주제 선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고, 전체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1) 토론의제 수집

먼저 다양한 의제를 수집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당과 유관 단체 및 학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등에 정책토론회의 토론의제 추천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1차(경제·과학·기술)에 45건, 2차(사회·복지·노동)에 79건, 3차(정치·외교·안보)에 56건으로 총 180건의 추천의제가 수집되었다.

의제선정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을 통해 2021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총 3회 실시하였다.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 차수별로 조사기관을 달리하여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웹 조사 방식으로 각각의 토론분야 중 토론회에서 토론했으면 하는 주제 및 질문사항 등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도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3-5〉 정책토론회 의제선정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개요

구분	1차	2차	3차
조사기간	2021. 11. 16.~11. 23.	2021. 12. 15.~12. 29.	2022. 1. 7.~1. 16.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유효 표본 수	1,000명		
조사방법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표본할당	지역(권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		
조사내용	경제·과학·기술 분야 토론주제 및 질문사항	사회·복지·노동 분야 토론주제 및 질문사항	정치·외교·안보 분야 토론주제 및 질문사항
조사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센터	(주)리서치앤리서치

1차 정책토론회(경제·과학·기술 분야)는, 경제 분야에서 ‘부동산/집값/주거안정’에 관련된 의제 추천이 3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자리/취업’(11.1%), ‘물가/생활/서민경제’(6.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세계화/발전’(37.4%)과 관련된 의제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기후위기/에너지’(25.3%), ‘의료/코로나/바이오’(8.9%) 순으로 추천이 많았다.

〈표 3-6〉 제1차 정책토론회(경제·과학·기술 분야)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주요결과

• 경제 분야

순위	추천 의제	빈도(건)	비율(%)
1	부동산 / 집값 / 주거안정 - 부동산 대책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주택 공급대책 등	459	32.8
2	일자리/취업 - 일자리 창출 / 실업 문제 / 청년 취업난 등	155	11.1
3	물가/생활/서민경제 - 경기침체 대책 / 물가 안정 / 서민경제 활성화 등	92	6.6
4	금융규제/대출/세금 - 가계부채 / 대출규제 / 세제 개편 등	88	6.3
5	금융/가상화폐/주식 - NFT 제도화 / 공모도 / 디지털 자산 / 증시 활성화 등	84	6
6	코로나 경제회복/지원금/국가운영 - 소상공인 지원 / 재난지원금 / 경기침체 대책 등	73	5.2
7	경제발전/성장 - 경기 부양책 / 경제 성장 / 소득주도 성장 문제 등	57	4.1
8	미래/성장/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 / ESG 경영 / 미래 먹거리 등	50	3.6
9	수출/무역/경제협력, 외교 - 대북 경험 / 중국 경제의존도 / 수출 규제 등	45	3.2
10	양극화 - 경제 양극화 / 빈부격차 / 소득불균형 등	44	3.1
11	임금/노동정책 - 52시간 근로제 / 고용 안정화 / 최저 임금 등	40	2.8
12	자원/기초소재/원자재 - 기초소재 자급 / 원자재 수입·수급 / 요소수 등	37	2.6
13	경제전반 - 경기회복 / 경기침체 / 한국판 뉴딜정책 등	29	2.1
14	저출산/고령화 - 노인 빈곤 / 저출산 해결방안 / 고령화 사회 등	28	2.0
15	기업정책 - 기업 규제 / 재벌 기업 문제 / 중소기업 활성화 등	26	1.9
16	국가부채/재정정책 - 국가부채 / 부채 상환 대책 / 경기 부양책 등	21	1.5
17	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 / 공공기관 이전 / 지방경제 분권 등	17	1.2
18	경제활동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 창업지원 대책	17	1.2

순위	추천 의제	빈도(건)	비율(%)
19	기본소득 - 대책 방향성 / 기본소득 해법 등	10	0.7
20	세대별대책 - 노인 일자리 / 중장년 대책 / 청년 문제 등	5	0.3
21	원전/에너지 - 에너지 대책 / 원자력 발전 / 원전사업 등	4	0.3
22	플랫폼경제 - 플랫폼경제 방향성 / 시장경제 미래 / 문제점 등	4	0.3
23	기타 - 1인 가구 / GTX 노선 / 문화창의산업 등	14	1.0

• 과학·기술 분야

순위	추천 의제	빈도(건)	비율(%)
1	과학기술 지원/세계화/발전 - 과학기술 지원 대책 / 미래 정책 / 반도체 등	248	37.4
2	환경/기후위기/에너지 - 기후위기 대응책 / 미세먼지 / 신재생에너지 등	168	25.3
3	의료/코로나/바이오 - 바이오산업 / 위드코로나 / 코로나 백신 개발 등	59	8.9
4	교육시스템/이공계처우/기초과학/인재육성 - 과학인재 육성 방향 / 교육정책 / 기초 과학 장려 등	49	7.4
5	항공우주/우주시대 - 나로호 / 우주공학 / 우주개발 등	45	6.8
6	AI/로봇/자동화기술 - AI 발전 방향 / 로봇 분야 / 일자리 감소 등	31	4.6
7	미래자동차산업 - 무인 자동차 / 수소자동차 / 전기자동차 등	19	2.9
8	메타버스 - 메타버스 기술 구축 / 위험성 / 긍정·부정적 효과 등	16	2.4
9	기술유출/특허 - 기술유출 문제 / 기술자 해외 유출 방지대책 등	9	1.4
10	국방/첨단장비 - 국방과학기술 / 첨단 국방장비 등	7	1.1
11	정보보호/보안/암호화 - 보안기술 / 블록체인 등	2	0.3
12	플랫폼경제	1	0.1
13	기타 - 정보 비대칭 / 클라우드 / 스트리밍 서비스 등	10	1.5

2차 정책토론회(사회·복지·노동 분야)는 사회 분야에서 ‘고령화 대책 방안’(38.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 문제 해결 방안’(14.6%), ‘코로나19 대응 방안(8.6%)이 뒤를 이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정책’(37.0%)이 가장 많이 추천됐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22.8%), ‘저출생 대책’(14.6%) 순으로 추천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 환경’(26.1%), ‘일자리 대책 및 고용 안정화’(25.5%), ‘근로 시간’(1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제2차 정책토론회(사회·복지·노동 분야)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주요결과

• 사회 분야

순위	추천 의제	빈도(건)	비율(%)
1	고령화 대책 방안 - 노인 일자리 / 복지정책 / 세대갈등 등	271	38.5
2	청년 문제 해결 방안 - 청년 일자리 / 지방 유인책 / 청년 주거 문제 등	103	14.6
3	코로나19 대응 방안 - 코로나 지원금 / 백신 부작용 / 백신휴가 등	60	8.6
4	사회 통합 방안 - 소득불균형 / 노사갈등 / 비정규직 문제 등	53	7.6
5	범죄 예방 및 처벌 방안 - 몰래카메라 / 데이터폭력 / 촉법소년 등	41	5.8
6	저출산 대책 방안 - 출산율 장려 정책 / 저출산 원인 / 신혼부부 지원책 등	26	3.7
7	부동산 문제 - 주택공급 / 임대차법 / 주거안정 등	25	3.6
8	외국인 및 재외국민 관련 - 조선족 범죄 / 불법체류자 / 난민 문제 등	17	2.4
9	정년연장 - 정년연장 기준 / 청년 구직난 등	17	2.4
10	경제 양극화 해결 - 빈부격차 / 무주택자 문제 / 소득격차 문제 등	15	2.1
11	지방 소도시 문제 - 돌봄 문제 / 지방의료 / 농어촌 고령화 등	9	1.3
12	젠더 갈등 - 성평등 / 여성가족부 / 여성할당제 등	7	1.0
13	공정성 관련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불공정 취업 등	7	1.0
14	인구감소 문제 - 인구감소 대책·해법 등	7	0.9
15	교육정책 - 화상수업 / 아동수당 / 보육 사각지대 등	5	0.7

순위	추천 의제	빈도(건)	비율(%)
16	여성문제 - 경력단절 / 육아휴직 등	5	0.7
17	결혼 관련 - 신혼부부 정책 / 덩크족 해법 등	5	0.7
18	여성정책 - 경력단절 / 육아휴직 등	3	0.4
19	공무원 채용 - 공무원 채용 / 공무원 연금 등	2	0.3
20	기타	26	3.7

• 복지 분야

순위	추천 의제	빈도(건)	비율(%)
1	복지 정책 관련 - 복지 예산 / 실업급여 / 보편적 복지 등	184	37.0
2	취약계층 지원 방안 - 복지 사각지대 / 저소득층 / 장애인 정책 등	114	22.8
3	저출생 대책 방안 - 출산율 장려 정책 / 신혼부부 지원 대책 등	73	14.6
4	국민연금 - 연금 고갈 / 연금 개혁 등	67	13.5
5	보육 정책 - 보육 사각지대 / 아동수당 / 청소년 복지 등	22	4.4
6	건강보험 - 건강보험 산정 방식 / 부정 수급 / 지역 가입자 등	12	2.3
7	기본 소득 문제 - 기본 소득 재원 마련 / 현금성 복지 등	12	2.3
8	코로나19 대응 방안 - 소상공인 구제 방안 / 거리두기 실효성 등	7	1.4
9	아동 복지 - 아동 학대 / 아동 수당 /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4	0.9
10	기타	4	0.7

• 노동 분야

순위	추천 의제	빈도(건)	비율(%)
1	근로 환경 - 임금 피크제 / 근로기준법 / 갑질 문제 등	119	26.1
2	일자리 대책 및 고용 안정화 - 청년 일자리 / 구인구직난 등	116	25.5

순위	추천 의제	빈도(건)	비율(%)
3	근로 시간 - 52시간 근무제 / 주 4일 근무제 등	67	14.7
4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 / 사각지대 등	61	13.4
5	일자리 창출 - 블라인드 채용 / 경력직 우대 / 중소기업 구직난 등	36	7.9
6	정규직/비정규직 관련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임금 격차 등	23	5.0
7	노동조합 관련 - 귀족 노조 / 정치세력화 / 비노조원 차별 문제 등	19	4.2
8	코로나19 대응 방안 - 소상공인 구제 / 거리두기 / 재난지원금 등	11	2.4
9	기타	4	0.8

3차 정책토론회(정치·외교·안보 분야)는 ‘외교 정책 및 대외관계 방안’(39.9%)이 가장 많이 추천됐고, 다음으로 ‘남북관계 대응 방안’(30.9%), ‘국방 및 안보 분야’(5.7%), ‘코로나19 대처 및 백신 관련 방안’(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제3차 정책토론회(정치·외교·안보 분야)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주요결과

순위	추천 의제	빈도(건)	비율(%)
1	외교 정책 및 대외관계 방안 - 미중 갈등 속 합리적 외교 방안 / 한일관계 등	591	39.9
2	남북관계 대응 방안 - 대북정책 / 남북 갈등 / 종전선언 등	458	30.9
3	국방 및 안보 분야 - 국방력 강화 / 군 비리 문제 / 모병제 등	84	5.7
4	코로나19 대처 및 백신 관련 방안 - 백신패스 / 코로나19 대응 방안 / 방역체계 개선 등	37	2.5
5	문화 및 역사 왜곡/침해 관련 문제 해결 방안 - 동북공정 / 일본의 역사왜곡 / 한류 등	21	1.4
6	부동산 정책 및 가격 안정화 방안 - 재건축 / 부동산 투기 / 집값 안정화 등	20	1.3
7	현 정권 평가 및 향후 정책 지향점 - 민주주의 / 다자외교 등	19	1.3
8	경제/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 경제성장 방안 / 물가안정 / 팬데믹 등	18	1.2
9	무역정책 관련 계획 및 방안 - 균형외교 / 무역분쟁 / 미중갈등 등	17	1.1

순위	추천 의제	빈도(건)	비율(%)
10	정당 간의 갈등 해소 방안 - 보수·진보 갈등 / 계파 갈등 등	17	1.1
11	미세먼지 및 환경 관련 문제 해결 방안 - 미세먼지 해결 방안 / 탄소중립 등	14	0.9
12	월북 문제 및 해결 방안 - 탈북자 / 노크귀순 / 월북 방지	14	0.9
13	없음/모름	4	0.3
14	기타	169	11.4

(2) 토론주제 선정

수집된 토론의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와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의 토론주제가 선정되었다. 1차 토론회(경제·과학·기술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너지 대책'과 '부동산 대책', 2차 토론회(사회·복지·노동 분야)는 '청년 정책' 및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3차 토론회(정치·외교·안보 분야)는 '정치 개혁 방안'과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로 각각 선정하였다.

〈표 3-9〉 정책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현황

구 분	토론분야	토론주제
1차	경제·과학·기술	[주제1]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너지 대책 [주제2] 부동산 대책
2차	사회·복지·노동	[주제1] 청년 정책 [주제2] 저출생·고령화 대책
3차	정치·외교·안보	[주제1] 정치 개혁 방안 [주제2]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3) 질문사항 선정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사회자 공통질문은 진행방식에 따라 차수별로 선정된 주제 중 '주제1'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비하였다. 사회자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이 각각 질문안을 작성하여 준비소위원회의에서 심층적으로 교차 검토한 후, 전체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내실 있는 토론회 개최를 위해 질문사항의 요지를 참석정당(토론자)에게 사전 통지하였다.

〈표 3-10〉 정책토론회 주제별 질문요지 선정 현황

구분	주제	질문요지
1차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너지 대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 대책과 미래 에너지 전략은?
2차	청년 정책	각 당의 최우선 청년 정책 과제는?
3차	정치 개혁 방안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개혁 방안

5)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주제 및 토론자의 수를 고려하여 상호간 역동적인 토론 진행을 위한 방식으로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간 시간총량제토론’ →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의 구조로 구성하여, 전문위원회의와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총 방송시간(120분)을 고려하여 토론회 진행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론자 수가 변동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참석 토론자 수에 따른 ‘시간총량제토론’ 및 ‘주도권토론’의 시간 배분 방식 역시 함께 결정하였다. 특히 ‘주도권토론’ 방식은 토론자간 검증의 유용성과 언론사 및 당내 경선 토론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법정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진행방식이였다. ‘주도권토론’의 단점으로 꼽히는 주도권을 쥔 토론자가 계속 혼자 발언하거나, 상대방에게 답변시간을 주지 않는 상황 등을 방지하고자 ‘2명 이상의 토론자에게 질문’, ‘답변시간 30초 보장’의 세부 운영 방법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진행 중 토론자의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운영 방법도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 주제인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책’이라는 국가적인 난제에 대해 각 정당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후 ‘시간총량제토론’ 방식이 사용되었다. 각 토론자에게 총 7분의 시간을 배분하고, 사회자에게 손을 드는 등의 방식으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도록 하였으며, 토론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 30초를 넘기지 않도록 권고 사항을 두는 등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토론회가 지루하고 늘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토론자별 5분 30초씩 총 2차례에 걸쳐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3-11〉 제1차 정책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주제 1: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너지 대책		40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E 토론자 답변(각 1분) 	5분 30초
자유토론 (시간총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토론자당 총 7분) 	35분
주제 2: 부동산 대책		55분
주도권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B/C/D/E/A 토론자 주도권토론(각 5분30초) 	27분 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C/D/E/A/B 토론자 주도권토론(각 5분30초) 	27분 30초
마무리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A/B/C 토론자(각 1분) 	5분

※ 참석 토론자 수에 따른 발언시간(주제별 자유토론·총 주도권토론) : 6명(각 5분·9분), 5명(각 7분·11분), 4명(각 9분·14분), 3명(각 12분·18분)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이며, 잔여시간이 있어도 자유토론시간에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토론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토론자의 발언 이후에는 순서 없이 각 토론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자유토론 시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토론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사회자가 토론의 흐름을 고려하여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하거나 발언 순서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 발언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자는 해당 토론자에게 보충(개별)질문을 할 수 있음.

• 주도권토론

- 토론자는 1차·2차 주도권토론에서 주도권을 가진 때마다 2명 이상의 토론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여야 함. 이와 다르게 운영할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 상대 토론자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답변시간이 길어지면(최소 30초는 보장)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답변자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음.

〈설명회 참석자 질문에 대한 부가 설명 내용〉

- 주도권토론자의 잔여시간이 부족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30초)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도권토론자는 질문보다는 앞선 답변에 대한 반론이나 추가 견해를 밝히도록 함.
- 답변자의 답변시간은 주도권자의 질문이 끝난 때부터 기산함.

• 공통

-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 자유토론,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에서 토론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의 전원을 차단함.
- 자유토론, 주도권토론의 각 잔여시간이 5초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소멸된 것으로 봄.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 120분).
- 〈권고사항〉 토론자의 1회 발언(자유토론·주도권토론)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2차 토론회는 1차 토론회와 동일한 진행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각 토론자에게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시간총량제토론 총 7분, 주도권토론의 경우 1차 토론회와 달리 한 번만 운영해 토론자당 11분으로 하고, 마무리발언은 1분씩으로 시간을 배정하였다.

〈표 3-12〉 제2차 정책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주제 1: 청년 정책		40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E 토론자 답변(각 1분)	5분 30초
시간총량제토론	• A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7분 총량)	35분
주제 2: 저출생·고령화 대책		55분
주도권토론	• B/C/D/E/A 토론자 주도권토론(각 11분)	55분
마무리발언	• C/D/E/A/B 토론자(각 1분)	5분

〈참석 토론자 수에 따른 시간배분〉

구 분	5명	4명	3명
시간총량제토론	7분	9분	12분
주도권토론	11분	14분	18분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이며, 잔여시간이 있어도 시간총량제토론 시간에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토론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토론자의 발언 이후에는 순서 없이 각 토론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시간총량제토론 시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토론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사회자가 토론의 흐름을 고려하여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하거나 발언 순서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 발언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자는 해당 토론자에게 보충(개별)질문을 할 수 있음.

• 주도권토론

- “2명 이상의 토론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여야 함.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 상대 토론자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답변보장시간(30초)을 초과하면 제지 가능함.
- 주도권토론자의 잔여시간이 부족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30초)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도권토론자는 질문보다는 앞선 답변에 대한 반론이나 추가 견해를 밝히도록 함.
- 답변자의 답변시간은 주도권자의 질문이 끝난 때부터 기산함.

• 공동

-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 시간총량제토론,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에서 토론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음소거함.
- 시간총량제토론, 주도권토론의 각 잔여시간이 5초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소멸된 것으로 봄.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 〈권고사항〉 토론자의 1회 발언(시간총량제토론·주도권토론)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3차 토론회 역시 1·2차 토론회와 동일한 진행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불참 정당이 늘어나 4명의 토론자를 기준으로 토론회 발언시간 등을 배분하였고, 주도권토론은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2차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였다. 각 토론자에게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1분, 시간총량제토론 시간 9분, 주도권토론 시간 1·2차 각 7분씩이 주어졌고 마무리발언은 1분이 제공되었다.

〈표 3-13〉 제3차 정책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주제 1: 정치 개혁 방안		40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 토론자 답변(각 1분)	4분 30초
시간총량제토론	• A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9분 총량)	36분
주제 2: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56분
주도권토론	• (1차) B/C/D/A 토론자 주도권토론(각 7분)	28분
	• (2차) C/D/A/B 토론자 주도권토론(각 7분)	28분
마무리발언	• D/A/B/C 토론자(각 1분)	4분

〈참석 토론자 수에 따른 시간배분〉

구 분	6명	5명	4명	3명
시간총량제토론	5분	7분	9분	12분
주도권토론	9분	11분	14분	18분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이며, 잔여시간이 있어도 시간총량제토론 시간에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토론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토론자의 발언 이후에는 순서 없이 각 토론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시간총량제토론 시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토론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사회자가 토론의 흐름을 고려하여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하거나 발언 순서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 발언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자는 해당 토론자에게 보충(개별)질문을 할 수 있음.

• 주도권토론

- 토론자는 1차·2차 주도권토론에서 주도권을 가진 때마다 “2명 이상의 토론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여야 함.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 상대 토론자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답변보장시간(30초)을 초과하면 제지 가능함.
- 주도권토론자의 잔여시간이 부족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30초)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도권토론자는 질문보다는 앞선 답변에 대한 반론이나 추가 견해를 밝히도록 함.
- 답변자의 답변시간은 주도권자의 질문이 끝난 때부터 기산함.

• 공통

-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 시간총량제토론,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에서 토론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음소거함.
- 시간총량제토론, 주도권토론의 각 잔여시간이 5초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소멸된 것으로 봄.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 〈권고사항〉 토론자의 1회 발언(시간총량제토론·주도권토론)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6) 사회자 선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3조(대답·토론회) 제3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법정 토론회 사회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준비소위원회의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전체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토론회 진행 경험과 방송 경력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계주관방송사의 현직 방송인들 위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토론회의 차수별 사회자를 선정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사회자에게 토론회의 진행방식, 사회자의 역할 및 돌발 상황 대처법 등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토론회 진행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선정된 사회자는 질문사항 등을 작성하고 준비소위원회의에 참석해 공통질문 문안을 검토하였고, 토론회 진행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토론진행표(Que sheet)와 대본의 문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토론회 준비에 임하였다.

[그림 3-2] 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1차 토론회: 이규원(KBS 아나운서) 2차 토론회: 허일후(MBC 아나운서) 3차 토론회: 편상욱(SBS 앵커)

7) 설명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초청정당을 대상으로 토론회의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을 위해 총 3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당별 1인 참석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각 정당 토론자 또는 토론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주제와 진행방식, 토론회 규칙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토론회 당일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하였다. 또한 토론회 당일 일정과 질서유지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진행방식 등 안내 사항이 토론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표 3-14〉 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정당명	추첨결과	비 고
1차	2021. 12. 8.(수) 09:30	위원회의실	더불어민주당	E	
			국민의힘	D	
			정의당	B	
			국민의당	C	
			민생당	A	
2차	2022. 1. 11.(화) 09:30	위원회의실	더불어민주당	C	
			국민의힘	B	
			정의당	A	
			국민의당	D	
			민생당	E	
3차	2022. 1. 27.(목) 09:30	위원회의실	더불어민주당	D	
			국민의힘	C	
			정의당	B	
			국민의당	A	* 토론팀장 대리추첨

〈그림 3-3〉 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1차 토론회 설명회(2021. 12. 8.)
- 토론회 관련 안내3차 토론회 설명회(2022. 1. 27.)
-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

8) 토론회장 설비 및 토론회 진행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 세트설비, 방송사 내 부대시설 활용과 토론회 진행에 관한 방송제작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 모두 사회자와 토론자가 마주 보는 구조로 좌석을 배치하고, 참석 정당 수의 변동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토론회장 세트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비하였다.

토론회장 중앙에 위치하는 원형구조물에는 토론회명(‘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관명, 위원회의 상징물(Corporate Identity, CI) 등을 함께 표출하였다. 토론자 테이블에 정당 명패를 추가하여 토론자를 볼 때 자막이 없이도 소속 정당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토론자 뒷배경 등에 정당 색을 활용한 디자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토론자 좌석 사이에 비말차단용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스튜디오 내에 비치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송사와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림 3-4] 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 현황



1차 토론회(KBS TS-4 스튜디오)

2차 토론회(MBC A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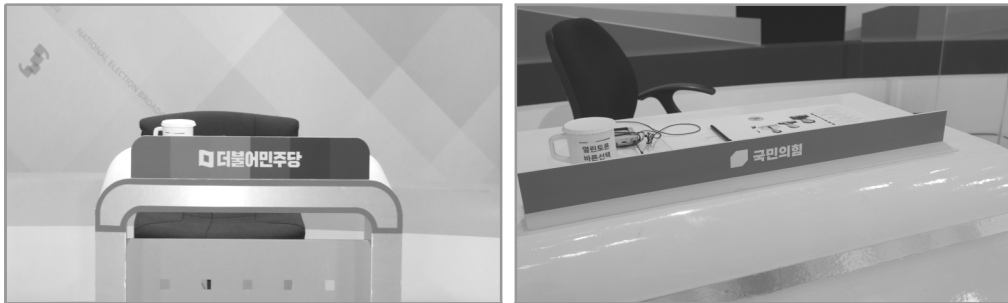
3차 토론회(SBS 7 스튜디오)

[그림 3-5] 정책토론회 구조물 등 설비 현황



중앙 원형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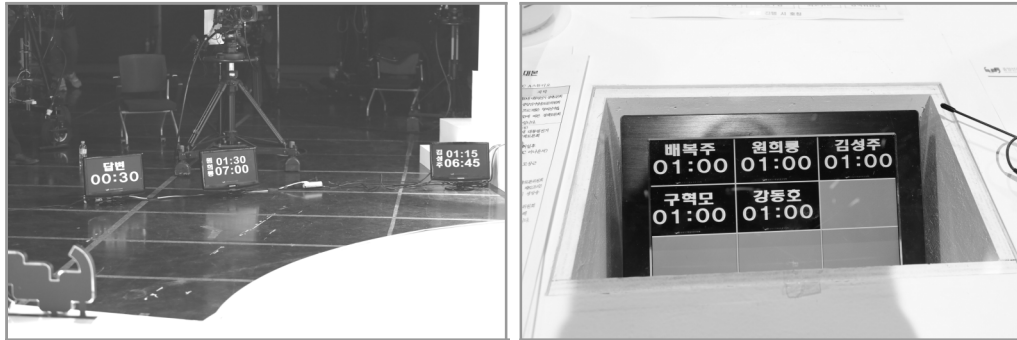
주관 기관 구조물



테이블 정당 명패

각 토론자의 잔여발언시간을 표출해주는 토론자용 개별모니터는 토론자의 좌석 맞은편에 설치하였고, 토론자의 발언시간을 관리하는 사회자용 모니터는 사회자의 우측에 설치하였다. 2차 토론회부터는 사회자의 테이블에 모니터를 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방송 화면상에 사회자 주변이 보다 정리된 인상을 주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주도권토론' 진행 시 '답변 30초 보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30초' 모니터를 토론회장 좌우 바깥쪽에 각 1대씩 추가 배치하였다. 토론자와 사회자의 모니터는 모두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스튜디오 내부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였다.

[그림 3-6] 정책토론회 토론시간관리 모니터 설비 현황



토론자용 시간관리 모니터

사회자용 시간관리 모니터(매립형)

스튜디오 카메라는 토론자에게 각 1대씩 배치되었고, 사회자용 프롬프터(Prompter) 카메라와 수어통역사 전용 카메라 1대, 전체화면용 지미집(Jimmy Jib) 카메라 1대, 여분 카메라 등 8~9대 정도가 사용되었다.

토론자 및 수행원들이 사용하는 대기실은 차수별 참석 정당의 수와 주관방송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2인 1실 또는 1인 1실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각 방송사의 분장실에서 토론자들이 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유사시 즉각 대책을 논의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모니터실을 별도로 제공받았다.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생방송 직전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이 A3 판넬 등 참고자료 사용 방식과 토론 진행방식, 시간운용 등에 관해 토론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안내하였다. 방송사 제작진의 안내 하에 음향 및 카메라 등 리허설을 마치고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사회자는 각 토론자의 주요 발언을 정리하고 자연스러운 토론 흐름을 유도하는 등 사회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처음 시도하는 주도권토론에서 단답형 질문이 오가거나 잔여시간이 30초 이하인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하였다. 몇몇 토론자가 발언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방송시간이 남아 마무리발언 시간을 1분 30초, 3차 토론회의 경우 2분까지 늘려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9)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스튜디오 내에 별도의 수어통역사 세트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어방송 및 자막방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총 12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를 위하여 KBS는 1명이 60분씩 총 2명의 수어통역사가 MBC와 SBS는 각 1명의 수어통역사가 투입되었다. 또한 토론회 종료 후 방송사로부터 토론회 속기록을 제공 받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에 전체 토론회 전문을 자막 형태로 게시하였다.

[그림 3-7] 정책토론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실시 현황



1차 토론회(2021. 12. 16.)

2차 토론회(2022. 1. 18.)

10) 시청률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은 1차 토론회 때 과거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차수가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하여 3차 토론회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3-15> 역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닐슨코리아 전국기준/단위: %)

구 분	시청률				
	KBS1	MBC	SBS	계(등시간)	
제17대 대선 (2007)	1차	2.3	1.0	-	3.3
	2차	2.4	0.9	-	3.3
	3차	2.7	1.3	-	4.0

구 분		시청률			
		KBS1	MBC	SBS	계(동시간)
제18대 대선 (2012)	1차	2.0	0.8	0.8	3.6
	2차	2.0	0.8	0.8	3.6
	3차	3.2	0.9	1.1	5.2
제19대 대선 (2017)	1차	2.0	0.7	0.8	3.5
제20대 대선 (2022)	1차	2.2	0.4	-	2.6
	2차	3.1	0.5	-	3.6
	3차	3.6	0.7	0.4	4.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텔레비전 본방송 시청 이외에도 시청접근성 확대를 위해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널 및 네이버TV, 카카오TV 등 타 플랫폼에서도 토론회가 실시간 중계되도록 중계주관방송사와 협의하였다. 다만, 카카오TV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1차 토론회 이후 실시간 중계가 중단되었다.

〈표 3-16〉 정책토론회 실시간 및 다시보기 조회수 현황

(개최일 기준, 단위: 회)

구 분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실시간중계)	계
	중앙토론회	중앙선관위			
1차	103	570	31	1,116	1,820
2차	109	340	57	-	506
3차	843	331	47	-	1,221

〔그림 3-8〕 정책토론회 관련 중앙토론회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3-9] 정책토론회 유튜브 및 네이버TV 중계화면



유튜브



네이버TV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백서

제2절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1. 개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월 15일(화)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화)까지였다.

22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정책공약 및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라 초청 대상에 포함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회로 총 4회의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주관·개최하였다.

〈표 3-17〉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초청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 외
개최일시	2022. 2. 21.(월) 20:00~22:00	2022. 2. 25.(금) 20:00~22:00	2022. 3. 2.(수) 20:00~22:00	2022. 2. 22.(화) 23:00 ~2. 23.(수) 01:00
개최장소	MBC D 공개홀 (상암)	SBS 오디토리움 (상암)	KBS TS-4 스튜디오 (여의도)	MBC B 스튜디오 (상암)
중계주관 방송사	MBC	SBS	KBS	MBC
중계방송	KBS, MBC, SBS, YTN 등 13개사			KBS, MBC, SBS, 국회방송 등 6개사
참석 후보자	4명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8명 (오준호, 허경영, 이백윤, 옥은호, 김경재, 김재연, 이경희, 김민찬)
사회자	박경추 (MBC 아나운서)	편상욱 (SBS 앵커)	박태서 (KBS 해설위원)	차미연 (MBC 아나운서)
토론분야	경제	정치	사회	국정전반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여야 유력 후보 간 초반빙의 접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 후보자 검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던 바, 후보자토론회 개최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사례 및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토론회 등을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회의 구성 및 진행방식, 세부운영방법 등을 재정비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토론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후보자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검토·보완하였다. 또한 앞선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에서 시범적으로 ‘주도권토론’ 방식을 활용해보며 장·단점을 분석하고, 실제 후보자토론회에서 법정 토론회 최초로 ‘주도권토론’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후보자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토론진행방식을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역, 경복궁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점을 영상에 담아 토론회 도입부에서 후보들에게 전하는 국민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였고,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토론회 의무중계 방송사가 확대됨(KBS·MBC·SBS)에 힘입어 보도전문 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재외선거인을 위한 국제방송, 인터넷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토론회가 생중계되도록 하는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시청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WBC 복지TV와 협력하여 국내 선거방송토론 최초로 후보자별 1:1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방송을 전국에 동시 생중계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시청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여 관련 단체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의 확산에 대비해 토론회의 화상 참여를 허용하고 방송사와 기술적인 방법 등을 사전에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및 유권자의 균등한 선거정보 획득 보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이 같은 노력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향하는 유권자 중심의 후보자토론회와 대국민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토론회 관리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2년 1월 7일(금) 제1차 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에 3차례 개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초청 후보자토론회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그리고 각 토론회의 토론 분야를 결정하고 보도자료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였다.¹⁶⁾ 후보자토론회 일정은 재외투표기간(2022. 2. 23.~2. 28.) 및 사전투표(2022. 3. 4.~3. 5.)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1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공지사항 No.602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표’

〈표 3-18〉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 후보자토론회)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토론분야
1차	2022. 2. 21.(월) 20:00~22:00	MBC D 공개홀 (상암)	KBS, MBC, SBS	경제
2차	2022. 2. 25.(금) 20:00~22:00	SBS 오디토리움 (상암)	KBS, MBC, SBS	정치
3차	2022. 3. 2.(수) 20:00~22:00	KBS TS-4 스튜디오 (여의도)	KBS, MBC, SBS	사회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토론분야
초청 외	2022. 2. 22.(화) 23:00 ~2. 23.(수) 01:00	MBC B 스튜디오 (상암)	KBS, MBC, SBS	국정전반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총 3회 개최하는 ‘초청 후보자토론회’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그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해 2월 21일(월) 경제 분야를 다루는 1차 후보자토론회를 시작으로 2월 25일(금) 정치 분야, 선거 일주일 전인 3월 2일(수) 사회 분야로 3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최시간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¹⁷⁾에 따라 세 차례의 후보자토론회 모두 주요시간대인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120분 동안 진행하기로 하였다.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2월 22일(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120분 동안 진행하며, 토론분야는 ‘국정전반’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라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역시 ‘초청 후보자토론회’의 중계방송 시간대와 동일한 시간대에 편성해 줄 것을 공문 발송 및 방송관계자 회의, 편성본부장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중계주관 방송사의 편성 사정으로 인해 밤 11시부터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토론회 의무중계 방송사로 SBS가 추가됨에 따라 방송 3사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2022년 1월 24일(월) 제3차 위원회의에서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의 개최장소를 SBS 스튜디오로 변경하고 방송 3사 동시 생중계로 결정하였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계주관방송사인 방송 3사(KBS·MBC·SBS) 관계자들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회의 및 유선 협의 등을 통해 후보자토론회의 일정 및 효과적인 토론회

17)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개최에 대한 의견 교환, 수중계 협조 등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송사에 중계방송 참여를 요청하는 등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중계주관방송사인 KBS, MBC, SBS 뿐만 아니라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과 KBS월드를 비롯한 국제방송채널 등이 중계에 참여하고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의 실시간 중계와 한국선거방송을 통한 후보자토론회 재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부터 복지TV가 후보자별 1:1 수어방송을 생중계하면서 일반 유권자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선거인의 시청 접근성 역시 제고하였다.

〈표 3-19〉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현황

구 분	중계주관 방송사	수중계 방송사
초청 1차 (22. 2. 21.)	MBC	KBS, S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JTBC, 채널A, MBN, 국회방송(NATV), KTV, OBS, TBS, 한국선거방송(재방송) 등
초청 2차 (22. 2. 25.)	SBS	KBS, MBC, YTN, 연합뉴스TV, TV조선, JTBC, 채널A, MBN, 국회방송(NATV), KTV, OBS, 복지TV, 한국선거방송(재방송) 등
초청 3차 (22. 3. 2.)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JTBC, 채널A, MBN, 국회방송(NATV), KTV, OBS, 복지TV, 한국선거방송(재방송) 등
초청 외 (22. 2. 22.)	MBC	KBS, SBS, 국회방송(NATV), KTV, 한국선거방송(재방송) 등

2)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2년 1월 7일(금) 제1차 위원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참석예정 후보자 수에 따른 진행방식을 각각 결정하고, 보도자료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론회 개최 일정을 공표하였다.

이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 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해야 한다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른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공표의 법정기한은 2022년 1월 8일(토)까지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의 개요는 〈표 3-20〉과 같다.

〈표 3-20〉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개요

구분	진행방식	비고
초청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인터뷰 영상(1분) • [주제1] 사회자 공통질문·답변(각 1분) 후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 [주제2] 사회자 공통질문·답변(각 1분) 후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 '경제분야' 주도권토론(각 9분) • 마무리발언(각 1분) 	입식
초청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인터뷰 영상(1분) • [주제1] 사회자 공통질문·답변(각 1분) 후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 [주제2] 사회자 공통질문·답변(각 1분) 후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 '정치분야' 주도권토론(각 9분) • 마무리발언(각 1분) 	
초청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인터뷰 영상(1분) • [주제1] 사회자 공통질문·답변(각 1분) 후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 [주제2] 사회자 공통질문·답변(각 1분) 후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 '사회분야' 주도권토론(각 9분) • 마무리발언(각 1분) 	
초청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인터뷰 영상(1분) • 시작발언(각 1분) • [1차] 후보자 공약발표(각 5분) • [2차] 후보자 공약발표(각 5분) • 마무리발언(각 1분) 	좌식

토론 진행방식은 초청 1~3차 모두 '국민인터뷰 영상' 시청과 '주제별 사회자 공통질문·답변 후 시간총량제토론'에 이어 차수별 토론분야 '주도권토론'으로 진행하고, 각 토론회 말미에 '마무리발언'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시간총량제토론'은 후보자가 발언권을 얻어 주어진 총 발언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사용된 '전체 시간총량제토론'의 분석 결과, 주제 전환 지연 및 후보자별 잔여발언시간 편차 등의 문제로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주제별 시간총량제'로 변경하였다.

'주도권토론' 방식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검증 및 토론회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방식이며, 연설식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한다는 세부규칙을 두었다.

또한 발언시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간총량제토론에서 잔여시간이 많이 남은 후보자가 잔여시간이 없거나 부족한 다른 후보자에게 시간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공통 사항으로 후보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각 후보자에게는 ‘마무리발언’ 시간을 제외하면 총 23분씩의 발언시간이 주어졌다. 사회자의 오프닝 및 브릿지(연결말) 멘트 등은 간소화하고 시작발언을 생략하는 등 후보자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120분의 방송시간 안에서 최대한 토론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3-21〉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1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1: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 후보자 답변(각 1분) •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30초
	〈주제2: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30초
주도권토론	〈경제분야 주도권토론〉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9분)	36분
마무리발언	• D/A/B/C 후보자(각 1분)	4분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분〉

구 분	5명	4명	3명
(주제별) 시간총량제토론	각 5분	각 6분	각 9분
주도권토론	7분	9분	11분

〈표 3-22〉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1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1: 권력 구조 개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 후보자 답변(각 1분) •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30초
	〈주제2: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30초
주도권토론	〈정치분야 주도권토론〉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9분)	36분
마무리발언	• D/A/B/C 후보자(각 1분)	4분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분〉

구 분	5명	4명	3명
(주제별) 시간총량제토론	각 5분	각 6분	각 9분
주도권토론	7분	9분	11분

〈표 3-23〉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1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1: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 후보자 답변(각 1분) •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30초
	〈주제2: 인구 절벽 대응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30초
주도권토론	〈사회분야 주도권토론〉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9분)	36분
마무리발언	• D/A/B/C 후보자(각 1분)	4분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분〉

구 분	5명	4명	3명
(주제별) 시간총량제토론	각 5분	각 6분	각 9분
주도권토론	7분	9분	11분



초청 후보자토론회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이며, 잔여시간이 있어도 시간총량제토론 시간에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후보자의 발언 이후에는 순서 없이 각 후보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시간총량제토론 시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사회자가 토론의 흐름을 고려하여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발언 순서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 발언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자는 해당 후보자에게 보충(개별)질문을 할 수 있음.

• 주도권토론

-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여야 함.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 상대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답변시간이 길어지면 제지 가능함.
- 주도권후보자의 잔여시간이 부족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30초)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도권후보자는 질문보다는 앞선 답변에 대한 반론이나 추가 견해를 밝히도록 함.
- 답변자의 답변시간은 주도권자의 질문이 끝난 때부터 기산함.

• 공통

- 사회자 공통질문·답변, 시간총량제토론,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에서 후보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 120분).
- 〈권고사항〉 후보자의 1회 발언(시간총량제토론·주도권토론)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함.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선 후보자토론회를 지향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국민인터뷰’의 형식으로 영상에 담아 모든 후보자토론회 도입부에서 약 1분 분량으로 사용하였고, 스튜디오 현장에서도 후보자들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배치하여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림 3-10] 국민인터뷰 ‘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영상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발언순서에 따른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좌식 형태로 진행하고, 후보자 수에 따라 10명 미만의 경우 ‘국민인터뷰 → 시작발언 → 시간총량제토론 → 마무리 발언’을, 10명 이상의 경우 ‘시간총량제토론’ 대신 ‘공약발표’를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후보자 수에 대한 기준일이 없어 후보자등록마감일(2. 14.)을 기준으로 진행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 수에 따른 발언시간배분을 포함하여 추가 결정하였다(위원장 결재). 이에 따라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10명 이상의 경우인 ‘공약발표’ 2회 운영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불참을 통보해 최종 참석 후보자 수는 8명이었으나, 후보자 등록마감일 기준 ‘10명’이므로 ‘공약발표’ 2회 운영으로 진행하였다.

〈표 3-24〉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1분
시작발언	• A/B/C/D/E/F/G/H 후보자 (각 1분)	8분
후보자 공약발표	〈1차〉 • B/C/D/E/F/G/H/A 후보자 공약발표 (각 5분)	40분
	〈2차〉 • C/D/E/F/G/H/A/B 후보자 공약발표 (각 5분)	40분
마무리발언	• D/E/F/G/H/A/B/C 후보자 (각 1분)	8분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분〉

구 분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공약발표	각 9분	각 8분30초	각 6분	5분	각 4분30초	각 4분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세부운영방법

- 후보자 공약발표
 - 각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동안 사전 추천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공약을 발표함.
- 공통
 - 후보자의 시작발언, 공약발표, 마무리발언에서 후보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3) 사회자 선정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유력 후보 간 접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던 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방송토론 진행의 경험,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해 방송사 소속 방송인들과 전직 위원, 외부인사 등으로 사회자 후보군을 정비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들의 추천 명단을 집계해 준비소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한편, 일부 정당이 언론사 주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로 거론된 인사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해당 정당이 법정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월 15일(화) 개최된 제6차 위원회의에서 사회자로 추천된 인사들의 공정성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논의 끝에,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회자 4명을 선정하였다.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2. 21.)와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2. 22.)는 박경추·차미연 MBC 아나운서,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2. 25.)는 편상욱 SBS 앵커,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3. 2.)는 박태서 KBS 해설위원으로 중계주관방송사의 소속 인사들로 최종 선정하였다.

[그림 3-11]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초청 1차: 박경추(MBC 아나운서)



초청 2차: 편상욱(SBS 앵커)



초청 3차: 박태서(KBS 해설위원)



초청 외: 차미연(MBC 아나운서)

선정된 4명의 사회자 중 초청 1~3차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들은 각 토론회의 공통 질문안을 작성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각 토론회의 질문사항 검토를 위한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질문사항과 토론회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련 법 및 규정,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사회자 안내자료'를 준비해 사회자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도 별도 면담을 실시하여 토론회 진행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안내자료 등을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사회자는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특히나 처음 도입되는 주도권토론에서는 세부규칙의 운용이 핵심이었기에 토론회 진행과 관련해 사회자의 개입 시점과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 후보자토론회에서의 사회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중립적이고 공정한 진행
- 주제 범위 내의 역동적이고 원활한 진행 유도
 - 토론이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 토론회의 주제를 주지시키고 안내한다.
 - 한 후보자의 발언 중 다른 후보자가 끼어들 경우, 이를 중지시키고 주의를 촉구한다.
 - 토론회 진행방식과 세부규칙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제지하고 해당 내용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고지한다.
- 후보자 발언시간 관리 및 발언권 부여
 - 발언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제지하고, 마이크 음소거 상황을 시청자와 후보들에 안내한다.
 - 후보자 간 잔여발언시간의 편차가 커질 경우, 후보자별로 남은 발언시간을 고지하거나 상대적으로 발언 시간이 많이 남은 후보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 여러 후보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할 경우, 토론의 흐름, 잔여발언시간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 위법한 발언 등 제지
 - 토론회장에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인신공격성 발언 등 토론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토론주제 선정

(1) 토론의제 수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주제로 다양한 의제를 수집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 및 학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등에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의제 추천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경제 분야 29건, 정치 분야 37건, 사회 분야 31건과 기후위기에 대한 단일주제 요청 33건 등 총 159건의 추천의제가 수집되었다.

또한 주제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용역을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약 1개월 동안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하였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후보들에 대한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른 실제 유권자들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의제개발 연구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거시적인 철학과 비전, 문제해결방안과 대안제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한 의제, 정책중심의 실질적인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 우리 사회의 문제와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의제로 방향 설정을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와 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토론의제를 개발 정리하였고, 실제 후보자토론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토론의 논점, 각각의 토론의제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정책분야별 토론의제 개발 현황은 <표 3-25>와 같다.¹⁸⁾

<표 3-25> 분야별 토론의제 개발 총괄표

분야	주제	토론의제
정치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정신과 미래 비전 • 국가지도자로서 대통령 자질 검증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 • 공정과 정의
	정치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개혁 • 선거정당개혁 • 검찰·법원개혁 •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국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국회 관계설정 • 국민소통 향상 • 정부조직개편 • 공공기관 개혁 • 언론개혁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 •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정책 • 한국의 국방개혁 • 사이버 안보 이슈 • 보건안보(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방안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정부 대북전략 평가와 새 정부의 통일 정책/비전 •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 • 북한 인권문제 • 북한 비핵화 전략(북핵/미사일 프로그램) • 남북 경제협력
	외교/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패권경쟁 속 한국의 외교 방향 • 경색된 한일관계와 대일외교 • 다자외교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 중견국에서 선진국 외교로 • 공급망 안전과 경제안보 • 노동, 기후변화 등 신통상의제와 한국의 통상 정책 방향

18) 본 백서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 주요결과<제4장제2절> 참조

분야	주제	토론의제
경제	경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와 협력 증진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증대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경제성장 및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 •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뉴딜 • 노동권 및 노동시간
	민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안정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공적연금 운용 및 개혁 • 가계부채 문제 • 재정건정성 및 조세
사회	복지&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 저출생·고령화, 인구절벽 대책 • 아동학대, 영아 살해 대책 • 정부의 노인돌봄서비스 및 간병인 처우 개선에 관한 후보의 태도와 정책비전 파악 • 성폭력, 성범죄 대책 •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방안
	환경&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기 대책(국가온실가스 감축) • 원전 정책에 관한 태도 • 미세먼지 저감 대책 • AI 및 빅데이터 활용 정책 • 디지털 격차·소외 계층 대책 • 우주 개발 육성 정책
	교육&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육정책비전과 인재상 •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정책 • 대입제도개선: 공정한 평가 그 이상을 향하여 •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여기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를 파악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토론 의제를 선정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2월 3일(목)부터 2월 4일(금)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경제, 정치, 사회 분야별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를 각각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표 3-26〉 후보자토론회 의제선정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 2022. 2. 3.(목)~2. 4.(금)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표본크기	• 1,000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표 집 틀	• 무선전화번호 RDD
가중치 부여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률	• 12.7%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 경제 분야

유권자에게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이 27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 창출’(108명), ‘경제 민주화/경제발전 방안’(50명), ‘소상공인 지원 정책’(30명), ‘최저임금 및 급여 인상’(24명), ‘물가안정’(21명), ‘서민경제 정책’(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7〉 경제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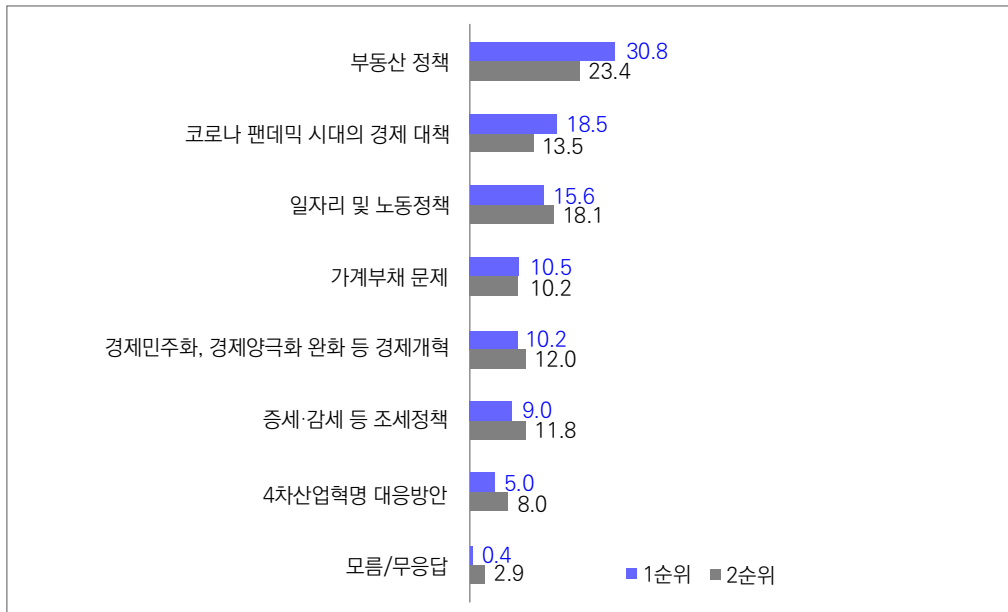
순위	토론주제	사례수(건)	비율(%)
1	부동산 정책	279	27.9
2	일자리 창출	108	10.8
3	경제 민주화/경제발전 방안	50	5.0
4	소상공인 지원 정책	30	3.0
5	최저임금 및 급여 인상	24	2.4
6	물가안정	21	2.1
7	서민경제 정책	20	2.0
	자영업자 지원 정책	20	2.0
	주식세금, 주식관련 문제	20	2.0
10	세금관련 문제(부동산 세금, 상속세, 양도세, 재산세 등)	18	1.8
11	수출, 수입, 무역 관련 문제	15	1.5
12	노인 복지 관련 정책(일자리, 정년연장, 연금 등)	12	1.2
13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경제 대책	8	0.8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미래산업	8	0.8
	민생문제	8	0.8

순위	토론주제	사례수(건)	비율(%)
16	양극화 문제	7	0.7
17	농촌/농업을 위한 정책	6	0.6
	복지관련 정책	6	0.6
	대출 관련 및 대출 금리 관련	6	0.6
	대장동 사건	6	0.6
21	비정규직 문제	5	0.5
	가계부채	5	0.5
	기업육성 및 기업경제 지원	5	0.5
24	높은 은행 문턱/금리 문제	4	0.4
	지역사회와의 상생/지역 경제 문제	4	0.4
	중소기업 지원 정책	4	0.4
27	연금관련 문제	3	0.3
	국민기초 소득	3	0.3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정책	3	0.3
	국가부채 관련 문제	3	0.3
31	한일, 중국, 일본과의 관계 문제	2	0.2
	재난지원금 관련 문제	2	0.2
	노조관련 문제	2	0.2
	저소득층 지원/소외계층 지원	2	0.2
	노동법 문제	2	0.2
	건설경기 활성화/건설하도급 강화	2	0.2
	빈부격차 문제	2	0.2
38	신생에너지 수소관련	1	0.1
	창업지원	1	0.1
	방역패스 문제	1	0.1
	탁상행정 문제	1	0.1
	중대재해법	1	0.1
	청년 관련 정책/청년들을 위한 저축	1	0.1
	산업구조 개편	1	0.1
	높은 최저 임금	1	0.1
	화물차 운행 관련	1	0.1
	배달업체의 횡포	1	0.1
	여성고용 문제	1	0.1
	대기업, 중소기업 납품가격 현실화	1	0.1
	국정운영 관련 문제	1	0.1

순위	토론주제	사례수(건)	비율(%)
	여성가족부 예산	1	0.1
	사회재분배	1	0.1
	연동형 비례선정	1	0.1
	재단 지원금 차등 지급	1	0.1
	검은돈 합법화 회수	1	0.1
	산업장비벽의 규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이해도	1	0.1
	가격표시제	1	0.1
	자유로운 시장 질서 문제	1	0.1
	불공정거래 문제	1	0.1
	부정부패 척결	1	0.1
	모름/무응답	211	21.1

경제 분야의 토론 주제를 폐쇄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경제 대책’(18.5%), ‘일자리 및 노동정책’(15.6%)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계부채 문제’(10.5%), ‘경제민주화, 경제양극화 완화 등 경제개혁’(10.2%), ‘증세·감세 등 조세정책’(9.0%),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및 노동정책’을 가장 많이 꼽은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위 집단에서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림 3-12] 경제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 정치 분야

정치 분야의 토론주제를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대북정책'이 4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검찰 개혁'(31명), '도덕성/정직/투명한 정치'(24명)에 이어 '여야 통합'(24명), '고위공직자 비리/부정부패'(19명), '공정한 정치'(18명), '대선후보 자격조건 논의'(17명), '외교정책'(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 정치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순위	토론주제	사례수(건)	비율(%)
1	대북정책	48	4.8
2	검찰 개혁	31	3.1
3	도덕성/정직/투명한 정치	24	2.4
4	여야 통합	22	2.2
5	고위공직자 비리/부정부패	19	1.9
6	공정한정치	18	1.8
7	대선후보 자격조건 논의	17	1.7
8	외교정책	16	1.6
	국가 안보	16	1.6
10	국민을 위한 정책	15	1.5
11	대장동 사건	13	1.3
12	사법부 개혁	12	1.2
	상대방 비방 없이 토론	12	1.2
14	정치 개혁	10	1.0
	국회의원 감축	10	1.0
16	정치평준화 개혁	9	0.9
	헌법개정	9	0.9
	국회의원 특혜	9	0.9
19	거대 양당폐지	8	0.8
20	공수처 관리	7	0.7
	민주주의 정치	7	0.7
	여성가족부 폐지	7	0.7
23	부동산 정책	6	0.6
	젠더 갈등	6	0.6
	언론 개혁	6	0.6
	선거법 개정	6	0.6
	국회의원 임금 조정	6	0.6
	국민 대통합	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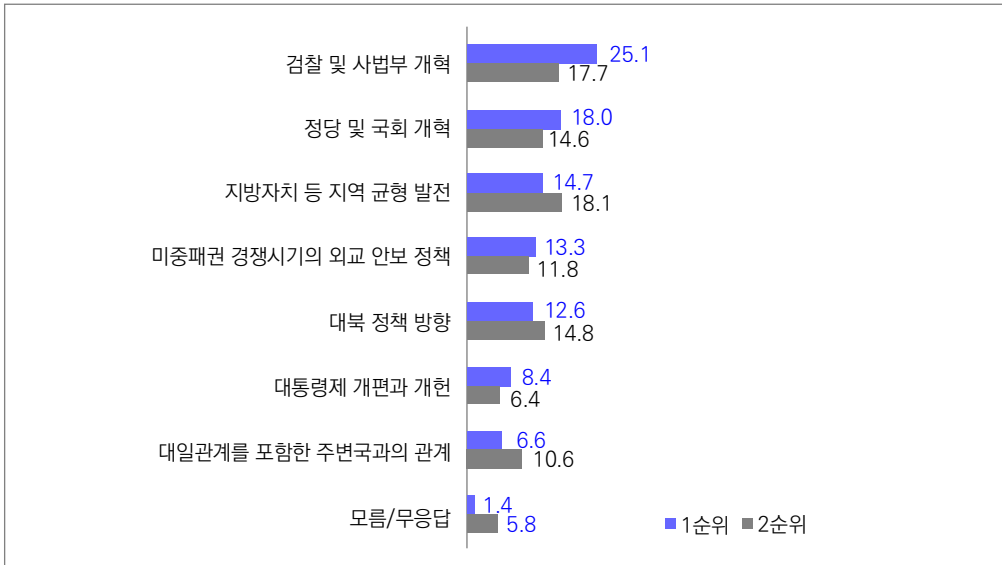


순위	토론주제	사례수(건)	비율(%)
29	국회의원 임기	5	0.5
	국회의원들의 국정운영 정상화	5	0.5
31	지역감정 해소	4	0.4
	평등사회	4	0.4
	정권교체	4	0.4
	공약실현	4	0.4
	일자리 창출	4	0.4
36	대통령 권한 축소	3	0.3
	지방자치 관련	3	0.3
	민생문제	3	0.3
	리더십 관련	3	0.3
40	새로운 정치인 발굴	2	0.2
	사드배치	2	0.2
	여성정책	2	0.2
	방역패스문제	2	0.2
	단일화	2	0.2
	대통령 특별사면 정책	2	0.2
	정당 중심의 정책	2	0.2
	국회 개혁	2	0.2
	정치인의 능력	2	0.2
	국익을 위한 정치	2	0.2
	대통령중심권력 분산	2	0.2
	농민을 위한 정책	2	0.2
	코로나 정책	2	0.2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2	0.2
	권력기관 분산	2	0.2
	대통령중임제	2	0.2
	경제 살리기	2	0.2
	국회 청렴화	2	0.2
	노동계의 유연성	2	0.2
	적폐청산	2	0.2
60	연금개혁	1	0.1
	저출산 문제	1	0.1
	국회 현안처리	1	0.1
	여성국회의원 정책	1	0.1

순위	토론주제	사례수(건)	비율(%)
	기후 관련 정책	1	0.1
	인사문제 공정성	1	0.1
	경제인 규제완화	1	0.1
	연좌제법 보완	1	0.1
	미래 정치의 비전	1	0.1
	정당의 다양화	1	0.1
	과학기술 분야	1	0.1
	주식 공매도 관련 대책	1	0.1
	탈원전화 대체방안	1	0.1
	입법 독재 방지	1	0.1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1	0.1
	신뢰받는 정치	1	0.1
	권역별 비례대표계	1	0.1
	지방의원 철폐	1	0.1
	세대 갈등 문제	1	0.1
	노년층을 위한 대책	1	0.1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1	0.1
	정당토론	1	0.1
	정부의 간소화	1	0.1
	대통령 연임제	1	0.1
	시민자유권	1	0.1
	공무원제도 개혁	1	0.1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1	0.1
	경찰 개혁	1	0.1
	대선후보자 공약 개혁	1	0.1
	모름/무응답	408	40.8

정치분야의 토론주제를 폐쇄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을 꼽은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고, ‘정당 및 국회 개혁’(18.0%), ‘지방자치 등 지역 균형 발전’(14.7%)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미중패권 경쟁시기의 외교안보 정책’(13.3%), ‘대북 정책 방향’(12.6%), ‘대통령제 개편과 개헌’(8.4%), ‘대일 관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등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 많이 꼽은 대구/경북 지역과 ‘정당 및 국회 개혁’을 가장 많이 꼽은 무직/기타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위 집단에서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림 3-13] 정치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 사회 분야

사회 분야의 토론주제를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 관련 정책’이 5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극화 문제’(40명), ‘젠더 갈등’(33명)에 이어 ‘저출산/인구감소 문제’, ‘일자리 창출/고용 문제’(각 28명), ‘노인 관련 정책(일자리, 복지, 치매 등)’(22명), ‘코로나 관련 대책/방역 관련 대책’(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9] 사회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순위	토론주제	사례수(건)	비율(%)
1	복지관련 정책	56	5.6
2	양극화 문제	40	4.0
3	젠더 갈등	33	3.3
4	저출산/인구감소 문제	28	2.8
	일자리 창출/고용문제	28	2.8
6	노인관련 정책(일자리, 복지, 치매 등)	22	2.2
7	코로나 관련 대책/방역 관련 대책	19	1.9
8	교육관련 문제	18	1.8
9	저소득층 지원/소외계층 지원	17	1.7
10	빈부격차 문제	14	1.4
	치안문제/강력범죄 강화	14	1.4
12	부동산 정책	10	1.0
	노령연금/국민연금/연금개혁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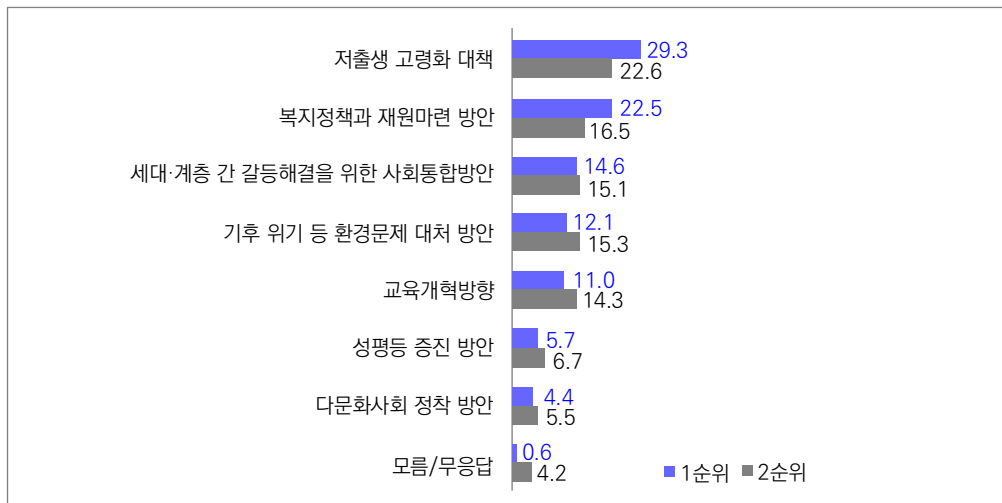
순위	토론주제	사례수(건)	비율(%)
14	민생문제	8	0.8
	언론개혁	8	0.8
	세대별 갈등 문제	8	0.8
17	장애인을 위한 정책	7	0.7
	지역 균형 발전 정책	7	0.7
	안전 관련 문제/사건사고 대책 문제	7	0.7
	공정한 사회	7	0.7
	여성관련 정책	7	0.7
22	노동격차/노동문제	6	0.6
	아동학대 및 아동 성범죄 문제	6	0.6
	기후변화, 환경분야(1회용품 줄이기 등)	6	0.6
25	차별금지법/평등사회	5	0.5
	동물복지 정책	5	0.5
	세금관련 문제(부동산 세금, 상속세, 양도세, 재산세 등)	5	0.5
	영유아/육아 지원 정책(돌봄, 방과후 수업 등)	5	0.5
29	사회적 약자 보호	4	0.4
	청소년법 폐지/청소년법 개정	4	0.4
	다문화 가족 문제/이주민 문제	4	0.4
	국민 대통합	4	0.4
	안정적인 사회 구현	4	0.4
	대장동 사건	4	0.4
	소통/존중/화목/정의로운 사회	4	0.4
36	대선 후보 자격조건/후보자 가족 검증 논의	3	0.3
	여성가족부 폐지	3	0.3
	경제 활성화	3	0.3
	코로나로 인한 교육문제/비대면 수업	3	0.3
	서민경제 정책	3	0.3
	지역감정 해소	3	0.3
	사형제도 부활	3	0.3
43	성범죄 관련 문제	2	0.2
	갈등해소	2	0.2
	소상공인 지원 대책	2	0.2
	청년문화	2	0.2
	비정규직 개선	2	0.2
	기초질서	2	0.2

순위	토론주제	사례수(건)	비율(%)
	자영업자 지원 대책	2	0.2
	부정부패	2	0.2
	방역패스 문제	2	0.2
	노조/노사관계	2	0.2
	군필 남성예 대한 보상 및 소급 기간	2	0.2
54	지하철 확대	1	0.1
	만 나이 사용 방안	1	0.1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	1	0.1
	1인가구 관련 문제	1	0.1
	제외 대상 업체 주 5일제 법 시행 방안	1	0.1
	불임복지 관련 문제	1	0.1
	대출규제	1	0.1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	1	0.1
	반중정권	1	0.1
	가계부채	1	0.1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1	0.1
	임금격차 해소	1	0.1
	강성노조 폐지	1	0.1
	공무원비리 관련	1	0.1
	부정투표 방지	1	0.1
	정치개혁	1	0.1
	공공도서관 일상화	1	0.1
	정규직 불균형	1	0.1
	국가 안보	1	0.1
	공무직을 정규직 요구 반대	1	0.1
	낮은 금리 및 비싼 이자	1	0.1
	운동및 문화를 즐길수 있는 곳 마련	1	0.1
	직장내 왕따/따돌림 문제	1	0.1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된 대안	1	0.1
	직장인 근무기간 연장으로 퇴직 연도 보장	1	0.1
	공약실현	1	0.1
	결혼문제	1	0.1
	국민의 알권리	1	0.1
	사법시험 폐지	1	0.1
	여성가족부 역할	1	0.1

순위	토론주제	사례수(건)	비율(%)
	도덕성	1	0.1
	검찰개혁	1	0.1
	최저임금	1	0.1
	남북관계 개선	1	0.1
	법치 확립	1	0.1
	플랫폼 산업	1	0.1
	코로나 백신 문제	1	0.1
	농촌 지원 대책	1	0.1
	진보에 편향된 정치	1	0.1
	비장애인 무상 지원 반대	1	0.1
	인성교육 정책	1	0.1
	국가부채	1	0.1
	민주화 정치	1	0.1
	모름/무응답	404	40.4

사회 분야에서 폐쇄형 질문으로 반드시 논의되었으면 하는 주제를 조사한 결과,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꼽은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고, ‘복지정책과 재원마련 방안’(22.5%), ‘세대·계층 간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14.6%)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대처방안’(12.1%), ‘교육개혁 방향’(11.0%), ‘성평등 증진 방안’(5.7%), ‘다문화사회 정착 방안’(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정책과 재원마련 방안’을 가장 많이 꼽은 40대,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위 집단에서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림 3-14] 사회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2) 토론주제 선정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차수별 주제는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과 40개 단체·학회로부터 추천 받은 토론의제를 전문위원회의(2022. 2. 8.)와 준비소위원회의(2022. 2. 9.)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2월 11일(금) 제5차 위원회의에서 선정하였다.

초청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참석 예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시간총량제토론’에는 2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주도권토론’에서는 각 차수별 토론 분야로 정해 토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 수 10명 미만의 경우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주제 2개를 선정(1. 경제 활성화 방안 2. 사회 통합 방안)하였으나, 최종 진행방식이 ‘후보자 공약발표’로 활용됨에 따라 선정된 주제는 활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약 30여개의 각종 환경 관련 단체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단일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 이는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위원회의에서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단일 주제로 채택하기보다 초청 1차 후보자 토론회의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 폭넓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 선정 현황은 <표 3-30>과 같다.

<표 3-30>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현황

구 분	토론분야	토론주제
초청 1차	경제	[주제1]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주제2]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초청 2차	정치	[주제1] 권력 구조 개편 [주제2]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초청 3차	사회	[주제1] 복지 정책과 자원 조달 방안 [주제2] 인구 절벽 대응 방안
초청 외	국정전반	후보자 공약 발표

5)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초청대상 후보자의 선정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1) 여론조사 공표결과 수집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명시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¹⁹⁾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사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언론기관 여론조사 수집은 1월 16일(일)부터 2월 14일(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및 수집 대상 언론기관(방송사업자 5개사, 전국 보급 일반 일간신문사 157개사)의 신문·방송 보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공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총 220건 중 관련 법규 및 기준과 부합하지 않거나 법정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 등을 제외하고 45건의 여론조사 공표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31>과 같다.

<표 3-31>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결과

후보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허경영	김동연	조원진	고영일	대상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36.9	40.4	2.3	8.2	2.7	0.6	0.8	0.3	45건

※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총 220건 중 '법정 언론기관 미해당' 등의 사유로 175건은 제외

19) 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

(2)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초청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였다.

④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표 3-32〉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단위: 석)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석수	172	106	6	3	1	1

※ 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재 정당의 명칭 및 기재순위(2022. 2. 12.)

④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표 3-33〉 정당별 직전선거의 득표율 현황

(단위: %)

정당명 \ 선거별	제19대 대통령선거 (17. 5. 9.)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20. 4. 15.)	제7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18. 6. 13.)	제7회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 (18. 6. 13.)
더불어민주당	41.08	38.77 (더불어시민당 33.35 열린민주당 5.42)	51.42	57.45
국민의힘	24.03 (자유한국당)	33.84 (미래한국당)	27.76 (자유한국당)	29.08 (자유한국당)
정의당	6.17	9.67	8.97	3.93
국민의당	-	6.79	-	-
민생당	28.17 (국민의당 21.41 바른정당 6.76)	2.71	9.33 (바른미래당 7.81 민주평화당 1.52)	8.65 (바른미래당 7.20 민주평화당 1.45)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표 3-31〉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 결과' 참조

2월 13일(일)부터 14일(월)까지 2일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14명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의 초청 대상자는 2월 15일(화) 제6차 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3-34〉 후보자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

구 분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초청대상 후보자)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	국민의힘	윤석열
	3	정의당	심상정
	4	국민의당	안철수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5	기본소득당	오준호
	6	국가혁명당	허경영
	7	노동당	이백윤
	8	새누리당	육은호
	9	새로운물결	김동연
	10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11	우리공화당	조원진
	12	진보당	김재연
	13	통일한국당	이경희
	14	한류연합당	김민찬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의 참석대상은 4명,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후보자토론회 참석대상은 10명이 선정되었으나, 기호 9번 김동연 후보(새로운물결)와 기호 11번 조원진 후보(우리공화당)가 불참 통보를 해오며 따라 2월 22일(화)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에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참석하였다.

앞선 여론조사 수집결과의 평균지지율 100분의 5 이상을 충족하여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에 추가된 후보자는 없었으며, 이와 관련해 일부 초청 외 후보자가 위법한 여론조사를 기초로 토론회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불공정하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하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금지 및 중계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기각되었다.

6) 설명회 개최

제6차 위원회의(2022. 2. 15.)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초청 후보자가 선정됨에 따라 2월 17일(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후보자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토론회 진행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초청 및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를 구분하여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개최하였다.

〈표 3-35〉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자	
			중앙토론회	후보자측
초청	2022. 2. 17.(목) 10:00~11:3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	사무국장 방송토론팀장	대리인 4명 외 3명
초청 외	2022. 2. 17.(목) 14:00~15:3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	토론통화팀장 직원 3명	대리인 8명

설명회는 안내자료 및 수행원·차량 출입증 등의 배부를 시작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에 이어 방송토론팀장이 토론회 ‘개최 개요’, ‘토론후제 및 진행방식’, ‘당일 일정 및 토론회 진행’,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토론문화팀장이 방송사 외곽 선거운동구역 및 차량통제 등의 내용과 방송사 내부 출입카드 발급, 보안검색대 운영 등 토론회 현장 질서유지 계획에 대해 안내 하였다.

안내자료 설명 후 토론회 개최 시 후보자의 자리 및 발언순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추첨을 진행하였다. 추첨은 토론회 차수별로 나누어 후보자의 기호 순서에 따라 추첨순서를 추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후보자의 대기실과 방송사 외곽의 후보자별 지지자 선거운동구역은 토론회 차수별 자리 및 발언순서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하였다.

〈표 3-36〉 초청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추첨 결과

후보자			추첨결과		
기호	정당명	성명	1차	2차	3차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A	D	D
2	국민의힘	윤석열	D	C	B
3	정의당	심상정	C	A	A
4	국민의당	안철수	B	B	C

〈표 3-37〉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추첨 결과

기호	정 당	성 명	추첨결과
5	기본소득당	오 준 호	H
6	국가혁명당	허 경 영	C
7	노동당	이 백 윤	F
8	새누리당	옥 은 호	D

기호	정 당	성 명	추첨결과
10	신자유민주연합	김 경 재	E
11	우리공화당	조 원 진	I
12	진보당	김 재 연	G
13	통일한국당	이 경 희	B
14	한류연합당	김 민 찬	A

※ 기호 11번 조원진 후보는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나, 토론회에 불참함.

추첨 진행 후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활용하여 후보자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고 안내사항 등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였다. 후보자 측 대리인들은 앞서 개최된 두 차례의 언론사 주관 후보자토론회 사례를 예로 들며 토론진행방식과 사회자의 역할·개입 범위, 토론 규칙을 어기는 후보자에 대한 대책 등 예상 사안 별로 질의를 하였다. 또한 후보자토론회의 세트 시안, 세트 공개시점, 카메라 대수 및 유튜브 등을 통한 중계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등 2017년 제19대 대선과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림 3-15]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2022. 2. 17.)



토론회 진행방식 등 안내

자리 및 발언순서 추첨

추첨결과 발표

7) 질문사항 선정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공통질문 선정은 사회자가 직접 참여한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차수별 토론회 2일 전에 개최하는 전체위원회의에서 선정하였다.

〈표 3-38〉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관련 회의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시·장소	처리 안건 등
준비소위원회의	2022. 2. 17.(목) 16:00 위원회의실	초청 1차 질문사항 검토
제7차 위원회의	2022. 2. 18.(금) 09:30 위원회의실	초청 1차 질문사항 선정

구 분	개최일시·장소	처리 안건 등
준비소위원회의	2022. 2. 21.(월) 09:30 위원회의실	초청 2차 질문사항 검토
제8차 위원회의	2022. 2. 23.(수) 16:00 위원회의실	초청 2차 질문사항 선정
준비소위원회의	2022. 2. 27.(일) 11:00 위원회의실	초청 3차 질문사항 검토
제9차 위원회의	2022. 2. 28.(월) 09:30 위원회의실	초청 3차 질문사항 선정

사회자 공통질문은 사회자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서 각각 작성한 질문사항 및 토론의제 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질문안 등을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교차 검토한 후 전체위원회의에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회자 공통질문은 그 요지를 4명의 후보자 측에 사전에 통지하였다.

〈표 3-39〉 후보자토론회 주제별 질문요지 등 선정 현황

구 분	주 제	질문요지
초청 1차 (경제)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청년실업,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점 경제 정책 방향과 목표
초청 2차 (정치)	권력 구조 개편	민의 반영과 사회 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국익 도모를 위한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초청 3차 (사회)	복지 정책과 자원 조달 방안	각 후보의 복지 정책과 자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인구 절벽 대응 방안

8) 토론회장 설비 및 질서유지

(1) 토론회장 설비

토론회장 세트설비는 사회자와 후보자가 마주보는 형태를 기본 구조로 하고 복잡한 형태는 피하면서 어느 각도에서 비추어도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도록 설비하였다. 후보들은 모든 후보가 한 눈에 들어오도록 반원 형태로 배치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후보 간 2m 씩 간격을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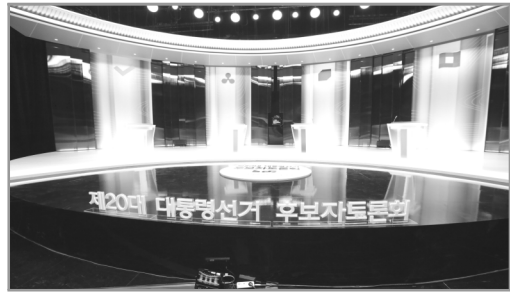
시간총량제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을 사용하는 초청 1~3차 후보자토론회는 후보들이 서서 토론하는 입식 형태로 연단을 설비하고, 후보자 공약발표로 진행되는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좌석에 앉아서 토론하는 좌식 형태로, 탁자와 의자를 설비하였다.

초청 후보자토론회의 연단은 참고자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판을 보다 넓게 제작하고 자료 수납 등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후보자의 다리 움직임 등이 TV화면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연단의 하단부는 불투명한 소재로 제작하였다. 연단의 하단부에 각 정당의 색상을 전식 장비를 통해 표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였다.

[그림 3-16] 후보자토론회 스튜디오 설비 현황



초청 1차(MBC D 공개홀)



초청 2차(SBS 오디토리움)



초청 3차(KBS TS-4 스튜디오)



초청 외(MBC B 스튜디오)

후보자의 배경은 후보별로 차이가 없도록 하고 소속 정당색과 정당 로고, 장식용 무늬 등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반대로 사회자는 화면에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무채색 계열이나 비교적 어두운 톤의 계열로 배경을 장식하고, 기존과 달리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같은 토론회명을 배경에 넣지 않음으로써 시청자들이 사회자의 진행과 멘트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설비하였다.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는 LED 설비를 통해 후보자별 정당색 배경 및 상단부에 정당로고를 배치하는 형태로 설비,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는 흰색과 회색 계열의 바탕색으로 물결무늬 등을 추가하고 상단부에 아크릴 소재로 정당 로고를 구현하였고,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는 회색 계열 바탕색에 시트지 등으로 기하학적 무늬 등을 추가하였다.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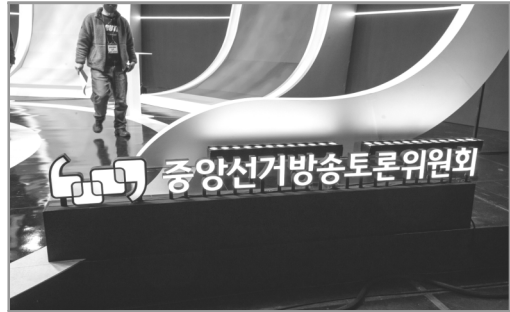
경우 배경을 각 정당에 맞춤 경우 혼란스러울 것을 염려하여 밝은 회색 계열의 바탕에 패턴 등으로 장식하여 모두 공평한 배경을 연출하였다.

토론회 중앙 원형 구조물은 토론회명(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징물(Corporate Identity, C.I) 등을 넣어 제작하고, 선거슬로건('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기관명, 토론회명 등을 별도 구조물로 제작하여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선거슬로건이 담긴 물컵 등을 제작하여 후보자 및 사회자가 사용할 때 수시로 노출되도록 하고, 3차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천장에 LED 설비를 통해 토론회명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등 시청자가 토론회를 시청할 때 주관 기관 및 법정 토론회임을 알려 대통령선거 및 기관 홍보의 목적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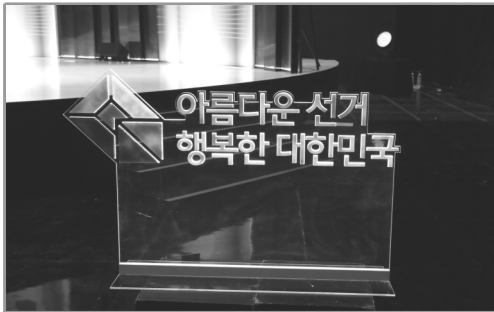
[그림 3-17] 후보자토론회 구조물 및 소품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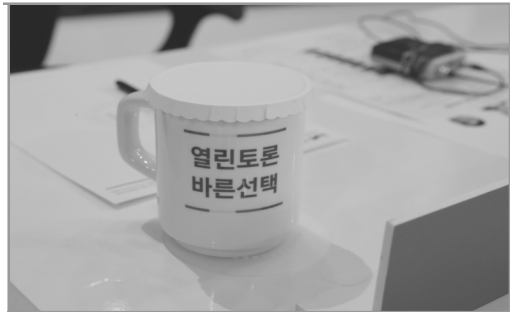
중앙 원형 구조물



주관 기관 구조물



선거슬로건 구조물



토론회용 물컵 제작

모든 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안정된 진행을 위하여 프롬프터를 사용하였고, 후보자와 사회자 전담 카메라를 1대씩 설치, 지미집(Jimmy jib), 좌·우측 풀샷(Full Shot)용 카메라, 수어통역 전용 카메라 등 총 9~10대 정도의 카메라가 활용되었다. 또한 별도로 레일카메라(Rail Cam) 등을 활용해 기존보다 다양한 화면을 연출하는 등 화면 구성의 역동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참석 후보자가 8명으로 1인 1대의 카메라 배정은 스튜디오 공간과 설비 여건 등이 충분하지 않아 2인당 1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토론회 도입부에 국민인터뷰 영상을 후보들이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 2대를 토론회장 외곽 좌·우측에 각 1대씩 설치하여 후보들이 국민들의 생생한 인터뷰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후보자별 발언시간 모니터는 각 후보자 정면에 설치하고, 여분의 받침을 준비해 후보의 신장 차이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주도권토론의 세부규칙인 ‘답변 시간 30초 보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모니터를 배치하여 어느 자리에서도 후보들의 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모든 후보자의 발언시간이 분할화면으로 나타나는 사회자용 발언시간 모니터는 사회자의 테이블 안쪽으로 매립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발언시간 계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토론시간관리시스템 담당 전문인력을 배 이상 배치하여 만전을 기하였다. 토론시간관리시스템과 수어통역세트는 스튜디오 내부 별도 공간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토론회장 설비는 개최 당일 16시 30분부터 20~30분 정도 후보자 측에 사전 공개하였고, 각 후보자 측에서 연단, 타이머 등 꼼꼼하게 설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발언시간 모니터 높낮이 조절 및 위치 조정, 연단의 각도 등 간단한 조정 외에 설비 변경 등의 요구는 없었다.

[그림 3-18] 후보자토론회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설비 현황



[그림 3-19]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세트 설비 현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KBS, MBC, SBS와 적극 협의하여 스튜디오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개별 후보자 대기실, 위원 모니터실 등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분장실과 전문 분장사 등을 배치하여 후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분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별도로 경호 및 폭발물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청 종합상황실도 방송사 내부 협조를 받아 설비하였다.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대형 대기실 2개소를 각각 가벽을 설치하여 후보자 수에 맞게 4개의 대기실로 분리하였으나, 방음 등의 문제로 후보자 측의 항의가 있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대기실과 분장실을 후보자의 대기실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4명의 후보자 모두 각각 독립된 대기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방송사의 여건상 대기실의 개수가 후보자의 인원수만큼 확보가 불가능하여 설명회 추첨 결과에 따라 대기실을 2명의 후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많은 언론사의 현장 취재요청에 따라 별도의 기자석도 설비하였다. 방송사의 협조를 받아 로비에 50석 정도 규모로 책상과 의자, 후보자토론회를 현장에서 시청 가능한 모니터, 무선 인터넷(Wi-Fi) 등의 설비를 갖춰 기자들의 기사 송고 등을 지원하였다.

[그림 3-20] 후보자토론회 기자석 설비 현황



KBS 본관 로비



MBC 미디어센터 로비



SBS 프리즘타워 로비

(2) 현장 질서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완벽한 현장 질서유지 및 후보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별로 핫라인을 구축하고 토론회장인 스튜디오 내·외부의 사전 점검을 엄격하게 실시하였다.

먼저 정당 관계자 및 후보자, 언론사, 토론회 관계자 등에게 출입자 등록 신청을 받아 방송사 출입카드의 발급과 차량출입비표 발급 등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후보자 외 출입인원을 최소화해달라는 방송사측 요청이 있었고, 이에 각 후보자 측에 최대 10명의 수행원을 기준으로 하고 스튜디오 출입이 가능한 인원은 후보별 5명씩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후보자 측의 차량 또한 후보자 탑승차량을 포함하여 최대 5대로 제한을

두었다. 발급한 출입카드는 방송사 출입통제시스템 외에 별도로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담당 직원과 경찰, 방송사 보안요원 등이 합동 근무를 하며 출입통제를 엄격하게 실시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스튜디오 내부로 진입하는 입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차수별 후보자토론회 진행 전에 경찰청에서 스튜디오 내부에 탐지견 등을 동반해 폭발물 감식을 30분 정도 실시했고, 이후 보안검색대를 본격적으로 운용하였는데, 이 때 보안검색을 실시한 인원은 출입명단과 대조 후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 토론회 진행을 위해 좀 더 빠른 보안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방송사의 출입구를 분리하여 일반인 출입구와 후보자 및 방송사 직원, 현장 관계자 등이 이용하는 출입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3-21] 후보자토론회 토론회장 출입 통제 현황



스피드게이트 설치·운용



경찰청 보안검색대

방송사 외곽의 안전 관리 및 현장 질서유지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다수의 지지자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후보자별 선거운동용 연설패담차량은 선거사무소(본부)용 1대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당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후보자의 좌석 추첨 결과에 따라 방송사 주변 후보자별 선거운동구역을 지정하여 구분하였다. 지정된 구역외의 장소는 경찰청에서 폴리스라인 설치, 경찰 인력 투입 등으로 제지하였다. 방송사 주변에 지지자들의 집회 신고가 많아 선거운동구역 확보 및 후보자 진입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회 신고 측과 협의하고, 경찰 인력이 추가 투입되는 등 현장 상황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방송사 주변에 현장단속반을 배치, 불법선거운동행위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후보별 선거운동 담당자를 사전에 파악해 당일 방송사 주변 선거운동 여부 및 집합인원 등을 수시로 확인하였다.



경찰청과 소방 당국 등의 협조로 방송사 외곽 경비 및 교통 통제가 엄격하게 진행돼 주변 지역 거주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화재 등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방송사 입구 및 주차장 등에서 구급차가 비상 대기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림 3-22] 후보자토론회 외부 현장 질서유지 현황



9) 토론회 진행

(1) 후보자의 코로나19 확진 대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격리된 장소에서 화상을 통한 토론회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토론회 개최 전 제7차 위원회의(2월 18일 금요일)에서 결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질병관리청과 중계방송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기술상 여건, 토론회 진행의 공정성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중계방송 방법은 안정성·보안성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확진 후보자에 대한 '화상연결 토론회 참여 확인서' 징구 서식, 화상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중계차 이용 및 전문인력 투입, 방역대책 등)을 포함하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자의 확진 상황 발생에 대비하였으나, 실제 확진 후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 후보자토론회 진행

후보자토론회는 토론진행표(Cue-Sheet) 및 대본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방송화면은 중계 주관방송사(KBS·MBC·SBS) 관계자와 방송제작실무회의를 거쳐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구성하였다.²⁰⁾

20) 토론회 방송화면의 최종 구성은 중계주관방송사에서 결정한다.

특히 새로 도입된 '주도권토론' 방식은 후보자에게 주도권이 주어졌을 때, 다른 후보자와 토론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연설식 진행'을 막기 위해 세부규칙으로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 '답변시간 30초 보장'을 두었고,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반 사실을 방송 자막과 사회자의 멘트 등으로 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효율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해 후보자의 발언시간이 모두 소진된 경우 마이크를 음소거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의혹 제기, 네거티브 공세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사회자의 개입 시점과 범위, 안내멘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황별 사회자 멘트 예시' 등 대처방안을 준비하였다.

〈표 3-40〉 후보자토론회 상황별 사회자 멘트 예시

구 분	상황별 사회자 멘트 예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 30초 이상 계속 발언하는 경우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되도록 1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발언시간이 약간(20초 이하) 남았을 경우 “발언시간이 ○초 남았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언시간을 초과하여 마이크가 음소거 된 경우 “◇◇◇ 후보는 주어진 발언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마이크가 음소거 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지금은 □□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토론주제 범위 안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장 이상의 참고자료(판넬)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참고자료는 2장 이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1장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상황 (위원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기호 ○번 ○○○당 ◇◇◇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하게 위법한 발언을 하는 경우 “◇◇◇ 후보는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음소거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후보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해하는 경우 퇴장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퇴장시킬 경우 “◇◇◇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퇴장하십시오. ◇◇◇ 후보는 사회자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토론 진행을 방해하여 퇴장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 후보는 토론 진행 중 토론회장을 임의로 벗어났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입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상황별 사회자 멘트 예시
시간총량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별 잔여시간이 2~3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각 후보의 잔여시간을 언급하며) 각 후보는 잔여 발언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언 중 다른 후보가 끼어들어 발언하는 경우 “◇◇◇ 후보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시에 둘 이상의 후보가 (발언권 신청), (발언을 시작)한 경우 “동시에 (발언권 신청),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부터 발언하시겠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시에 둘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하는 경우 “두 분에게 질문하셨는데, 어떤 분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여시간을 양도하려 하거나 가능 여부를 묻는 경우 “토론회 규칙에 따라 잔여 시간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계속 혼자 발언할 때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여시간이 40초 정도 남았을 때 “답변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명의 후보에게 질문하지 않았을 때 “토론 규칙상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하여야 하는데, ◇◇◇ 후보는 어느 후보에게도 질문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명의 후보에게만 질문을 한 때 “토론 규칙상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하여야 하는데, ◇◇◇ 후보는 1명의 후보에게만 질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답변시간 30초를 보장하지 않고 제지할 때 “답변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이루어지도록 사전 설명회 및 당일 리허설 현장에서 상세하게 안내하였고, 후보자들의 발언시간 편차가 발생하거나 발언을 너무 길게 하는 경우 사회자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발언시간이 많이 남은 후보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거나 잔여발언 시간을 알려주는 등 후보들이 발언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역시 실시하였다.²¹⁾ 지속적으로 청각장애인 단체 등의 불편함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WBC 복지TV’와 협력하여 후보자별 1:1 수어통역방송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21)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2항은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때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2월 21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MBC 미디어센터 D 공개홀에서 개최된 초청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토론회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리허설 종료 후 후보자의 수행원들이 퇴장을 하지 않거나, 퇴장을 하다 다시 토론회장으로 진입하는 등 장내 소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뜨거운 이슈인 만큼 후보들 간의 토론도 치열하게 진행됐다.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시간총량제토론에서 후보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새로 도입된 주도권토론에서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는 후보들의 뒷배경으로 LED를 설비하여 정당의 대표색과 정당 로고 등을 표출하였는데, 토론회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풀샷(Full Shot)에서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색상으로 다채로운 화면이었으나, 후보자만 비추었을 경우 뒤에 LED 화면에 물결 무늬가 발생하는 일종의 간섭현상, 이른바 ‘무아레(Moire)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발언 시 미세한 잡음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해당 후보자가 무선 이어폰 등을 착용하여 외부의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토론회 종료 후 SNS나 유튜브 등에 퍼지기도 하였다. 이에 중계주관방송사였던 MBC에서 사회자가 제작진과 소통하기 위해 착용하는 이어폰의 소리가 커서 마이크를 통해 방송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임을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²²⁾

[그림 3-23]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진행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2022. 2. 21. MBC)

22) “MBC, 대선후보 토론 잡음 논란에 “진행자 이어폰 때문””, <연합뉴스>, 2022. 2. 22.

②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2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SBS 상암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정치분야에 대한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각 후보들은 정치와 관련된 정책 및 공약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편’, ‘대북 정책’ 등 폭넓게 토론을 벌였다. 특히나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두 번째 시간총량제토론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하여 ‘북핵 문제’, ‘전술핵 논란’ 등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후보자가 발언 시간을 다 활용하지 않는 등 생방송 진행 시간이 여유가 있어 마무리발언 시간은 2분 30초로 늘려서 진행하였다.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사회자는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토론회 종료 후 일부 후보자 측에서 사회자가 편파적인 진행을 하였다는 항의가 있었다. 사회자는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 및 토론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발언 순서를 적절하게 지정할 수 있으므로 편파적인 진행은 아니었지만, 사회자가 발언권을 부여할 때 우선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3-24]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진행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2022. 2. 25. S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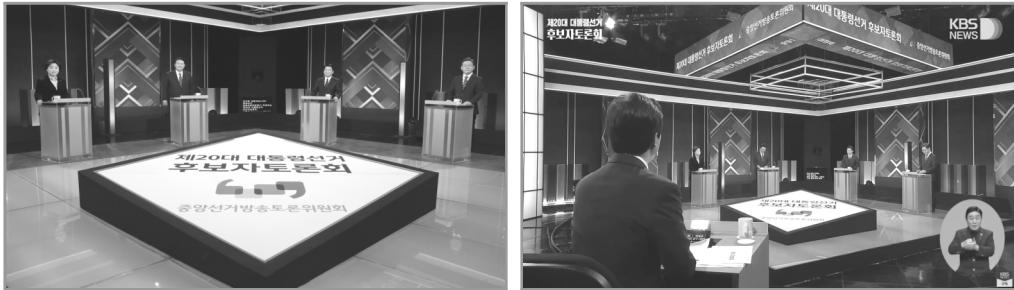
③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마지막 토론회였던 만큼 3월 2일(수) KBS 본관 TS-4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는 방송사 주변 선거운동 및 언론기관의 취재 열기가 최고조로 달했다. 토론회는 사회분야의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여가부 폐지’, ‘복지 정책’, ‘복지 재원 마련’ 등 다방면에 걸쳐 토론이 이루어졌다.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는 중계주관방송사 제작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자가 토론회장에 걸어 들어와 서서 오프닝을 진행하였고, 국민인터뷰 영상 시청 후 후보들이 무대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연출하여 토론회의 역동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주도권토론 진행 중 후보자간 질문·답변이 단답식으로 이루어져 최소 답변시간 30초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자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답변시간 보장을 위한 질문의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는 등 개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종료 후 사회자의 개입으로 토론의 맥이 끊어졌다는 이의제기가 일부 있었다.

[그림 3-25]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진행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2022. 3. 2. KBS)

④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2월 22일(화) 밤 11시부터 23일(수)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MBC B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되었다. 후보자 8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와 달리 ‘시작발언’, 2회에 걸친 ‘후보자 공약발표’와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일부 후보자가 참고자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규정 안내를 하는 상황에서 소란이 있었고, 토론회 생방송 중 ‘허리띠’, ‘철제 지휘봉’ 등 규정의 지침물을 사용하여 사회자가 규정 위반 사실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와 동일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 개최에 대한 일부 후보자의 시작 전 항의, 다른 후보자와 토론할 수 없는 진행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발언 등이 있었다. 자신의 발언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발언을 종료하는 등 상황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그림 3-26]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진행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2022. 2. 22. MBC)

10)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1)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생중계 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중계주관방송사 간의 합의를 통해 수어통역사의 표출화면을 자연스러운 ‘타원형’ 형태로 조정하고 크기를 일부 확대하였으며, 방송사마다 제각각이었던 크로마키(Chroma-Key)화면을 녹색 계통으로 통일하여 표출하였다. 수어통역사의 피로도 및 수어통역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토론회에서 2명의 수어통역사를 교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자막방송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들이 발언할 때마다 후보자의 ‘성 또는 성명’을 표출하고 백색과 황색으로 자막의 색상을 달리해 말하는 후보자가 바뀌었음을 알리도록 하였다. 아울러 토론회 당일 본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청각장애 유권자들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토론회 다시보기’에 토론회 전문 자막을 함께 제공하였다.

[그림 3-27]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실시



(2) 후보자 1:1 수어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수어통역사 한 사람이 토론회 내내 수어통역을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WBC 복지TV와 후보자별 1:1 수어통역방송을 운영하였다. 초청 1차 토론회는 준비 시간 등이 촉박하여 복지TV 측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하였고, 초청 2·3차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후보자토론회 본방송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화면 좌·우측에 각 후보자 및 사회자를 전담하여 통역하는 수어통역사 화면을 배치하였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방송과 같이 토론회 내용이 자막으로 실시간 표출되도록 하였다. 초청 2·3차 토론회에서는 사회자가 이와 같은 복지TV의 1:1 수어통역 생중계 방송을 멘트로 안내하여 시청자들에게 알렸고,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²³⁾

23) “선거방송토론회, 대선 2차 토론...복지TV 일대일 수어통역”, <장애인신문>, 2022. 2. 24.

[그림 3-28] 후보자토론회 복지TV 후보자별 1:1 수어통역방송 실시



11) 토론회 홍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매체와 다채로운 방식의 홍보를 통해 유권자의 토론회 시청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관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단위별 추진사항으로 공보 분야에서는 언론 취재 및 보도 응대, 언론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언론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홍보·미디어 분야에서는 언론매체 이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미디어과, 외부적으로는 네이버·다음카카오·방송사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후보자토론회 관련 보도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의 협조로 주요 일간지 등에 4회 배부되었고,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41〉 후보자토론회 보도자료 제공 내역

제공일자	내 용
2022. 1. 7.	제20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 진행방식 결정
2022. 2. 18.	제20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2022. 2. 24.	제20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2022. 3. 1.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후보자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제공과 함께 토론회 시작 전 스튜디오에서 보도사진 촬영, 방송국 내에 기자석 설비 등으로 실시간 토론회 관련 내용이 언론보도가 되도록 지원하였다.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토론회 관련 내용은 총 1,184건 등이었다.

〈표 3-42〉 후보자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 내역²⁴⁾

구 분	계	TV	지면보도	인터넷보도			
			일반일간 신문	일반일간 신문	뉴스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방송사
1차	355	103	73	81	24	59	15
2차	324	82	59	89	17	67	10
3차	437	80	67	110	38	131	11
초청 외	68	9	1	17	12	24	5
계	1,184	274	200	297	91	281	41

온라인 공간에서도 활발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요 포털 사이트 및 SNS, 유관기관·단체·정당 등에 선거특집페이지 및 메인화면을 이용하여 후보자 토론회 개최정보, 방송일정, 이벤트 등을 안내하는 홍보 배너를 송부하였다. 또한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특집 페이지를 개설하고 후보자토론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SNS 등을 통해 후보자토론회 개최 정보, 시청 인증샷 기획행사,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와 시각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유권자의 시청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의 협조로 한국선거방송에서 후보자토론회 방송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후보자토론회 관련 뉴스 및 재방송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에서 후보자토론회 홍보를 계속하였다.

〈그림 3-29〉 후보자토론회 개최 홍보 및 시청 이벤트 실시



그 밖에 중계주관방송사인 KBS, MBC, SBS와 협의를 통해 후보자토론회 직전과 직후 등 가용한 시간에 후보자토론회 특집 프로그램 등을 방송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였고, 실제로 각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후보자토론회 전후로 토론회 현장과 스튜디오 내부 분위기 등을 전하거나 별도 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토론회의 쟁점이나 토론회 관전 포인트 등을 짚는 등의 생방송을 진행하였다.

24) 보도자료 제공 및 토론회 개최 전·후에 후보자토론회가 포함된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검색한 내역으로, 실제 보도된 기사의 내역과 다를 수 있음.

[그림 3-30] 후보자토론회 관련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 자료출처: 각 방송사 유튜브 채널 등

12) 시청률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Nielsen Korea)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3사(KBS·MBC·SBS)를 비롯하여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과 보도전문편성채널(YTN, 연합뉴스TV)의 9개 채널에서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전국 기준 합계시청률의 평균은 33.5%로 나타났다. 특히 2월 21일 월요일에 개최된 첫 번째 초청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34.3%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초청 2·3차 후보자토론회도 각각 33%, 33.2%의 기록하며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다만, 2월 22일 화요일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8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은 4%에 머물렀다.

〈표 3-43〉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단위: %)

구분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채널			계
	KBS1	MBC	SBS	소계	TV조선	JTBC	채널A	MBN	소계	YTN	연합뉴스	소계	
1차	8.5	5.1	3.9	17.5	2.7	4.1	3.1	2.9	12.8	2.5	1.5	4	34.3
2차	8.4	5.5	4.7	18.6	3.2	2.2	2.8	2.7	10.9	2.2	1.3	3.5	33.0
3차	8.3	5.2	4.4	17.9	3.3	2.4	2.6	2.6	10.9	2.8	1.6	4.4	33.2
초청 외	2.1	0.5	1.4	4.0	-	-	-	-	-	-	-	-	4.0

〈표 3-44〉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단위: %)

구분	초청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 외	중계방송사
15대(1997)	55.1	59.6	43.7	28.7	지상파 3사
16대(2002)	38.5	36.7	36.4	8.3	지상파 3사
17대(2007)	27.0	23.5	21.5	5.6	KBS, MBC
18대(2012)	42.6	44.4	35.9	6.8	지상파 3사 및 종편 등
19대(2017)	38.5	31.2	36.0	5.5	지상파 3사 및 종편 등
20대(2022)	34.3	33.0	33.2	4.0	지상파 3사 및 종편 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평균 시청률(33.5%)은 지난 제18대(40.97%)와 제19대(35.2%)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반면,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2년의 경우 언론기관이 주관한 후보자토론회가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점, 2017년의 경우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높은 국민적 관심도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TV를 통한 시청 인구보다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청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또한 기성 매체인 TV에서 편성된 시간이 아닌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된 만큼, 단순 시청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45>의 유튜브 등의 높은 조회수는 이러한 분석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태고 있다.

<표 3-45> 후보자토론회 유튜브 등 조회수 현황

(3. 9. 선거일 기준 / 단위: 회)

구 분	유튜브						네이버TV	계
	중앙선거위	중앙토론회	(수어통역)	KBS	MBC	SBS		
1차	7,889	7,678	2,134	604,156	522,694	819,895	2,219	1,966,665
2차	15,886	2,386	421	798,958	924,126	902,354	938	2,645,069
3차	236	3,423	304	944,543	1,125,945	483,955	903	2,559,309
초청 외	1,557	1,298	-	120,309	215,335	457,798	211	796,508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2022)』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여전히 기성 매체인 텔레비전을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고 있지만, 본방송을 놓친 유권자들은 다시 보기 매체로서 유튜브를 8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로 선택하는 등 이제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생방송 시청률로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0대 유권자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유튜브를 통한 후보자토론회 시청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청률 비교에 연연하기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후보자토론회 콘텐츠의 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3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1. 개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5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해당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지원하였다.

2. 토론회 등 관리

1) 개최 현황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서울 종로구, 서초구갑, 대구 중구남구, 경기도 안성시,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 실시되었으며, 토론회 4회, 연설회 4회로 총 8회 개최되었다.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투표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의 모든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시청편의성을 고려해 오전시간대를 피하고 오후시간대(13:00~19:00) 2회, 저녁시간대(19:00~23:00) 5회, 심야시간대(23:00~25:00)에 1회 방송하였다.

〈표 3-4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시도명	선거구명	대상	개최 구분	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참석 후보자
서울	종로구	초청	토론	2022. 3. 1.(화) 20:00~21:30 (녹화방송)	SK브로드밴드, (주)딜라이브 서울경기	최재형(국민의힘) 배복주(정의당) 김영종(무소속)
		초청 외	연설회	2022. 3. 1.(화) 21:30~23:30 (녹화방송)	SK브로드밴드, (주)딜라이브 서울경기	김도연(시대전환) 구본철(국민혁명당) 김두환(독도한국당) 송문희(새로운물결) 윤대관(통일한국당) 서주원(무소속) 박종구(무소속)
	서초구갑	초청	토론	2022. 2. 25.(금) 22:00~23:20 (녹화방송)	HCN서초방송	이정근(더불어민주당) 조은희(국민의힘)
		초청 외	연설회	2022. 2. 25.(금) 23:20~23:50 (녹화방송)	HCN서초방송	구주와(국민혁명당) 김소연(무소속) 송자호(무소속)

시도명	선거구명	대상	개최 구분	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참석 후보자
대구	중구남구	초청	토론	2022. 2. 22.(화) 17:10~18:20 (생방송)	대구문화방송	백수범(더불어민주당) 권영현(국민의당) 도태우(무소속) 임병현(무소속)
		초청 외	연설	2022. 2. 22.(화) 18:20~18:50 (생방송)	대구문화방송	주선영(무소속) 도건우(무소속)
경기	안성시	초청	토론	2022. 2. 24.(목) 21:00~22:30 (녹화방송)	SK브로드밴드 기념방송	김학용(국민의힘) 이주현(정의당) 이기영(무소속)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합동	연설	2022. 2. 24.(목) 22:30~23:25 (녹화방송)	MBC충북	정우택(국민의힘) 김시진(무소속) 박진재(무소속) 안창현(무소속)

2) 토론회 관리 및 지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후보자 선정’, ‘중계방송사와 업무협약’, ‘토론회 진행’ 등 후보자토론회 세부운영 안내를 실시하고 관련 문의사항에 회답하는 등 원활한 후보자토론회 개최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돌발상황이나 사건·사고 발생 시 문제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해결방법 등을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토론회 개최 후 각급 토론위원회로부터 토론회 추진상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후보자토론회 평가서’를 제출받았다.

이외에도 후보자토론회 개최 직후 한국선거방송에 토론회 영상을 제공하여 사전투표일 전에 토론회가 재방송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특집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표 3-4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한국선거방송 편성 현황

구분	2. 28.(월)	3. 1.(화)	3. 2.(수)	3. 3.(목)	3. 4.(금)	계
초청	대구 중구남구	경기도 안성시	서울 서초구갑	서울 종로구	-	4
초청 외	대구 중구남구	-	서울 서초구갑	서울 종로구	-	3
합동연설	-	충북 청주시상당구	-	-	-	1

[그림 3-3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특집페이지 개설



재·보궐선거 특집페이지



토론회 다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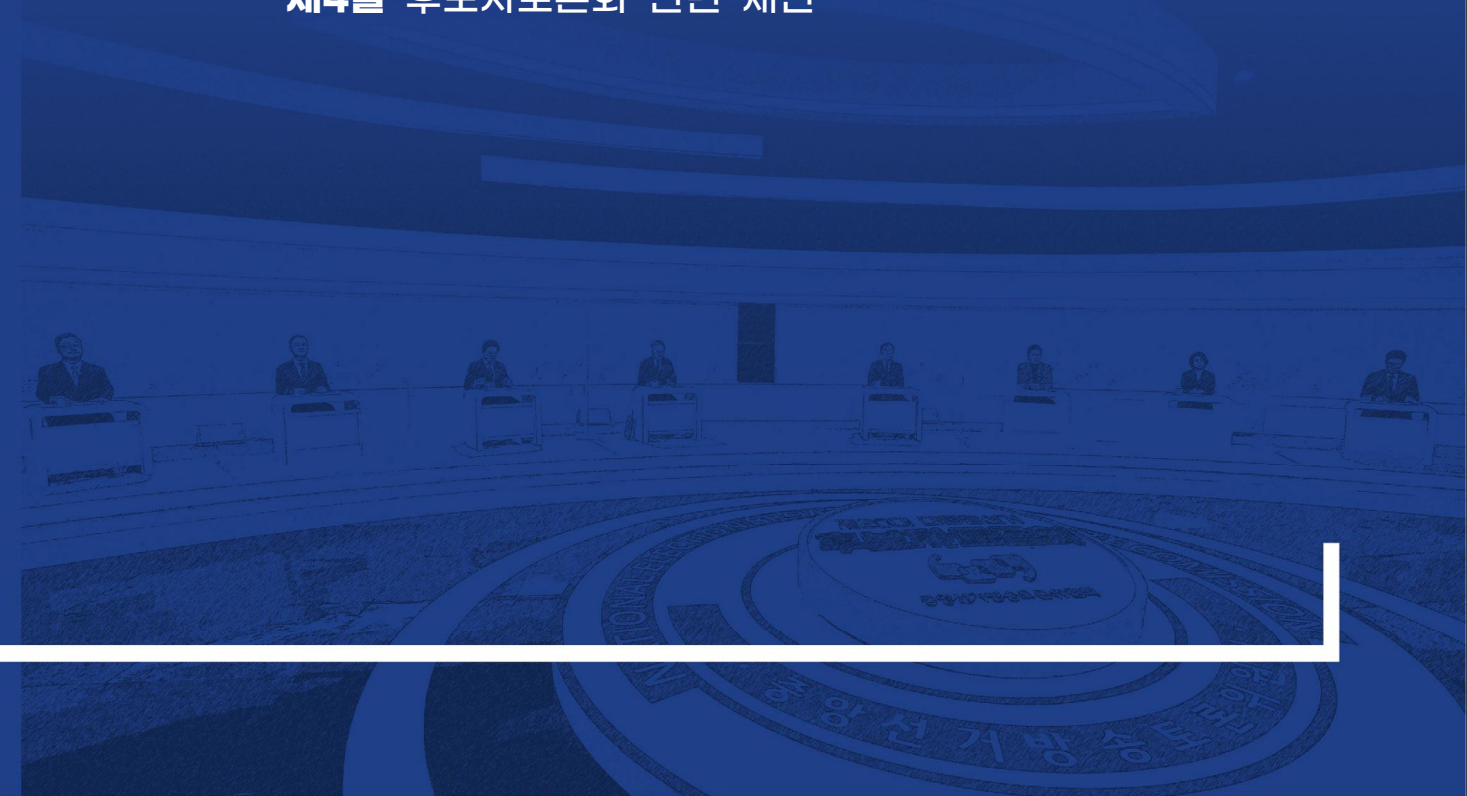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제4장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등

- 제1절 2021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개최
- 제2절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
- 제3절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 제4절 후보자토론회 관련 제언





제4장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등

제1절 2021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개최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년 11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2층 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선거방송토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일반적인 학술세미나 방식과 다르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이 발제하고 전·현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선거방송토론 담당 방송관계자,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전임 직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코로나19를 고려하여 개·폐회식을 생략하고 참석자 최소화, 좌석간 가림막 설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이번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토론회의 운영 사례 등을 비교하여 주도권토론 방식 도입과, 정책발표 시 PT형식 활용, 청중 참여 등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적용해볼만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역동적인 토론 제작을 위해 타이머 표출, 자막활용 등 화면구성 및 토론회 진행에 관해 방송관계자와의 고민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

[그림 4-1]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진행



〈표 4-1〉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참여자 현황

주제 및 참여자	사회자
<p>주제1: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방안 모색 -19대 대선 토론회와 20대 대선 경선토론회 분석을 바탕으로-</p> <p>발표 : 장혜영(명지대 교수, 중앙토론회 전문위원) 토론 : 박주연(한국외대 교수, 중앙토론회 위원) 이종희(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전 중앙토론회 방송토론팀장)</p>	<p>오미영 (가천대 교수, 전 중앙토론회 위원)</p>
<p>주제2: 역동성 강화를 위한 토론진행 방안 제언</p> <p>발표 : 태양식(SBS 보도영상본부장, 중앙토론회 전문위원) 토론 : 최성민(KBS 기자, 선거방송토론 담당PD) 심현화(중앙선관위 기록보존소장, 전 중앙토론회 지원팀장)</p>	
<p>주제3: 20대 대선 토론, 국민참여 및 관심제고 방안</p> <p>발표 : 이영배(JTBC 보도제작국 부국장, 중앙토론회 전문위원) 토론 : 김진수(KBS 해설위원, 전 중앙토론회 위원) 최지향(이화여대 교수, 중앙토론회 전문위원) 김준오(중앙선관위 총무과 사무관, 전 중앙토론회 방송토론팀)</p>	

2. 발제문

가. 제1주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방안 모색
- 19대 대선 토론회와 20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분석을 바탕으로

장 혜 영
(명지대 교수, 중앙토론회 전문위원)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는 1997년 15대 대선 때 처음으로 토론회가 실시된 이후 진일보한 TV토론회로 평가받았다. “TV토론 영향력 극대”²⁵⁾, “위력 컸던 TV토론”²⁶⁾, “진화하는 대선후보 토론회”²⁷⁾. 이것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몇몇 기사의 제목이다. 양적인 면에서 6번으로 가장 많은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형식면에서도

25) “지역 이념대결 사라지고...사이 유권자가 판세 흔들어-유례 없는 다자대결, 짧은 기간에 TV토론 영향력 극대,” 〈한국일보〉, 2017.05.08., A06면.

26) “위력 컸던 TV토론”, 〈한겨레〉, 2017.05.09, 008면.

27) “진화하는 대선후보 토론회”, 〈한겨레〉, 2017.04.17, 002면.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여러 다양한 방식들인 시간총량제 토론, 주도권 토론, 1:1 정책토론 방식 등이 시도되었다. 스탠딩 토론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시청률도 높았고, 과거 TV토론의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통념도 바꾸어 놓았다.

내년에 치루어지는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해 주요 정당에서 경선 과정이 치루어지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현장 유세 등의 어려움 때문인지 역대 가장 많은 경선후보자 토론회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상황에 맞는 좀 더 의미 있는 TV토론회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 19대 대선 토론회와 경선 후보자 토론회의 다양한 토론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6차례에 걸쳐 진행된 19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20대 각 당 후보자 경선 토론회의 경우 무작위로 주요 방송사별로 10회의 TV토론회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9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공식 초청대상 토론회 3번, 방송사 주관 토론회 3번으로 총 6차례 진행되었다. 총 6회로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표 4-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개최일자	주관기관	방송시간	사회자	시청률(%)
1	4/13 목	SBS, 한국기자협회	22:00-00:20 (녹화10:00-12:30)	김성준 (SBS 보도본부장)	11.2
2	4/19 수	KBS	22:00-00:00	박영환 (KBS 취재주간)	26.4
3	4/23 일	중앙토론회	20:00-22:00	김진석 (KBS 기자)	38.5
4	4/25 수	JTBC,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20:40-23:30	손석희 (JTBC 보도부문사장)	20.28
5	4/28 금	중앙토론회	20:00-22:00	박용찬 (MBC 논설위원실장)	31.2
6	5/2 화	중앙토론회	20:00-22:00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36.0

19대 대선 토론회 각각의 진행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개요

• 제19대 대선 토론회

	정당 인원 배치	소개	모두 발언	1부		2부		마무리
① SBS 4.13.	일렬 앉아서	영상	인사말 없음	공통질문 대북문제 경제 살리기 30초 답변	일대일 정책토론 주제: 정책공약 발표 PPT 3분, 질문 3분 (질의, 답변 각 1분 30초) [* 정책토론]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6분/ 3명 이상 질문/ 최소 답변 시간 보장 [* 자질, 도덕성, 리더십 검증]	공통질문 언론자유문제 대통령 사면권	30초
② KBS 4.19.	일렬 서서	입장 영상	인사말 30초 (슬로건)	공통질문 정치, 복핵 답변 1분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주제별) 정치/후보당 9분	공통질문 경제, 조세 정의 답변 1분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주제별) 경제/후보당 9분	20초
③ 중앙 토론회 4.23.	일렬 서서	사회자가 소개	국민인터뷰 영상 1분	공통질문 복핵위기 답변 1부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전체) 정치/후보당 18분	공통질문 권력기관, 대통령제 개선방안 답변 1부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전체) 정치/후보당 9분	1분
④ JTBC 4.25.	일렬 앉아서	사회자가 소개	인사말 없음	*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주제별) 1라운드 경제, 2라운드 안보/ 후보당 6분(1분 찬스 발언)		공통질문 내각구성 원칙과 인물선정 얕은꼴 리더십 역사속 인물은 답변 30초	주도권 토론 1라운드 정책, 2라운드 자질검증/ 6분/3명 이상 질문/ 최소 답변시간 보장	30초
⑤ 중앙 토론회 4.28.	일렬 앉아서	사회자가 소개	국민인터뷰 영상 1분	일대일 정책토론 주제: 경제 발표 3분, 후보자당 4분(질의, 답변 각 2분)				1분
⑥ 중앙 토론회 5.2.	일렬 서서	사회자가 소개	국민인터뷰 영상 1분	공통질문 복지교육방안 답변 1분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전체) 복지, 교육정책/ 후보당 18분	공통질문 국민소통방안은 답변 1분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주제별) 국민통합방안/ 후보당 18분	1분

20대 대선 후보자 경선 토론은 주요 방송국 중심으로 10회의 토론회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10회의 토론회는 다음과 같다.



〈표 4-4〉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토론회 개최 현황(분석대상)

	방송사	방영 날짜	정 당	토론 인원	출 처
1	KBS	10.05	국민의힘	8명	https://www.youtube.com/watch?v=bweFPeeP7Lc
2	SBS	09.23	국민의힘	8명	https://www.youtube.com/watch?v=j1TjkXcu4YI
3	SBS	09.28	더민주	4명	https://www.youtube.com/watch?v=CeZ1EqwdnJ0
4	OBS	10.05	더민주	4명	https://www.youtube.com/watch?v=h-1QjBijgJY
5	TV조선	09.16	국민의힘	8명	https://www.youtube.com/watch?v=ASo5157U0dl
6	MBN	10.01	국민의힘	8명	https://www.youtube.com/watch?v=TVx3HwmqBDA
7	MBC	09.28	국민의힘	8명	https://www.youtube.com/watch?v=HOyFW-w4qh8
8	MBC	09.14	더민주	5명	https://www.youtube.com/watch?v=ZrKOnXG4nM4
9	JTBC	07.05	더민주	8명	https://www.youtube.com/watch?v=sYWZ4cTdE98
10	채널A	07.08	더민주	8명	https://www.youtube.com/watch?v=nPPCKi3BtzU

10회 토론회 각각의 진행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분석대상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개요

•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분석

	정당 인원 배치	소개	모두 발언	1부	쉬어가기	2부	마무리
① KBS 10.5.	국힘 8명 일렬 서서	영상	걸어 들어온 후 서서 자기소개	일대일 정책토론 주제: 경제공약 발표 1분 30초, 질의응답 4분 30초 동일 템플릿 사용, 사회자가 지명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4분/2명 이상 질문/질문, 1분 제한/ 답변 30초 보장	50초
② SBS 9.23.	국힘 8명 일렬 앉아서	사회자 소개	모두발언 1부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6분/물없음(사회자 당부)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6분/물없음 (사회자 당부)	1분
③ SBS 9.28.	민주 4명 일렬 서서		대통령이 되면 () 꼭 하겠다 60초	일대일 정책토론 주제: 대표정책 발표 1분 30초, 토론 5분 30초 질문 30초, 답변 1분 동일 템플릿 사용, 사회자 지명	나의 인생 스토리 1분 30초 그래프 템플릿 동일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7분/2명 이상 질문/질문 1분 제한/ 답변 30초 보장	30초
④ OBS 10.5.	민주 4명 일렬 앉아서		모두발언 1분	일대일 정책토론 주제: 수도권 공약 발표 2분 30초, 토론 4분 30초 질문 30초 답변 1분 판넬사용, 사회자가 지명 (* 1분 찬스 발언)	역사에 되돌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사진 준비 1분 30초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8분/2명 이상 질문/ 질문 1분 제한/ 답변 30초 보장	1분

	정당 인원 배치	소개	모두 발언	1부	쉬어가기	2부	마무리		
⑤ TV조선 9.16.	국힘 8명 일렬 서서	소개 영상	나는 () 다 30초	OX로 풀어보는 정치 현안 질문 3개 2~3인만 30 초 이내 설명 들음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4분/2명 이상 질문/질문, 답변 짧게	악플 2개에 대한 답변 듣기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4분/1명만 질문 가능/질문, 답변 짧게	40초	
⑥ MBN 10.1.	국힘 8명 일렬 앉아서		영상 (슬로건)	공통질문 1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차별점은? 1분/판별사용	주도권 토론 키워드 제시/5분/ 2명 이상 질문/ 질문 1분 제한/ 답변 30초 보장	공통질문 2 주위담고 싶은 발언? 1분	일대일 토론 주도권자가 지목 한 1인과 토론 후보당 4분 30초 질문 답변 30초 보장	돌발질문 OX (곽상도의원 제명처리 OX) 40초	40초
⑦ MBC 9.28.	국힘 8명 일렬 서서	소개 (슬로건 과 같이) 인사		공통질문 외교안보 북한문제 1분	주도권 토론 주제: 외교, 안보, 통일/4분/2명 이상 질문/질문 1분 제한 / 답변 30초 보장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5분/ 2명 이상 질문/ 질문 1분 제한/ 답변 30초 보장	지격질문 사회자가 개인에게 질문 1분 답변	30초
⑧ MBC 9.14.	민주 5명 일렬 앉아서		출마각오 20초	일대일토론 5분 자유토론 한번 발언 50초 한 후보당 2번/5개조			주도권 토론 정책(출산문제)/5분/2명 이상 질문/질문 1분 제한/답변 30초 보장	1분	
⑨ JTBC 7.5.	민주 8명 일렬 앉아서	소개 인사		자유토론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 1인당 5분, 1회 발언 30초에서 1분, 손들면 발언권 * 1분 찬스 발언권	공통질문 대통령이 되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30초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5분/2명 이상 질문/ 질문 1분 제한/답변 20초 보장 * 중간에 OX퀴즈	40초		
⑩ 채널 A 7.8.	민주 8명 일렬 서서		다섯글자 소개 30초	1 : 7 방어전 5분 자유주제 질문 30초, 답변 1분, 손 든 순서(추가질문 이어지지 못함)	나의 인생곡 1분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4분 30초/2명 이상 질문/질문 1분 제한/답변 30초 보장	15초		



1. 토론회 진행방식

19대 대선 토론회와 20대 경선 토론회에서 사용된 토론 진행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제19대 토론회와 제20대 경선 토론회의 진행방식 비교

19대 토론회 (총 11회)		20대 경선 토론회 (총 20회)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7회 (주제별 3회, 전체 4회)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1회
주도권 토론	2회	주도권 토론	13회
일대일 정책토론	2회	일대일 정책 토론	3회
		일대일 토론 변형 방식	3회

19대 대선 토론회에서는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일대일 정책토론, 주도권 토론의 3가지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위 주관 방송의 경우 2번은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한 번은 일대일 정책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대 대선후보 경선 토론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토론자들이 모두 동시에 참여하는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주도권 토론 방식이다. 그 다음으로 일대일 정책토론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토론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일대일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1.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

시간총량제 토론 방식은 19대 대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방식이다. 토론위 주관 토론의 경우는 경제 분야 일대일 정책토론 1회를 제외한 정치, 사회 분야 토론에서 시간총량제 토론방식이 채택되었다. 19대 대선 토론회 진행 당시 각각의 TV토론이 방영된 후 각 주요 언론들의 토론회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보면 가장 부정적 평가를 받은 토론회는 3차 토론위 정치 분야 토론회와 6차 토론위 사회 분야 토론회이다. 부정 평가가 많은 3차, 6차 토론회는 모두 시간총량제(전체) 방식의 토론회였다. 3차, 6차 토론회의 부정적 평가 내용은 토론방식에 대한 내용보다는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흐른 토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러나 시간총량제(전체)라는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 두 번의 토론이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형식이 내용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대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은 JTBC에서 한 번 사용되었다.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1인당 5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총량제로 진행되었다. 한번 발언 시간은 30초에서 1분 안으로 하기를 당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손을

들면 사회자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고, 1분 찬스 발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대 경선 총 20회의 토론 중 시간총량제 토론 방식이 단 한번밖에 채택되지 않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듯 하다.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2.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가 일정 시간 주도권을 쥐고 토론을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상대 후보를 선택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이다. 주도권이 있는 후보와 지목된 후보가 일대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유토론과는 달리 끼어들기 등이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 될 수 있는 방식이다. 주도권 토론 방식은 19대 대선 토론회에서는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20대 경선토론회에서는 거의 모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방식이다,

19대 대선 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은 SBS 1차(2부)와 JTBC 4차(2부)에서 진행되었다. 19대 토론회에서는 한 후보에게 6분의 시간을 할당했고, 세부 규칙으로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 3명 이상에게 질문하도록 하였으며 상대에게 최소(30초) 답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칙을 두었다.

20대 경선 토론회에서 진행된 주도권 토론을 살펴보면, 우선 토론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총 13번의 주도권 토론 중 10번이 자유주제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세 번의 경우는 외교, 안보(MBC), 출산정책(MBC), 키워드 설정(MBN) 등으로 주제를 한정해 진행하였다. 토론 진행에 있어서 세부 조건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경우 토론자당 5분 내외 시간 할당, 2명 이상에게 질문,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최소 30초 보장 등의 규정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 규정이다. 그러나 몇몇 토론회의 경우 세부 조건들에 차별화를 두어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V조선의 경우 2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2명 이상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규정을 1명 이상에게 질문으로 바꾸었다. 이는 주도권자가 한 명에게만 질문을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내내 일대일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SBS의 경우 토론자당 6분이라는 시간만 제한할 뿐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경우도 주도권자가 원한다면 일대일 토론이 가능한 방식이다. 주도권 토론에 2명 이상 질문, 답변 시간 보장 등의 세부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발언을 독점하거나 또는 주요 후보에게 질문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부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했던 SBS 주도권 토론에서 각 주도권 토론자가 몇 명에게 질문을 던졌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SBS 주도권토론 운영현황

SBS 주도권 토론 1부	SBS 주도권 토론 2부
안상수 → 최재형	하태경 → 홍준표, 윤석열
윤석열 →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 윤석열, 유승민
최재형 →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윤석열 →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안상수 →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 윤석열	유승민 → 홍준표
황교안 → 최재형, 홍준표	원희룡 → 최재형,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 윤석열, 유승민	황교안 →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 윤석열	홍준표 → 안상수, 최재형, 원희룡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주도권 시간 동안 단 한 명에게만 질문을 던져 일대일 토론 형식으로만 진행한 경우는 전체 16회 중 4회 뿐이다. 이는 토론자들이 그동안 여러 번의 주도권 토론을 통해 이미 2명 이상 질문, 답변 시간 보장이라는 세부 조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 토론이 세부 조건을 지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질문이 한 후보에게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위의 표에서도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는 윤석열 후보인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지나친 쏠림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19대 때 진행된 주도권 토론 후 신문기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쏠림현상이었다. 한 후보가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한 후보에게만 질문을 하기도 하며,²⁸⁾ 전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 후보와 질문을 받지 못하는 후보가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²⁹⁾ 다른 문제점으로는 6분 안에 3명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4차 토론회 진행 중 사회자에 의해 언급된 문제점이다. 실제로 주도권을 쥔 토론자들은 3명이라는 규칙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 남은 매우 짧은 시간에 다른 두 사람에게 의미없는 질문을 던지는 풍경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형평성을 위해 3명 이상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규칙을 정해 놓다보니 파행적으로 진행된 면이 있다. 그러나 20대 경선에서 진행된 주도권 토론 방식들을 보면 과거 단점으로 지적된 쏠림현상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듯 하다. 다자간 토론에서 선두후보에게 질문이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판단된다. 지지율이 적은 후보가 1위 후보와 동일한 시간의 발언권을 갖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 주도권 토론에서 모든 토론자가 1위 후보에게만 질문을 했다 하여도 대선토론이 한 명의 대통령을 뽑기 위한 검증 수단이라면

28) “안 후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주도권 토론 6분 중 5분을 문 후보에게 할애하며 집중 공략했다”, “문, 안 적폐 논쟁 충돌”, 〈중앙일보〉, 2017.04.14., V01면.

29) “문제인·안철수·유승민 후보는 각각 네 번 지명돼 방어를 해야 했다. 심 후보는 두 번 방어를 했다. 반면 홍 후보는 딱 한 번 안철수 후보의 지명만 받았다”, “文 安에 집중된 화살, 홍준표 트럼프는 기피 1호”, 〈중앙일보〉, 2017.04.14., 005면.

오히려 적합해 보인다. 지나친 세부 규정보다는 토론자들에게 맡겨 놓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주도권 토론은 다자구도 토론에서 양자 간의 토론을 가능하게 해 준 좋은 방식이다. 한 토론회에서 두 꼭지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될 경우, 1부 토론은 2인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이 있는 방식으로, 2부 토론은 세부 규정이 없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구성해 보는 것도 다양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으로 보인다.

1-3. 일대일 정책 토론

일대일 정책토론 방식은 19대 대선 토론회에서 2번(1차 1부, 5차) 진행되었다. 1차 토론회는 각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PPT로 3분간 발표하고 바로 이어서 나머지 네 후보가 순서대로 돌아가며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 답변 각 1분 30초로 제한해 한 후보자와의 3분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5차 토론회는 주제가 경제 분야로 한정되었고, 후보자가 3분간 정책발표를 한 후, 한 후보자와 4분간(각 2분씩)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이었다. 두 토론에서의 차이는 후보자가 정책 발표를 서서 피피티로 하는가, 앉아서 말로만 하는가의 차이였다. 20대 경선 토론회에서는 일대일 정책 토론방식이 3차례 진행되었다. 19대와 20대 경선에서 진행된 일대일 정책토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제19대 토론회와 제20대 경선 토론회의 일대일 정책토론방식 현황

구 분	주 제	발 표	질의 응답
19대 토론위	경제 공약	3분	한 후보와 4분씩 / 질의, 답변 각 2분
19대 SBS	대표 정책	3분 피피티 사용	한 후보와 3분씩 / 질문, 답변 각 1분 30초
20대 KBS	경제 공약	1분 30초 패널 사용	전체 4분 30초 / 질문 30초, 답변 1분 손들면 사회자가 지명
20대 SBS	대표 정책	2분 30초 패널 사용	전체 4분 30초 / 질문 30초, 답변 1분 손들면 사회자가 지명
20대 OBS	수도권 공약	2분 30초 패널	전체 4분 30초 / 질문 30초, 답변 1분 손들면 사회자가 지명

일대일 정책 토론의 주제 선정을 살펴보면 2차례는 공약 전체였고 3차례는 분야를 한정하였다. 그 중 2차례가 경제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대일 정책토론의 경우 경제 분야 주제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로 판단된다.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를 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19대 SBS의 경우 후보들이 피피티를 사용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20대 경선 3번의 경우는 한 장짜리 패널로 정책을 제시하였다. 19대 토론위의 경우 한 후보를 제외하고 후보자들은 말로만 정책을 제시하였다. 19대 SBS 1차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정책 발표를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한 것도 신선한 시도였다. 이를

통해 토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후보자의 비언어적인 면을 파악하기에도 적합했다. 단조로울 수 있는 토론회에서 PPT같은 시각자료의 도입도 좋은 시도로 보인다. 반면 19대 토론위 주관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말로만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후보자들이 PPT를 사용하여 제대로 된 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렵다면 동일 템플릿의 판넬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질의응답의 경우 19대 대선에서는 각 후보에게 2분 내외의 시간을 주고 발표자와 일대일 토론이 이루어질수록 진행하였다. 20대 경선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자별로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후보들이 손을 들면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이 1회로 끝나고 재질문이 이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발견된다. 토론위 방식처럼 한 후보자간 2분 정도의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9대 대선토론회의 1:1 정책토론 방식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5차 토론 후인 29일자 세계일보는 “토론방식도 난상토론이 아니라 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한 뒤 다른 후보와 일대일 토론을 하는 방식이어서 훨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정책토론이 이뤄졌다.”³⁰⁾고 평가한다. 토론위 2차 경제 분야 토론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대일 정책 토론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4. 일대일 토론 방식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토론보다는 일대일 토론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토론 참여자 수가 여러 명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20대 경선토론회를 보면 여러 명의 후보자가 참여하더라도 일대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주도권 토론에서 질문자 수를 한 명 이하로 하거나 세부 규정을 두지 않는 것도 그 한 예이다. 이외에 20대 경선 토론에서 사용된 일대일 토론 방식은 다음과 같다.

1-4-1. MBN 양자 직격 토론

MBN에서 사용한 ‘양자 직격 토론’ 방식은 주도권 토론 방식의 변형으로, 주도권자가 한 명을 지목하여 지목한 후보와 일대일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각 후보당 4분 30초의 시간을 주었고, 세부 규정으로는 질문 30초, 답변 30초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 토론회는 8명의 후보가 참여했던 토론으로 각각의 주도권자가 지목한 후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숫자싸움에 정쟁 줄고 토론 치열” <세계일보>, 2017. 4. 29., 005면.

〈표 4-9〉 MBN 주도권토론 운영 현황

MBN [주도권자 → 지목한 후보]			
최재형 → 윤석열	원희룡 → 홍준표	윤석열 → 유승민	안상수 → 유승민
홍준표 → 윤석열	유승민 → 윤석열	황교안 → 윤석열	하태경 → 윤석열

8명의 토론자 중 5명이 윤석열을, 2명이 유승민을, 1명이 홍준표를 토론 상대자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발언권의 쏠림현상이라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위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집중적으로 지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후보자 수가 많다면 적용해 볼 만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1-4-2. MBC 맞수토론

9월 14일에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후보가 앞에 나와 마주 보고 서서 일대일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토론회의 전체 참여자 수는 5인이었다. 미리 추첨을 통해 5인의 후보자를 5개 조로 편성하였다. 한 후보가 똑같이 2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개 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낙연-추미애 / 김두관-박용진 / 이낙연-이재명 / 추미애-박용진 / 김두관-이재명

각 후보간의 토론은 후보당 5분씩 총 10분의 시간총량제로 진행되었다. 한 번 발언은 50초로 제한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도권 토론의 변형 방식으로 일대일 토론이 진행된 경우들은 많다. 그러나 그 토론회에서는 여러 토론자들이 일렬로 선 상태에서 때로는 멀리 서 있는 토론자와 일대일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청자가 보기에 두 후보간에 일대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MBC 맞수토론의 경우 해당 두 토론자가 앞에 나와 마주 서서 토론이 진행되고, 한 번의 토론이 10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이루어져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준다.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 편성이 가능하다면 시도해보기 좋은 방식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4인으로 추려진 이후의 경선 토론은 한 번의 토론회에서 일대일 토론을 두 번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진행한 국민의힘 후보 4인 토론회에서는 1부는 원희룡-유승민, 2부는 홍준표-윤석열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후보자당 20분을 사용하는 (총 40분)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4-3. 채널 A 1:7 방어전

채널 A는 토론회의 1부에서 1:7 방어전 토론을 진행하였다. 5분 동안 자유주제로, 한 후보자에게만 다른 후보자들이 질문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으로 제한하였다. 손 든 순서대로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는 방식이었다. 추가 질문이 이어지지 못해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보였다.

2. 공통질문

토론회는 대부분 1부와 2부로 나누어 구성되고, 1부와 2부 사이 또는 1부와 2부 앞 뒤에 쉬어가기 성격의 짧은 코너들을 배치하고 있다. 가장 많이 채용되는 방식은 공통질문 형식이다. 19대 대선 토론 전체 6번의 토론회 중 5차 일대일 정책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질문을 도입하였다. 공통질문을 사용한 방식은 회차 별로 차이가 있다. 2차, 3차, 4차(1부), 6차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토론을 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제기된 질문이 토론의 방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2차, 3차, 4차의 공통질문은 모두 북핵 위기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 일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보관 위주의 토론회로 치우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19대 대선 2차 토론회는 두 개의 질문을 준비해 현장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정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현장성을 살리고자 하였으나 질문 뒤에 이어지는 토론을 제한한 면은 동일하였다. 19대 대선 토론회의 경우 공통질문이 토론회 내용을 방향 짓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대 경선 토론의 경우에도 공통질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북한문제 등 토론의 쟁점이 되는 내용을 질문으로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경선 토론에서는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다소 부드러운 질문들로 대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워 담고 싶은 발언이 있다면 무엇인가”(MBN),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차별점은 무엇인가”(MBN), “대통령이 되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이름 정확히 말하기”(JTBC) 등이 질문으로 제기되었다.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보다 더 예능적인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OX 답변 방식도 TV조선과 MBN, JTBC 세 방송사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질문은 “곽상도 제명처리 적합한가”(MBN),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JTBC) “이번 대선에 도움이 안되는 후보 있다”(TV조선) 등이 OX 질문으로 제기되었다.

그 외 ‘나의 인생곡 들어보기’(채널 A),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SBS), ‘사진을 제시하며 역사에 되돌아가 하고 싶은 말하기’(SBS) 등 시각과 청각 자료를 사용하여 후보자들이 이야기 하도록 하는 방식들도 채택되었다. TV조선의 경우 각 후보자에 대한 악플을 2개씩 읽어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쉬어가기 성격의 코너들은 장점은 살리되 좀 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통 질문의 경우 19대 대선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토론의 방향을 한정짓는 질문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쉬어가기는 토론회의 분위기를 풀어주고 다소 지루한 토론회를 흥미있게 볼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질문 후 후보자들은 30초씩 매우 짧은 답변을 한 번씩 말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같은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의 차이와 순발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 토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으나, 전체 토론회의 흐름을 끊고 산만해 보일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잘못 진행하면 예능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 선거관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토론회에서는 지나친 사용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토론회 시작 - 소개와 모두 인사

19대 대선 토론회의 토론위 주최 토론회는 사회자의 후보자 소개와 1분 국민인터뷰 영상으로 시작하였다. 다른 방송사 토론회의 경우 영상과 인사말 등으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20대 경선의 경우는 영상, 사회자의 후보자 소개, 후보자 모두 발언 등이 토론회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사회자의 후보자 소개의 경우 사회자가 “○○○ 후보 나오셨습니다” 라는 소개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소개는 각 후보자들이 ‘안녕하세요’만 반복해 지루한 느낌을 준다. 사회자가 후보의 이름을 소개할 때 각 후보의 슬로건을 사용해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사 토론의 경우 사회자가 후보를 소개하기보다는 준비된 소개 영상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토론자에 대한 소개없이 바로 각 토론자들이 자신의 모두발언을 함으로써 소개를 대신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후보자들의 모두발언의 경우 자유발언 1분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20대 경선에서는 주어진 포맷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어진 포맷이란 “나는 ○○○ 이다”(TV조선), “대통령이 되면 ○○○ 하겠다(SBS)” 다섯글자 본인 소개(채널 A) 등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모두발언은 대부분 토론자들이 이미 정해진 자기 자리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KBS의 경우 토론자들이 순서대로 걸어들어온 후 서서 자기소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움직임이 있어 신선한 면이 있다.

19대 대선토론 당시 토론위는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콜드스타드 방송기법을 적용하여 오프닝 멘트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기조연설을 생략하여 토론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113 참조)고 하고 있다. 19대 대선 당시 경향신문은 “인사말과 공통질문은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³¹⁾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토론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생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19대 대선 토론회에서 토론위주관 세 차례 토론에서는 공통적으로 1분 국민 인터뷰 영상이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4. 마무리 발언

모든 토론회는 마지막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종료한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최대 1분에서 최소 15초 이다. 채널A 토론에서 마무리 발언이 15초가 된 이유는 앞의 토론 시간이 길어져서 짧아진 것이다. 마무리 발언은 30초에서 1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된다.

5. 토론회 주제 설정

토론회의 주제 설정은 토론회 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20대 경선토론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자유주제로 진행되었다. 각기 다른 방송사들이 진행하는 것이고 경선이 진행됨에 따라 토론 참여자 수가 변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구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서는 총 6회의 토론회 중 토론위 주최 세 번의 토론은 정치, 경제, 사회로 주제를 나누었다. 그러나 SBS, KBS, JTBC 주관 토론회는 각 방송사 별 한 차례 진행되는 것이기에 주제를 나누지 않고 국정 전반을 다루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방송사 토론들도 진행상의 세부 주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SBS 1부-정치, 경제 / 2부-자질검증], [KBS 1부-정치 / 2부-경제], [JTBC 1부-경제, 안보 / 2부-정책, 자질검증]

이상에서 보듯이 6회의 토론 대부분은 자질 검증이 아닌 정책 검증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정책 중에서도 정치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정치 다음으로 경제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사회 관련 이슈는 마지막 토론회에서만 다루어졌다.

20대 경선 토론회들을 보면 정책 검증이 사라진 도덕성 논란에 치우친 토론이라는 평가가 많다. 현재의 각 당 유력 후보들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실제 대선 토론에서도 토론이 이러한

31) “조기 대선에 풍속도가 달라졌다”, <경향신문>, 2017. 5. 1. 006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대선토론은 정책토론을 지향하고 있다. 19대 대선 토론 전체 6차례 토론회 중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은 1차 2부와 4차 2부 뒷부분뿐이었다. 기사들을 보면 정책 토론의 반대를 말싸움으로 생각하고 정책토론 만을 생산적 토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³²⁾ 하지만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토론을 통해 검증해야 하는 것의 1순위는 정책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이다. 19대 대선 토론회 관련 기사들에서 각 신문들은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철학과 자질, 정책 능력”(국민 4/25), “도덕성과 정책비전”(세계 4/15), “인품과 철학능력”(중앙 4/20)³³⁾을 가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후보자의 정책보다 자질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후보결정 순위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신문과 동아일보가 밝히고 있는 유권자들의 후보 결정 순위 1위는 후보자들의 자질, 도덕성이며 정책과 공약은 2위이다.³⁴⁾

이처럼 유권자들의 후보결정 기준과 비교하면 대선 토론이 정책토론만을 지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책토론만을 진행한다면 21일자 한국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마치 정확한 수치와 용어를 잘 사용하는 후보가 좋은 후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³⁵⁾ 19대 2차 토론회에서는 정책토론회였음에도 아무런 참고자료도 소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25일자 한겨레는 “자료 없이 토론하다보니 정책적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중구난방”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⁶⁾

우리나라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요시하고 네거티브와 말싸움에 대한 경계가 지나치다보니 가치토론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치토론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을 정책토론이라 규정하고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 토론 후 조선일보 오피니언에서 박성희는 1차 토론회는 정책보다 가치토론에 가까웠다고 평가한다. 박성희는 정책토론과 가치토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토론은 가치의

32) “전문가들은 19일 KBS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과 관련 정책 위주의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 위주의 토론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정책토론 없고 공격만 네가 이랬잖아 언쟁하다 끝나”, 〈문화일보〉, 2017. 4. 20., 006면.

33) “도덕성과 정책 비전 등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겨룰 필요가 있다”, “중구난방 첫 TV토론…文 안양자 끝장토론 해보라”, 〈세계일보〉, 2017. 4. 14., 006면. / “인품과 철학 능력과 리더십을 갖대로 지도자를 뽑는 선거혁명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대선 후보 변별력 높여준 2차 스탠딩 TV토론”, 〈중앙일보〉, 2017. 4. 20., 034면. / “토론이 진행돼 후보의 통치 철학과 자질, 정책 능력을 유권자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수준 이하의 TV토론…후보들의 각성이 절실하다”, 〈국민일보〉, 2017. 4. 25., 027면.

34) “후보 결정 기준으로 전체의 32.8%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꼽았다 이어 이념과 정책 30.2% 정치경험 22.9% 당선 가능성 5.3% 소속 정당 2.5% 출신 지역학교 0.5% 등이 뒤를 이었다”, “10명 중 3명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 TV토론 가장 영향”, 〈서울신문〉, 2017.04.19., 004면. /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1%는 후보의 자질과 됴됨이가 중요하다고 했다. (...) 이어 정책과 공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9.5% 였다.”, “후보 선택기준은 자질과 됴됨이 51%”, 〈동아일보〉, 2017. 5. 4., A02면.

35) “원고·률·사회자 없는 3無 토론”, 〈한국일보〉, 2017. 4. 21., A06면.

36) “문, 공수 균형 잡으며 선전, 안, 스스로 네거티브에 간혀, 심, 사회자 역할 병행 돋보여, 홍, 돼지홍분제 이슈에 허둥, 유, 보수색 강화 장점 빛바래”, 〈한겨레〉, 2017. 4. 25., 004면.

공유를 전제한다. 정책 토론은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맞붙어 서로의 한계를 발견하는 변증법적 도구이다. 이에 비해 가치 토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하고 악한지 등에 집중해 설득보다는 입장 확인이 주목적이다”³⁷⁾ 19대 토론회 내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안보관 문제였고 이에 대한 토론은 결국 같은 말이 반복되며 네거티브로 이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안보인식을 공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논하려 하니 토론이 발전해 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 어떠한 정책을 제시한다 해도 다른 가치를 지닌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토론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중앙일보 중앙시평 기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시평에서 박원호는 주적논란에 대해서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토론이 아닌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이끌고 갈 것인지”³⁸⁾를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가치적으로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이라 생각된다.

20대 경선 토론회처럼 정책은 사라지고 도덕성 검증, 자질 검증에 치우친 토론회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토론회가 정책 토론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해야하는 정책토론과, 옳고 그름이 아닌 각 후보자가 지닌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가치토론의 차이를 토론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정책토론이라는 이름하에 파행적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카데미 토론의 대표 유형 중 하나인 링컨·더글라스 형식은 대표적인 가치토론 방식이다. 이것은 링컨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 나가 상대 후보인 더글라스와 행했던 토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형식이다. 링컨은 선거에서는 패배했으나 이 토론을 통해 노예제 폐지에 대한 자신의 가치 철학을 잘 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링컨·더글라스 형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책토론만이 선거토론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가치토론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후보들의 기본철학과 도덕성을 살필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 토론으로는 일대일 정책토론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주제 선정에 있어 가능하다면 방송사와 토론위의 일정 조율도 필요해 보인다. 19대 전체 6차례 토론회를 방송순서대로 따라가면 [1차 국정전반 — 2차 국정전반 — 3차 정치 — 4차 국정전반 — 5차 경제 — 6차 사회]의 순서로, 방송되는 순서대로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37) “네가 서 있는 쪽 어디냐며 몰아붙인 몸풀기 토론”, 박성희, <조선일보>, 2017. 4. 15., A06면.

38) 박원호, “후보자 토론은 게임이 아니다”, <중앙일보>, 2017. 4. 24., 035면.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그 토론회의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 없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대선 토론회의 큰 그림을 그리고 토론위와 방송사 간의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6. 토론 좌석 배치

19대 대선 토론회의 가장 큰 이슈는 스탠딩 토론이었다. 전체 6회의 토론회 중 3번 즉 2차, 3차, 6차 토론회가 스탠딩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만큼 큰 기대를 모았고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각 신문들이 ‘스탠딩 토론’이라 부르며 평가하고 있는 내용은 스탠딩 방식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에 대한 평가인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2차, 3차, 6차 토론회는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을 후보자들이 일렬형태로 선 채로 진행한 토론회였다. 스탠딩은 토론을 앉아서 하는가 서서 하는가의 문제 이지 토론의 진행형식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기사들은 ‘스탠딩 토론’을 다른 토론진행형식과 비교되는 하나의 토론형식으로 지칭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³⁹⁾

이러한 혼란은 스탠딩과 원탁토론을 비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등글게 앉아서 진행된 4차 토론 이후 많은 신문들은 스탠딩 토론과 원탁토론을 비교한다. 기사내용으로 유추하자면 일렬방식이 아닌 등근 방식이 더 효과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탁토론의 대응으로 일렬방식이 아닌 스탠딩 토론을 지칭하고 있어 혼란을 준다. 따라서 자유토론, 주도권 토론, 1:1정책토론 같은 토론의 형식과 서서 하는가 앉아서 하는가, 일렬로 배치하는가 등글게 배치하는가와 같은 추가적인 토론 방식은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서서 진행되는 스탠딩 토론만의 특징에 대한 평가들도 있으며 그 평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서서 진행되는 것의 “특징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⁴⁰⁾ 스탠딩 토론의 특징은 토론자들이 서서 진행함으로 해서 비언어가 활성화되고 청중과의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서 있었을 뿐이지 앉아 있을 때와 동일하게 비언어가 극히 제한된 채 진행된 이번 토론은 “체력 테스트로 전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⁴¹⁾ 방송화면으로 보기에 앉아서 진행되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39) “전문가들은 스탠딩 토론 형식에 대해선 대체로 과거 TV토론 형식과 비교해 확실히 긴장감이 커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잘한 후보는 유승민 4명, 심상정 3명”, <동아일보>, 2017. 4. 20., A04면. / “스탠딩 토론 절반의 성공, 후보간 공방속 역량 확인, 토론 교칙 몰라 감정싸움도”, <한국일보>, 2017. 5. 4., A06면.

40) “3차례 대선 토론에 국민은 안보였다”, <한국일보>, 2017. 4. 25., A03면.

41) “대선 TV토론 5자 틀 깨기 어려우면 진행자 역할 키워야”, <한국일보>, 2017. 4. 21., A31면.

20대 경선 토론회를 보면 이러한 스탠딩 토론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회의 토론회 중 5번은 앉아서 진행하였고, 5번은 서서 진행하였다. 시청자들이나 후보자들에게 앉아서 하는가, 서서 하는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 배치 방식의 경우 거의 모든 토론회는 토론자들을 일렬로 배치하고 토론회를 진행한다. 단 한번 19대 JTBC 4차 토론회에서만 토론자들이 원탁으로 앉아 진행하였다. 그리고 100명의 청중을 토론회장에 참석시켜 진행하였다. 토론 진행에 있어 청중들이 질문을 하는 등의 직접 참여는 없었으나 토론회장의 청중의 존재만으로도 토론회 분위기 조성에 효과적이었다. 토론회의 궁극적 목적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유권자들을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 토론회에서는 유권자는 보이지 않고 후보자들만 보인다. 효과적인 청중의 개입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7. 사회자

사회자 역할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계속되었다. 19대 토론회에서도 많은 신문들이 사회자 역할의 확대⁴²⁾를, “단순 시간관리자에서 논점 촉진자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대선 토론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다보니 사회자의 역할은 시간관리자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자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많으나 실제로 사회자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19대 2차 토론회의 사회자에 대한 평가도 두 신문사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를 하고 있다. 24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사회자가 “장식 화분 같은 역할”만 하여 토론이 말싸움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반면⁴³⁾ 25일자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사회자가 토론 주제를 제한하는 등 너무 끼어드는 바람에 토론의 긴장도가 확 떨어졌다”⁴⁴⁾고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자의 평가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 반면 19대 4차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손석희 사회자에 대해서는 신문사 간 이견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⁵⁾

토론회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능력 있는 사회자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공정성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는 현 사회 분위기를 본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자 역할 확대라는 이상적인 목표에 몰두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 상황에 맞는 사회자의 모습을 정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토론에서 사회자가

42) “대선 TV토론 5자 틀 깨기 어려우면 진행자 역할 키워야”, 〈한국일보〉, 2017. 4. 21., A31면.

43) “TV토론 사회자”, 〈한국일보〉, 2017. 4. 24., A30면.

44) “최악의 5자 중구난방 문, 안 양자 토론누가 피하나”, 〈동아일보〉, 2017. 4. 25., A35면.

45) “네거티브, 난상 토론은 없었다, 집중도 높은 정책토론 성공”, 〈한국일보〉, 2017. 4. 26.,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시간 관리자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사회자에게 시간관리에 대한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생각한다. 절대적 공정성을 위해 잔여시간 사용 여부, 추가 발언 시간 설정, 다른 후보의 발언시간 사용 등의 세부적인 시간들을 설정하기보다 이러한 세부적인 시간 배정을 사회자가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사회자가 할 수 있는 일로 보인다.

8. 토론회 참여자 구성

시청자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일대일 토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회는 복수의 후보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양자토론에 대한 필요성은 19대 대선에서도 거의 모든 신문들이 제기하고 있다.⁴⁶⁾ 토론이 다자간의 토론회로 진행되었던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초청대상 후보 선정기준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다. 우선 중앙토론회 위주 토론회와 언론사 주최 토론회를 분리하여, 선거법 적용에서 자유로운 언론사 토론회는 유력후보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⁴⁷⁾ 그러나 이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후보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현실화되기 어렵다. 19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의 인식차이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한다.⁴⁸⁾ 두 번째는 초청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25일자 국민일보는 미국 기준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⁴⁹⁾ 세 번째는 일명 ‘슈퍼스타K’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17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중앙토론회는 1차 토론회는 현행 방식대로, 2차 토론회는 여론조사 10% 이상 후보, 3차 토론회는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로 토론 대상을 좁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⁵¹⁾

46) “지지율 15% 이상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어떤가”, 〈동아일보〉, 2017.04.14., A35면. / “5자 TV토론 아쉬움과 유력 후보만 참여가 필요성”, 〈문화일보〉, 2017. 4. 14., 039면. / “중구난방 첫 TV토론. 문재인 안철수 양자 끝장 토론 해보라”, 〈세계일보〉, 2017. 4. 14., 006면. / “대선후보 양자 토론이 보고싶다”, 〈중앙일보〉, 2017. 4. 15., 026면.

47) “방송사 연합으로 유력후보들만 따로 초청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앙선관위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오늘 밤 TV토론도 봉숭아 학당 만들 것인가”, 〈중앙일보〉, 2017. 4. 25., 034면.

48) “문재인 끝장 토론 결단 바란다-안철수 등 후보 다수 적극적 입장, 인물 진면목 겨룰 축제로 승화 가능, 문재인도 가치와 진심 드러낼 기회”, 〈한국일보〉, 2017. 4. 13, A30면.

49) “반면 미국은 민간 기구인 대선 토론관리위원회(CPD)가 선정한 5개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평균 15%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만 TV토론회에 초청한다.”, “TV토론에 시선 쏟아지는데 초당 토론 언제까지”, 〈국민일보〉, 2017. 4. 25., 003면.

50) “공약검색 부스, 오디션 방식 토론, 국민 참여적극 유도”, 〈문화일보〉, 2017. 4. 17., 00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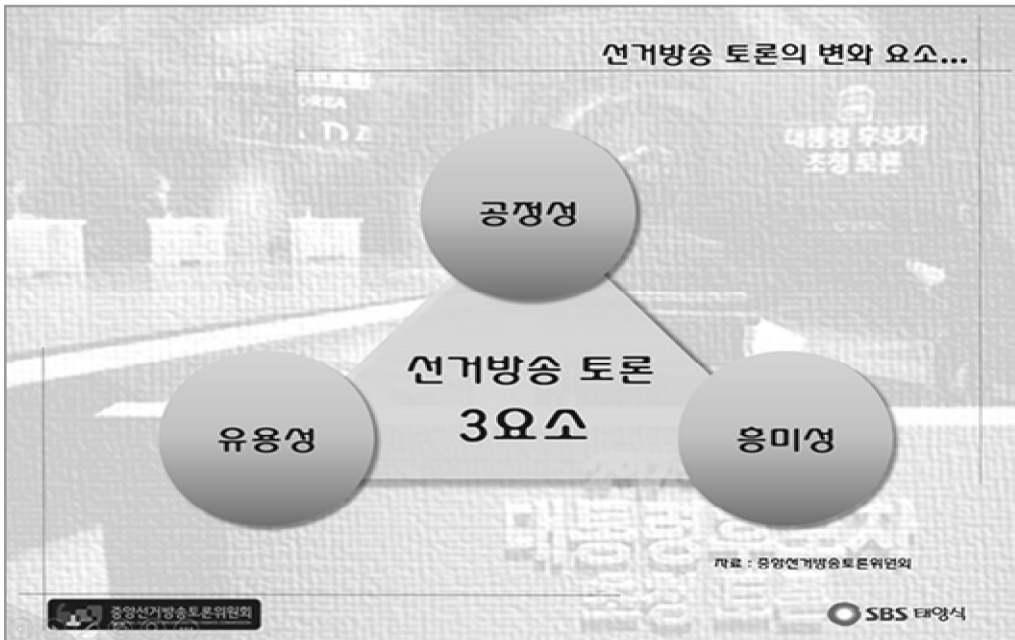
51)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 인터뷰, “1·2위 후보, 대선 토론 ‘眞檢승부 펼쳐야’·정치권에서 안 받아들여”, 〈조선일보〉, 2017. 3. 13., A28면.

현재와 같은 다당제 구도에서 모든 토론이 양자 토론으로만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모든 토론회가 모두 같은 후보들끼리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토론위에서 제출한 ‘슈퍼스타K’ 방식이 이 둘의 절충점으로 가장 적합해 보인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지지 말고 올바른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형식에 대해 점검하였으면 한다.

나. 제2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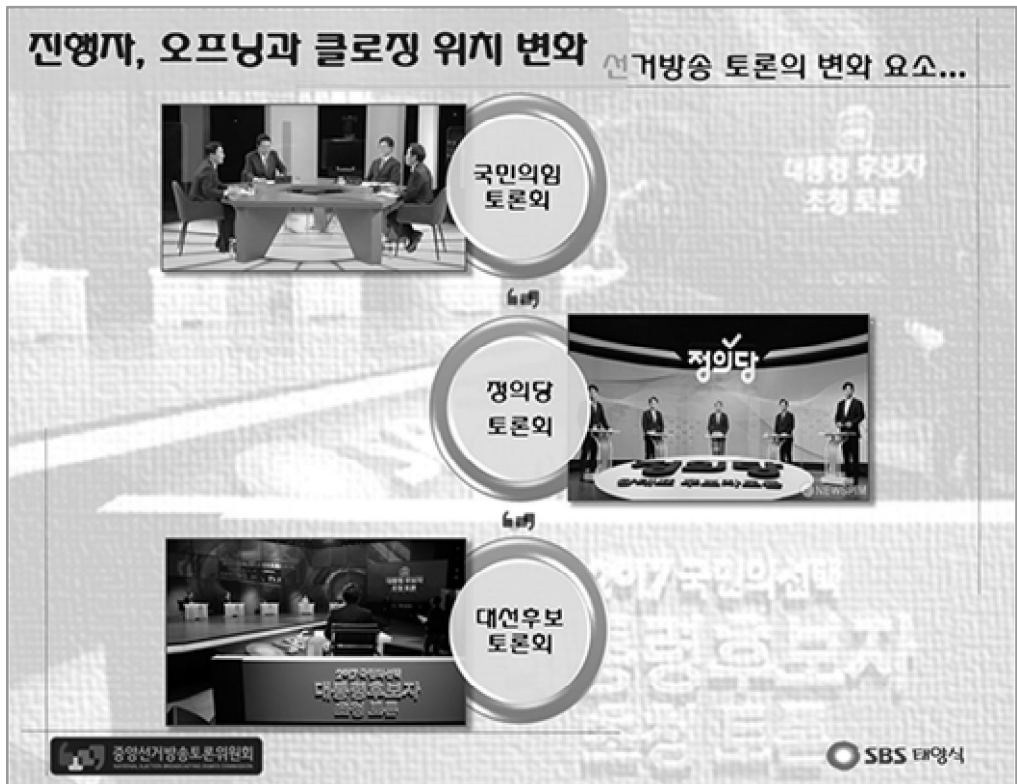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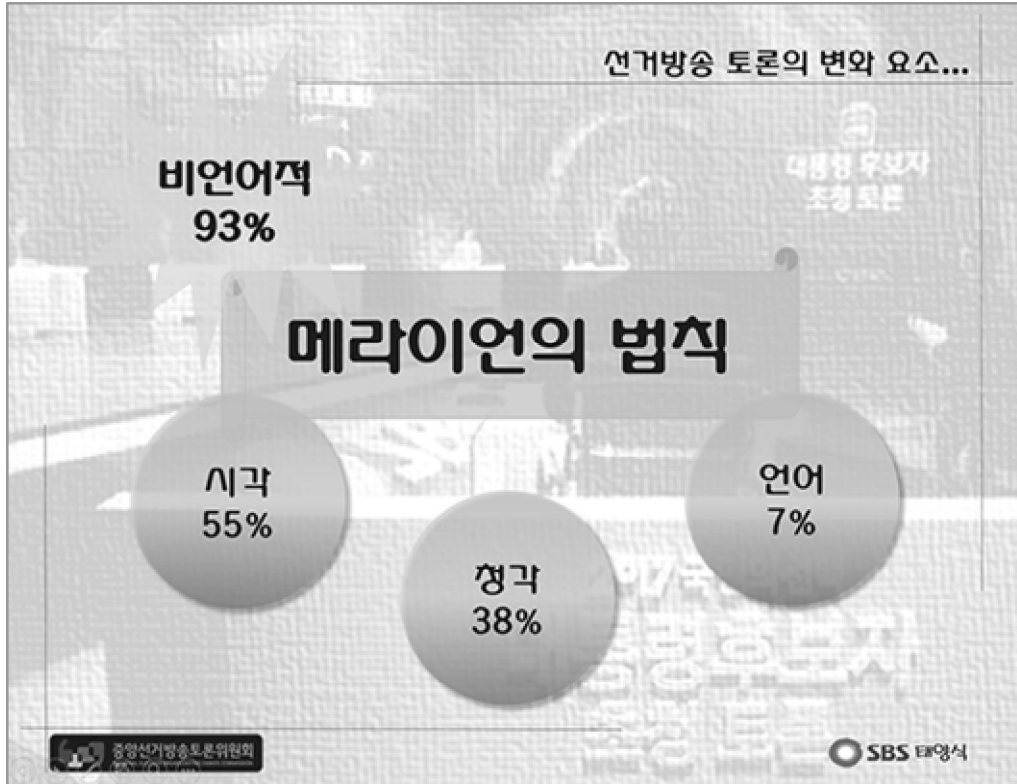
역동성 강화를 위한 토론진행 방안 제언

태양식
(SBS 보도영상본부장, 전문위원)



제4장 :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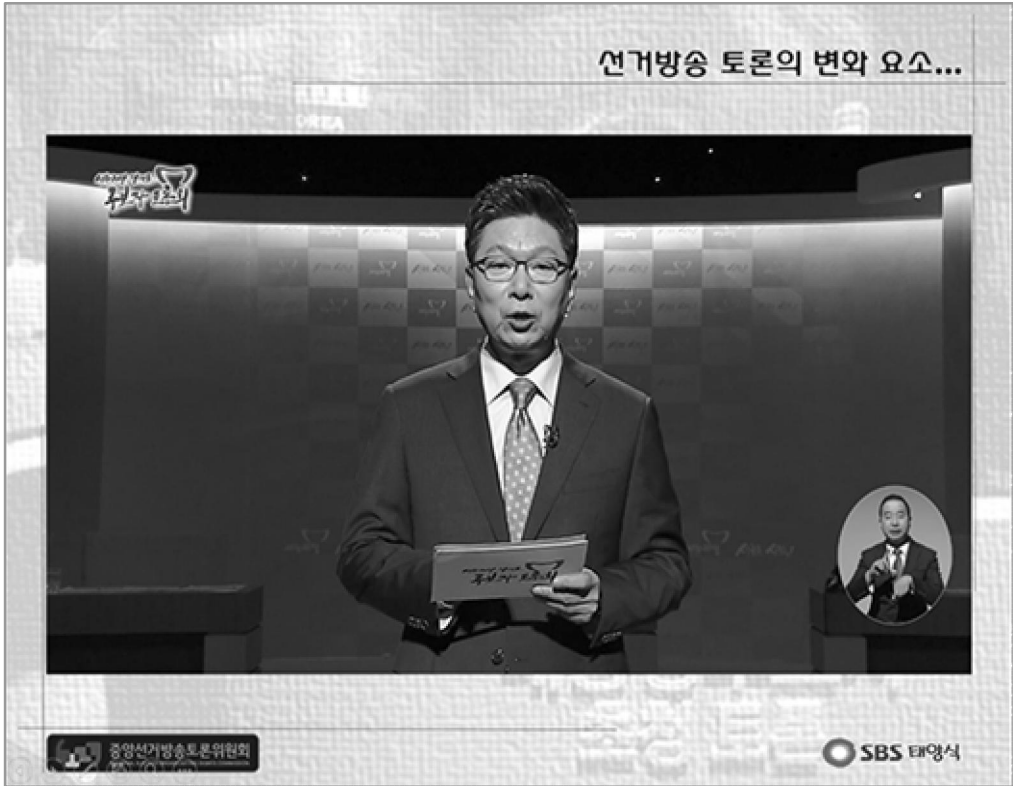






제4장 :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등





선거방송 토론의 변화 요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SBS 태양석

진행자, 오프닝과 클로징 위치 변화 선거방송 토론의 변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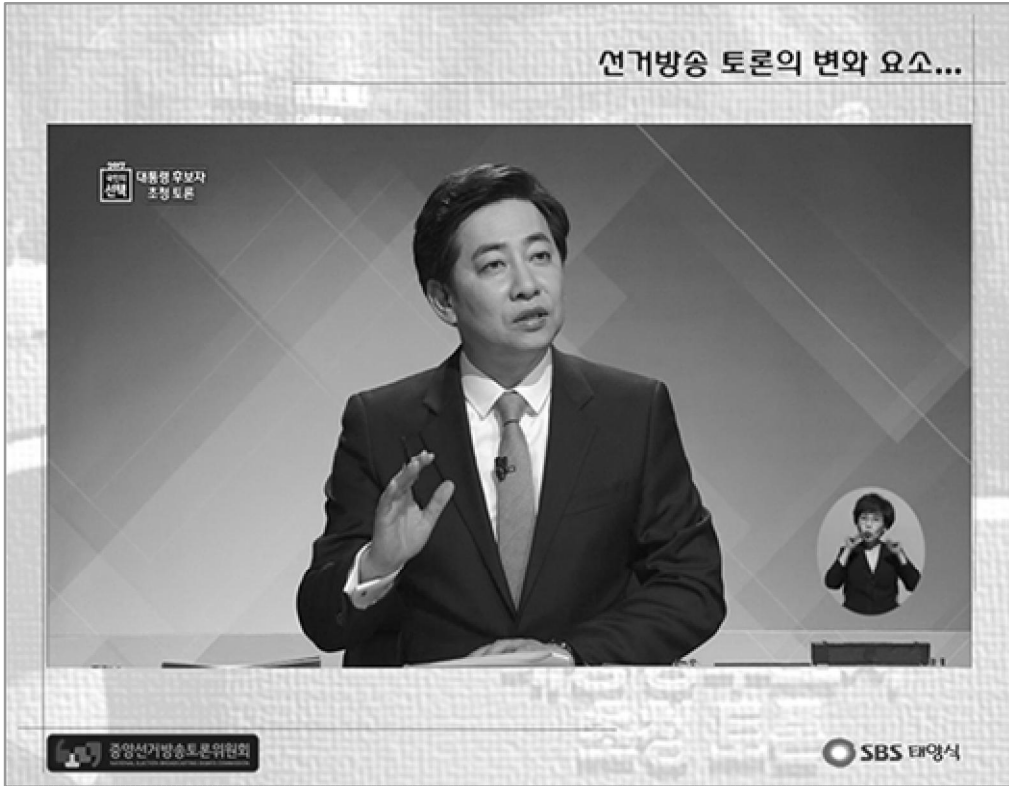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SBS 태양석

제4장 :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등





선거방송 토론의 변화 요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SBS 태양석

스탠딩(Standing) 토론
Or 좌식(Sitting) 토론

선거방송 토론의 변화 요소...



자유한국당
토론회

노태

대선 후보
토론회



노태



민주당 후보
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SBS 태양석





다. 제3주제

20대 대선 토론, 국민참여 및 관심제고 방안

이 영 배
(JTBC 보도제작국 부국장, 전문위원)

1. 들어가며

대선 후보자 토론의 첫째 임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혹은 정당)들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평가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른바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좋은 선거방송토론이 된다는 의미이다.

2004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창설된 이래로 다양한 시도의 선거방송토론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선거방송토론은 ‘공정성’이라는 기준에 얽매어서 대선 토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공정성’은 대선 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공정함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쳐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중심의 대선 토론’을 방해한다면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지난 19대 대선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 되었다는 의견이 거의 80%에 다다름 ... 19대 대선토론 백서 中)

고도로 진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대선후보자 토론의 필요성엔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무려 95% 유권자들이 필요하다 ... 19대 대선토론 백서 中)

공정한 기회 보장(공정성), 유익한 정보 제공(유용성),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흥미성)를 얻기 위해 솔한 시행착오와 경험 축적이 이뤄지는 가운데, 최근 선거방송토론은 ‘공정성과 유용성’을 넘어 포맷과 진행상의 역동성과 생동감 있는 토론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핵심에 바로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가 있다.

5번의 대선 후보자 토론을 경험하고, 다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변화무쌍한 유권자들의 궁금증 혹은 바람’을 풀어 줄 수 있다면 더욱 진화된 대선후보자 토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불통의 ‘그들(정치인)만의 리그’가 아닌 ‘함께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방향 잡은 ‘선거방송토론!’ 이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향상의 핵심 방안으로 ‘국민 참여형 대선 토론’을 그 대안으로 모색해 본다.

2. 역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유권자 참여 사례

대선 후보자 방송토론이 도입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적 변화는 물론 미디어의 환경도 급변했지만,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법정 대선토론의 횟수(3회)와 형식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언론사나 외부 기관 주최 제외)

특히, 유권자의 참여 정도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UCC 동영상 질문이 채택된 이후 18-19대 대선토론에서도 사전공모에 의한 ‘국민질문’ 코너가 배치되었으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① 2007년 제17대 : UCC 동영상 공모

- 홈페이지를 통해 UCC 동영상을 공모. 당시 총 345개 동영상 질문이 접수됐었고, 중앙 선거방송토론위에서 토론회 차수별, 초청 외 대상 토론회 각 1개씩 동영상을 선정하여 국민질문으로 활용(동영상 주제는 사전공개, 질문내용은 비공개)
- 1차(정치/외교) : 피랍사태에 대한 방안
- 2차(사회/문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 3차(경제/복지) : 국민연금 해결 방안
- 초청 외 :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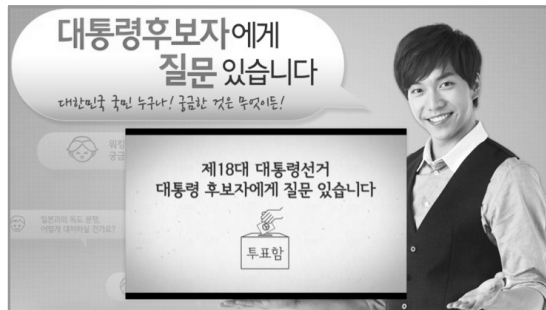
[그림 4-2]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UCC 동영상 질문



② 2012년 제18대 : 국민질문 공모 및 토론회 평가단 운영

- 홈페이지·우편 등을 활용하여 ‘대통령 후보자에게 질문있습니다’ 이벤트를 실시(총 17,226건 질문 접수)
- 초청 차수별 토론회마다 가장 많이 공모된 분야 중에서 1개씩 공통질문으로 선정. 사회자가 낭독(내용 비공개)
- 1차(정치/외교) : 정치권 불신 해소 방안
- 2차(경제/복지) : 복지정책 실현 방안
- 3차(사회/문화) : 교육제도 개선방향
 - ▶ 국민질문이라곤 했지만, 사실상 ‘토론 주제’
- 토론회 평가단 : 총 50명으로 운영, 토론 시청 후 설문지, 평가표, 소감문 작성

[그림 4-3] 2012년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질문공모



③ 2017년 제19대 : 국민질문 공모 및 국민인터뷰 영상 제작·활용

- 홈페이지·우편·팩스 등을 활용하여 국민질문 공모(총 4,591명 참가하여 8,396건의 질문 접수)
- 사회자가 공통질문의 형식으로 낭독(주제는 사전공개, 구체적 내용 비공개)

[그림 4-4]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및 TV토론 모니터단 모집



- 1차(정치) : 북핵위기 주도적 타개 대책
- 2차(경제) : 각 후보의 경제 정책토론으로 '국민질문'코너 제외
- 3차(사회) : 국민과 소통 위한 구체적 실현 가능한 방안
- 국민인터뷰 영상은 토론회 방송 도입부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상영하여 토론회의 흥미성과 시청자 관심 제고 (1분)
 - ➔ 유권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건, 좋은 시도!!

3. 해외 선거방송토론회 유권자 참여 사례

① 미국 : 1992년 '타운홀 미팅' 방식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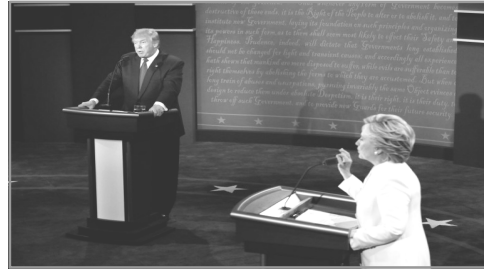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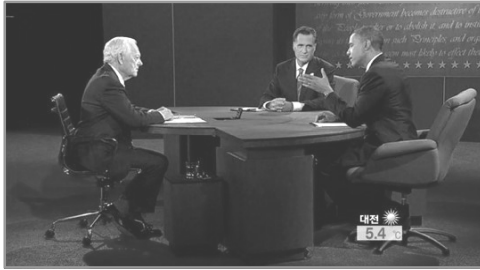
- 미국 대선의 토론도 3차례 진행, 방식도 최근에는 1차 토론은 스탠딩형식, 2차 토론은 유권자들이 직접 참가해서 질문하고, 후보자들이 무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타운홀 미팅방식, 3차 토론은 두 후보자가 45도 각도로 테이블에 앉아서(혹은 서서) 진행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1·3차 토론은 6개 주제를 15분씩 나눠 자유토론으로 진행.

[그림 4-5] 2016년 미 대선 1차 토론-스탠딩 토론



- 1988년 이전까지 여러 명의 저널리스트들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질문-답변-토론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1인의 사회자가 사회와 질문을 도맡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이후)

[그림 4-6] 2012년 미 대선 3차토론(오바마vs롬니) [그림 4-7] 2016년 미 대선 3차토론(힐러리vs트럼프)



- 1992년부터 도입된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은 한 지역에서 인구학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된 일반 시민들을 전문 여론 조사기관에서 추출해 이들을 토론회장에 시민 패널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관심사를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하게 하는 방식이다.
- 공신력 있는 제3여론조사기관이 타운홀 토론이 열리는 주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에서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 100명을 선정, 초대
- 사전에 사회자와 유권자들이 서로 논의해 질문 결정
- 토론 당일 스튜디오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이 사전 준비된 질문 수행하고 sns 등을 통한 유권자 질문은 사회자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90분간 진행.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

[그림 4-8] 2008년 미 대선 2차 토론-오바마 vs 매케인, 타운홀 방식



- 타운홀 토론방식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 참여하는 청중 100명이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냐에 대해서도 고민 지속. 그 대안으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 질문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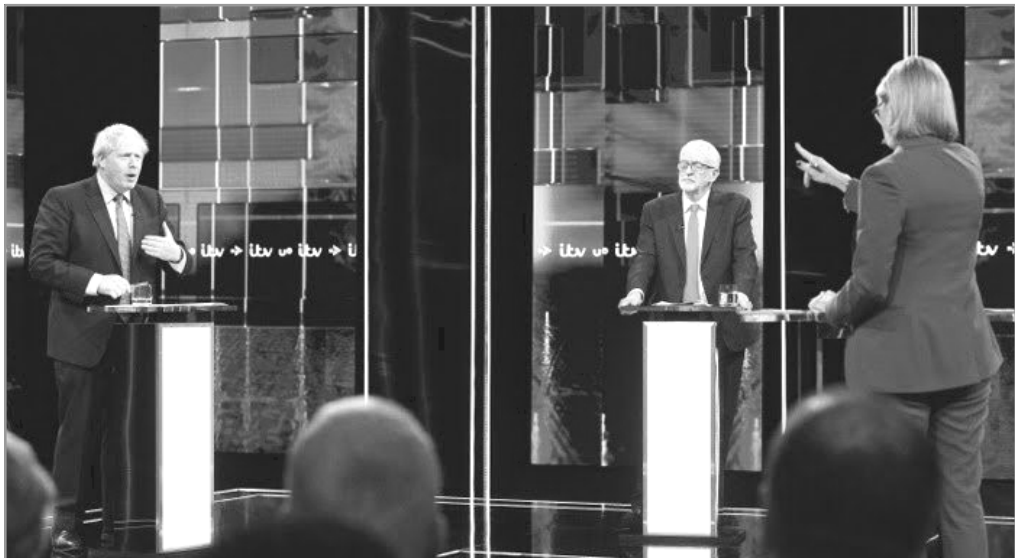


- 2008년 대선 타운홀토론에서는 총 600만여 개의 질문이 접수되어, 그 중 4개의 질문이 채택(90분 토론중 현장 참여질문 8개, 인터넷 질문 4개, 사회자 후속질문 9개 등 총 21개 질문 소화)

② 영국 : 2010년 이후 총선에서 ‘당수 TV토론’ 도입

- 토론 형식은 기자회견식 + 타운홀 미팅 방식 결합 (3회 모두)
 - * 사전에 질문을 받아 핵심적인 질문을 한 국민 12명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날카로운 질의 응답
- 토론시 현장 방청객들의 생생한 리액션 (박수, 환호, 야유 등)

[그림 4-9] 2019년 총선 앞두고 보리스 존슨 총리 VS 제레미 코빈 야당 당수 토론



“다음 달 12일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 보수당을 이끄는 보리스 존슨 총리와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이 19일(현지 시각) TV토론으로 맞붙었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질문자로 나온 영국 국민은 존슨 총리와 코빈 대표를 향해 송곳 같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현장의 방청객들은 답변이 시원찮을 땐 노골적으로 야유를 보내며 조롱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그 파트너를 상대로 찬양과 읊소형 질문은 한 건도 없었다. 이 토론회를 전한 외신들은 토론자로 나온 두 사람 보다 날 선 질문을 쏟아낸 질문자와 이를 적절히 유도한 관록 있는 사회자에 찬사를 보냈다.” (중략)

“한 여성은 “최저임금을 받는 가정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당신들은 돈이 많아 걱정이 없겠지만, 나는 긴축 정책이 걱정”이라며 “바보 같은 선거의 선심성 공약은 던져버리고,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2019년 11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中)

4. 국내 언론사 주관 대선 토론에서의 시청자 참여사례

1997년 15대 대선 이후 한국의 대선 후보자 토론은 양과 형식에서 점진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그중 공직선거법의 제약(?)을 받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사 초청 토론이 좀더 다양한 형식의 토론회를 제작해 왔다.

초기에는 기자회견형 (1인 & 공동) 토론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2007년 17대 대선부터는 후보자간 상호토론과 더불어 타운홀 방식의 토론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형식적인 측면만 보면, 17대 대선 보다 그 이후 대선에서 시도한 후보자토론의 방식이 편협. 요즘은 오직 '후보간 상호토론'만 하는 분위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 두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부분 참여형 : mbc 100분토론 <5분 청문회> (2007년)

- 1999년 10월 첫 방송이후 한국의 대표적 방송토론으로 자리매김한 <mbc 100분토론>에서는 전문가 위주 토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기부터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는 3대 코너 운영

① 방청객 질문 ② 시청자 전화 연결 ③ 인터넷·전화 의견 소개

- 이런 시청자 의견을 대선 후보간 토론 사이 적절히 활용한다면 '긴장감과 흥미성'을 돋우는데 기여하리라 기대

① 활용

- 2007년 대선후보 검증 토론(이명박/정동영/문국현/권영길 후보 1인 초청)

- 2006 ~ 2010년 각종 대선·당대표 당내 경선토론 등 활용

② 구성 방식

- 5분 청문회는 각 후보에게 5분 동안 5개의 질문이 주어지는데, 그 구성은 인터넷 현장 질문 2개, 시민논객 2개, 사회자 질문 1개로 구성.

- 인터넷 질문은 사전에 홈페이지나 SNS에 올라온 질문 중 선정, 시민논객·사회자 질문은 현장에서 직접 질문

- 질문 1개는 질의 응답을 포함하여 총 1분 안에 마무리되어야 하며, 1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ex) 질문 10초이면 답변은 50초, 질문 15초면 답변 45초.

- 질문은 20초를 절대 넘지 않도록 한다.

- 아예 시민논객 질문 5개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인터넷 & 사회자 질문 배제)

- 또, 5분 청문회는 상황에 따라 시간 조절 가능(7분 or 3분)

③ 장단점

- ① 장점: 스피디한 진행으로 토론의 긴장감 증폭, 짧고 간결한 질문으로 유권자들의 질문 의도를 전달하는데 유리한 방식
- ② 단점: 시간상 깊이있는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움. 추가 질문도 제한되어 '열띤 논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단점

당시 언론기사 제목

李(이명박),대선전검증 모의고사 “휴~진땀나네”(머니투데이. 2007.10.12.)
 “전문가 패널의 치밀한 준비와 시민논객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어우러져 이 후보는 내내 진땀을 뺐다“

[그림 4-10] MBC 100분토론 - 정동영 후보 편



2) 전면 참여형 :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질문 있습니다>(2007년)

① 사례

- <kbs 대선후보초청 토론- 질문있습니다>는 17대 대선후보 4인(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을 각각 초청해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토론
- 시민패널 구성 :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수도권(서울과 경기)의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할당 표집을 한 후 참가 희망자 100명을 초대해 대선후보 1인과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시민패널들은 토론회 당일 각자 작성한 질문지를 제출하고, KBS 토론방송위에서 20개 내외의 질문을 최종 선정
- 더불어 KBS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질문 받아
- 2007년은 시행됐으나, 2012년은 박근혜 후보 불참으로 결국 무산

② 장단점

- ① 장점: 유권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가능.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의 '정리된' 질문 대신 예측 불가능한 돌발질문에 흥미와 역동성이 뛰어나고, '시민참여 보장'이란 민주성도 보장.
- ② 단점: 이슈에 대한 집중도 있는 토론 어렵고, 반드시 질의해야할 문제가 제외될수 있음. '공정성 시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큼.

[그림 4-11] 2007년 이명박 후보 편 - KBS '질문있습니다'



5. <국민참여형 토론 방식> 제안

“유권자들에게 ‘평가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에게 ‘정책과 비전 공유의 기회’를 제공”

선거방송토론에서 지켜져야 할 이 원칙은 늘 유효하다. 그리고, 토론회에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청중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대선에서는 ‘타운홀미팅’ 방식의 <국민 참여형> 토론 방식을 일찍이 사용해 토론의 역동성과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선 후보자토론에서 ‘우리’만의 포맷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 그 선결 조건을 알아보면,

1) 3번의 대선토론 형식을 달리 해 보자!

- 우리는 비슷한 형식의 후보자간 상호토론 3회, 미국은 다른 형식의 토론 3회

대안 → 1차는 후보간 자유토론(시간총량제)

2차는 후보간 주도권 토론(1:1 토론 중심)

3차는 타운홀 미팅 토론(시민패널 중심).....는 어떨까?

→ 무조건 한번은 ‘타운홀미팅’으로!!!

2) 초청 후보자를 제한해 보자!

- 앞서 많이 언급될 것이므로 긴 설명 필요 없겠지만, 이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임.

- 그동안 3인 → 3인 → 6인 → 3인 → 5인이 대선 후보자 초청 대상이었음. 2인 혹은 3인

정도로 제한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토론은 불가능

대안 → 공직선거법 상 초청기준 개정 필요

- 국회의원 5인이상, 직전 선거 3%이상 정당, 여론조사 5%이상 후보자
- 미·영·프·독은 거의 양자 토론(간혹 3인)
- :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토론횟수를 1회(총4회) 늘려서라도 1:1토론이나 타운홀 토론 진행 필요.

3) 준비된 시민패널 확보로 활기차고 긴장감 넘치는 토론으로!

- 유권자 참여 토론(타운홀미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의를 담당할 '시민패널'의 능력이 토론의 성패를 가를 핵심변수.
- 형식만 '타운홀'로 한다고, 저절로 역동적인 토론이 될리 없다.

① 18대 대선 1차토론 국민질문 (공통)

경기도에 사시는 김진식 씨가 보내온 질문인데요. 질문 드립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고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후보들이 정치쇄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정치쇄신 공약이 또 다시 말뿐인 개혁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19대 대선 3차토론 국민질문

“총 8323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시 달서구 민00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새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각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 이런 거창하고, 추상적 질문 내용과 태도라면 굳이 '타운홀미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질문에 '구체적'이란 단어만 들어가지, 2-3분 안에 답할 수 있는 명확한 질문이 아니다.

③ 영국 2010년 총리 후보 3차토론 중 중년여성 질문

“제 남편은 회계사이고,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우리 둘 다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집을 가질 수 없고, 노후를 위한 예금도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회계사 맞벌이 부부가 집을 살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까?”

④ 미국 2011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중

“2010년 제가 이라크에 배치되었을 때,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성애자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직업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동성애자 군인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까?”

➔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이 살아있는 유권자의 목소리 아닐까?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못지않은 날카로운 유권자의 질문이 있었다!

⑤ 2007년 <mbc 100분토론 - 이명박 후보편> 중 시민 논객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가는 것은, 법과 질서를 정책으로 내놓으실 만큼 강조하시면서 굉장히 외란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수차례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장전입이라든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정치인으로서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하셨고요. 기업인으로서 노조 조직 방해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본인에게는 들이댈 수 없는 법과 질서 준수의 기준을 힘없는 근로자와 서민에게만 엄격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⑥ 2007년 <mbc 100분토론 - 정동영 후보편> 중 시민 논객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후보님을 ‘갈기도’ 후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갈기도는 이것 갈기도 하고 저거 갈기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확인됐듯이 후보님의 말씀 스타일이 약간은 두루뭉수리 한 것 같습니다. 아까 1가구 1주택 감면에 대해서도 “원칙은 지키되 귀를 기울이겠다” 이게 감세 갈기도 하고 아닌 것 갈기도 하고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이나 개헌 같은 것도 “원칙은 찬성 하지만 시기가 이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많이 혼란을 야기한 것 같거든요. 결국 이렇게 갈기도 스타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성격이 신중하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책 추진력에 자신이 없으셔서 그러는 건지 헷갈립니다.

정동영: 지금까지 질문 중에 제일 아주 신랄하고 아픈 질문인데요.

➔ 후보 맞춤형 검증 질문으로 이 탄탄한 논리가 뛰어난 시민논객 개인기가 아니라 ‘팀 플레이의 산물’이었다면?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한 학습(공약 & 과거발언 등)을 하면 날카롭게 좋은 질문이 가능하다!

※ 이를 위해 시민패널의 구성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본다.

- 1회성 참여로 생방송 토론에서 ‘실력을 발휘할 전문가급 시민패널’을 확보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일 뿐.
- 경험 축적과 집단지성 발휘를 위해 <100분토론 시민논객> 모집방식을 차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됨.

- ▶ 예를 들어, 100명의 '시민패널'을 모집할 경우... ① 공개모집(방송, 인터넷 공고) ② 추천(단체 등) ③ 토론대회 입상자 등을 통해 선발
 - ▶ 연령별, 성별, 지역별, 그리고 '지지정당 여부'(무당파)를 따져 선발
 - 확보된 '시민패널'은 1년간 활동하며, 대선 토론은 물론 토론위 주최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모색. (기수모임으로 이어감, 6개월 단위로 20명씩 교체할 수도)
 - 매 토론시 참여가능한 40-50명 정도를 선발하여, 집단토론을 통해 질문과 질문자를 선정.
 - 대선 후보자 토론(타운홀미팅)의 경우 그 중요성을 고려해 방송 전날 모여 합숙토론을 벌이거나, 적어도 방송 당일 오전에 모여(통상 밤에 토론 시작) 토론을 통해 '좋은 질문과 질문자 찾기'에 노력해야 함.
 -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타운홀미팅 (안해본게 아니다 -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보면 '소문난 잔치 먹을까 없다'의 전형 아닌가 국민적 관심사 & 주요 이슈 보다 개인적 관심사 위주의, 깊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의 질의 응답까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 시민논객의 질문 원칙은
 - 첫째,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찌른다'
 - 둘째, 첫 질문 후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 필수
 - 셋째, '비판적 검증' 차원의 질문하기(홍보성 혹은 지지성 질문 배제)
 - ▶ 이해당사자가 직접 질문을 해서 집중도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때론 지나치게 감정이입되는 경우도 있어 적절히 조절 필요
 - ▶ '강-강-강' 질문의 연속 보다는 '강약중강약'처럼 딱딱한 질문 대신 위트와 순발력 있는 질의 응답도 적절히 배치하는 노력 필요함
 - 토론위는 일부 전문가를 배치해, 질문의 난이도(분야 혹은 정당별)를 조정하고, 사전 충실한 팩트체크를 통해 '공정성' 논란 조정 가능.
- 4) 비공개된 대선 토론 스튜디오에 유권자의 방청을 허하라!
- 그동안 우리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는 일반 방청객 조차 한번도 허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 아시는가?
 - 지난 5번의 대선 토론은 지상파(kbs, mbc//sbs는 2002년까지) 스튜디오에서 후보들과 토론 관계자만 모여서 비공개적으로 진행.
 - ▶ 공인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제작 편의성(보안문제) & 공정성 시비(배경, 지지여부) 등 아닐까...추측해 본다.

-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유권자는 배제한 채 진행해 온 것. 하지만, 유권자가 현장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대선 토론의 역동적인 현장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도 좁혀질 수 있다.
- 후보들 역시 텅빈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쳐다보며 토론 하는 것보다 긴장감도 있고, 책임감 있는 발언으로 공감하는 토론이 가능
- ▶타운홀미팅 뿐 아니라 모든 대선 토론에 방청객(시민패널)이 허용돼야 한다!

[그림 4-12]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청중 참여 현황(JTBC)



[그림 4-13]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장면



제2절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의제 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행기관은 2012년 제18대 및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도 본 용역의 경험이 있는 한국정당학회가 선정되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용역은 한국의 정치, 외교, 통상과 안보 및 통일, 경제와 민생, 사회와 복지, 교육과 환경, 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전공자들이 포함된 학회의 소속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2022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수행하였다.

〈표 4-10〉 토론의제 개발 참여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단 명단

구분	분야	성명	소속	
참여 연구진	정치	김남규	고려대학교	
		이선우	전북대학교	
	외교	권재범	한국외국어대학교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경제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성조	순천대학교	
	사회	김한나	서울대학교	
		홍미화	국민대학교	
	전문가 자문단	경제	어윤종	고려대학교
			이강구	KDI
이나경			서울여자대학교	
사회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김윤영	전북대학교	
		정인관	송실대학교	

조사결과의 적실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균등한 인원의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였고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이 편향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복지, 문화, 여성 등 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당학회 외에도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의 전문 학회에서 높은 학술적 평가를 받는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학계 외에 정부와 국회, 비영리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 또한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분야별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하고 후보자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정책분야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한국정당학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의를 거쳐 진행하였고,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 1) 당대 현안에 대한 후보의 총체적인 평가, 2) 정책 중심성, 3) 미래지향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한국 사회의 당대 현안을 바라보는 후보자의 거시적인 철학, 비전, 태도와 아울러 각론 차원의 구체적 문제해결방안 및 대안 제시와 같이 후보자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제 선정에 집중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은 대부분의 대선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 당장의 사회 현안에 대한 세세한 정책 제안에 쏠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 전체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 및 시대정신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적인 입장과 세계관 그리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조 및 당대 현안에 대한 거시적 방향성과 비전과 같이 보다 큰 추상적인 질문도 던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중심의 실질적인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가 중요하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도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높고 대통령 후보의 비전과 정책적 입장에 대한 엄정하고도 전문적인 검증 및 정책 경쟁에 대한 목마름이 큰 실정이다. 대선을 50여일 남기고 중요한 이슈에 대한 다수의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정책에 기반한 투표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함의가 있다. 따라서 남은 선거 기간에 대선 후보자들의 치열한 정책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정책에 기반해서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투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의제 선정이 필수적이다.

셋째, 한국 사회의 변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고자 했다. 각 후보자들이 당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변화하는 내외부의 환경 및 구조의 변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및 해결책을 제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을 통합하고 함께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한 공간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토론 의제는 후보자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안보, 경제, 민생, 복지, 사회, 교육, 과학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미래지향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협의 과정은 1차로 각 정책 분야의 토론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토론의제는 토론의 전체적인 구성을 계획하는데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각 정책 분야별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토론 의제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통계 수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당 토론 의제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정당과 후보자별 입장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토론의 논점을 정리하였다. 토론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 이유와 쟁점을 정리한 결과에 기초하여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예시를 기술하였다.

2. 주요 결과

가. 정치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의제 1> 시대정신과 미래비전	<p>(토론의도) 후보가 시대정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떠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p> <p>(질문) Q.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기존의 국내외적 질서는 강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시대에는 국가 지도자가 과거를 성찰하고 현시대의 상황을 진단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후보가 보시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토론의제 2> 국가지도자로서 대통령 자질 검증	<p>(토론의도) 후보의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p> <p>(질문) Q.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많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인성, 가치관, 리더십,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 2개를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지도자 중에서 닳고 싶은 지도자는 누구입니까?</p>
<토론의제 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p>(토론의도) 후보자가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검증</p> <p>(질문) Q.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 내의 갈등은 이념, 젠더, 세대, 계층, 노사, 지역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나날이 격화되어 왔습니다. 사회갈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p>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p>동안 더욱 악화되면서 한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의 표출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현재 사회갈등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세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사회갈등이 격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토론의제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	<p>(토론의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의지 검증 (질문) Q. ‘민주주의 후퇴’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합법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권력 견제를 약화시키고 점진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의 제한적 성격을 갖고 ‘국민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권력을 남용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경우가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가와 대통령 권력이 비대화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을 행사하는데 자제하지 않았고 평가판을 통해 정치갈등과 경쟁을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빈번하게 들립니다. 후보들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토론의제 6〉 공정과 정의	<p>(토론의도)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검증 (질문) Q. 공정과 정의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였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약속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각 후보들께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고, 두 개념이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p>
정치개혁	
〈토론의제 1〉 국회개혁	<p>(토론의도) 대의기관인 국회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질문) Q. 한국에서 국회는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갈등과 대립만이 난무했으며, 그 가운데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또한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p>
〈토론의제 2〉 선거정당개혁	<p>(토론의도)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질문) Q. 그간 한국 선거제도는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한 채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을 계속 재생산해왔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은 공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혁신을 게을리하던 비판을 현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선거 및 정당을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p>

정치개혁	
<p>〈토론의제 3〉 검찰·법원개혁</p>	<p>(토론의도)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는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p> <p>(질문) Q. 그간 한국의 사법체계,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검찰의 경우 형사절차상 너무 과도한 권한을 보유했음에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취약해 공정한 사법처리에 기여하지 못한단 비판이 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검찰개혁이 단행되기도 했구요. 하지만 현재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첨예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검찰 및 사법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p>
<p>〈토론의제 4〉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p>	<p>(토론의도) 지방자치 및 분권과 균형발전을 꾀하는 개혁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p> <p>(질문) Q. 그간 한국은 지방자치 및 분권화의 수준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극심한 수도권과밀화 및 지방의 쇠퇴 및 소멸이란 악순환의 고리로 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지체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자치 및 분권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p>
<p>〈토론의제 6〉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p>	<p>(토론의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구상 파악</p> <p>(질문) Q.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제왕적' 대통령이란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단 사회적 요청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그간 개헌을 전제하지 않은 운영상의 변화에서부터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의 근간을 바꾸는 방식까지 다양한 안들이 제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행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p>
국정운영	
<p>〈토론의제 1〉 대통령-국회 관계설정</p>	<p>(토론의도) 대통령과 국회 간 적절한 관계설정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p> <p>(질문) Q. 역대 대통령들은 여소야대 시 자신의 정책 아젠다들을 입법화시키거나 국무 위원들을 임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여대야소 상황에선 다수 여당을 동원해 국회를 거수기화하고 자신의 아젠다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시 국회의 청문보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국무위원들을 그냥 임명하곤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회와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위해 여당과의 건강한 거리, 야당과의 적절한 대화와 타협을 어떻게 이뤄내시겠습니까?</p>
<p>〈토론의제 2〉 국민소통 향상</p>	<p>(토론의도) 대통령의 국민소통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p> <p>(질문) Q. 민주화 이후 현재는 시사각각 집계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권력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또한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시사각각 반영되는 비판적인 여론과 함께 국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소통이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는 뜻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민소통을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p>

국정운영	
〈토론의제 3〉 정부조직개편	<p>(토론의도)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p> <p>(질문) Q.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년 가까이 정부조직개편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MZ세대의 부상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이 큰 시점이기도 합니다. 후보자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은 어떻게 되십니까?</p>
〈토론의제 4〉 공공기관 개혁	<p>(토론의도) 공공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p> <p>(질문) Q. 2021년 이른바 'LH 사태'가 터진 이후 한국에선 다시금 공공기관 개혁 의제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H 임직원의 부적절한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공공기관 문제가 일종의 국가 차원의 시스템 고장으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문제가 LH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공공기관 개혁을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p>
〈토론의제 5〉 언론개혁	<p>(토론의도) 언론개혁의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p> <p>(질문) Q. 최근 이른바 '가짜뉴스'를 둘러싼 공정 보도 이슈가 급부상한 상태이며,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주요 미디어 관련 정책의제로서 언론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혁 등 또한 중요한 언론개혁 관련 이슈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언론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과 정책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p>

안보	
〈토론의제 1〉 한미동맹	<p>(토론의도) 최근 한국과 미국 간 합동훈련의 규모 및 횟수 축소와 관련된 문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문제 등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논쟁 중인 이슈 등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현재에 대한 후보자들의 평가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방향 및 비전을 알아보고자 함.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재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진단과 함께 새로운 정부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제시할 것을 의도</p> <p>(질문) Q.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 축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미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안보네트워크에 한국이 일본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북핵문제를 둘러싸고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한미연합훈련 역시 규모나 횟수 면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의 현주소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토론의제 2〉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정책	<p>(토론의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군사 재무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여전히 진행 중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외부 안보 위협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음. 또한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는 동맹국에 의존만 해서는 한국의 전략적 행동에 제약을</p>



	<p>받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들의 제시가 필요함.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자주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각 후보들의 비전과 로드맵 제시를 의도</p> <p>(질문) Q. 201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 재무장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에 대한 핵위협은 여전합니다. 한편, 미중 간의 경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안보 의존은 한국의 전략적 행보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자주적으로 안보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 후보자들께서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를 위한 어떠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토론의제 3〉 한국의 국방개혁</p>	<p>(토론의도) 최근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음. 국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음. 국내적으로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지 오래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적 변화는 한국의 국방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 역시 국방개혁2.0을 추진하며 제4차 산업혁명 시기와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국방개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목적 및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방안 제시를 의도</p> <p>(질문) Q.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면서 5G로 대표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등장하였고, 동북아시아에서는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안보지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국방구조와 무기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기체계에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등장하고, 가용한 군 인력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력의 손실을 막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상황에 맞춘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방 개혁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듣고자 합니다.</p>
<p>〈토론의제 4〉 사이버 안보 이슈</p>	<p>(토론의도) 최근 들어 신형안보 이슈가 전통안보 이슈와 연계되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이버 안보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음.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적극적 대응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간헐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사이버 안보가 한국의 전통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안보에도 중요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자들의 위기의식 수준과 대응방안 제시를 의도</p>

안보	
	<p>(질문) Q. 최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과 관련한 뉴스들을 보도하기도 했고, 국내외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 발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안보 위협 요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접근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과 정책적 제안을 듣고자 합니다.</p>
<p>〈토론의제 5〉 보건안보(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방안</p>	<p>(토론의제) 코로나19 등과 같은 초국경적 감염병과 질병의 증상은 한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전파력은 국제사회에서의 교류는 물론이고 개별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음. 더욱이 이러한 질병들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할 경우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방안, 즉 보건안보 증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의도</p> <p>(질문) Q. 2019년 말에 등장한 코로나19는 이미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도 사회,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전 세계적 사망자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문제는 지속적인 변이의 등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각 국가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과 같은 보건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 각 후보자들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통일	
<p>〈토론의제 1〉 문재인 정부 대북전략 평가와 새 정부의 통일정책/비전</p>	<p>(토론의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대북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의제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도 남한-북한-미국 삼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것을 의도함. 이와 함께 대북정책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제시를 의도</p> <p>(질문) Q.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는 상당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회담,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었으나 2019년 이후로 다시 경색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p>

통일	
	<p>있으며 2022년 들어서는 북한이 총 7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될 새 정부의 대북관계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토론의제 2〉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p>	<p>(토론의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 아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정부의 종전선언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제시를 의도</p> <p>(질문) Q. 제76차 유엔총회 기초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후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종전선언은 비록 협정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체제에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종전선언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토론의제 3〉 북한 인권문제</p>	<p>(토론의도) 인간 개개인의 삶과 존엄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내에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은 대표적인 중진국으로써 인권보호라는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며, 더욱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각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제시를 의도</p> <p>(질문) Q. 지난 20여년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조직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 내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 내 인권유린 참상이 보도되기도 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을 들어왔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좁게는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넓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토론의제 4〉 북한 비핵화 전략 (북핵/미사일 프로그램)</p>	<p>(토론의도) 90년대 초반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북한은 지속적 개발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 및 미사일 사거리 능력에 진척을 보이고 있음. 여전히 북한 핵 위협으로</p>

통일

	<p>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대응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의도</p> <p>(질문) Q.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7차례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추가적인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접근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외부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p> <p>이에, 각 후보자들께서는 지금까지 대북 핵무기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접근방법과 함께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p>
<p>〈토론의제 5〉 남북 경제협력</p>	<p>(토론의도)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 경험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중단 상태에 놓여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 여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남북 경험의 효과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경협의 재개 여부 및 재개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의도</p> <p>(질문) Q. 남북 경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현재 양자 간의 경제 협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경제협력의 효과와 관련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남북경협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선이 존재합니다.</p> <p>각 후보자들께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경험이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북경협 재개여부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의견과 함께 경험 재개를 찬성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양자 간의 경제 협력이 재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p>

외교·통상

<p>〈토론의제 1〉 미중패권경쟁 속 한국의 외교 방향</p>	<p>(토론의도) 동아시아 지정학적 구조 재편에 있어서 미중 두 강대국의 경쟁 양상 파악 및 후보자의 미중 외교 방향 점검</p> <p>(질문) Q.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대국간의 관계가 우리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기도 하고, 외교적 반경을 좁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해 왔는데,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안보, 통상, 가치 규범, 디지털 신기술 등 다양한 국제 이슈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보여 경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국제정치구조의 급박한 변혁 속에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의 방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p>
--	--



외교·통상	
<p>〈토론의제 2〉 경색된 한일관계와 대일외교</p>	<p>(토론의도) 경색된 한일관계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해결책</p> <p>(질문) Q. 평화롭고 번영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대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중요한 대외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나라는 주변 4강과의 안정적이고도 호의적인 외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와 같은 과거 역사 문제로 인해 지난 정권에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경직되고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향후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토론의제 3〉 다자외교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 중견국에서 선진국 외교로</p>	<p>(토론의도) 후보자들의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외교 수단 및 선진국으로써 글로벌 공공재에 기여하는 발판으로써 다자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점검</p> <p>(질문) Q.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함에 따라, 한국은 1964년 UNCTAD 창설 이래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선진국으로의 공식적인 지위 변경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선진국으로써의 국제적 책임을 부담스러워 하는 등 의견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유엔 등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으로서의 국력과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의 현실은 주변 4강 외교에 압도된 경향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이제 중견국 외교에서 선진국 외교로 한국이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p>
<p>〈토론의제 4〉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p>	<p>(토론의도) 경제에 있어 대중의존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 및 다변화 전략. 지역별 경제블록화 움직임과 한국의 통상대책에 대한 입장</p> <p>(질문) Q. 최근 경제와 안보가 고도로 연계되는 주요 강대국들의 통상 정책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바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 제재,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중국과 호주 간 석탄 분쟁으로 인한 요소수 대란 등 최근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에 따른 한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 및 전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실정에 있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RCEP과 CPTPP와 같은 지역별 경제블록화를 통한 공급망 재편을 위한 미중 패권 경쟁 국면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p>
<p>〈토론의제 5〉 노동, 기후 변화 등 신통상의제와 한국의 통상정책방향</p>	<p>(토론의도) 국제 통상에 있어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움직임이 우리의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의식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p> <p>(질문) Q. 바이든 정부의 등장 이후 2021년 3월 미국은 USTR 통상 의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에 있어 우선 순위 중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공정 성장”의 기조 아래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노동 및 기후변화 등 신통상의제의 부상이 한국의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며,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시지요.</p>

나. 경제분야

경제개혁	
<p>〈토론의제 1〉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p>	<p>(토론의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경제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검토</p> <p>(질문) Q.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시장소득과 함께 세금과 정부가 제공한 혜택을 고려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을 살펴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매우 불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 격차에 따른 자산불평등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우려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확대되면서 경제불평등은 사회갈등과 불안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토론의제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와 협력 증진</p>	<p>(토론의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검토</p> <p>(질문) Q.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3%를 차지하여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37.3%, 영업이익 비중은 25%에 불과합니다. 양극화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투자의 차이로도 이어지는데, 대기업 노동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3.3배이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중소기업의 3.7배라고 합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59.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투자, 임금 격차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와 소득 불평등 증대라는 중요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둘 간의 상생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토론의제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p>	<p>(토론의도) 후보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인식과 입장 검토</p> <p>(질문) Q.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인들과 소통하고, 여러 물건을 구입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자와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급증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각 후보자께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되는지, 규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토론의제 4〉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증대</p>	<p>(토론의도)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극복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개선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 입장과 정책 대안 파악</p> <p>(질문) Q. 과거 증시 활황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가 1000만명 규모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후보님들도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정책 방안에서는 각 후보마다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요구되는지 설명해주시죠.</p>



경제개혁	
<p>〈토론의제 5〉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p>	<p>(토론의도) 저성장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이해 정도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파악</p> <p>(질문) Q.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1970년대 10%대였지만, 이후 1980년대에는 8.6%, 1990년대 6.7%, 2000년대 4.6%, 2010년대 3%대 초반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하락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내서 우려가 큼니다.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는데 생산성 증진을 위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어떤 경제정책을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경제성장 및 일자리	
<p>〈토론의제 1〉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p>	<p>(토론의도)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과 우선 순위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한다.</p> <p>(질문) Q. 고령화·저출산이 심화되고 국내 투자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4차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4차산업혁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과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p>
<p>〈토론의제 2〉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p>	<p>(토론의도)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본다.</p> <p>(질문) Q. 최근 제2의 벤처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벤처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벤처업계에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아동보호·기존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p>
<p>〈토론의제 3〉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p>	<p>(토론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파악해보고 이를 뛰어넘을 혁신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p> <p>(질문) Q. 그동안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체감할만한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노년층은 구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후보들께서 내세우는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과 크게 구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p>
<p>〈토론의제 4〉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뉴딜</p>	<p>(토론의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경제성, 자원마련, 지대추구 등의 이슈를 토론했도록 한다.</p> <p>(질문) Q. 화석에너지 사용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아직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산림훼손이나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기도</p>

경제성장 및 일자리

	<p>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가 더 중요한지 속도조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같리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p>
<p>〈토론의제 5〉 노동권 및 노동시간</p>	<p>(토론의도) 후보자들의 각기 다른 노동개혁의 비전을 염두해두면서 노동시장과 노동권의 문제를 논의해보도록 한다.</p> <p>(질문) Q.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이나 임금의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이고 사회적 안전망 역시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공서열제 등 정규직 고용구조의 경직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정책의 주요한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민생

	<p>(토론의도)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하면서 주거문제가 심각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면서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p> <p>(질문) Q. 지난 몇 년간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젊은 세대에서는 코인이나 주식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탄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위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p>
<p>〈토론의제 1〉 부동산 안정</p>	<p>(토론의도)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이 후보들마다 차이를 보이는 바 이를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p> <p>(질문) Q.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원책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의 출처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관련 지원에 대한 후보님의 원칙은 무엇인가요?</p>
<p>〈토론의제 2〉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p>	<p>(토론의도)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미 몇 차례 개혁이 단행되었으나 여전히 재정고갈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근로세대의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p> <p>(질문) Q.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연금고갈의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더 많은 부담을 뒷세대로 넘기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복되는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신뢰성을 손상하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각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요?</p>
<p>〈토론의제 3〉 공적연금 운용 및 개혁</p>	<p>(토론의도)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p>
<p>〈토론의제 4〉 가계부채 문제</p>	<p>(토론의도)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p>



민생	
	<p>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줄조이면 서민들의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지므로 이 가운데서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p> <p>(질문) Q.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줄조이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p>
<p>〈토론의제 5〉 재정건전성 및 조세</p>	<p>(토론의도) 증대되는 사회복지 및 인프라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상유지 혹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바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p> <p>(질문) Q.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응당 필요한 조치이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가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세 등을 포함하여 국가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한가요?</p>

다. 사회분야

복지와 여성	
<p>〈토론의제 1〉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p>	<p>(토론의도) 복지 정책의 범위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p> <p>(질문) Q. 최근 신자유주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담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복지제도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떤 방식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토론의제 2〉 저출생·고령화, 인구절벽 대책</p>	<p>(토론의도) 최근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적 비전은 무엇인지 의견 파악</p> <p>(질문) Q.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며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사회입니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의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청년 세대의 의식 변화에 따른 불가역적인 결과라면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p>
<p>〈토론의제 3〉 아동 학대, 영아 살해 대책</p>	<p>(토론의도) 아동 학대 및 영유아 살해 사건에 관한 후보의 심각성 인식 정도와 함께 정책적 방안에 대한 파악</p> <p>(질문) Q. 일명 '정인이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 학대 사건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소위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하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등으로 여론에 응답하였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예방</p>

복지와 여성	
	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가의 대응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론의제 4〉 노인 돌봄 및 간병인 관련 정책	<p>(토론의도) 정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 및 간병인 처우 개선에 관한 후보의 태도와 정책 비전 파악</p> <p>(질문) Q.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을 위한 간병 인력은 부족하고 병상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이 부족하면 결국 돌봄 노동은 개인 또는 자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간병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 그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p>
〈토론의제 5〉 성폭력, 성범죄 대책	<p>(토론의도) 성폭력 및 성범죄에 관한 후보의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방안 파악</p> <p>(질문) Q. 최근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성범죄 실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수준이라면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토론의제 6〉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방안	<p>(토론의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 노동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는 저출산 위기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후보자들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질문) Q.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력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기 매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일터에서 경력의 단절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회 정책과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책 비전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p>
환경과 과학	
〈토론의제 1〉 기후 위기 대책 (국가온실가스 감축)	<p>(토론의도)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 사회 노력에 관하여 어떤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후보의 의견 파악</p> <p>(질문) Q. 세계 각국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당사국총회(COP26)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후보는 찬성하십니까? 찬성 또는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토론의제 2〉 원전 정책에 관한 태도	<p>(토론의도)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비전과 주장을 파악</p> <p>(질문) Q. 원자력 에너지 기술에 회의적이었던 선진국들이 전력난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원전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돌아서는 경향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p>

환경과 과학	
	<p>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반면,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복구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전을 감축 혹은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후보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토론의제 3〉 미세먼지 저감 대책</p>	<p>(토론의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후보의 외교 비전과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 (질문) Q.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외교적 노력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적 비전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p>
<p>〈토론의제 4〉 AI 및 빅데이터 활용 정책</p>	<p>(토론의도) AI·빅데이터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을지에 관한 후보 입장 파악 (질문) Q. 최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ICT 강국으로서 빅데이터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공공부문 중 특히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까?</p>
<p>〈토론의제 5〉 디지털 격차·소외 계층 대책</p>	<p>(토론의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후보의 입장과 정책적 비전을 파악 (질문) Q.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이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 일상의 각종 생활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없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p>
<p>〈토론의제 6〉 우주 개발 육성 정책</p>	<p>(토론의도) 대통령 후보의 우주 개발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성 파악 (질문) Q. 우주산업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 국가 간 산업 개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주산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되고 거시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p>
교육과 문화	
<p>〈토론의제 1〉 국가교육정책비전과 인재상</p>	<p>(토론의도) 각 후보자들의 시대 정신 및 과제에 대한 인식 파악 및 교육관 점검 (질문) Q.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수 및 구성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바로 “사람,” “인재”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후보께서는 그리는 미래인재상은 무엇이며, 그러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국가교육철학 및 장기적 교육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p>

교육과 문화

<p>〈토론의제 2〉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정책</p>	<p>(토론의도) 코로나 19 국면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 및 4차 산업혁명의 교육 현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 점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파악</p> <p>(질문) Q.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대면수업이 제한되면서 교육에 있어서의 디지털 대전환은 그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초중등 학생들의 학력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후보께서는 디지털 시대 학력 양극화에 완화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현장에 어떠한 전환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p>
<p>〈토론의제 3〉 대입제도개선: 공정한 평가 그 이상을 향하여</p>	<p>(토론의도)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대안/해결책 제시 파악</p> <p>(질문) Q. 최근 수년간 사회 엘리트층의 입시비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대입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우리사회 불평등 문제 해소와 연관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고, 동시에 대학입학제도는 초중고공교육과정 수립과 운영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같이 국가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는 평가의 공정성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정책 목표를 위해 논의가 발전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대안은 무엇입니까?</p>
<p>〈토론의제 4〉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p>	<p>(토론의도) 차별과 혐오 관련 사회 현황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교육, 인식 개선 및 법제화 등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점검</p> <p>(질문) Q.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성이 높아졌고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 기저에 존재하던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을 강화하고 부각시켰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로 인한 실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디 까지 생각이 모아졌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후보자만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p>
<p>〈토론의제 5〉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p>	<p>(토론의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이후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취약층 지원 방안 및 한국의 미래 산업 구조에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문화산업정책 비전 파악</p> <p>(질문) Q. 지난 2년간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건강한 문화예술산업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문화예술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p>



제3절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토론회의 역할 및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다. 2021년 11월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연구기관을 공개 모집하였고, 총 2개 기관이 응찰하였다. 제안서 평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⁵²⁾ 추가 조치로 인해 비대면방식으로 2021년 12월 8일 서면평가하였고, 그 결과 한국정치학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정치학회는 이전 선거에서도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경험이 있는 학회로서, 아주대학교 이한수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총 4명의 연구진이 본 용역에 참여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후보자토론회의 다각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 인지적 측면, 효과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후보자토론회 시청 전·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11〉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동일 대상에게 후보자토론회 개최시점을 전후로 설문조사 진행
조사기간	사전조사: 2022년 2월 17일 ~ 2월 18일 ※ 후보자토론회 시청 전 사후조사: 2022년 3월 10일 ~ 3월 14일 ※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표본수	사전조사: 총 1,534명 조사 후 지역/성/연령별 사후보정 사후조사: 총 1,004명 조사 후 지역/성/연령별 사후보정 패널유지율 : 65.4%
표본추출방법	유선전화 RDD + 무선전화 RDD (Random Digit Dialing)
표본오차	사전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5%point 사후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oint

5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 및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우려로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를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각종 회의 및 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철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구 분	내 용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 출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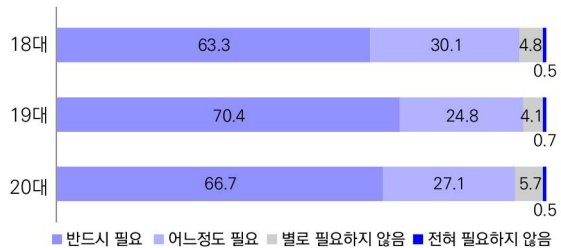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제도적 측면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진행방식 등을 인식적 측면은 유권자의 인지도 및 관심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효과적 측면은 토론회가 유권자의 인지·태도·참여·선택 효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분석하였다.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분석 연구에서 공통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하기도 하였다. 주요 결과를 도표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후보자토론회 제도 분석

➊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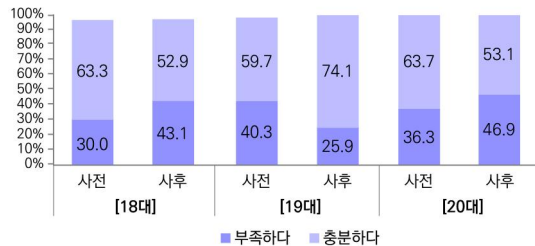
〈표 4-12〉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사전조사)

필요성	비율(%)
반드시 필요하다	66.7
어느 정도 필요하다	27.1
별로 필요하지 않다	5.7
전혀 필요하지 않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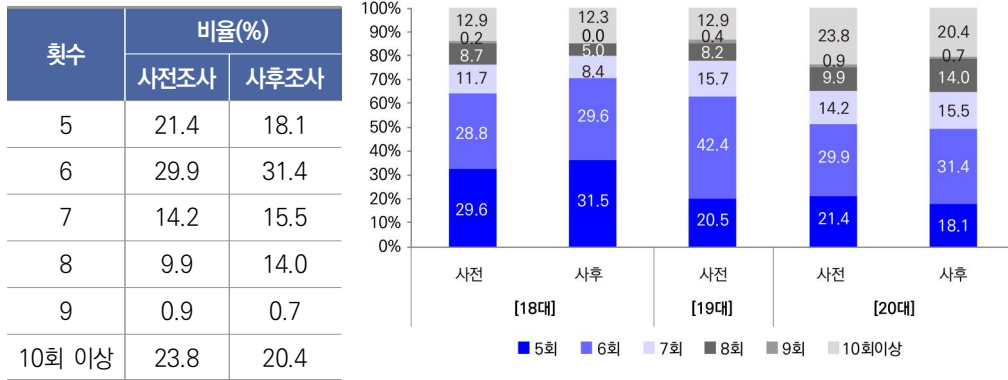
〈표 4-13〉 후보자토론회 횟수의 적정성

구 분	비율(%)	
	사전조사	사후조사
부족하다	36.3	46.9
충분하다	63.7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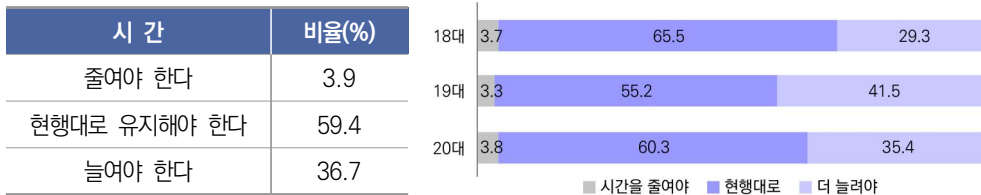


※ 현행: 초청 후보 3회, 초청 외 후보 1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2)

〈표 4-14〉 적절한 후보자토론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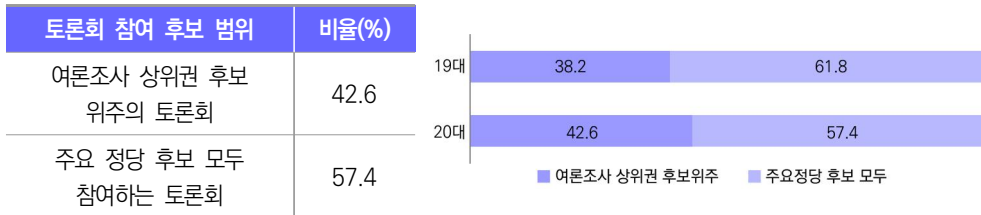


〈표 4-15〉 후보자토론회의 시간(사후조사)



➔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표 4-16〉 후보자토론회 참여 후보 범위에 대한 선호도(사후조사)



〈표 4-17〉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만족도(사후조사)

평 가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1.8
보통이다	45.0
어느 정도 만족한다	32.7
매우 만족한다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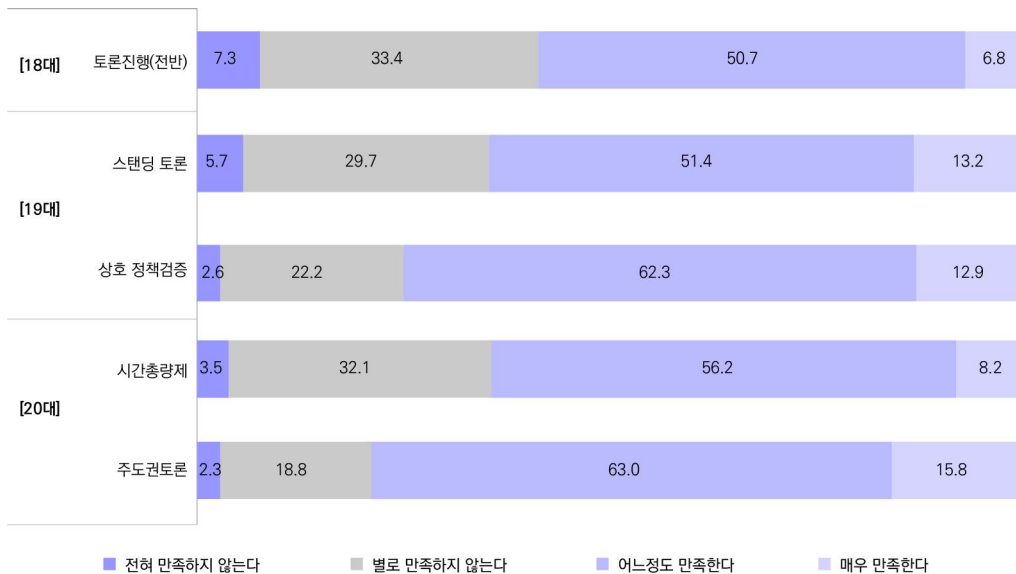
〈표 4-18〉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사후조사)

평 가	비율(%)	
	시간총량제토론	주도권토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5	2.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2.1	18.8
어느 정도 만족한다	56.2	63.0
매우 만족한다	8.2	15.8

〈표 4-19〉 상호토론 방식 선호도(사후조사)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비율(%)
주도권토론 방식	27.0
후보자 공약발표 후 1:1토론	22.3
유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응답	18.8
전문가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	17.6
시간총량제토론	9.4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	4.9

〈그림 4-14〉 역대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평가 추이



나. 후보자토론회 인식 평가

〈표 4-20〉 후보자토론회 관심도(사후조사)

(단위: %)

구 분	18대	19대	20대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51.2	56.6	50.9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	40.6	36.8	37.3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끔 보았다	7	4.9	9.3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0.9	1.8	2.8

〈표 4-21〉 타 정보매체 대비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사후조사)

(단위: %)

구 분	18대	19대	20대
매우 유익했다	20.6	27.9	19.8
다소 유익했다	57.6	57.8	55.2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	17.5	14.8	21.8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2.4	1.3	2.8

〈표 4-22〉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사후조사)

(단위: %)

구 분	18대	19대	20대
매우 그렇다	16.4	22.5	16.2
그런 편이다	53.0	55.9	54.6
별로 그렇지 않다	23.3	17.1	23.8
전혀 그렇지 않다	5.5	3.2	5.0

〈표 4-23〉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사후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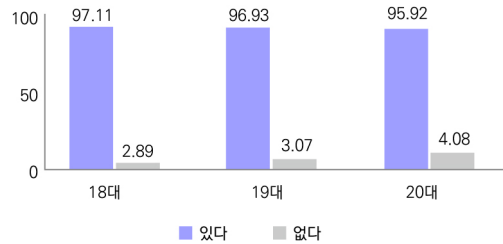
구 분	18대	19대	20대
매우 그렇다	5.3	24.4	15.8
그런 편이다	40.8	50.7	48.4
별로 그렇지 않다	40.5	21.3	29.4
전혀 그렇지 않다	7.1	2.4	6.1

다.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시청자 집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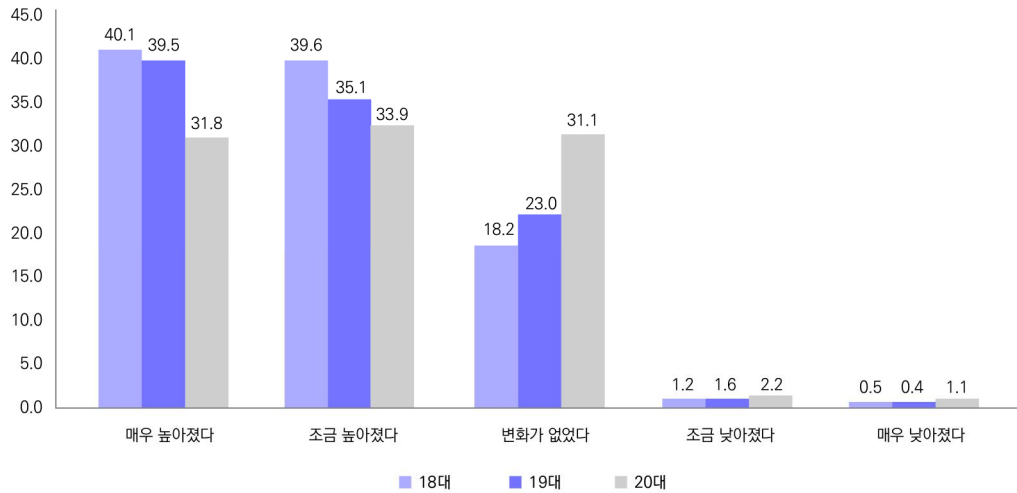
〈표 4-24〉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여부(사후조사)

구분	빈도(명)	비율(%)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	963	95.92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없다	41	4.08
합계	1,00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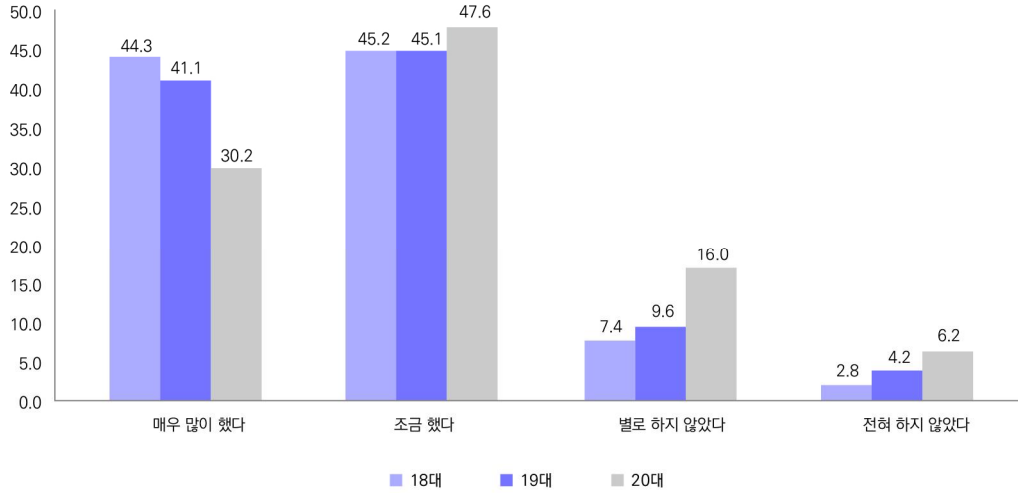


심리·인지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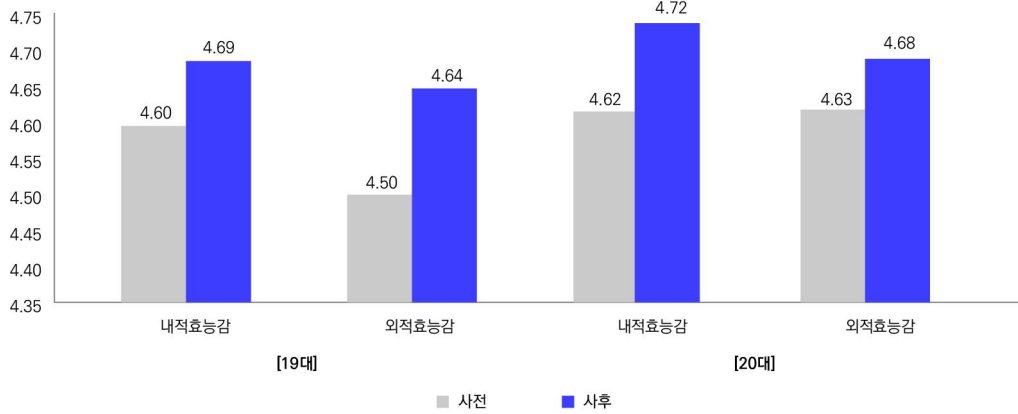
〈그림 4-15〉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선거 관심도의 변화(사후조사)



[그림 4-16]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의 선거 관련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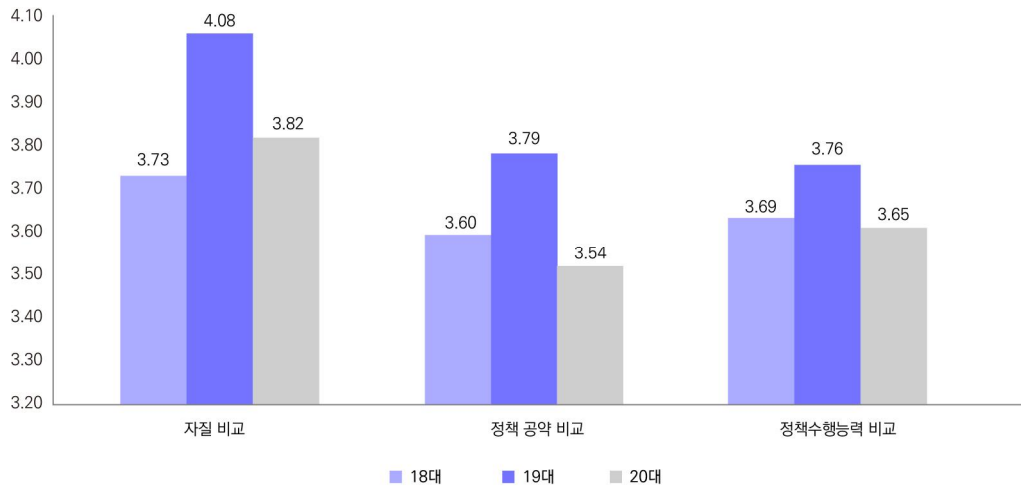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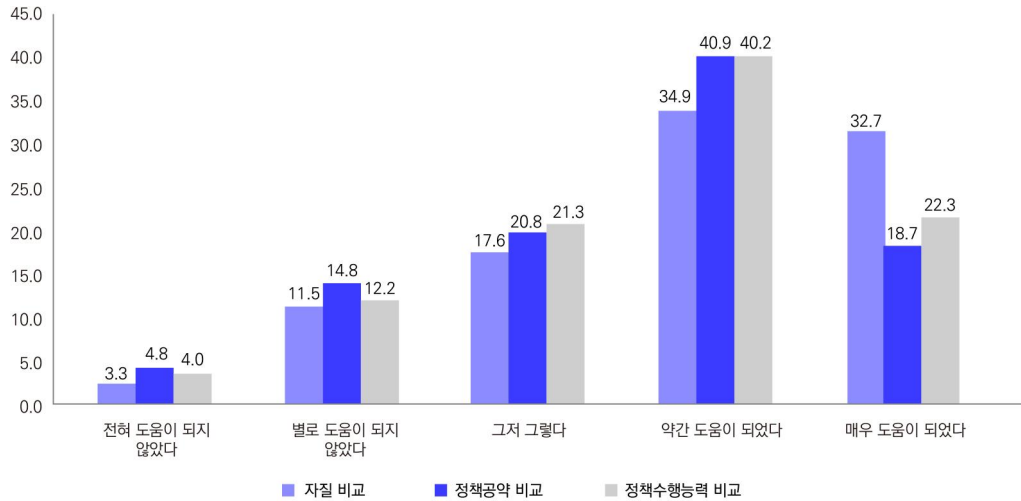


[그림 4-17] 후보자토론회 시청 전후의 정치적 효능감(사전/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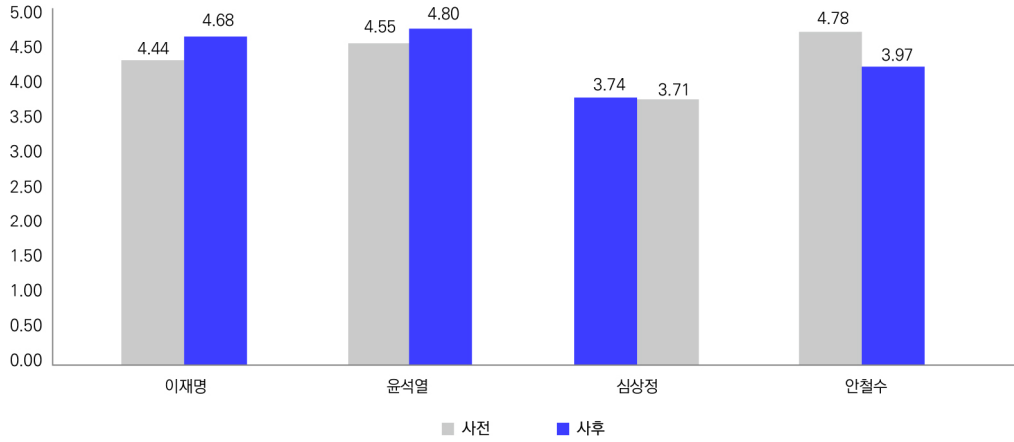
📌 후보자 자질, 정책공약, 국정운영능력 평가(%)

[그림 4-18]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정책공약·정책수행능력 비교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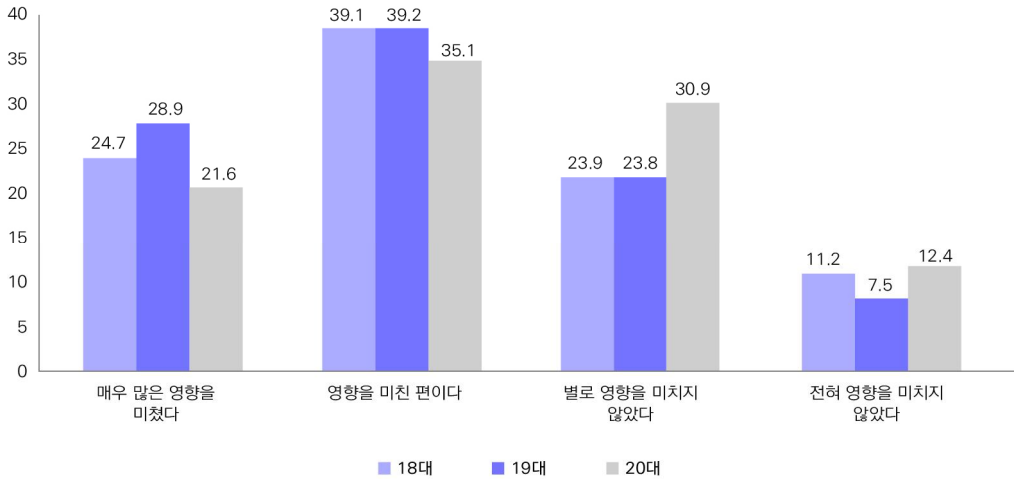
태도 효과: 후보자 호감도에 미친 영향(%)

[그림 4-19]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변화(사전/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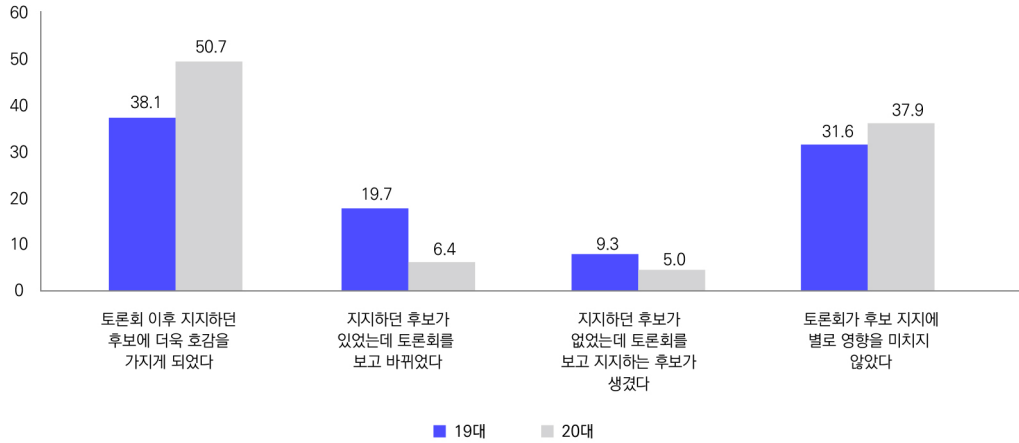


후보자 선택 효과(%)

[그림 4-20]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 비교(사후조사)



[그림 4-21] 후보자토론회가 후보 지지에 미친 영향(사후조사)



2. 용역결과 요약보고서

가. 서론

방송을 통한 후보자토론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Holbrook 1996). 이 연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이러한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했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후보자토론회가 정보 제공과 후보자 선택에 효과적이었는지, 흥미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토론회 시청이 유권자들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후보자토론회 시청은 유권자들의 선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즉, 후보자토론회가 넓은 의미에서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한다. 또한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선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식 증가로 이어지는가를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다.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가는 토론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와도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토론회 진행 방식과 빈도, 시간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파악한 후 더 나은 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토론회 운영 방식이 필요한가를 숙고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영향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토론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나. 선행 연구 검토

(1)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에 대한 평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처음 개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자들 간의 합동 토론회는 세 차례 개최되었다. 당시 토론회를 탐구한 연구에 따르면, 토론회가 토론이 아닌 비방 중심이었으며, 사회자의 역할이 미숙하여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 있었던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후보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명한 후 상호토론을 진행하는 방식, 즉 후보자들끼리 질문을 주고 받는 형식의 경우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질문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부터는 2004년 선거법에 개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토론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기존에 비해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기획했던 것은 좋았으나 후보자가 여섯 명에 달해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형식을 탐구한 연구는 당시 후보자들의 반박과 재반박, 재 질문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것이 후보자들 간의 열띤 토론을 제한하였으며, 또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을 평가할 기회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도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진행 시 후보자들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질문과 발언을 하며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2)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은 크게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유용성, 흥미성, 공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존 보고서의 경험적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특히 정보원으로서의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과 토론회 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인상적이다. 반면 흥미로운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는가는 토론회의 형식과 진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후보자들의 수와 토론 행태, 선거 환경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현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후보자토론회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후보자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들 중 하나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기존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다수는 후보자토론회가 선거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더 나아가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이 연구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 인지적 측면, 효과적 측면과 관련한 유권자 평가를 조사·분석한다. 이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4-25〉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의 범위

제도 평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주제 및 진행방식 평가
인지 평가	후보자토론회의 인지도, 관심도,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평가
효과 분석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분석: 후보자 선호와 선택 변화, 정치 관심도 및 참여 변화, 정치 지식 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진행방식, 주제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 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의 제도적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인지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적 평가를 살펴본다. 후보자토론회를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인지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두는지(관심도), 흥미를 유발하는지(흥미성), 유용한 정보의 제공자로 인식하는지(유용성),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공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분석한다.

효과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 지식, 효능감, 정책 및 후보자 인지, 정책 및 후보자에 대한 태도와 참여, 그리고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특히,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심리학적, 합리적선택, 그리고 인지심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추정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제도와 인지 평가, 그리고 효과 분석에 있어 선거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가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중 매체가 후보자토론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사화하는지를 조사한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매체의 후보자토론회 보도가 유권자들의 평가와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2) 조사 방법

이 연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를 전후하여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남녀이며, 조사 방법은 유무선 전화를 혼용한 무작위(Random Digit Dialing) 전화면접조사이다. 사전조사는 2022년 2월 17~18일에 진행하였으며, 사후 조사는 선거 직후인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설문 문항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제도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는 후보자토론회의 주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담고 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세 차례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3) 응답자 특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전/사후 패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후조사 기준 응답자 수는 1,004명이다. <표 4-26>은 이 조사에 참여한 설문 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담고 있다. 이 표의 사례수는 조사완료자의 수이며, 비율(%)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가 부여된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본문에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가중치가 적용된 부록의 통계표와는 수치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을 담고 있는 아래의 표를 보면,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하여 후보자 토론회를 3회 시청하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주요 후보자 토론회인 제1차 토론회(경제분야)를 보았다는 유권자의 비율은 78.3%, 제2차 토론회(정치분야)를 시청하였다는 비율은 75.3%, 제3차 토론회를 시청한 비율은 76.5%, 마지막으로 군소정당 후보자토론회를 보았다는 비율은 25.9%였다. 이러한 통계치는 이번 선거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았다. 설문 참여자의 87.9%가 토론회에 관심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은 주요 후보자토론회를 중심으로 한다.

〈표 4-26〉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 (명)	비율(%)
전 체		1,004	100.0
성별	남자	560	49.8
	여자	444	50.2
연령별	18~29세	142	17.4
	30~39세	145	15.1
	40~49세	177	18.7
	50~59세	222	19.4
	60세 이상	318	29.3
지역별	서울	212	18.9
	인천/경기	319	31.5
	대전/세종/충청	107	10.8
	광주/전라	100	10.1
	대구/경북	88	9.5
	부산/울산/경남	132	15.0
	강원/제주	46	4.3
20대 대선 관심도	관심있음	1,494	97.5
	관심없음	40	2.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 시청여부	시청함	1,494	97.5
	시청안함	40	2.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 시청횟수	1회	153	17.3
	2회	154	15.8
	3회	415	42.9
	4회	217	21.5
	모름/무응답	24	2.5
개별 토론회 시청 비율	1차 토론회	787	78.3
	2차 토론회	757	75.3
	3차 토론회	769	76.5
	군소 후보자토론회	261	25.9
TV토론회 관심도	관심있었음	849	87.9
	관심없었음	114	12.1
이념 성향별	보수	401	38.5
	중도	297	30.8



		조사원료 사례수 (명)	비율(%)
	진보	295	29.7
	모름/무응답	11	1.0
월평균 개인소득	100만원이하	189	18.8
	101-200만원	124	14.1
	201-300만원	173	17.8
	301-400만원	161	15.0
	401-500만원	101	9.5
	501만원이상	150	14.3
	모름/무응답	106	10.4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347	35.7
	국민의힘	399	38.3
	정의당	19	2.1
	국민의당	49	5.3
	기타정당	5	0.5
	없음	183	18.0
	모름/무응답	2	0.1
투표후보별	이재명	432	44.5
	윤석열	482	47.6
	심상정	19	2.2
	그 외 후보	9	0.8
	모름/무응답	49	5.0
최종학력별	고졸이하	353	33.6
	대학교 재학/졸업	548	56.3
	대학원 재학/졸업	99	9.8
	모름/무응답	4	0.4
직업별	화이트칼라	292	29.9
	블루칼라	151	14.2
	자영업	181	17.3
	가정주부	175	17.5
	학생	55	6.3
	농임어업	35	3.2
	무직/기타	115	11.5

(4) 분석방법

이 연구는 앞서 소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사용한 주요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어떠한 변수가 어떠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더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1)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제도 평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법정 토론 3회와 군소정당 후보 토론 1회와 함께 언론사가 주관한 2차례의 토론회 등 총 6차례가 개최되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법정 토론회(3회)와 군소정당 후보 토론회(1회)를 중심으로 후보자토론회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토론 횟수와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현재 주요 후보자 대상 토론회 3회와 군소 정당 후보 대상 토론회 1회 등 4회에 걸친 개최 횟수와 토론회 진행시간(2시간)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토론회 시청 이후 후보자토론회 개최 횟수가 4회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소간 증가한 것이 나타났다. 이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후보들 간 네거티브 비방전이 이어지면서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검증이 어려워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과 관련하여 토론진행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요 정당 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후보자들 간 토론방식은 주도권토론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비율 또한 높았다. 반면, 시간총량제토론 방식과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형태였다.

이는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자토론회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시간총량제토론 진행 과정에서 사회자 역할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후보자토론회에서 사회자에게 조금 더 의미있는 개입과 진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된다면 후보자토론회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2)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현실 평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현실 평가는 관심도, 유용성, 공정성, 흥미성의 세부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자질, 그리고 국정수행 능력을 한자리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거과정의 중요 이벤트인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유권자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88.2%의 응답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관심이 많거나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후보 선택의 차이로도 이어졌는데, 응답의 선택지 가운데 후보자토론회를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고 응답한 유권자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후보자토론회의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개인소득, 지지 정당 등의 요소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유권자들이 정보 전달의 채널로서 후보자토론회를 얼마나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설문에 응한 75%의 유권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유의한 편이었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실제 경로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들은 신문이나 TV와 같은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정보의 소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나 1인 미디어를 통한 뉴스의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의 진단과 결을 달리한다. 전통적인 언론매체(legacy media) 다음으로 응답자들은 후보자토론회와 유튜브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사후조사에서는 유튜브가 후보자토론회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대안적 정책 검증 시도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유권자의 개별적 특성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채널 이용에 체계적인 차이를 유발하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지지정당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정보의 출처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후보자 정보 습득에 사용되는 매체와 20대 대통령 선택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언론보도, 주변 사람, 메신저를 통해서 후보자 정보를 습득한다는 유권자 층은 더 높은 비율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유튜브로 정보를 확인하는 유권자인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셋째,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과 흥미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후보자토론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흥미롭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유권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공정성과 흥미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있는지 파악한 결과, 공정성 인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흥미성에는 연령과 지지정당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20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공정성과 흥미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일수록 후보자 토론회가 공정했다거나 흥미로웠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가 불공정했거나 흥미롭지 못했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은 차이는 선거에 패배한 진영과 그 지지자들일수록 자유와 공정과 같은 지표들로 측정된 선거 품질(electoral quality)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3)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효과 분석은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유권자들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우선, 조사결과에 따르면, 95.92%라는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총 4회의 후보자토론회 중 3회를 시청한 응답자 비율이 41.33%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후보자토론회의 시청은 응답자들의 정치 관심,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선거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빈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65.63%의 응답자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2.76%의 응답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이후 주변 사람들과 선거에 대해 활발히 대화했다고 하였다.

후보자토론회는 정치적 효능감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이 모두 다소 상승폭을 보였다. 그런데 특히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적 효능감에서 더욱 명확한 증가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후보자토론회는 응답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자질, 정책공약, 그리고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응답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후보자 토론회 이전과 이후에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인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 호감도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사전/사후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그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응답자의 정당 선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에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 평균값이 상승한 것은 두 후보가 속한 정당을 각각 지지하는 응답자 집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도 호감도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후보자 선택과 관련한 분석 결과들은 응답자들이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선호를 후보자토론회 이후에 보다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이 높았으며,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선택한 후보를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명확하게 나타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보다 결속력 있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기존의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경우는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선택한 비율이 윤석열 후보의 선택만큼이나 높았으나, 이들은 실제 선택에서 심상정 후보를 선택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후보자토론회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지지하는 후보를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후보자토론회는 응답자의 선거관심도와 정치 관련 대화의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보자토론회가 후보 선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 매체의 후보자토론회 보도

이 장은 매체가 후보자토론회를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열 개의 신문사와 네 개의 방송사가 2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생산한 후보자토론회 관련 1,919개의 기사를 다양한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 결과에 따르면 대략 약 45.96%의 기사가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였다. 반면 후보자토론회 자체를 평가하는 기사는 약 4.84%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토론회 자체를 평가하는 기사의 대부분(53.76%)은 후보자토론회가 필요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연구는 매체의 선거기사를 분류할 때 전략과 승부에 초점을 두는지 혹은 정책에 초점을 두는지를 확인하곤 한다. 이 연구도 유사한 맥락에서 후보자토론회 관련 기사가 승부에 초점을 두는지 정책에 초점을 두는지를 확인하였다. 분류 결과에 따르면 승부에 초점을 두는 기사가 약 14.9%인 반면 정책에 초점을 두는 기사는 약 9.95%이었다. 일반적인 선거기사보다 그

격차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후보자토론회 관련 기사에서도 승부에 초점을 둔 기사가 정책에 초점을 둔 기사보다 더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후보자토론회를 보도할 때 매체가 정책보다는 전략에 초점을 두는 것은 후보자들이 토론회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매체가 정책에 초점을 둔 기사보다 승부와 전략에 집중하는 기사의 판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보다 승부에 초점을 두는 기사를 더 빈번하게 생산할 수도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목적 중 하나가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책선거를 고양하는 것이라면 매체가 정책에 초점을 두고 후보자토론회를 보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를 보도할 때 방송사와 신문사들 사이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신문보다 방송의 승부프레임기사 비율이 더 높은 편이며, 방송보다 신문의 정책기사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이 결과는 신문보다 방송에서 선거기간 전략기사와 정책기사 비율이 더 높았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물론 정책과 전략기사 빈도 차이는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관찰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경향신문의 경우 승부프레임기사의 비율보다 정책기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매체가 후보자토론회를 승부에 초점을 두고 보도한다는 것은 때로 특정 후보의 우세나 열세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약 82.11%에 달하는 기사들이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박빙의 승부였다고 평가했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기사(10.48%)가 이재명 후보가 후보자토론회를 더 잘 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이 비율은 약 3.14% 정도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대략 절반에 달하는 후보자토론회 관련 기사들은 토론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들은 때로 특정 후보에게 호의적이거나 비판적인 논조를 띤다. 이 보고서의 분류 결과에 따르면 언론은 대체로 토론회를 보도하며 후보자들에게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비율과 우호적인 기사 비율의 차이는 42.52%에 달하며, 윤석열 후보의 경우 약 40.37%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매체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더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후보자토론회 내용을 전달할 때 언론사들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는 더 빈번하게 그리고 비판적인 기사는 덜 빈번하게 생산했다.

바. 후보자토론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1) 후보자토론회 제도적 차원에서의 제언

후보자토론회가 선거과정 전반에 행사하는 영향력과 제도에 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대통령선거에서 다당제적 후보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다수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을 동시에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진행방식에 대한 검토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계적인 중립을 넘어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토론을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쟁점에 관한 후보자들 간의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유권자 참여형 실시간 진행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유권자들의 질문에 후보자가 응답하는 방식과 전문가의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 등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토론 방식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여주었다.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명의 수어통역사가 전체 후보자의 통역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 각 후보자들을 담당하는 수어 통역사들을 배정함으로써 현장성을 높이고, 수어통역 채널을 복지TV와 같은 일부 한정된 케이블방송이 아닌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후보자토론회 인지적 차원에서의 제언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토론회 현실 평가를 관심도, 유용성, 공정성, 흥미성이라는 네 가지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고 평가한 이후,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18대에서 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유권자들에 따라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같은 '관심도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젊은 연령대의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뉴미디어를 활용한 토론회 형식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요청된다. 또한, 생산직이나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유권자들과 저소득층인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후보자토론회 종료 이후에라도 1인 미디어 채널을 통해 5분 이내의 짧은 분량으로 이슈별 토론 내용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정보 채널이 다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절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현대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후보자토론회 콘텐츠의 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과 흥미성은 점증하는 정치적/정서적 양극화 추세 때문에 점차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극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정치권의 영합게임(zero-sum game)식의 대결 문화가 청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선관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직선거법에서의 인터넷 댓글 규제 관련 자율규제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제안한다.

(3) 후보자토론회 효과적 차원에서의 제언

최근 세 번의 대선에 걸쳐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가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그 정도에 있어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응답자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후보자토론회를 겪어오면서 그 효과가 감소한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떤 이유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특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후보자토론회가 유용했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검증하고 후보자의 정책수행능력을 비교 평가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공약에 대한 검증과 정책수행능력의 검증에서 유권자들이 도움을 얻어 투표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후보자토론회가 정책에 집중하여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는 제도의 문제이자 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들의 자세와도 관련이 있다.

셋째, 이번 후보자토론회는 여전히 응답자들의 선거 관심을 고양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분석의 결과 후보자토론회는 응답자가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호감도와 지지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후보자토론회가 반드시 지지와 선택에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토론회가 응답자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방향의 고민과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절 후보자토론회 관련 제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선거방송토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를 개최·주관한 방송 3사 관계자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등에게 소회 또는 평가, 향후 과제 등에 관한 원고작성을 의뢰하였다.⁵³⁾

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방송토론에 대한 평가와 제언

권영준 교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1. 서론

20대 대통령선거가 무난하게 끝났다. 엄중한 코로나19 사태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질서유지로 명실상부한 선진국다운 선거 과정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일 뿐아니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1987년 국민들에 의해 민주 대혁명으로 쟁취한 자랑스런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금번 20대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유권자들인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의거 3번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너지 대책’과 ‘부동산 대책’(제1회), ‘청년 정책’과 ‘저출생·고령화 대책’(제2회), ‘정치 개혁 방안’과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제3회)라는 주제하에 각 정당의 논객들이 출연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대통령선거방송 토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 선거 초청후보자 토론회(제82조의2 제4항)”가 경제·정치·사회 각 영역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서 열렸는 바, 합계시청률이 최고 35%에 근접할 정도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초청대상 후보자는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3) 본 글은 작성자의 의견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후보자” 등이 대상이 되어, 제20대 대선 초청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 등 4인이었다. 그 외의 대선후보자들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의거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가 1회 개최되었다.

금번 대선방송토론에서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모두 ‘시간총량제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주도권토론’은 법정 대통령선거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검증에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것인데, 이를 통해 과거에 비하여 후보자간 치열한 검증과 논박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역동적인 토론을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20대 대선 선거방송토론의 백미인 3회에 걸쳐 개최된 “초청후보자 토론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한 “대통령선거 초청후보자” 토론회(3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진행방식 결정에 따라, 세 차례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모두 ‘시간총량제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도권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해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매 토론회마다 후보자들은 각 분야에 대한 2가지 주제에 대해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 동일하게 배분된 총 발언시간 안에서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시간총량제토론)이었고, 이후 해당 토론분야 전반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를 지목하여 토론(주도권토론)함으로써 토론의 역동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다양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토론주제는 최근 및 향후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현실들이 잘 반영되도록 정해졌다. 즉,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대중들의 어려운 삶,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의 극심한 고통, 2021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극심한 생활 물가인상(인플레이션),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로 인한 원자재 대란, 부동산 가격 급등 및 불안정 장기화, 세계 최악의 저출생 고령화 현상, 소득·자산·계층·세대·지역 간의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 노사 및 노노 갈등 문제, 연금적자 및 재원의 고갈 문제, 4차 산업시대와 상충되고 낙후한 교육제도 문제, 북한의 도발 및 추가적인 핵위협 문제, 미중 및 미소갈등의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쏟아지는 제반 문제들을 고려하여, 3회의 대선 초청후보자 토론회의 주제를 정치·경제·사회로

하되, 그 순서는 가장 시급한 경제문제에 대한 초청후보자들의 대책과 비전을 먼저 알기 위하여, 첫 번째 토론회 주제를 경제로 결정하였고, 두 번째가 정치, 마지막으로 사회를 주제로 결정하고 진행하였다.

1) 20대 대선 초청후보자 제1차 토론회(경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초청후보자 제1차 토론회는 2022년 2월 21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가 참석하였으며, 토론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제1주제)’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제2주제)’으로, 후보자는 2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 6분 내에서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9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하여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토론회는 MBC, KBS1,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에서 동시 생중계 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었다. 시청률은 지상파 3사 소계 17.5%, 종합편성채널 4사 소계 12.8%, 보도전문 편성채널 2사 소계 4% 등 합계시청률 34.3%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시청률을 보여 주고 있었다.

제1차 초청후보자 토론에서는 경제분야 관련 주제로서,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하여 네 명의 후보자들은 공히 자신들과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에게 답변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전환적 공정 성장”을 강조하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우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규제완화 및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전환을 통해 우리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위기해결을 통한 안정 성장’을 강조하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산업 구조조정과 과학기술 투자, 인재 양성’ 등 3가지 기반을 통한 ‘4차 산업시대의 선도 국가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문제들인 코로나 추경 처리 과정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장재정 등 다양한 이슈와 논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체적으로 제1차 초청후보자 경제토론회는 대과없이 진행되었고, 국민들이 언론들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토론 중반에 가서는 양강 후보가 경제 정책과는 무관한 네거티브를 거칠게 주고 받으며 전반적인 토론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차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언급한 경제 정책은 대체로 언론에서 소개된 내용과 다르지 않았고, 네거티브 공방 역시 추가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한 팩트 검증은 없이 기존의 의혹을 반복하는 수준이었고, 입장이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회피하거나 상호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동문서답식 답변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품격없는 토론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2) 20대 대선 초청후보자 제2차 토론회(정치)

제2차 토론회는 2020년 2월 25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정치 분야 주제로 개최되었는 바, 구체적 토론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제1주제)’과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제2주제)’이었다. 토론회는 SBS, KBS1, MBC,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 WBC복지TV,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에서 동시 생중계 되었다. 이번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WBC복지TV와 협력하여 사회자와 각 후보자를 전담하는 수어통역사 총 5명을 배치하여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생중계를 실시하였는 바, 후보자별 일대일 수어통역사 배치는 국내 선거방송토론에서는 최초의 시도로서, 청각장애 선거인의 시청 접근성을 높여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청률은 지상파 3사 소계 18.6%, 종합편성채널 4사 소계 10.9%, 보도전문편성채널 2사 소계 3.5% 등 합계시청률 33%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구체적인 토론회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첫 번째 주제가 권력구조 개편이었던 바, 네 명의 초청후보자들은 먼저 헌법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공유했으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늘 제기되는 개헌 담론은 선거 후엔 항상 흐지부지되기 일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하여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후보가 심 후보와 안 후보에게 정치 개혁안을 제안하였으나, 그동안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온 언행 불일치에 대한 비난 등이 오가면서 결론 없는 설전을 이어 갔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논박도 있었던 바,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미 결렬을 선언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논의를 일축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자신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안 후보는 경선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강변하는 토론회였다. 그밖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놓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과 입장이 바뀐 후보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한편 1차 토론회에 이어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놓고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가 다시금 또 충돌했는데,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서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이 상대방 후보라고 맹렬하게 성토했는 등 치열한 네거티브와 공방이 진행되었다.

제2 주제인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구상들에 대하여 4명의 후보자들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념지향에 따라 변별력을 갖게된 토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지 위협하고 북한에게 거칠게 대해서 전쟁 위험을 높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반박하면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으론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규칙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치겠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간에 놓고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서 외교안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며, 북한과의 대화에는 진정성을 갖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북핵문제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토론회 하루 전날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관련한 토론도 있었는데,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공약과 관련해 한·중 경제 및 외교 파탄이 너무나 명백해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윤석열 후보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한·미가 감시정찰 자산을 공유해야 하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외교의 실패가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라면서 윤 후보가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보지도자로 평가하면서 정치 초년생인 윤후보를 비난하는 것 같은 논쟁을 벌임으로써 제3국의 비극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이었다는 일부 비판도 존재하였지만, 종합적인 평가는 2차 토론회가 1차에 비하면 변별력이 큰 토론회라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3) 20대 대선 초청후보자 제3차 토론회(사회)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3월 2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KBS 스튜디오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였는 바, 토론 주제는 ‘복지정책과 재원조달방안(제1주제)’, ‘인구절벽 대응방안(제2주제)’이었다. 시청률은 지상파 3사 소계 17.9%, 종합편성채널 4사 소계 10.9%, 보도전문편성채널 2사 소계 4.4% 등 합계시청률 33.2%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토론 내용들을 살펴보면, 4명의 초청후보자들 모두 인구절벽 대응방안으로 첫째 일자리, 둘째 주거안정, 셋째 보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총론적으로는 같은 입장을 보였으나, 구체적 각론에서는 의견이 상이하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첨단기술 R&D 투자와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투자 확대,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기관의 고용을 늘리고, 주택공급의 30%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리쇼어링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강조하였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을 줄여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최우선 과제로 주거안정대책을 강조하였다. 이 후보는 “주거문제는 청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의 30%를 청년층에게 우선 배정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형태로 구조로 집을 짓겠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 후보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인프라·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 회복을 통해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이 후보는 “공공기관의 고용을 늘리고, 청년고용을 5% 포인트 올리겠으며, 청년 기본소득도 확대 시행해 청년들이 알바할 시간을 줄여 자기 개발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1명인데, 3.1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스라엘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하며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 까지 탁아 및 육아를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정책을 시행하면 보육교사와 급식 일자리 등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동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면서 보육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확실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 후보는 “현재 지방 교육 교부금에 축적된 자금이 많아서 (보육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15조를 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일자리에서 교육·문화·의료의 기회를 고루 누리면서 지방에 자리를 잡아야 자녀 출산이 용이하다는 학계의 정설을 본인도 채용하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통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자체의 일자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매년 1000개의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고, 일본은 연 5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 제조업과 고부가가치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8개 밖에 유치하지 못했다”고 문재인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안 후보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같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기업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떨어지는 환경이면 구태여 우리 쪽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 규제가 너무나 많다. 규제가 제일 심각할 수 있으므로 규제혁파가 중요하고, 동시에 노동개혁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2018년 사망한 (고)김용균 청년 노동자 이야기를 하면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압박하였다. 심 후보는 “민주당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고)김용균의 친구 6,561명 중 단 한 명도 정규직화 된 사람이 없다”고 강조하며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인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고, 이 후보는 “저도 산재 환자이기도 하니까, 문제의식에 안타까움을 갖고 공감한다”며 “차기 정부를 통합정부로 만들어서 심 후보가 직접하시는 게 어떨겠느냐”고 통합정부 구상을 심상정 후보에게 다시 제안하였으나, 심 후보는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당이 민간기업은 강제하기 힘들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보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라는 뜻이냐”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이날 3차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간 ‘페미니즘’에 대한 뜨거운 설전도 진행되었는 바,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저출생의 원인을 이야기하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 미친다는 말을 했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이고 남녀 교제에 영향 준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냐”고 물었고, 윤석열 후보는 “나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이란 여성의 성차별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논박하였다.

선거일을 바로 몇일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토론회인 3차 토론회에서도 양당 후보의 집요한 네거티브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벌어지며 주제와 무관한 대장동 비리 의혹 사태의 주범을 서로 상대방이라고 지목하면서 토론을 진흙탕으로 몰고간 것은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품격을 낮춘 안타까운 일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3. 20대 대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대한 총괄 평가 및 제언

이미 선거가 완료된 시점이지만, 향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정책토론회 및 후보자 대상 토론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20대 대선 정책토론회(3회)에 대한 평가와 제언

첫째, 20대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의거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주요 정당 관련자들이 3번의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으나,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청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년의 경험으로 각 정당들은 낮은 시청률을 인식해서 그런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참석한 토론자들도 제시된 주제에 대한 준비부족을 드러내는 한계도 일부 있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정책토론회가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낮은 시청률로 인한 참석 정당들의 낮은 관심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둘째, 사회자 선정에 있어서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주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선정함으로써 낮은 시청률을 극복하고 사회자의 적극적 역할이 발휘되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사회자가 기계적 중립성만을 준수하고 토론자들의 부적절한 답변 내지 토론에 대한 적절한 관여가 없는 현상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질적인 공정성을 전제로 적극적 사회자의 역할이 제고되는 구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20대 대선 초청후보자 토론회(3회)에 대한 평가와 제언

첫째, 시의성있는 팩트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 초청후보자 토론에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네거티브 공방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방송토론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근거없는 네거티브 주장이나 허위사실 주장 내지 사실을 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결과를 방송 중에 별도의 화면을 통한 공지 내지 방송 직후에라도 보도하는 구조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CNN 방송의 경우 대선 후보 TV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TV토론 중계화면에 표출한 사례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팩트체크 보도의 경우 후보자들의 발언이 명확히 거짓인지 또는 어느 정도가 진실인지 구분해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공영방송 ZDF는 2021년 총리 후보자 TV토론회 직후 1시간 동안 검증 보도를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둘째, 이번 대선 토론을 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한 사회자의 역할이다. 정책토론회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공정성을 전제로 한 권위 있는 사회자의 적극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시간 총량제 토론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상대방 후보에게 답변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지명된 상대방 후보가 아닌 엉뚱하게도 제3의 후보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식의 상대방 망신주기식의 토론이 종종 횡행하였는데,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자가 기계적 중립이 아닌 실질적 공정토론의 사회자로서의 개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도권토론은 앞선 19대 대선 토론의 한계를 보완하지는 취지로 토론 주제의 다양화와 심층토론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유토론 방식을 채택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 다르게 모든 주도권토론에서 상대방의 약점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네거티브 공방이 반복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럴 경우, 사회자의 적절한 경고성 개입이 필요했으나, 이번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사회자는 대선후보자들로부터 받는 중압감 때문인지 그냥 내버려두거나 적당한 개입마저도 방기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사회자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당들이 사회자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토론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A 후보는 2월 25일 제2차 정치 분야 토론회를 진행한 사회자가 A 후보 질문을 받은 B 후보의 답변 차례에 개입해서 오히려 C 후보에게 답변 기회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또 3월 2일 제3차 사회 분야 토론회 직후엔 D 정당이 해당 토론의 사회자를 향해 '발언권을 얻지 못한 C 후보가 홀로 발언을 해야 했다'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총량제 토론에서의 사회자의 발언 시간 조율의 문제로 발생한 일들로서, 공정성을 담보로 사회자의 신뢰받을 수 있고 권위있는 적절한 개입으로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TV토론 이후 유권자들이 토론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사회자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등 다양한 방식의 유권자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토론회 진행 형식과 사회자의 역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즉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타 사항으로서, 행사를 주관한 방송국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 현장을 주관했던 일부 방송사의 경우, 토론 집중을 방해할 수도 있는 조명 문제들과 후보자마다 상이한 배경색 문제 등은 간과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후보들의 하반기가 모두 드러나게 만든 투명한 연단도 후보자들을 두 시간 내내 긴장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이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20대 대선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1회)에 평가와 제언

끝으로 TV토론방식에서 현저히 홀대받고 있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 초청후보자들과 동일한 기탁금(3억원)을 내고도 초청 외 후보자들의 토론회는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계 방송시간도 한밤중인 11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한밤중 취침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4%에 달하여, 대선 정책토론회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정책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생방송 중계되는데 비해, 한밤중 취침시간에 방영되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는 초청 외 후보자들을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토론 횟수를 늘릴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토론회 시간대는 재조정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초청 외 후보자들 중 일부가 생방송 토론 중에 “초청 외 후보자들에게 2일에 걸쳐서 생방송으로 중계해줄려고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진행하는 것 같다”는 비아냥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는 주도권토론은 전혀 없이 2번에 걸친 후보자 공약발표만 하는 진행방식인데, 이 또한 초청후보자 토론회와 기본적인 진행형식에서의 차별을 두는 것인 바, 초청 외 토론회에서도 초청후보자 토론회와 동일한 진행 형식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선후보 기탁금을 동일하게 납부하면서 상이한 대우를 여러 형태로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들을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0대 대통령선거와 토론 프로그램 독립성

김재영 MBC 부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MBC 100분토론 팀장)

1. 들어가는 말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쟁점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기록되었다. 77%가 넘는 높은 투표율, 당선된 1위와 낙선한 2위의 차이는 불과 0.73%.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되었고, 이재명 후보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낙선자가 되었다.

선거 과정도 역사상 처음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졌다. 대규모 집회와 같이 대중을 직접 대면하는 선거 캠페인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한 후보자 노출과 대중 소통은 다른 선거에 비해 중요도가 훨씬 높았고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 컸다. 5년 전인 2017년에 선거에 비해 미디어 환경은 크게 변했고 TV매체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토론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지상파 TV 뿐만 아니라 각종 뉴미디어를 통해 후보자들은 출연했고, 이에 대한 관심도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기반 경제채널인 삼프로TV에서 진행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기호 순 표현) 토론회는 조회 수가 기록적이었고 영향력도 매우 높았다.

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후보자간 토론에 대한 태도 역시 매우 예민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경우 선거 캠페인 초기부터 TV 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후보자간 토론회의 경우 방송사 공동 주관 토론회 2차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 3차례가 성사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일어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룰이 만들어졌다. 공직선거법상 토론참여 기준에 부합하는 군소 후보들을 배제하고 거대정당 후보들만 토론에 참여시키려는 방송사들의 시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이재명-윤석열 거대정당 유력후보들끼리의 1대1 토론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의 흐름은 이후 6.1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이 글은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후보자들이 출연한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 과연 주관하는 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언론사의 독립성이 얼마나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높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박빙의 선거였던 만큼 매체 간 경쟁도 치열했다. 토론회에 대한 후보자들의 예민함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토론을 주관하는 기관들의 독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웠다.

2. 20대 대통령선거와 TV 방송사 토론프로그램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들끼리의 TV 토론은 절차적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14대 대통령선거인 1992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후보자간 TV 토론은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물론 관훈클럽, 방송기자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정치학회 등 언론학술단체들이 후보자별로 초청을 해 언론인, 혹은 전문가들과 대담형식으로 하는 토론회도 존재했지만 1992년 이래 TV 토론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철학, 실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

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선 캠페인 기간이 매우 짧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고 2달 안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2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각 정당들은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치러야 했고 이후 후보 간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 정당 후보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TV 토론회는 모두 6번 열렸고 이 가운데 방송사가 직접 주최하는 후보자간 토론회는 3차례 열렸다.

20대 대통령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19대 선거에 비해 오랜 기간 대선 캠페인이 펼쳐졌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적은 횟수의 후보자간 토론회가 열렸다는 점이다.

〈표 4-27〉 제19대·제20대 대통령선거 캠페인 기간과 후보자토론회 횟수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캠페인 기간(후보 결정 후)	30일	120일
방송사 토론회	3회	2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3회	3회

후보자간 토론회 뿐만 아니라 각 방송사들은 후보자들 한 명씩 등장시켜 시청자,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대담식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19대의 경우 모든 후보들은 지상파 3사가 마련한 대담식 토론회에 모두 참여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KBS, MBC 등에서 마련한 후보자별 대담식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는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의 토론 기피는 전체적으로 19대에 비해 적은 숫자의 TV 토론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1) 지상파 3사 합동 토론회 개최 과정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은 선거를 100일 앞둔 2021년 연말과 2022년 새해 벽두를 거쳐 매우 높아졌다. 이 기간 각 언론사들이 실시한 엄청난 수의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이번 대통령선거기간 “토론”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큰 분기점은 바로 2021년 12월

25일 경제전문 유튜브채널 삼프로TV에서는 공개한 두 편의 영상이었다. <삼프로가 묻고 000후보가 답하다>는 제목으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각각 출연해 삼프로TV 진행자(정영진, 이진우, 김동환)들과 함께 경제전문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는데 두 편 모두 공개 하루 만에 1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속된 말로 떡상을 했다(현재까지 이재명 715만회, 윤석열 372만회 기록). 그 때까지 각 방송사들은 후보자들이 출연하는 변변한 토론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한 상황, 유튜브 콘텐츠인 삼프로TV 토론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으로 TV 토론에 대한 여론의 압박은 더욱 커졌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거 같다... (중략) 이나라 공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검증해나가는 데 정책 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TV 토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노출했다. 윤 후보의 토론에 대한 이런 인식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진보, 보수언론을 막론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중앙일보 사설 “격 높은 대선후보간 토론, 후보들의 의무다”, 한겨레 만평 “검사는 취조하고 왕은 명령할뿐... ‘토론’하지 않는다” 등 참조).

사실 삼프로TV 영상 공개 전후로 MBC를 비롯한 각 방송사들은 당시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1대1 토론, 혹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한 4자 토론을 각 후보 측에 제의한 상황이었다. 윤석열 후보 측의 답변이 늦어지면서 TV 토론 성사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여론의 압박이 강해지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이 양 진영 간에 논의되기 시작했다. 결국 2022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토론으로 주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방송3사 토론회와 독립성 침해

방송3사 합동토론회 성사 과정은 프로그램 제작 독립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했다. 먼저 방송사들이 주관사로서 양자토론을 제의하고 조율하는 형식이 아니라 양 후보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토론을 요청하고 방송사들은 거대정당들의 하청업체처럼 토론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TV 토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는 커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감에 시달린 방송사들이 마지못해 이 제안을 수용하긴 했지만 대통령선거 TV 토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게다가 이 제안에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배제하고자 하는 양 후보의 이해관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었다. 거대 양 후보의 제안을 방송사가 받아들였지만, 토론에서 소외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당연히 불공정한 처사라며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두 후보가 모두 법정 토론회의 대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 후보들을 빼고 양자 TV 토론을 하는 건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은 무산되었다.

법원에 의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토론이 제지되자 지상파 3사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한 4자 토론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즉각 동의를 했고, 윤 후보도 결국 마지막 순간 토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토론을 주최하는 방송사와 후보들 간에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 방송3사 보도책임자들은 토론회 제작과 연출은 KBS가 맡기로 하고 KBS 라디오 <열린토론>과 MBC <100분 토론>을 진행하는 정준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사회자로 내정했다. 정준희 교수는 두 공영방송사에서 수많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단 한번 공정성 관련 심의를 받지 않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심지어 국민의힘 토론 배틀 행사에 심사위원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의 진행 능력을 가진 진행자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내정된 사회자가 편향적(?)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의 반응에 어렵게 성사된 방송3사 토론회 과정에서 자칫 사회자 이슈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보도책임자들은 제작을 담당할 KBS에서 다시 사회자를 추천하기로 합의를 하고 결국 정관용 국민대학교 특임교수가 진행을 맡게 되었다. 특정 정파가 주장하는 편향성을 잣대로 한 비토에 방송3사의 독립성은 침해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상황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반복되었다.

방송3사 합동토론회는 2022년 2월 3일 저녁 8시 2시간 동안 KBS에서 진행했으며 지상파 3사는 TV와 유튜브로 동시 중계를 실시했는데 시청률과 조회수는 다음과 같았다.

〈표 4-28〉 방송3사 합동초청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닐슨코리아 집계, 유튜브 조회수 2022.6.9. 기준)

	KBS	MBC	SBS	합계
시청률	19.5%	11.1%	8.4%	39%
유튜브 조회수	161만	106만	70만	337만회

3) 반복되는 TV 토론회 파행과 성사

2022년 2월 3일 방송3사 합동토론회 이후 한국기자협회와 jtbc가 함께 주최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한국기자협회는 2월 5일 4개 정당에 공문을 접수했고, 모든 정당이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잠정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태. 2월 8일 토론회를 열기 위해 4개 정당 참석자들이 모여 실무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황상무 언론전략단장은 협의를 결렬시켰다.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황상무 당시 국민의힘 언론전략단장은 ‘한국기자협회와 jtbc가

좌편향 되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협상을 결렬시켰고 황상무 단장도 자신의 sns에 자신이 기자협회와 jtbc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국기자협회와 jtbc는 즉각 강력한 항의를 했다. 황상무 국민의힘 언론전략단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9시 뉴스 앵커를 진행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김인규 사장이 KBS 사장 이었고 KBS의 신뢰도는 추락하던 시기였다. 그는 2012년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토론회의 진행을 보기도 했다. 황상무 단장은 jtbc 편향성을 거론하며 일본 순회특파원으로 떠난 손석희 사장을 언급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기자협회, jtbc의 강력한 항의와는 별개로 결국 한국기자협회 초청 후보자 토론회 주관 방송사는 종편과 보도채널 6사로 바뀌고 시간은 2월 11일로 시간이 옮겨져 실시되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진행자는 노동일 경희대 교수가 맡았는데 노동일 교수는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의 창조연설을 하고, 신문 칼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 구의원 후보로 등록조차 하기 어려운 인물”, “입에 담기도 어려운 ‘형수 욕설’ 녹취가 나돌고 있고, 여배우와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단정하며 이 후보를 공격한 이력이 있었다.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2월 11일 8시부터 2시간 동안 4자 토론은 실시되었고, 언론사들이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마지막이었다.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1) 일정 조정의 난항

2022년 2월 15일 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3월 3일과 4일 실시되었기 때문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사전투표 이전인 2월 15일과 3월 2일 사이에 토론회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초청 후보자 토론회 3차례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1차례가 진행되었다. 2월 21일 월요일 경제분야, 2월 22일 화요일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2월 25일 금요일 정치분야, 그리고 3월 2일 수요일 사회분야의 토론회가 열리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투표 뿐 아니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일정을 방송사와 협의하는데도 난항을 겪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 일정과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일부 겹쳤기 때문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거액을 주고 올림픽 중계권을 구입했고 주요 경기 중계에 들어오는 광고를 통해 중계권료에 상응하는 수익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정상 첫 번째 토론회는 관례대로라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인 2월 19-20일에는 열렸어야 했지만 주관 방송사인

MBC가 베이징 올림픽 중계를 이유로 이러한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KBS 역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2월 21일 월요일에 첫 번째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차례의 초청후보자 토론회와 1차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열흘 만에 모두 소화해야 했다.

2) 진행자 이슈

방송사 주관 토론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자 이슈가 발생했다. 사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절차였지만 위원회에 속한 각 방송사 위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관방송사가 추천하는 사회자가 주로 선정되는 게 관례였다. MBC는 정준희 100분 토론 진행자, KBS는 박태서 일요진단 진행자, SBS는 주영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자를 추천했고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논의없이 이런 방향으로 사회자를 결정하려 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공문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MBC가 추천한 정준희 100분토론 진행자에 대한 비토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그 공문에 전달되기 전까지 전체 위원회 추천과정, 예비 소위에서 정준희 사회자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본 바 있었으며 KBS와 MBC 양 공영방송사 대표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였다.

국민의힘의 공문을 접수한 사무국에서는 정준희 진행자에 대한 기사를 담은 문서를 만들었고 전체 위원회에서 공개했다. 상임위원이 재고를 요청했고 위원회 토론을 거쳐 투표로 가부를 결정했다. MBC가 추천한 정준희 교수가 위원회에서 비토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은 '이렇게 되면 SBS가 추천한 주영진 기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에서는 주영진 기자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했고 결국 주영진 기자도 비토되었다. 정준희, 주영진 진행자는 6.1지방선거에서 각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 사회를 맡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위원회에서는 여성 사회자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일부 위원들께서 3차례 초청후보자 토론회 가운데 1차례는 여성이 사회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에서는 KBS 심야토론을 진행하는 정세진 아나운서를 추천했지만 본인의 고사로 결국 박태서 기자가 진행을 맡게 되었고, MBC가 제작하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사회는 차미연 MBC 아나운서가 맡았다.

3) 토론방식의 변화와 연출 이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후보자간 주도권토론을 실시했다. 위원회에서는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 대한 후보자간 주제토론(시간총량제)과 각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물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주도권토론은 각 주제와 상관없는 유력 후보들의 도덕성

이슈로 점철되었고, 사회자나 위원회도 주제와 관련이 없는 주도권토론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주제 토론의 경우에도 문답식 토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 후보들의 경우 질문을 하고 답할 시간을 주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4. 20대 대통령선거와 뉴미디어 토론 프로그램

1) 삼프로TV 출연의 영향력

삼프로TV는 후보자들을 개별적으로 초청, 2시간 가량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춘 토론을 진행했고 이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코인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투자시장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인식은 선거 이후 시민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갈증이 대중들에게 존재하는 시기에 삼프로TV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한 사람씩 등장해 거의 시간제한 없이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했다. 기존 방송사들의 경우 편성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후보자들을 한 사람씩 따로 불러 토론을 하더라도 각종 정치, 사회, 개인적 이슈 모두를 물어야 하는 강박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삼프로TV는 경제와 투자라는 하나의 주제에 천착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들의 실력을 가늠하는데 매우 유용했다. 게다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에 동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능동적으로 두 후보의 발언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다. 삼프로TV 외에도 게임채널, 또 여성주의 채널 등에서도 후보들을 초청해 관련 이슈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견해를 듣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다.

5. 결론 - 자유로운 TV토론이 답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왜 방송사 TV토론은 삼프로TV의 토론만큼 성공적이지 못했을까”라는 지점이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TV 토론,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은 몇가지 이슈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었다. 횡수도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부족했고, 주관하는 단체의 재량권은 상당 부분 침해되었다. 심지어 진행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삼프로TV에서는 형식, 내용, 그리고 시간까지도 거의 제한이 없는 자유로움 속에서 후보자들의 면모를 지켜볼 수 있었다. 물론 TV 토론의 경우 후보자간 토론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룰을 정해야 하고, 그 룰이 공정하게 작용하게끔 설계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제약 속에서도 후보자들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편일률적인 TV 토론은 더 이상 진화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자율성의 회복과 새로운 토론 룰의 정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TV토론

KBS 선거방송기획단 최성민 기자

1. 개관

대통령 선거에 있어 TV토론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① 정책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3)
 - ② 후보자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2)
- 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
 - ① 언론사 초청 후보토론회

〈표 4-29〉 제20대 대통령선거 TV토론 실시 개요

	세부내용	주 관	내 역
TV토론 (法定) + KBS초청	정책토론회 (법정)	중앙토론회	3회 (월 1회, 선거일전 90일)
	후보자토론회 (법정)	중앙토론회	3회 이상(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일 23일 전) • 초청 후보 3회 : 20:00~22:00 (120분) • 초청 외 후보 1회 : 23:00~01:00 (120분)
	언론사 초청 토론회 (방송3사 초청 후보토론)	언론사	선거일 1년 전부터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라 선거전 90일부터 매일 한차례씩 총 3회 실시한다. 정책토론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자가 출연 대상이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2달여 앞둔 1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1월 11일 본회의 상정, 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만 실시하던 정책토론회를 지상파로 확대하면서 SBS가 포함됐다. KBS와 MBC,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긴급회의를 거쳐 정책토론회에 SBS를 참여시키고 지난 12월 KBS, 1월 MBC 다음으로 2월은 SBS가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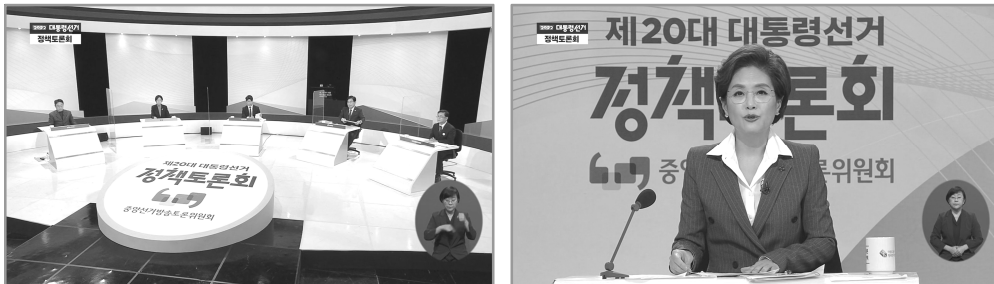
중계방송에 필요한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며 세트 제작비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KBS 아트비전과 직접 계약하여 진행하고 스튜디오 임대료는 KBS 선거방송기획단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요청하여 받는다. 스튜디오(장소)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하여 5백만 원을 받고 있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올해 대선의 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3개 방송사 가운데 KBS가 가장 높았다.

【표 4-30】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TV토론 시청률

(닐슨코리아, 단위: %)

	개최일자	방송시간	내 용	중계주관방송사	시청률(전국)	
					방송사	시청률
1	12/16(목)	10:00~12:00	1차 정책토론회	KBS	KBS	2.2
					MBC	0.4
					SBS	-
2	1/18(화)	10:00~12:00	2차 정책토론회	MBC	KBS	3.1
					MBC	0.5
					SBS	-
3	2/3(목)	10:00~12:00	3차 정책토론회	SBS	KBS	3.6
					MBC	0.7
					SBS	0.4

【그림 4-22】 제1차 정책토론회 방송 화면(2021. 12. 16. / KBS 1TV)



② 대통령선거 후보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의해 선거운동 기간에 실시하는 대선 후보토론은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이 3회 이상, 초청 외 후보자 대상으로 1회로 보통 4차례 실시된다. 이번 대선에선 앞서 언급했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KBS와 MBC, SBS가 각 1회씩 초청대상 후보 토론을 실시하고 MBC가 초청 외 후보 토론 1회를 병행하기로 했다. 토론 분야와 주제, 포맷, 진행방식, 사회자 선정 등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방송사는 토론중계 관련 업무를 맡는다.



〈표 4-31〉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내역

• 개최개요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개최시기: 선거운동기간 중 (2022.2.15.(화) ~ 3.8.(화)까지)
- 개최횟수: 3회 이상
- 초청대상: 다음 선정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

1. 대통령선거

-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 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개최일자	개최장소	방송시간	사 회	토론분야
초청 1차	2/21(월)	MBC	20:00~22:00	박경추	경제분야
초청 외	2/22(화)	MBC	23:00~25:00	차미연	국정전반(공약발표)
초청 2차	2/25(금)	SBS	20:00~22:00	편상욱	정치분야
초청 3차	3/2(수)	KBS	20:00~22:00	박태서	사회분야

➊ 초청 후보 1차 토론(MBC)

1차 토론은 2022년 2월 21일 (월) 오후 8시부터 120분간 박경추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등 경제 분야를 주제로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KBS는 중계1부조에서 MBC의 화면을 수중계하여 동시 생중계했다.

➋ 초청 외 후보 토론(MBC)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군소정당 후보자 TV토론은 1차 토론 다음날인 2월 22일(화) 오후 11시부터 120분 간 MBC에서 열렸다.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 이경희 통일한국당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 김경재 자유민주연합 후보, 이백운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등 8명의 후보가 참석했다. 후보자 공약 발표 위주로 1차, 2차로 나눠 진행됐고, 구성됐다. 후보 8명이 2시간을 나눠 써야 하는 토론회인 만큼 후보 간 자유토론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정견을 밝히는 수준에 머물렀다. KBS는 MBC의 화면을 수중계하여 동시 생중계했다.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들은 3차에 걸친 초청 후보토론은 수중계를 모두 받은 반면, 초청 외 후보 토론은 중계하지 않았다.

◆ 초청 후보 2차 토론(SBS)

권력 구조 개편,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등 정치분야를 주제로 2월 25일(금)에 SBS에서 열린 2차 토론은 편상욱 SBS앵커의 사회로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인터뷰, 시간총량제 토론, 주도권토론 등 기존 1차 토론과 구성은 동일하게 진행됐다.

◆ 초청 후보 3차 토론(KBS)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대선 후보 간 TV토론회였다. 2022년 3월 2일(수) 오후 8시부터 KBS에서 진행된 3차 토론은 스탠딩 방식으로 심상정, 윤석열, 안철수, 이재명 후보 순으로 120분간 진행됐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별도의 자문단을 꾸려 토론 방식과 큐시트, 대본 등을 구성하고, 후보자 좌석 순서 추천 및 룰미팅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담당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토론회 중계에 필요한 스튜디오와 세트, 카메라, 조명, 음향, 기술 스텝, 대기실, 분장실 등을 담당하면 된다.

[그림 4-23]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2022. 3. 2. /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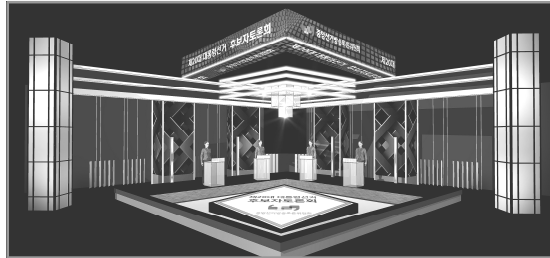


◆ 초청 후보 3차 토론(KBS) 제작 과정

가. 세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선후보 토론인 만큼 격조있고 후보자가 돋보이면서 토론에 집중할 수 있는 세트 디자인을 채택했다. 세트 곳곳에 한국 전통 문양의 격자무늬와 창호지 문틀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통일되게 반영했다. 후보자의 위치는 4명의 후보가 서로 마주 보며 토론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자와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 바닥재도 흠집이 많이 나는 아크릴이 아닌 유리 재질을 사용해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연출했다.

[그림 4-24]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2022. 3. 2. / KBS TS-4) 미술기획안 - KBS아트비전



〈세트 설치 후 보완 작업〉

세트 디자인 기획안이 결정되고 당일 스튜디오에 세트가 설치된 이후에도 실제로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현장에서 카메라 동선과 조명, 후보자 위치, 사회자와 후보자의 동선, 카메라 앵글 등을 고려해 꼼꼼하게 세트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후보자 뒤 패널 위치 재설정(당일 카메라 앵글과 맞춤)
2. 후보 배경 격자무늬 연하게 프린트(후보 키 높이 다르기 때문)
3. 세트 양옆의 날개벽 있어야 한다
4. MC석 단상 높이 높아져야 함(레일캠이 높아짐)
5. 레일캠은 반원형으로(반지름 13.5m)
6. 후보토론회 구조물 높이를 낮게 설치(30cm)...레일캠에 걸림
7. 세트 위 후보자토론회 구조물 70% 작게 제작...위치는 뒤로 30cm 밀어달라
8. 타이머 모니터 받침대 없어도 됨(바닥에 설치)
9. 세트 뒤 MC 카메라 공간 확보(1.5m 이상)
10. 후보 입장 위한 무대 양옆 계단 설치





[그림 4-25]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세트 제작 과정(KBS TS-4)



나. 오프닝의 역동성

기존 1차, 2차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앉아서 오프닝을 진행했다. 하지만 KBS가 진행한 3차 토론은 사회자가 무대 밖에서 걸어 들어와 오프닝 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또한 4명의 후보도 무대 앞의 별도의 공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회자의 소개 멘트와 함께 무대 위로 입장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후보 입장과 함께 스튜디오 조명이 밝아지고 레일캠과 지미집으로 사회자와 후보자의 동선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오프닝을 생동감 있게 구성했다.

〈표 4-32〉 초청 3차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오프닝 구성과 내용

	오프닝 구성	내용
1		스튜디오 F.S
2		사회자 무대 입장 후 멘트
3		무대 안으로 후보 입장 레일캠 + 지미집
4		조명 밝아짐 + 후보 소개



다. 선거방송 사상 최초 1:1 수어통역 방송

2022년 대선 TV토론에선 청각장애 유권자들을 위한 수어 방송에 큰 변화가 있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장애인 복지 채널인 복지TV, 지상파 방송 3사가 협력하여 토론회 중계 화면을 복지TV에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숙원이었던 후보자별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방송을 청각장애 유권자들에게 생중계로 선보이게 됐다. 복지TV는 방송3사가 제공한 토론화면을 토대로 사회자 포함 후보자 수만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어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국내선거방송 사상 최초의 시도였으며 해외 TV방송에서도 대선후보 4명과 사회자까지 모두 5명을 동시에 각각의 수어통역사를 두고 생방송으로 방송토론을 펼치는 전례가 없는 역사적인 시도였다. 청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를 알권리, 볼권리, 참정권 향상의 기회를 확보하며 동시에 일반 시청자들의 시청권도 보장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됐다.

[그림 4-26] 복지TV 방송화면(2022. 2. 25.)



라. 시청률

1차 토론(MBC)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9개 채널의 통합시청률을 조사한 결과 34.3%, 2차 토론(SBS)은 33.0%, KBS가 진행한 3차 토론은 33.2%로 집계됐다. 3차례의 대선 후보토론의 평균 시청률은 33.5%, 시청자 3명 중 한 명은 TV를 통해 후보들을 지켜봤다는 의미로 대선후보에 대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방송사별 시청률을 보면 KBS가 8%대의 시청률로 가장 높았다.

〈표 4-33〉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TV토론 시청률

(닐슨코리아 / 단위: %)

구분	개최일자	방송시간	내 용	중계주관 방송사	방송3사(전국)			종편 등 합계 시청률
					방송사	시청률	합계	
1	2/21(월)	20:00~22:00	1차 후보토론	MBC	KBS	8.5	17.5	34.3
					MBC	5.1		
					SBS	3.9		
2	2/22(화)	23:00~25:00	초청 외 후보토론	MBC	KBS	2.1	4.0	4.0
					MBC	0.5		
					SBS	1.4		
3	2/25(금)	20:00~22:00	2차 후보토론	SBS	KBS	8.4	18.6	33.0
					MBC	5.5		
					SBS	4.7		
4	3/2(수)	20:00~22:00	3차 후보토론	KBS	KBS	8.3	17.9	33.2
					MBC	5.2		
					SBS	4.4		

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방송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토론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선거일 전 1년부터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KBS, MBC, SBS 방송 3사는 2월 3일 오후 8시부터 2시간동안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선후보 4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 스튜디오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첫 TV토론을 개최했다. 초청 대상 기준은 언론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지만 앞서 추진했던 (1월 27일 개최 예정)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이 법원판결로 무산된 가운데 공직선거법의 후보 초청 기준을 따라 4인을 초청하기로 방송 3사가 합의했다.

〈표 4-34〉 방송3사 합동초청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실시 내용

구 분	개최일자	방송시간	장 소	비 고
방송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토론	2/3(목)	20:00~22:00	KBS TS-15	

② 시청률

KBS·MBC·SBS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한 대선후보 토론의 전국 기준 시청률이 KBS 19.5%, MBC 11.1%, SBS 8.4%로 모두 39%에 달했다. 개인 시청자 수론 691만 900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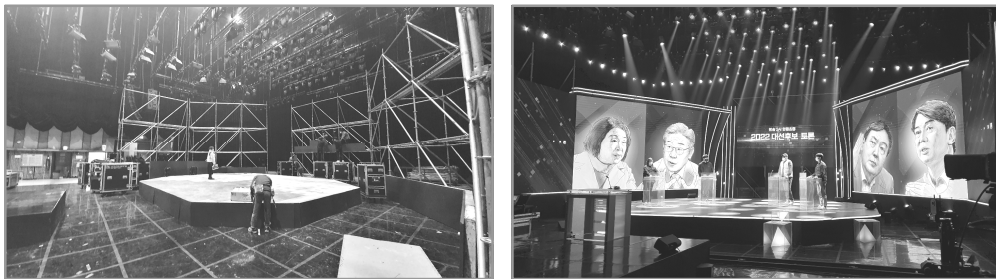


명이다. 첫 TV토론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역대 최고는 TV토론이 최초로 도입된 1997년 김대중 국회의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 간 대결로 55.7%였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 사람도 40여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표 4-35〉 방송3사 합동초청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구 분	전국 시청률(%)	
	방송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토론	KBS
MBC		11.1
SBS		8.4
		39

〔그림 4-27〕 방송3사 합동초청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세트(KBS TS-15)



2. 총평

대통령 선거를 2달여 앞두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TV토론을 준비하던 방송사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는 선거일로부터 3달 전에 이미 정책토론회가 시작된 시기였기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방송사별 순번을 새로 짜고 제작과 편성 관련 부서에 변경 통보를 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후 TV토론 외 정강정책연설, 후보연설, 후보광고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법정 선거방송을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를 유발했다. 선거법 개정은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선거가 없는 해에 진행하고 선관위를 비롯해 정치계, 학계, 방송계, 시민사회단체 등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토론은 다년간 선거방송 TV토론을 운영 관리해오며 축적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신뢰와 경험, KBS를 비롯한 방송3사의 토론 제작 및 중계, 송출 능력이 어우러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30%가 넘는 시청률에서 나타났듯 선거기간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 평가, 분석, 검증하고 올바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TV토론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TV토론이 유권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층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의 특이점은 언론사가 자율적 초청 기준으로 단독 혹은 합동으로 추진했던 양자 후보토론이 모두 무산됐다는 것이다. 언론사 단독 또는 합동으로 추진했던 대선후보 양자 TV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언론사의 초청토론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앞으로 개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토론은 한 단계 성장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선거방송 TV토론은 선거와 방송이 결합한 형태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TV를 시청하는 유권자의 관심도 끌어내야 한다. 토론의제 선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한 기준과 형평성 등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TV토론의 형식과 구성에 있어서는 방송사의 토론 담당자(PD)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방송 TV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는 풍부할 수 있지만, 선거 외적으로 TV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시도와 화면의 구성, 진행의 역동성과 세트 및 조명, 그래픽 등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기대하긴 더욱 어려워졌다. 그동안 공영방송사 KBS와 MBC 2곳에서 빠듯하게 진행하던 후보토론이 선거법 개정 이후 SBS까지 포함되면서 예산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법상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방송사와 토론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상호 보완할 언론사(방송사)의 초청토론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토론을 결합한 형태의 TV토론을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대선 선거방송토론 제작 후기

- 각 요소별 평가를 중심으로(SBS) -

SBS 보도제작팀 신진수 부장

1. 들어가는 말

SBS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 주관 방송사의 한 주체로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SBS 선거 방송토론 제작진은 유권자이며 동시에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키는 '선거방송토론'의 목적과 의의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참여하는 법정 토론회의 주관 방송을 수행하면서 그 준비과정과 실행에 있어 다소 시행착오가 발생한 점을 상기하며 '성과'와 '과오'를 가감 없이 기록하여 차후 선거방송토론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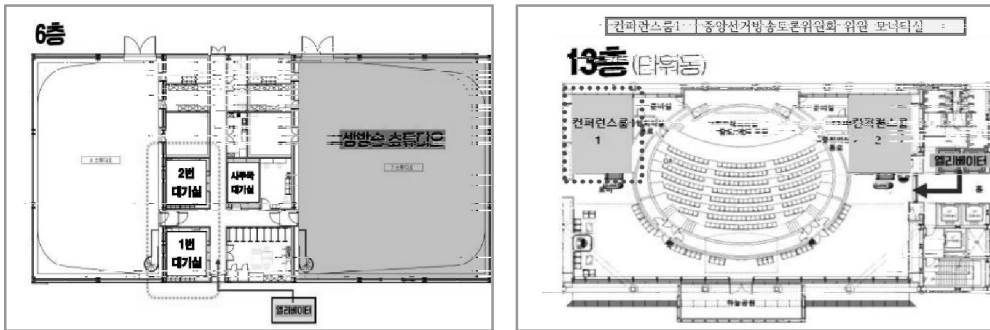
2. 각 요소별 평가

1) 개최 장소 (토론회장, 대기실, 부대시설, 인원 출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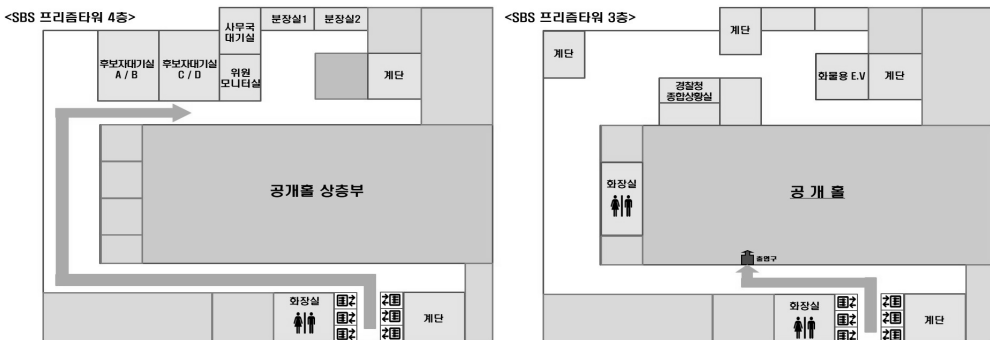
- 2/3 대선 정책토론회는 목동사옥 '7 스튜디오'에서, 2/25 대선 후보자토론회는 대선 후보 출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암동 SBS 프리즘 센터 '오디토리엄'에서 개최하였음.
- 토론방송을 위한 전문 스튜디오가 없는데다 제반 연계시설 인프라까지 협소한 한계 상황을 중앙토론회와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극복하였음.
- 생방송의 특성 상 스튜디오 내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숙련된 연출 및 부조 인력의 역량을 발휘함.
- 이번 법정 토론회 중계 이전에 수행했던 정당 경선 후보자 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방송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경험한 제작 인력을 투입하여 처음 치루는 법정 토론회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 목동과 상암 사옥 전체적으로 공간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토론자들 대기실 배치에 다소 어려움 발생하였음.
- 각 후보별로 동일한 층 배치, 대기실 면적, 편의시설 등을 '공정성' 원칙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나 주관방송사의 공간적 제약 상황이 이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다소 상이한 각 토론자별 대기실 조건을 추첨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이 불가피 하였으며 중앙토론투위 측과 각 후보 측의 합리적인 협의와 수용으로 원만한 배치가 이루어졌음.
- 그럼에도 토론회 당일 후보 측 요청으로 대기실을 급히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향후 주관방송사에서 각 후보 측 요청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각 후보 측과 사전 ‘불 미팅’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잡을 필요가 있음.

[그림 4-28] 정책토론회 SBS 목동사옥 대기실 배치도



[그림 4-29] 후보자토론회 SBS 상암사옥 대기실 배치도



- 매주 고정 토론프로그램이 있는 타사의 경우 토론회를 개최하는 스튜디오와 관련하여 대기실 등의 인프라가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음
- 그에 비해 간헐적으로 토론프로그램을 방송하는 SBS 여건상 토론회에 필요한 제반 공간과 인프라를 급조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 심지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도 타 프로그램 녹화와 스케줄 조율이 필요하였으며 상암 사옥에서의 진행 시 중계방송 송출 및 생방송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제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했음



- 또한 이전 정당 주관 토론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중앙토론회 위원모니터실, 사무국 대기실 등의 편의 및 부대시설 마련 및 대선 후보 경호, 보안을 위한 경찰 인력과의 협조 등도 필수적이었음
-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 측, 정당 관계자, 중앙토론회, 경찰 및 보안 관계자 등의 출입 및 주차 등에 최선의 협조와 여건을 제공해야 함에도 공간적 제약 및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출입 강화 조치로 인해 차량의 대수를 제한하였고 인원 출입 시 비포 등을 착용 하도록 하였음.

2) 세트

- 원칙적으로 선거방송토론의 세트는 각 토론자들이 역동적으로 토론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각적, 공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대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음.

[그림 4-30]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세트의 모습(2022. 2. 25. SBS)



- 세트의 효능을 더욱 배가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무대 장치, 조명, 전식, 카메라 배치를 세트와 어우러지도록 설계하였음.
-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미니멀한 세트 디자인을 통해 시청자들이 토론자들의 발언과 표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세트를 디자인하는데 필수 요소인 출연자의 인원, 참여 정당 수 등에 대한 결정이 다소 늦게 이루어져 디자인에 애로가 있었음에도 중앙토론회 측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선거방송토론에 적합한 세트를 구성하였음.

- 다만 토론회에 임박하여 시안 교체 및 수정을 요구할 경우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후 토론위원회 측에서 표준 시안을 제시하거나 세트 디자인 감독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차후 대안이 필요함.
- 방송 전 각 후보 측 세트 점검 시 토론위에서 엄격하게 인원을 제한하여 후보 측 인사들이 중구난방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함.
- 후보 측에서는 모든 요구를 ‘공정성’에 기반하여 주장할 경우, 주관 방송사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 세트, 공간과 같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함.

3) 연출 및 진행

- 법정 선거방송토론회는 아니지만 예전 다수의 토론방송의 연출 및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연출과 제반 중계, 송출을 수행함.
- 정기적인 토론방송을 연출, 진행하는 인적 자원을 갖춘 타사에 비해 평소 타 업무를 수행하던 구성원들이 이번 토론회 준비 및 진행을 병행함으로써 현행 업무와 충돌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이를 SBS의 법정토론회 참여라는 중차대한 사명감으로 극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음.
- 특히 보통의 방송 토론과 달리 토론회 전 중앙토론위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각 요청 사항에 맞게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함에도 다소 혼선이 발생하였으나 중앙토론위 사무국 직원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조정하였음.

4) 토론 주제의 선정과 토론 방식

-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중앙토론위가 깊은 고민 끝에 선정하였음에도 토론 주제와는 동떨어진 상대방 후보의 인신공격성 폭로가 난무했던 이번 대선 토론의 적절한 균형추를 맞추고자 노력하였음.
- 각 후보 측은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토론 형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음에도 시간총량제 토론, 주도권토론 등 다양한 토론방식을 도입하여 각 후보자에게 공정한 토론방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중앙토론위의 의도를 토론방송을 통해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음.
- 그러나 ‘공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엄격하고 세분화된 토론방식은 자칫 토론자들을 위축시키고 소위 ‘토론다운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 특히 양자 토론이 아닌 다수 토론자가 등장할 경우 각자의 발언 시간은 더욱 세분화되다 보니 그저 시간에 쫓겨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발언에 그치는 경우도 발생함.

- 토론방식의 엄정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토론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감소시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반감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 그런 엄격한 장치에 불구하고 질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주장을 설파하는데 할애하고 정작 그 내용도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상대 후보의 약점과 부정적인 내용만을 노출시키려는 데 집중하는 경향도 일부 보임.
- 특히 상대방 후보를 비판, 공격하는 경우 그 주장의 진위를 바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이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를 토론 현장에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시간총량제토론의 경우 질문하는 후보의 질문 내용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반론할 시간을 보장해줘야 함에도 질문시간이 답변시간을 상당량 압도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질문과 답변시간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간총량제토론 방식의 제고가 필요함.
- 향후 이러한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고 정책과 공약 중심의 토론이 가능한 혁신적이고 기발한 토론 형식의 개발이 요구됨.
- 코로나19 여파로 방청객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꽤 긴 시간 후보자들만 덩그러니 출연하는 모습이 다소 토론의 역동성과 소통, 확장성을 감소시켰음.
- 향후 유권자들이 토론회에 직접 방청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회에 의제를 제시하는 등 토론회의 역동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만 함.
- 현재 주제별(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뉘져 있는 3회에 걸친 토론회 구분 방식을 토론 형식별, 토론자 인원별로 나누어 각 후보자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토론 방식도 고려해볼만 함.

5) 사회자의 선출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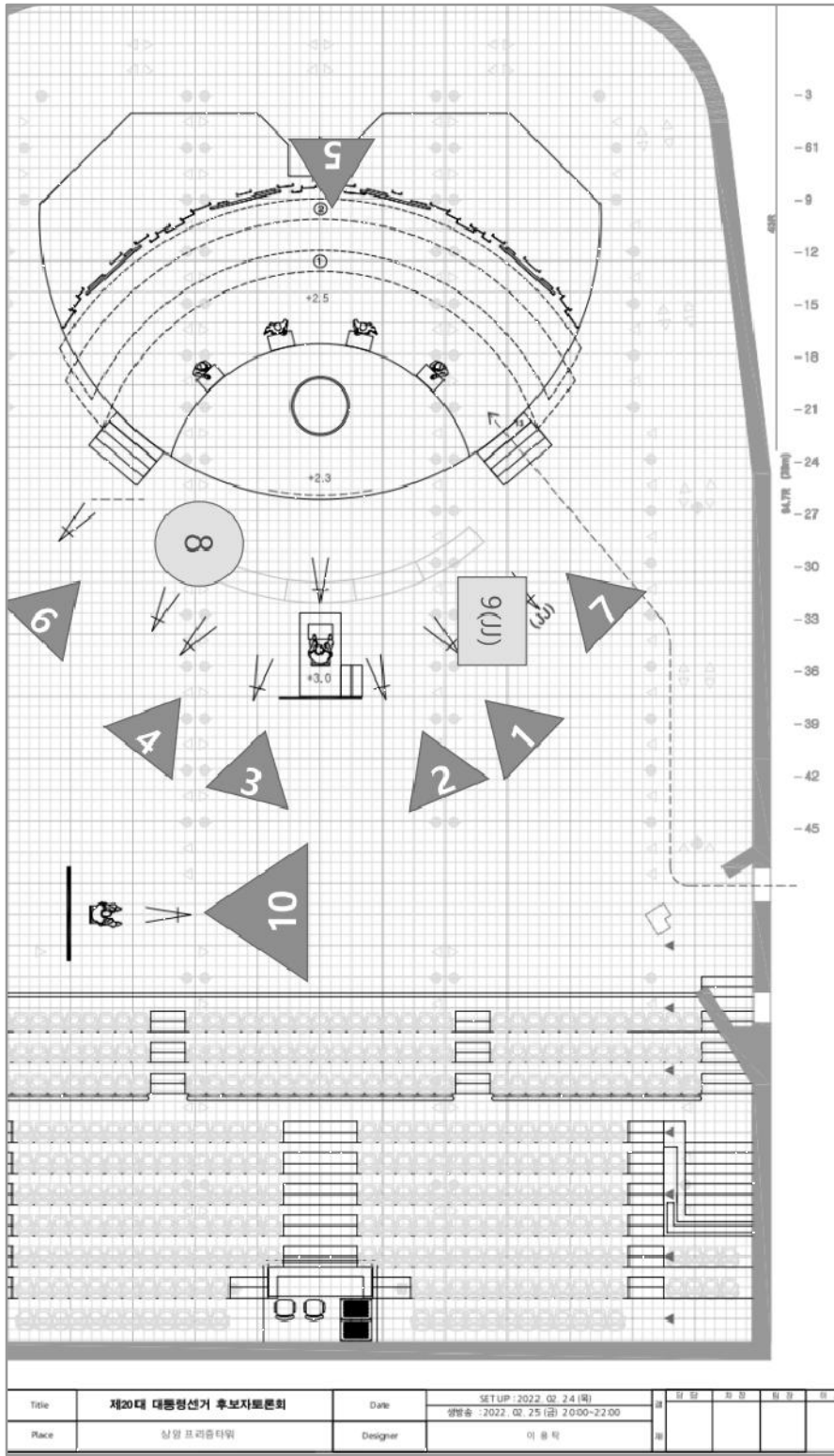
- 각종 토론 프로그램 및 다년간의 생방송 뉴스 진행 경험을 갖춘 앵커들을 토론 사회자로 기용, 토론에 실질적인 개입은 최소화 하면서도 집중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소 과열된 토론 분위기를 제어하는 등 역할을 수행함.
- 다만 매우 세분화된 토론 코너 별 시간 적용에 있어 사회자의 개입 권한을 다소 덜 엄격하게 사용한 것이 특정 후보 측의 반발을 낳기도 하였음.
- 이를 계기 삼아 토론회 전 사회자의 개입 및 재량권 사용에 대한 충분한 리허설 및 상황별 대응 플랜이 필요함.

- 생방송의 특성상 토론의 원활한 진행과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 지속시키기 위해 사회자의 적극적인 혹은 소극적 개입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자의 역량 강화도 요구됨.
- 주관방송사가 1차 추천한 사회자 교체와 관련한 각 정당의 요구사항을 토론위가 받아들여 논의할 때 토론의 형평성 원칙에 기초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인지 다분히 '정파성'에 치우친 요구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6) 화면의 구성 (카메라 앵글, 화면 분할, 자막 등)

- 대선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후보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트 및 조명, 카메라 워킹의 배치 및 조화를 위해 연출진의 깊은 고민과 배려가 온에어 화면을 통해 적절히 구현되었음.
- 정당 로고 및 선거 슬로건, 토론위 로고 등 중앙토론위와 협의한 후 배치한 적절한 배치물과 필요한 자막 등이 전체 화면의 미장센을 방해하지 않으며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였음.
- 단, 다소 화면 구성에 있어 제약 사항이 많아 주관방송사별 특성과 개성을 표현하기 어려웠고 특히 화려한 현대 미디어 화면에 익숙한 시청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토론회 화면이 고루하고 진부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움.
- 향후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토론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시청 트렌드의 변화에 맞추어 전향적으로 변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할 것임.
- 방송사 자율 주관의 토론회의 경우 삽입 자막이 주관방송사별로 자율적으로 제작, 사용하였으나 토론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는 삽입되는 진행 자막의 삽입 시점, 횡수, 디자인, 크기, 색깔 등을 토론위 측에서 사전에 검수, 통일하여 토론방송 전체의 일관된 느낌을 주었음.
- 그러나 앞서 화면 구성에서 지적하였듯이 화려하고 수시로 등장하는 방송 자막에 익숙한 현재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절제되고 통일된 자막이 다소 시청 지속도와 흥미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음.
-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청객 부재로 인한 리액션 커트 등의 한계로 토론회장 선 후보들 화면의 샷 구분만으로 2시간 가까운 방송 시간을 커버해야하는 연출진의 고민이 있었음.
- 물론 시청자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화면 구성이 답답하고 단조롭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됨.
- 카메라 배치에 따라 화면은 후보자 원 샷, 부감, 지미집 부감, 사회자 샷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대방 후보와 질문과 답이 이어질 경우 화면 분할을 사용하여 발언하지 않는 상대방의 표정 등을 보여주며 토론의 긴장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음.

[그림 4-31]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카메라 배치도(2022. 2. 25. SBS)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배서

- 단, 화면 구성이나 자막의 삽입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철저히 지켜야한다는 선거방송 토론의 대원칙을 비켜갈 수 없는 만큼 화면 분할 외 다양한 앵글의 시도가(표정의 클로즈업이나 다양한 리액션샷 등) 절제된 엄격하고 일률적인 화면 구성 역시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단조롭다는 느낌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음.

6) 기타 (뉴미디어의 활용, 장애인 배려 등)

- 생방송을 수중계한 지상파, 종편 등 외에도 유튜브 및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라이브 스트림 장비를 활용, 영상을 송출하여 TV 시청자 외 다양한 경로로 토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토론방송 내내 수어통역사를 등장시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TV에 영상 신호 및 타이틀 등을 제공하여 토론방송 시청의 소외층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함.
- 다만,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각 후보자별 수어통역사 배치는 TV화면 구성의 한계상 수용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

3. 맺는 말

이번 대통령선거 법정 토론회 중계부터 주관방송사로 처음 참여하게 된 SBS 제작진은 앞에서 기술한 토론회 과정의 여섯 가지 요소의 성과와 과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후 좀 더 성공적인 선거방송토론 프로그램을 제작, 중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2회의 대선 정책, 후보자 토론회 제작 과정을 통해 노정된 토론방송을 위한 인력, 공간, 인프라 등의 사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사측 관계자들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가능한 것들은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수 차례 서술한바 현재 선거방송토론의 최대 딜레마는 토론방송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시청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한꺼번에 잡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선거방송토론 형식의 엄격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충족시키면서도 현대 미디어의 트렌드에 익숙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떻게든 유권자들을 TV 앞에 머물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찾아 나가는데 앞으로도 중앙토론회와 주관 방송사간 많은 고민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는데 SBS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부록

1. 주요업무 추진 연표
2. 토론진행표
3. 보도자료 제공 현황
4. 주요 언론보도 현황
5. 관련 법규



부록

1. 주요업무 추진 연표

2021년	
9. 2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일부 개정
11. 3.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개정
11. 5.	선거방송토론 세미나 개최
11. 16.	정당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11. 25.	공영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12. 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운영
12. 16.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KBS)
2022년	
1. 3. ~ 2. 4.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용역 실시(한국정당학회)
1. 3. ~ 4. 29.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한국정치학회)
1. 7.	(1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장소, 진행방식 결정
1. 13.	방송관계자회의 개최(1차)
1. 16. ~ 2. 14.	초청 후보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결과 수집
1. 18.	제2차 정책토론회 개최(MBC)
1. 21.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토론회 의무중계방송사 확대 등)
1. 22. ~ 1. 23.	후보자토론회 국민인터뷰 영상 촬영
1. 24.	(3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개최장소 및 중계방송사 변경
1. 26.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 3.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SBS)
2. 3. ~ 2. 4.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실시
2. 7.	방송관계자회의 개최(2차)
2. 11.	(5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2. 13. ~ 2. 14.	후보자 등록
2. 15. ~ 3. 8.	선거운동기간
2. 15.	(6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 초청 후보자 등 선정
2. 17.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2. 18.	(7차 위원회의)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2. 21. ~ 3. 9.	후보자토론회 시청 인증샷 및 초성퀴즈 이벤트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실시
2. 21.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개최(MBC)
2. 22.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개최(MBC)
2. 23. ~ 2. 28.	재외투표기간
2. 23.	(8차 위원회의)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2. 25.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개최(SBS)
2. 28.	(9차 위원회의)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3. 2.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개최(KBS)
3. 4. ~ 3. 5.	사전투표기간
3. 9.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

- 일시: 2022. 1. 18.(화) 10:00~12:00(120분 생방송) • 장소: MBC A 스튜디오
 - 중계방송: MBC·KBS1, NATV·KTV 동시 생중계 (* 유튜브, 네이버TV 실시간 중계)
 - 토론자(좌석순): 배복주(정의당)/ 원희룡(국민의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구혁모(국민의당)/ 강동호(민생당)
- ※ 추첨 순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	영 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2분	10:02:00	MC/ S/T 수어 MIX	허일후 (MBC 아나운서)	
3	주제·진행 방식설명 ▶ 주제 및 진행방식 안내	1분30초	10:03:30		배 복 주 (정의당 부대표)	
4	사회자 공동질문 [주제1: 청년 정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배복주/원희룡/김성주/구혁모/강동호 순 토론자 답변 (각 1분)	7분 (5분30초)	10:10:30		원 희 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5	시간 총량제 토론 ☞ 배복주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 토론자당 총 7분 ☞ 사회자 Bridge	38분 (35분)	10:48:30		김 성 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 위원회 정책본부 수석 부분부장)	
6	주도권 토론 [주제2: 저출생·고령화 대책] ☞ 사회자 Bridge ▶ 원희룡/김성주/구혁모/강동호/배복주 순 토론자 주도권토론 (각 11분)	58분 (55분)	11:46:30		구 혁 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7	마무리 발언 ☞ 사회자 Bridge ▶ 김성주/구혁모/강동호/배복주/원희룡 순 마무리발언(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6분 (5분)	11:52:30		강 동 호 (민생당 정책위원장)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3:30		허일후 (MBC 아나운서)	
9	엔딩 스튜디오 F.S + 엔딩스크롤	20초	11:53:50		S/T F.S	위원 등 소개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4:00		VCR	

- ※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예시(주도권토론 종료 시점 기준)
- 11:44~45 종료 시 ➔ 마무리발언 2분
 - 11:46~47 종료 시 ➔ 마무리발언 1분 30초
 - 11:48~50 종료 시 ➔ 마무리발언 1분
 - 11:51~ 종료 시 ➔ 마무리발언 30초

2) 후보자토론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 일시: 2022. 2. 21.(월) 20:00~22:00(120분 생방송) • 장소: MBC 미디어센터 D 공개홀
- 중계방송: MBC·KBS1·SBS 등 동시 생중계(* 유튜브, 네이버TV 실시간 중계)
- 후보자(자리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윤석열(국민의힘) ※ 추첨 순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	영 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2분	20:02:00	MC/ S/T 수어 MIX	박경추 (MBC 아나운서)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1분	20:03:00				
4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및 진행방식 안내	1분30초	20:04:30				
5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1: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이재명/안철수/심상정/윤석열 순 후보자 답변 (각 1분)	후보자 01:00	6분 (4분30초)			20:10:30	
		☞ 이재명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 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 후보자당 총 6분 ☞ 사회자 Bridge	후 보 자 01:00 06:00	27분 (24분)			20:37:30	이 재 명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7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2: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안철수/심상정/윤석열/이재명 순 후보자 답변 (각 1분)	후보자 01:00	6분 (4분30초)			20:43:30	안 철 수 (기호 4번 국민의당)
		☞ 안철수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 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 후보자당 총 6분 ☞ 사회자 Bridge	후 보 자 01:00 06:00	27분 (24분)			21:10:30	심 상 정 (기호 3번 정의당)
9	주도권토론	[경제분야 주도권토론] ☞ 사회자 Bridge ▶ 심상정/윤석열/이재명/안철수 순 후보자 주도권토론 (각 9분)	후보자 09:00 답 변 00:30	39분 (36분)			21:49:30	윤 석 열 (기호 2번 국민의힘)
		☞ 사회자 Bridge ▶ 윤석열/이재명/안철수/심상정 순 후보자 마무리발언(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후보자 01:00	5분 (4분)			21:54:30	
11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5:30	박경추 (MBC 아나운서)
12	엔딩	스튜디오 F.S + 엔딩스크롤		20초			21:55:50	S/T F.S 위원 등 소개
13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1:56:00	VCR

※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예시(주도권토론 종료 시점 기준)

- 21:45~46 종료 시 → 마무리발언 2분 • 21:47~48 종료 시 → 마무리발언 1분 30초
- 21:49~50 종료 시 → 마무리발언 1분 • 21:51~ 종료 시 → 마무리발언 30초

제20대 대통령선거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 일시: 2022. 2. 25.(금) 20:00~22:00(120분 생방송) • 장소: SBS 프리즘타워 오디오리움
- 중계방송: SBS·KBS1·MBC 등 동시 생중계 (* 유튜브, 네이버TV 실시간 중계)
- 후보자(자리순):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윤석열(국민의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추천 순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	영 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2분	20:02:00	MC/ S/T 수어 MIX	편상욱 (SBS 앵커)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1분	20:03:00				
4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및 진행방식 안내	1분30초	20:04:30				
5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1: 권력 구조 개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심상정/안철수/윤석열/이재명 순 후보자 답변 (각 1분)	6분 (4분30초)	20:10:30			후보자 01:00	
6	시간총량제 토론 ☞ 심상정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 후보자당 총 6분 ☞ 사회자 Bridge	27분 (24분)	20:37:30			후보자 01:00 06:00	심 상 정 (기호 3번 정의당)
7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2: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안철수/윤석열/이재명/심상정 순 후보자 답변 (각 1분)	6분 (4분30초)	20:43:30			후보자 01:00	안 철 수 (기호 4번 국민의당)
8	시간총량제 토론 ☞ 안철수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 후보자당 총 6분 ☞ 사회자 Bridge	27분 (24분)	21:10:30			후보자 01:00 06:00	윤 석 열 (기호 2번 국민의힘)
9	주도권토론 [정치분야 주도권토론] ☞ 사회자 Bridge ▶ 윤석열/이재명/심상정/안철수 순 후보자 주도권토론 (각 9분)	39분 (36분)	21:49:30			후보자 09:00 답 변 00:30	이 재 명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10	마무리발언 ☞ 사회자 Bridge ▶ 이재명/심상정/안철수/윤석열 순 후보자 마무리발언(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5분 (4분)	21:54:30			후보자 01:00	
11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5:30				편상욱 (SBS 앵커)
12	엔딩 스튜디오 F.S + 엔딩스크롤	20초	21:55:50			S/T F.S	위원 등 소개
13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1:56:00			VCR	

※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예시(주도권토론 종료 시점 기준)

- 21:45~46 종료 시 ➔ 마무리발언 2분
- 21:47~48 종료 시 ➔ 마무리발언 1분 30초
- 21:49~50 종료 시 ➔ 마무리발언 1분
- 21:51~ 종료 시 ➔ 마무리발언 30초



제20대 대통령선거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 일시: 2022. 3. 2.(수) 20:00~22:00(120분 생방송) • 장소: KBS 본관 TS-4
- 중계방송: KBS1·MBC·SBS 등 동시 생중계 (* 유튜브, 네이버TV 실시간 중계)
- 후보자(자리순): 심상정(정의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추첨 순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	영 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스튜디오 F.S ➡ 사회자 무대 입장 ▶ 사회자 오프닝(스탠딩)	1분30초	20:01:30	MC/ S/T 수어 MIX	박태서 (KBS 해설위원)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1분	20:02:30		
4	후보자 입장 및 소개	▶ 사회자 Bridge ▶ 후보자 입장 및 소개	1분	20:03:30		
5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및 진행방식 안내	1분	20:04:30		
6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1: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심상정/윤석열/안철수/이재명 순 후보자 답변 (각 1분)	6분 (4분30초)	20:10:30		
7	시간총량제 토론	☞ 심상정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 후보자당 총 6분 ☞ 사회자 Bridge	후보자 01:00 후보자 06:00	27분 (24분)	20:37:30	윤 석 열 (기호 2번 국민의힘)
8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2: 인구 절벽 대응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윤석열/안철수/이재명/심상정 순 후보자 답변 (각 1분)	후보자 01:00	6분 (4분30초)	20:43:30	안 철 수 (기호 4번 국민의당)
9	시간총량제 토론	☞ 윤석열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 후보자당 총 6분 ☞ 사회자 Bridge	후보자 01:00 후보자 06:00	27분 (24분)	21:10:30	이 재 명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10	주도권토론	[사회분야 주도권토론] ☞ 사회자 Bridge ▶ 안철수/이재명/심상정/윤석열 순 후보자 주도권토론 (각 9분)	후보자 09:00 00:30 답변	39분 (36분)	21:49:30	
11	마무리발언	☞ 사회자 Bridge ▶ 이재명/심상정/윤석열/안철수 순 후보자 마무리발언(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후보자 01:00	5분 (4분)	21:54:30	
12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5:30	박태서 (KBS 해설위원)
13	엔딩	스튜디오 F.S + 엔딩스크롤	20초	21:55:50	S/T F.S	위원 등 소개
14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1:56:00	VCR	

※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예시(주도권토론 종료 시점 기준)

- 21:49:00 이전 종료 시 ➡ 마무리발언 1분 30초
- 21:49:00 이후 종료 시 ➡ 마무리발언 1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 일시: 2022. 2. 22.(화) 23:00~25:00(120분 생방송) • 장소: MBC 방송센터 B 스튜디오
- 중계방송: MBC·KBS1·SBS 등 동시 생중계 (* 유튜브, 네이버TV 실시간 중계)
- 후보자(좌석순): 김민찬(한류연합당)/ 이경희(통일한국당)/ 허경영(국가혁명당)/ 옥은호(새누리당)/ 김경재(신자유민주연합)/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오준호(기본소득당) ※ 사전 추첨 순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	영 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23: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2분	23:02:00	MC/ S/T 수어 MIX	차미연 (MBC 아나운서)	
3	인트로	▶ 국민인터뷰 “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란다”	1분	23:03:00			
4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및 진행방식 안내	1분30초	23:04:30		김 민 찬 (한류연합당)	
5	시작발언	▶ 김민찬/이경희/허경영/옥은호/김경재/ 이백윤/김재연/오준호 순 후보자 시작발언 (각 1분) ☞ 사회자 Bridge	시작발언 01:00 10분 (8분)	23:14:30		이 경 희 (통일한국당) 허 경 영 (국가혁명당)	
6	후보자 공약발표 (1차)	▶ 이경희/허경영/옥은호/김경재/이백윤/ 김재연/오준호/김민찬 순 후보자 공약발표 (각 5분) ☞ 사회자 Bridge	공약발표 05:00 43분 (40분)	23:57:30		옥 은 호 (새누리당)	
7	후보자 공약발표 (2차)	▶ 허경영/옥은호/김경재/이백윤/김재연/ 오준호/김민찬/이경희 순 후보자 공약발표 (각 5분)	공약발표 05:00 43분 (40분)	24:40:30		김 경 재 (신자유민주연합) 이 백 윤 (노동당)	
8	마무리발언	☞ 사회자 Bridge ▶ 옥은호/김경재/이백윤/김재연/오준호/ 김민찬/이경희/허경영 순 후보자 마무리발언 (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마무리 01:00 10분 (8분)	24:50:30		김 재 연 (진보당) 오 준 호 (기본소득당)	
9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4:51:30		차미연 (MBC 아나운서)	
10	엔딩	스튜디오 F.S + 엔딩스크롤	20초	24:51:50		S/T F.S	위원 등 소개
11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4:52:00		VCR	

※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예시(2차 후보자 공약발표 종료 시점 기준)

- 24:30~35 종료 시 → 마무리발언 2분 • 24:36~39 종료 시 → 마무리발언 1분 30초
- 24:40~45 종료 시 → 마무리발언 1분 • 24:46~ 종료 시 → 마무리발언 30초



3. 보도자료 제공 현황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1. 12. 15. 총 2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3~4

FAX 0505-058-1173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너지 대책'과 '부동산 대책' 주제로 5개 정당 토론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12월 16일(목) 오전 10시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너지 대책'과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및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KBS1, MBC,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동시 생중계 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전일인 내년 2월 12일까지 월 1회씩,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1부.

[붙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1.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 12. 16.(목) 10:00~12:00
- 장 소 : KBS 스튜디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 ▶ 취재안내 :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이경민 주무관
- ▶ 취재시간 : 09:30 ~ 09:45분까지 스튜디오 내 취재 가능
- ▶ 출 입 증 : 방송국 1층 로비에서 연락 시 출입증 배부

2. 중계방송 : 공영방송사(KBS1, MBC) · 국회방송 · KTV국민방송 · 유튜브(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네이버TV · 카카오TV 동시 생중계, 한국선거방송 녹화중계

3. 토 론 자

-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 국 민 의 힘 : 윤창현 [국회의원]
- 정 의 당 : 장혜영 [정책위의장]
- 국 민 의 당 :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 민 생 당 : 강동호 [정책위원장]

4. 사 회 자 : 이규원(KBS 아나운서)

5.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주제	1.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너지 대책 2. 부동산 대책
진행방식	• (주제1)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 (주제2)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2. 1. 7.(금) 총 5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3~4

FAX 0505-058-1173

대통령선거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개최

= 그 외 후보자 1회 개최, 검증강화 위해 주도권토론 방식 첫 도입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 대상으로 1회, 총 4회 개최한다.

3회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2월 21일(월) 경제분야, ▲2월 25일(금) 정치분야, ▲3월 2일(수) 사회분야로 각각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입식 토론으로 진행된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초청대상’ 후보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2월 1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확정한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2월 22일(화)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좌석에 앉아 진행한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세 차례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모두 ‘시간총량제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주도권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해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매 토론회마다 후보자들은 각 분야에 대한 2가지 주제에 대해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 동일하게 배분된 총 발언시간 안에서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하게 된다.

이후 해당 토론분야 전반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를 지목하여 토론함으로써 토론의 역동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다양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 된다.

붙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개요 1부.

[붙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개요

1. 개최개요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개최시기 : 2022. 2. 15(화)~3. 8.(화) ※ 사전투표기간 전일(3. 3.)까지 개최완료
- 초청대상 : 다음 선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

-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 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후보자

※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2. 개최일시·장소

-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토론분야
1차	2022. 2. 21.(월) 20:00 ~ 22:00	MBC 스튜디오	KBS, MBC	경 제
2차	2022. 2. 25.(금) 20:00 ~ 22:00	KBS 스튜디오	KBS, MBC	정 치
3차	2022. 3. 2.(수) 20:00 ~ 22:00	KBS 스튜디오	KBS, MBC	사 회

- 법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토론분야
2022. 2. 22.(화) 23:00 ~ 2. 23.(수) 01:00	MBC 스튜디오	KBS, MBC	국정전반

국
세



3. 진행방식

- 초청(입식):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주도권토론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1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 1>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E 후보자 답변(각 1분) •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5분 총량)	30분30초
	<주제 2>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A 후보자 답변(각 1분)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5분 총량)	30분30초
주도권토론	<차수별 분야 주도권토론> • C/D/E/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7분)	35분
마무리발언	• D/E/A/B/C 후보자(각 1분)	5분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분>

구 분	6명	5명	4명	3명
(주제별) 시간총량제토론	각 4분	각 5분	각 6분	각 9분
주도권토론	6분	7분	9분	11분

- 초청 외(10인 미만, 좌식):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1분
시작발언	• A/B/C/D/E 후보자(각 1분)	5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 1>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A 후보자 답변(각 1분)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7분 총량)	40분30초
	<주제 2>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D/E/A/B 후보자 답변(각 1분) • C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7분 총량)	40분30초
마무리발언	• D/E/A/B/C 후보자(각 1분)	5분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분>

구 분	5명	6명	7명	8명	9명
(주제별)시간총량제토론	각 7분	각 6분	각 5분	각 4분	각 3분30초

• 초청 외(10인 이상, 좌식) : 후보자 공약발표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1분
시작발언	• A/B/C/D/E/F/G/H/I/J 후보자 (각 1분)	10분
후보자 공약발표	<00분야> • B/C/D/E/F/G/H/I/J/A 후보자 공약발표 (각 4분)	40분
	<00분야> • C/D/E/F/G/H/I/J/A/B 후보자 공약발표 (각 4분)	40분
마무리발언	• D/E/F/G/H/I/J/A/B/C 후보자 (각 1분)	10분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분〉

구 분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분야별)공약발표	각 4분	각 3분30초	각 3분	각 2분45초	각 2분30초	각 2분15초

※ 후보자 수가 5인 미만,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후 결정 예정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2. 1. 17. 총 2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3~4

FAX 0505-058-1173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 개최

= '청년 정책'과 '저출생·고령화 대책' 주제로 5개 정당 토론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1월 18일(화) 오전 10시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정책'과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주제로 시간총량제토론 및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수석부분부장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KBS1, MBC,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에서 동시 생중계 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3차 정책토론회는 2월 3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1부.

[붙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1.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2. 1. 18.(화) 10:00~12:00
- 장 소 : MBC 스튜디오(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 ▶ 취재안내 :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이채일 주무관
- ▶ 취재시간 : 09:30 ~ 09:45분까지 스튜디오 내 취재 가능
- ▶ 출 입 증 : 방송국 1층 로비에서 연락 시 출입증 배부

2. 중계방송: 공영방송사(MBC, KBS1)·국회방송·KTV국민방송·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네이버TV 동시 생중계, 한국선거방송 녹화중계

3. 토 론 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수석부분부장]
- 국 민 의 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 정 의 당: 배복주 [부대표]
- 국 민 의 당: 구혁모 [최고위원]
- 민 생 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4. 사 회 자: 허일후(MBC 아나운서)

5.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주제	1. 청년 정책 2. 저출생·고령화 대책
진행방식	• (주제1)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주제2)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

보도자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제공일자 2022. 1. 28. 총 2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3~4

FAX 0505-058-1173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

= '정치 개혁 방안'과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주제로 4개 정당 토론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olleh
273번

U+tv
256번

SK broadband
B tv 케이블 205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2월 3일(목) 오전 10시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 개혁 방안'과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주제로 시간총량제토론 및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정의당 김중대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SBS, KBS1, MBC,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에서 동시 생중계 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인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1부.

[붙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1.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2. 2. 3.(목) 10:00~12:00
- 장 소 : SBS 스튜디오(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 ▶ 취재안내 :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이경민 주무관
- ▶ 취재시간 : 09:30 ~ 09:45분까지 스튜디오 내 취재 가능
- ▶ 출 입 증 : 방송국 1층 로비에서 연락 시 출입증 배부

2. 중계방송: SBS · KBS1 · MBC · 국회방송 · KTV국민방송 ·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네이버TV 동시 생중계, 한국선거방송 녹화중계

3. 토 론 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 국 민 의 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 정 의 당: 김종대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 국 민 의 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

4. 사 회 자: 편상욱(SBS 앵커)

5.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주제	1. 정치 개혁 방안 2.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진행방식	• (주제1)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주제2)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2. 2. 18. 총 3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3~4

FAX 0505-058-1173

제20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 2월 21일 오후 8시, 참석 후보자 4명, 경제분야 주도권토론 등 진행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한국선거방송

olleh 273번

U+tv 256번

SK broadband B tv 케이블 205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월 21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1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가 참석하며, 참석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 의석수, 직전 선거 득표율,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결정되었다.

토론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제1주제)’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제2주제)’으로, 후보자는 2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 6분 내에서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하게 된다.

이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9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하여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한다.

그 외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2월 22일 저녁 11시부터 2시간 동안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되며, 후보자별로 두 차례씩 각 4분 30초 동안 공약을 발표한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화상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회는 MBC, KBS1,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에서 동시 생중계 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붙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요 1부.

[붙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요

• 참석 대상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2. 21.(월) 토론회 ※ 의석수 5석 이상,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율 등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초청대상) -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	국민의힘	윤석열
	3	정의당	심상정
	4	국민의당	안철수
2. 22.(화) 토론회 ※ 초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 -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5항	5	기본소득당	오준호
	6	국가혁명당	허경영
	7	노동당	이백윤
	8	새누리당	옥은호
	10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11	우리공화당	조원진
	12	진보당	김재연
	13	통일한국당	이경희
	14	한류연합당	김민찬

• 사회자

- ① 2월 21일(월) 1차 토론회 : 박경추 MBC아나운서
- ② 2월 22일(화) 토론회 : 차미연 MBC아나운서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① 2월 21일(월) 1차 토론회 : 후보자 4명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1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p>〈주제 1〉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 후보자 답변(각 1분) •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 30초
	<p>〈주제 2〉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 30초
	<p>〈경제 분야 주도권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9분) 	36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B/C 후보자(각 1분) 	4분

② 2월 22일(화) 토론회 : 후보자 9인 대상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1분
시작발언	• A/B/C/D/E/F/G/H/I 후보자(각 1분)	9분
후보자 공약발표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D/E/F/G/H/I/A 후보자 공약발표(각 4분30초) 	40분 30초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E/F/G/H/I/A/B 후보자 공약발표(각 4분30초) 	40분 30초
마무리발언	• D/E/F/G/H/I/A/B/C 후보자(각 1분)	9분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2. 2. 24. 총 3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3~4

FAX 0505-058-1173

제20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 2월 25일 오후 8시, 정치 분야 주도권토론 등 진행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월 25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2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가 참석하며, 정치 분야의 토론 주제는 ‘권력 구조 개편(제1주제)’과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제2주제)’이다.

후보자는 2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 6분 내에서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하게 된다.

이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9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하여 정치 분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한다.

토론회는 SBS, KBS1, MBC,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WBC복지TV,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에서 동시 생중계 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WBC복지TV와 협력하여 사회자와 각 후보자를 전담하는 수어통역사 총 5명을 배치하여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생중계를 실시한다. 후보자별 일대일 수어통역사 배치는 국내 선거방송토론에서는 최초로, 청각장애 선거인의 시청 접근성을 높여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자별 수어통역 생중계 영상은 WBC복지TV(Olleh TV 219번, Btv 293번 등)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붙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요 1부.



[붙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요

• 개최일시·장소 등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사회자	토론분야
2차	2022. 2. 25.(금) 20:00 ~ 22:00	SBS (상암)	SBS, MBC, KBS1	편상욱 (SBS 앵커)	정치

• 토론자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1	더 불 어 민 주 당	이 재 명
2	국 민 의 힘	윤 석 열
3	정 의 당	심 상 정
4	국 민 의 당	안 철 수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1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u><주제 1> 권력 구조 개편</u>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 후보자 답변(각 1분) •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 30초
	<u><주제 2>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u>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 30초
주도권토론	<u><정치 분야 주도권토론></u>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9분)	36분
	• D/A/B/C 후보자(각 1분)	
마무리발언	• D/A/B/C 후보자(각 1분)	4분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2. 3. 1. 총 2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3~4

FAX 0505-058-1173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후보자토론회 개최 = 3월 2일 오후 8시, 사회 분야 주도권토론 등 진행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한국선거방송

olleh
273번

U+tv
256번

SK broadband
B tv 케이블 205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2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KBS 스튜디오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마지막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후보자토론회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며, 토론 주제는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제1주제)’, ‘인구 절벽 대응 방안(제2주제)’이다.

후보자들은 2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 6분 내에서 상호 토론을 벌인다.

이어서 주도권토론에서는 후보자별로 9분씩의 주도권 시간 내에서 상대후보자를 지목하여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한다.

토론회는 KBS1, MBC,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WBC복지TV,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에서 동시 생중계 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후보자토론회에서도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WBC복지TV(Olleh TV 219번, Btv 293번 등)를 통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후보자별 수어통역 영상을 생중계 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후보자토론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개요 1부.

[붙임]

제20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개요

• 개최일시·장소 등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사회자	토론분야
3차	2022. 3 2.(수) 20:00 ~ 22:00	KBS	KBS1, MBC, SBS	박태서 (KBS 해설위원)	사회

• 토론자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1	더 불 어 민 주 당	이 재 명
2	국 민 의 힘	윤 석 열
3	정 의 당	심 상 정
4	국 민 의 당	안 철 수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국민인터뷰	국민인터뷰 영상('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1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 1> 복지 정책과 자원 조달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C/D 후보자 답변(각 1분) •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 30초
	<주제 2> 인구 절벽 대응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각 6분 총량)	28분 30초
주도권토론	<사회 분야 주도권토론>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9분)	36분
	• D/A/B/C 후보자(각 1분)	4분

“李·尹 경제비전 못 보여줘…팩트도 잘 몰라”

전문가들은 22일 전날 밤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 후보 경제분야 TV토론에 대해 “주요 후보들이 경제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인 것에도 “국민이 바랐던 토론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는데, 차별적으로 뛰어나다거나 경제를 확실히 잘 알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기축통화 발언이나 토지이 매입당금 명칭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 후보의 경제 공

‘경제 분야 TV 토론’ 전문가 평가
李, 경제 잘 안다는 면모 안 보여
尹, 이번에도 ‘기승전 대장동’
安, 논리 충실 - 沈, 매섭게 질문

약이 분배정책에 성장정책을 얹어놓은 것이라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 빈틈이 토론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신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 후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도 기축통화 발언은 잘못 끌어온 사례”라며 “팩트도 잘 모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자신의 공약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교수는 “심 후보가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윤 후보는 ‘글쎄, 가르쳐달라’고 답했는데, 본인(윤 후보)이 주식 양도세를 얹어줬다고 공약했다면 도입 이유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경제 공약 중 내세를 만든 것들을 강조하는 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토론이 난타전으로 흐른 게 아쉽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 후보가 김만배 녹취록 패 널을 들고나와서 공세를 펼 것은 좋게 보이지만 않았다”며 “윤 후보의 대장동 공세를 무디게 하려는 전략인데, 그러다

보니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 평론가는 “윤 후보는 이번에도 ‘기승전 대장동’이었다”며 “윤 후보 토론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다 보니 까 가지효과는 있지만 이제는 그런 평가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나”고 반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 후보는 상대적으로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신 교수는 “안 후보는 나름대로 품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팩트와 논리에 충실하고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선 솔직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평론가는 “심 후보가 매섭게 피고들어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 여러 번 나왔다”고 말했다.

고은이자

경향신문

2022년 02월 22일 화요일 001면 종합



토론 지켜보는 시장 상인 서울 서대문구 인형시장의 한 상인이 2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토론을 사용하고 있다.

한수빈기자

국민일보

2022년 02월 22일 화요일 001면 종합



굳은 표정의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두 후보는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이 후보가 김만배 녹취록을 거론하며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하나”라고 묻자 윤 후보는 “당연히 후보님을 의심하죠”라고 받아쳤다. 국회의원기자단

윤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 말 끊자, 이 “그게 토론” 반박

양강 후보, 언성 높이며 난타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TV토론에서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난타전을 벌였다. 충돌음은 이 후보가 ‘화전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담긴 패널을 꺼내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읊었다.

윤 후보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다. 듣기론 그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 데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퍼냐”고 반

아쳤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맞섰다.

현 정부 방역정책 실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둘은 충돌했다. 윤 후보가 “여당 후보도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지적한 뒤 “심상정 후보에게 묻겠다”고 한 게 발단이 됐다. 이 후보가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발끈했다. 이에 윤 후보가 “얘기해 봐야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라고 말을 끊자, 이 후보는 “그게 토론”이라고 맞받았다.

단일화 결렬 선언의 당사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윤 후보와 신경

전을 벌였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하자 안 후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서도 공약 목록과 필요한 재원이 적힌 패널을 들고 공격했다. “필요한 예산이) 1300조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비(非)기축통화국에선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서울신문

李 “尹, 음해하는 습관 있어” 尹 “허, 참” 정색 단일화 결렬 후 처음 만난 安,尹에게 질문공세

장내외 치열한 신경전

李:尹, 토론규칙 두고 치고받아
토론장 밖 일부 지지자 몸싸움

2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초반부터 작심한 듯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윤 후보는 적극적으로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 관련 윤 후보의 의혹을 제기하는 패널을 갑자기 꺼내며 공격하자 윤 후보가 정면 반격에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 주제는 ‘경제’ 분야로 한정됐지만 지난 두 차례 토론에서 정책 발언에 치중했던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의혹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함락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다.

윤 후보가 먼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는 ‘화전대유 관계자 녹취록’ 대화 내용을 적은 패널을 갑자기 꺼내 들고 읽으면서 반격했다. 이 후보는 패널을 미리 준비해와 발언대 옆에 세워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읽자 윤 후보는 “녹취록 끝부분에는 김만배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한다”고 되받았고 감정 섞인 설전이 오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아무 근거 없이 음해하는 습관이 있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키나. 지금까지 없는 사실 지어내서 기소하고 사람 죽고 그랬나” 등 윤 후보에게 거듭 도발했고, 윤 후보는 “허, 참”이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다가도 정색한 듯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아권 단일화 결렬 이후 처음 만난 윤 후보와 안 후보 간에는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특히 안 후보는 윤 후보에 디지털 데이터 경제와 국가 데이터 공개에 대해 반복 질문한 뒤 윤 후보가 답변하자 틀린 답변이라는 듯 눈을 질끈 감고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 완전히 다른데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다”면서 쏘아붙였다.

토론이 끝난 뒤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나라 경제를 살릴 사람 누구인지 설명드리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이 가장 실망스러웠다”면서 “이 후보는 재정 관련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심 후보와는 토론할 기회가 적어 아쉽다”고 했다. 심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한 번도 제가 질문을 못 받았다. 무려 30분을 혼자 서 있느라고 생겼다. 의리가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소감 발표 없이 토론장을 떠났는데, 국민의힘 측은 “소감 발표 장소에 착오를 일으켜 혼선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대선후보 TV토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열린 첫 법정 TV토론인 만큼 장외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토론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미디어센터 앞에는 후보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선거 운동 열기가 뜨거웠다. 건물 맞은편에는 이·안·윤 후보의 유세차량이 일렬로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서 운동원들이 로고송에 맞춰 춤을 췄다.

토론을 1시간 20여분 앞둔 오후 6시40분, 심 후보와 안 후보가 연이어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7시쯤 도착한 윤 후보는 곧장 토론장으로 들어서지 않고 차도로 걸어 나가 유세차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7시 7분 현장에 도착한 이 후보도 본인 유세차량에 들러 양손을 들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했다.

고혜지 기자



安 단일화 불발 뒤끝?... 尹에 작심공세

토론회 이모저모

李 “검사 출신이니까 합리적 근거 대야”
安 “尹, 깊게 고민안 하신듯” 수차 핀잔
沈까지 가세해 ‘尹 집중 견제’ 공동전선

곽은산·김현우·조희연 기자 silver@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세 번째로 맞붙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 토론회에선 이, 안, 심 후보가 지지율 1위 윤 후보를 집중 견제하며 새로운 전선을 형성했다.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작심 공세를 펼쳤다. 윤 후보 답변에 안 후보가 수차례 고개를 가로짓는 모습을 보이는 등 토론회 내내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강’ 이, 윤 후보도 다양한 토론 주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삼양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윤 후보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하자, 안 후보는 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 후보가 정부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을 설명하자 윤 후보는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면 민간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공공 데이터가 돌게 돼 있다”고 이어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다시 한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이날 윤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한 안 후보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확장재정 등 상반된 경제 조치에 대한 토론 중에도 “핀트를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깊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거 운동 기간 첫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린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방송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다”,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을 구분 못하는 것 같다” 등 수차례 핀잔을 주는 발언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방역 정책을 놓고 토론하던 중 윤 후보를 향해 “윤 후보 본인은 마스크를 잘 안 쓰죠? 부인도 잘 안 쓰더군요”라고 공격했다. 방역 지침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정부 방역 성과를 폄하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잘못한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새 정부가 되겠다. 국민의힘도 협조 좀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혔다. 윤 후보는 웃으며 “이 후보님 말씀이 작년부터 바뀌는 걸 보니 오늘 선언 내용도 지켜질지 믿기 힘들다”고 응수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시 앙도세 폐지 공약을 비판하며 주시 앙도세 도입 이유를 물었고, 윤 후보는 2초가량 답을 하지 못하다가 “벗쩍은 듯 ‘글썩요.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라며 웃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선관위에 낸 자료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얼마 냈는지도 물었고, 윤 후보는 “머뭇거리다” “까먹었다”고 답했다. 심 후

보는 “92만원 내셨다”며 “30억짜리 집에 총부세 92만원이 폭탄이다. 폭탄 맞아 집 무너졌느냐”고 지적했다.

이, 윤 후보 토론 중에는 “더 이상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했던 윤 후보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승진이나 급여, 보직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 문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피해야 할 약자의 권리,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받아쳤다.

윤 후보는 경제정책을 두고 이 후보에게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모델로 제시했는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나서면 민권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현성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같은 생각인가”라고 물으며 “원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발언 기회가 돌아오자마자 안철수를 높이며 “검사 출신이니까 합리적 근거를 갖고 말씀하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朝鮮日報

2022년 02월 22일 화요일 A04면 종합

李, ‘尹은 죽어’ 적힌 김만배 녹취록 들자… 尹 “녹취록 끝에 이재명게이트 말 나와”

(이정호 외환 특집)

후보 4인 치열한 설전

이 후보는 이날 TV 토론회에서 최원대 유 대주수 김만배서 녹취 내용을 거론하며 윤 후보의 행적을 요구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야가 민주당의와 경쟁했던 이야기 하셨는데, 언론에 언급 나오는 경지사 발언인데 공인 공천의 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 말씀을 하시니 어중을 중해했다”면서 김만배서 녹취 내용이 적힌 책장을 들어 보였다. 책에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 후보는 “최원대 유 아니꼬 하면서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말하옵시는데, 그 사람들이 윤 후보와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10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만배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녹취록) 내용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제가 듣고는 그 녹취록을 부랴부러 읽어 봤는데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했다고 한다”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게 어때냐”고 했다. 이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가 있다는 건가”라며 “녹취록 중에 보라, 위약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했다. 윤 후보는 “저도 잘도”며 “현반

공권 데이터 공개하고 말기에 이뤄본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경제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성장만 외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 경제를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느냐”고 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MB 아바타 더 위험한 것 아니냐”라며 “저렴 흡수 만나서” 불공정을 보는 “국가 데이터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공개할 정보들의 종류도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나 보느냐”라며 “국가 간섭을 강요하고 있고,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가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백서

尹 “추경 50조 필요”에 安 “고민 안한 것 같다”

추경 기준금리 인상 압박자 공방

대선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윤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안 후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은 압박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21일 중앙선관위 주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예산을 늘리는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완전히

박자”라며 추경을 옹호한 윤 후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금리를 올리면서 확장 재정을 펼치면 금리인상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원래 재정과 금융은 확장할 때도 같이하고, 긴축할 때도 같이하는 게 정상”이라면서도 “지금의 확장 재정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앞서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약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안 후보는 “(윤 후보) 말씀이

돌아가고, 핀트를 못 잡고 있다”며 “재정 확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치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한 방법이 있느냐”고 재차 윤 후보를 쏘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어느 당 국이라도 일반적인 해답은 없다”고 재반박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고민을 안한 것 같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하는 땀 질식 추경은 비정상”이라며 “특별회계법을 만들면 빚을 얻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현기자

沈 “부동산 감세 尹과 비슷”에 李 “국민에 유용한 정책”

종부세 감면 공방

沈, 세금 감면 내건 尹 李에 날 세워 李 “보유세 강화, 거래세 낮추는 방향” 尹 “폐지아닌 재산세와 합치자는 것”

21일 대선 후보토론에서 여야 후보들이 세금 감면 정책을 놓고도 또다시 맞붙었다. 지난 3일 방송3사 합동 TV 토론회에 이어 2차 공방전이다.

이날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내건 여야 양강 후보들을 공격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그간) 보유세 강화를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재산세를 감면하고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했을 때 왜 침묵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며 “종부세는 종종 재산, 교외 재산이 과하다 하면 면제해주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양도세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위한 기능을 다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주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감세 주장은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낸 것이 공급 폭탄,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 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꺼낸 것”이라며 “만약 이게 옳은 방향이라면 정권 교체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잘 안 가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만 한다”며 “반드시 한쪽으로만 가라고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도 많이 올랐다”면서 “법률상 순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어 반영 비율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방송3사 TV 토론회에 이어 이날도 종부세

공방을 이어갔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공시가격 15억5,000만 원, 시가 30억 원 정도 되는 집에 사는데 종부세 얼마 냈는지 아니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글쎄, 몇 백만 원 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92만 원이 폭탄 아니냐, 폭탄 맞아 집이 무너졌습니까”라고 물으며 “재산세 다 포함해도 400만 원밖에 안 된다. 청년이 서울에서 내는 월세가 1년에 800만 원”이라고 따졌다. 이어 “조세는 시민의 의무인데 국가가 약탈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걸 약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질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후보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너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 칸 이외에 별도 수입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재산세에 합쳐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섭기자

이재명, 기축통화국 말실수에...야 “경제 대통령 맞나” 맹공

TV토론회 발언 두고 공방

“문소리치더니 경제 기본도 몰라”
“제2의 IMF 위기 초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잇단 논평서 거센 비판

IMF·SDR 통화바스켓과 혼재
실제 환입 가능성도 매우 낮아
민주당 “답이 하나 밖으로 짚기”

국민의힘이 22일 전날 허브(TV)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환입 가능성을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기본 경제 지식이 없다” “위법천민을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붓았다. 이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발언의 부조화를 부각할 각설 여론조사에서 문석열 후보와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이 후보의 경제 대책 능력 “유능”을 평가에 반영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시대변론부는 이날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환입 발언을 반박하는 3개의 논평을 잇달아 발표하며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천민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더욱 늘려도 편지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가부채 급증으로 외환위기의 국가부채가 사태가 발생하여 방국의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은희 국민의힘 정책대통령 리플렛도 문소리치더니 후보가 기축통화국 같은 경제의 기본을 잘 안지라지 못하고 거

서러라’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허브 토론에서 나라 밖을 둘러 확실히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련 질문을 받고 “이아열에나 국제기금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제비율) 85%까지 적절하다고 한다. 지금은 더우 낫아서 충분해 여력이 있다”며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반박이 있는데 우리는 경제 내국이고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환입권(SDR) 통화 바스켓과 거

념이 혼재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 기축통화기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상 기축통화국은 국제 거점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로 미국의 달러와 연인정하는 시상이 나수다. 한국은행도 경제협력개발기구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라고 적고 있다. 추은도 기축통화 단수설이 서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기축통화론의 근거로 제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도자료에서는 기축통화론 “국가 간 무역·자본거래에서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다.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 5개 통화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선결조건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22일 추가 자료를 내어 “원화가 이스타이브에 편입된다 해도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기축통화기 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일하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 등이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선거운동을 펼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간혹 시 민주당 의원은 《시비예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가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커진 건 사실”이라며 “채무 문제,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기축통화까지 이야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재야계 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축통화란이 하나 불공정 논란거리로 부추기는 모양새”라며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채무가 아득히 커져 있다는 사실 명백히 유망”이었다. 국립단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투자 확대 노력이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발표잡기 좀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김기남@han.co.kr

문화일보

2022년 02월 22일 화요일 004면 종합

선관위 주관 첫 TV토론 시청률 34.3%... 부동산 관심 여전

25일·3월 2일 2차례 토론 남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선 후보 4명의 첫 법정 TV토론 시청률이 34%대로 집계됐다. 정적이 실종된 ‘비중감 선거’라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 아직 지지하는 후보를 찾지 못한 부동산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 3사(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 4사(MBN·JTBC·채널A·TV조선)

선), 보도전문채널 2사(연합뉴스·YTN) 등 총 9개 채널에서 생중계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률 총합은 34.3%를 기록했다.

지난 3일 열린 첫 TV토론의 시청률 총합(39.0%)보다는 4.7%포인트 낮았지만, 11일 진행된 2차 토론(21.4%)보다는 12.9%포인트 높았다. 2차 토론의 경우 같은 시간대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최민정 선수의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전이 진행됐기 때문에 토론 시청률이 대폭 하락했다.

이날 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종합부동산세 등 코로나19 시대 경제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이 TV뿐만 아니라 각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됐고, TV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시청이 익숙한 2030세대의 동시 접속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 토론을 지켜본 이들의 수는 시청률 추이를 웃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은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추가로 진행된다. 안진용 기자

한국일보

2022년 02월 22일 화요일 A27면 오피니언

경제 정책은 뒷전이고 인신공격 난무한 3차 토론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첫 법정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인신공격에 가까운 거센 설전을 벌였다. 당초 토론 주제였던 경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두 후보 모두 내거티브 카드를 총동원해 격렬한 난타전을 벌였다. 최근 유세에서 서로를 향해 “주술공화국” “허물러” 등 격한 표현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왔던 두 후보가 얼굴을 맞대고 거친 인사를 주고받은 것이다.

토론 시작부터 발언 기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두 후보는 정치보복, 대장동 개발비리, 법안카드 유용 등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꼬집어 상대방을 몰았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위기는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며 윤 후보의 정치보복이 민주당의 위기를 부른다고 공박하자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시절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도 범을 적용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반격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선 거짓말 공방도 벌어졌다. 이 후

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김만배씨의 추가 녹취록 내용을 손맛말로 준비해 추궁하자 윤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하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 말씀해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허위 사실 공표하면서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다”고 따졌다. 이 후보는 주로 윤 후보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운 반면 윤 후보는 여러 차례 이 후보가 말과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깐내렸다. ‘거짓말 대 말바꾸기’라는 프레임 싸움이 거행된 것이다. 앞선 토론에선 배우자 의혹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가급적 자제했으나 이날은 김혜경씨의 법안카드 유용 의혹과 김건희씨의 추가 조작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선거운위가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여 우려스럽다. 특히 후보들이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설전을 벌이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권자들이 더욱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답변 우물쭈물... 경제분야 또 점수 잃은尹

“경제는 평생을 걸사
로 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약한 고리.
21일 경제를 주제로 열
린 1차 법정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윤 후보
는 확실한 득점을 하지
 못했다. 주도권을 잡기보다 주로 수비를
 했고, 질문과 야구단 답변을 내놓기도 했
 다. 토론회가 끝난 뒤 윤 후보는 다른 대
 선후보들과 달리 소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를 두고 ‘태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沈 주석 양도세 공격에 “알려달라”
안에겐 “핀트 못 잡아” 면박 당해
토론 소감 없이 퇴장 태도 논란도

오”라고 말을 돌렸다.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에게도 면박을 당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데이터 경제 비전 등에 대한 안 후보
의 질문에 윤 후보는 조리있게 답하지 못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답변을 듣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가로짓는가 하면,
“핀트를 못 잡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후보는 그러나 받아치지 못했다. 국민의
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안 후보가 마치
IT시장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고 전문가
처럼 행세했지만, 윤 후보도 틀린 답을 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윤 후보
의 ‘자질 부족’을 난타했다. 박광온 민주

당 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대한민국 경
제를 이끌 준비가 안 된 불성실한 윤 후보
의 본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대변인도 “윤 후보는 무
식을 자랑하듯 가르침을 구걸했다”는 논
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토론회장을 곧
바로 떠난 것이 “일정 문제였다”고 했다
만, 민주당은 놓치지 않았다. 강훈식 민주
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국민들은
태도도 중시한다. 그냥 없이 가버린 윤 후
보를 보고 국기를 말길 수 있는지 판단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5일(정치분야)과 다음 달
2일(사회 분야) 2차례 남은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설욕을 버리고 있다. 선거대책
본부 관계자는 “윤 후보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의 시험이 끝난 만큼, 자신있는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
라고 말했다.

한마당

심상정의 1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1일 대선 후보 TV 토
론회에서 마무리 발언 1분을 지하철 시위 중
인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했다. 심 후보는 “지
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
소하지만, 책임은 시위하는 장애인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10위 선진국임에도 장애인 이
동권조차 보장 못 하는 정치권에 있다”고 했
다.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일간 계
속해온 지하철 시위를 마무리
했다. 전장연은 “심 후보
가 TV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
권 보장을 언급했다”고 했
다. ‘심상정의 1분’은 율령이
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들도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들은 버스도
타기 어렵고 지하철도 타기 어렵고 택시도
타기 어렵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기준 30%에 불과하다. 장애
인플렉시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지하철을
타려 해도 곳곳이 장애물이다. 장애인 지하
철 시위 자체가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용 리

프트 추락 사망 사고에서 시작했다. 전장연
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
설 운영비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언
제나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 몇조원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난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은 727억원과 3431억
원이었다. 매년 2000억원 정
도를 추가로 투입하면 장애
인 이동권 보장이 빠르게 이
뤄질 수 있다고 한다. 수십조
원짜리 대선 공약도 많은데,
2000억원이 없을 리 없다. 돈
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
는 거다.

마무리 발언 1분 동안 절절한 후보들의 호
소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
민의힘 후보는 “정직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
의힘 후보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 선진국
을 만들자”고 했다. 마지막 1분은 심 후보의
슬리디였다. 남도영 논설위원

경향신문

2022년 02월 26일 토요일 004면 중항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김진표 국민의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 삼성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초청 2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특별위원회가 주관한 TV토론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진표)

“윤석열 6개월 초보 정치인” “이재명 안보 준비 전혀 안 돼”

이·윤, 대북·외교정책 난타전
안철수 “자주·실용 기반 책임의교”
심상정 “현안에 의거한 평화 안 돼”

유류 4개 상승 대신 유류는 25일 4대 TV토론회에서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놓고 입찰을 벌였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합의국에 의거한 평화”를 강조했다.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현안”이 아닌 이상에 의거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윤 후보는 “자주, 실용, 평화”를 기반으로 한 책임의교”를 내세웠다.

북핵 대응 방식에 대해 윤 후보는 “북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22년 02월 26일 토요일 004면 중항

안철수 “정치보복 안 한다고 대국민 선언하자” 제안에… 다른 후보들 동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후보는 25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정치보복 안 한다고 대국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미포구 삼성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정치보복 안 한다고 대국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미포구 삼성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정치보복 안 한다고 대국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미포구 삼성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정치보복 안 한다고 대국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미포구 삼성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 후보와 같은 주장에 “정치보복 안 한다고 대국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미포구 삼성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 후보와 같은 주장에 “정치보복 안 한다고 대국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미포구 삼성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세계일보

2022년 02월 26일 토요일 001면 중항

李 “전쟁으로 이기는 건 하책” 尹 “확실한 억지력 있어야 평화”

대선 후보 TV 토론회서 안보관 충돌

李 “尹 선제타격론 너무 거칠고 난폭”
尹 “사드·MD연합·강력한 동맹 필요”
安 “북핵 대응 위해美와 핵공유 해야”
沈 “역대 어느 정부도美MD 참여 안해”

회청장 정창서·조희연 기자 calling@segye.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후보가 25일 상반된 안보관을 표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두번째 TV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사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나. 우크라이나(사태) 신간하지 않나”라면서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주장을 언급하면서 “너무 거칠고 난폭하다. 최근 우리가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을 개발해서 굳이 사드는 필요없고 선제타격론은 곧 전쟁 개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6개월만 초보대

통령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3면) 이 후보는 “평화는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유지되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고지를 보일 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북핵 위협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하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연인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전선언’을 거론하며 “중이와 일크로 된 협약서 하나 갖고는 국가 안보와 평화 지켜질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는데 중전선언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확실한 협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럴 각주치 못했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미국 MD 편입 주장과 관련, “(동북아) 전략적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선한 의도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보복 안 한다고 대국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0세

尹 “李, 유약한 태도 평화 위협” 李 “尹, 큰소리 뽐뽐 ‘안방 장비’”

(윤석열)

(이재명)

대선후보 4명, 선관위 주관 2차토론

李 “尹, 빙하 타고 온 돌리” 공격에
尹 “정신적인 질분하러” 맞받아치

연동형 비례제-대선 결선 투표

李 “제3선택 가능계”尹 “선거전략”

尹 “與 의성정당으로 정의당 배신”

李 “국민의힘 먼저해 따라라”

이제 대선 후보들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 주관으로 열린 2차 법정 TV토론(정치 분야)
에서 유력이나 사법계 보는 시기 등 외교안보
관을 놓고 격렬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는 서로에 대해 “큰소리” 치는 ‘안방 장비’,
“두 뿔수까지”서 유력한 태도” 등 공격적인
선전을 하고 나섰다.

● **李 “큰소리 뽐뽐 안방 장비”尹 “유약한 태도
평화 위협”**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 사태를 보며 서로로 맞붙었다. 이 후보가
먼저 “윤 후보는 거침없고 냉혹해서 생리대만
썼고 화장기, 화장기 아니냐. 유력이나
사법계 보고 자책하고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
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안방
이 부패한 것 같다”면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
할 만한 정권을 이끌 수 있는 것인지, 유력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가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응대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전쟁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큰소리 뽐뽐
치고 다니고, 그럴 ‘안방 장비’라고 한다”고 지적
했다. 윤 후보는 “극초음속미사일이 나오는
데 지면 발발을 하다가 지고 군용수급자와 대동
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많이 걱정
이 된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우리가
나 친분이 있는데도 이 후보가 유력하고는 만
일이라는 말을 한다”면서 “대통령직에 도
정하는 사람으로서 안방에 대한 준비가 정회 안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보았다. 이 후보는 즉각
“윤 후보는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는 것 같다”
면서 “내 나라 일인데 우대-내외의 주기가 떨어
질 만큼 상황이 없는 얘기냐”라고 말했다.
또 “6개월 후보 중보인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라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시간마다 강경 발언 선전을 주고
받았다. 이 후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미 해체해 NSC 회의 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불과다”라며 “사중에 윤 후보는 ‘빙의 타크’
를 들리겠다”는 말이 있다”고 윤 후보를 자극했다.
윤 후보도 “정신적인 불안을 하사다, 히드도 큰
개방사”라며 “말하지 않았다.”

● **李 “연동형 비례제”尹 “선거전략”**

이날 양측은 시간마다 강경 발언 선전을 주고
받았다. 이 후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미 해체해 NSC 회의 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불과다”라며 “사중에 윤 후보는 ‘빙의 타크’
를 들리겠다”는 말이 있다”고 윤 후보를 자극했다.
윤 후보도 “정신적인 불안을 하사다, 히드도 큰
개방사”라며 “말하지 않았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진제공:이데일리

이 후보는 “인, 인 후보 의선에 정적으로 공격
한다”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의 선제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또 “중앙
부, 국민회의 꼭 필요하다”라고 했다. 윤 후
보는 이에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개혁 방안
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호기부지다가 일
부”라며 “대통령, 총리, 장관이 할 일을 딱히 구
분 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윤 후보는 “국민의힘 정치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윤 후보는
“경치소에 가까운 제안”이라며 “중립적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무시하며 ‘안방’으로 치
려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
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소속도 하느냐”
고 물었다. 윤 후보는 “연
동형 비례제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연
동’이 패스드득(신속처리)인 지점으로 밀
어붙어 통과시켰다”며 말했다.

두 후보 간 설정은 21과 총선을 앞두고 벌어
진 경선결과를 살피는 한편으로 이어졌다. 윤 후보
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제를 도입하자
나 후보정당을 만들어 정의당 위등수 치고 배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동형) 국민
의힘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
과를 잊고 있는”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연
동형 비례제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연
동’이 패스드득(신속처리)인 지점으로 밀
어붙어 통과시켰다”며 말했다.

장관식, sbs@korea.com 이데일리 기자

한국일보

이완용·안중근까지 등장한 李·尹 대장동 충돌

주도권 토론

李 “임만 열면 거짓말”尹 비판에
尹 “이완용이 안중근 맞는다”는 격

安, 정치보복 금지 대국민선언 제안
沈 “박근혜 어면가”...尹 즉답 회피

“윤석열 후보는 임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윤석열 국민
의힘 대선후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와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나 ‘윤석
열 게이트’가 1차 충돌 포인트였다.

윤 후보는 “제가 21일 1차 TV토론 때
(정영하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했더니 이 후보가
‘사실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결국 사실
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정
영하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
현이 나온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그 녹취록이 맞다면 (녹취

록엔 윤 후보야말로) ‘죄를 많이 지어서
구속돼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다”
고 받아쳤다. 대장동 의혹은 오히려 윤
석열 게이트라고 반격할 것이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
는 것이 명백하다”고 물리지 않았고,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한
다”라는 표현을 7차례 하면서 적극 반
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 보복을 하
면 안 된다”며 함께 내국민 약속을 하사
고 제안했다.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
패 청산 수사 발언으로 정권 보복이 대
선의이슈로 떠오른 터다.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
답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정
치 보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
라고 공감했다. 윤 후보는 “이미 ‘보복’
은 없다”고 말했다”면서 “공정한 사스
템에 의해 (수사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
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존속 여부에
대해선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다. 이 후보
는 “공수처의 역할이 부족하다”면서 “
검찰을 수사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앞
으로 역할을 키워서 제 기능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한번 고칠 만큼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
에 없다”며 “조건부 유지론”을 내놨다. 안
후보는 공수처 폐지론을 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박
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중범죄자인가,
부당한 정치탄압을 받은 사람인가”라
는 질문에 윤 후보는 명확한 답변을 피
했다. 윤 후보는 “검사로서 제가 맡은 일
(박 전 대통령 수사)을 한 것이고, 검사
는 중소장으로 말한다”며 “정치적 평가
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느냐”는 심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고 짧게 답했다.

윤 후보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연
두에 둔 듯 안 후보에게 거듭 호의적 태
도를 취했지만, 안 후보는 미지근한 반
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경기도 법안가
드로 이 후보 배우자가 소고기, 초밥, 백
숙 등을 엄청나게 사 먹은 것은 명백한
세금횡령”이라며 안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에 맞서는 공동 전선을 펼치
려는 시도였지만 안 후보는 “그건 자
에게 어찌될 일이나 아니겠냐”고 답했다.
이상택속영하 기자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백서

李 “일본군 망언 철퇴를” 尹 “우크라 발언에 공분”

지난 25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나왔던 안보 관련 발언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말 내내 치열한 비난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특별성명을 통해 “윤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유사시에 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다”며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윤 후보의 국가관과 대일본 인식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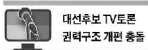
포 유세에선 “저는 유관순 선생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은 못할 것 같다”고 했고, 파주 유세에선 “이승만도 그 어려운 6·25 동안 당시 일본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패색이 짙어진 이 후보의 조작 선동이자 주악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 이 돼서 나도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

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총들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불행한 일을 겪은 다른 나라를 위로하기는커녕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 모습이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지존십에 상처를 받은 우크라이나 국민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불안한 외교·안보관을 지적한 것”이라며 “제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며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윤혁·이하영 기자

李 “제3의 선택 할수있게 선거개혁” 尹 “대선 열흘 앞두고 정치쇼”



대선후보 TV토론 권력구조 게임 중흥

문재인과 이재명 대선후보 후보는 25일 TV토론에서 국민의힘과 다른 세 정파가 운영하는 ‘2차 대선 토론회’가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를 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நட감 열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쇼에 가까운 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혁에서 제3의 선택이

이기에 이 후보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혁에서 제3의 선택이



25일 대선후보에 출마한 후보들이 2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528호 스테이지에서 열린 윤석열(가운데)의 대선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이재명, 김민석, 이낙연 순으로 발언했다.

沈 “정의당이 지난 국회서 선거제 바꿨지만 뭐가 뒤집어”

尹 “정치보복 중단 선언을” 李 “전체 공망” 卞 “너무 당연”

가운데에 해당한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 각 정파 세력이 신뢰를 얻어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협의 정부와 국민 내각이 필요해”고 했다. 그는 “국민 역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혁이 시시 지중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내일이 나 모레는 의원총회를 통해 당장을 정리하고 등언으로 일괄 새안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정치 쇼’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선거 열흘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공적으로 선전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 전적으로 윤석열의 지지를 유도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년 민주당 승선길 대표가 국’이원 3선 초과 유지 공적 등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선거구제 개혁은 제안되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선거구제 개혁이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제기된 것인데, 윤 후보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며 ‘보통하던 국민이 가만히 놔두셨다. 공정파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왔다’고 했다.

원래부터 선거구제 개혁 관련 공약 중의 핵심이었고, 윤 후보는 이번 대선에 대해 “정치 보복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며 “보통하던 국민이 가만히 놔두셨다. 공정파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왔다”고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윤 후보의 ‘전(前) 정치 최대 정당’ 발언에서 비롯된 정치 보복 논란에 대해 “정치 보복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며 “보통하던 국민이 가만히 놔두셨다. 공정파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왔다”고 했다.



이재명 “우크라 초보 대통령, 러 자극해 충돌”

TV토론 발언 논란

尹 “우크라에 상처, 국제망신”

(윤석열)

李, 사과하면서도 “안보불안尹 지적한것”
“정치개혁... 다당제 책임지고 꼭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TV토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을 두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오해”라며 26일 사과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고개를 숙인 것.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는 가운데 27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지지층을 향해 ‘정치개혁 연대’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 “우크라이나 아닌尹 지적”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TV토론 전문을 보셨다면 제가 해당 발언 직후에 러시아의 침공을 분명하게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불안한 외교·안보관을 지적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며 “러시아의 침략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가 서둘러 전화에 나선 건 해당 발언 영상이 토론 회 직후 해외 유명 커뮤니티 ‘레딧’ 등에 게시되고 비판 댓글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27일 경북 포항시 유세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이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 식민지가 됐다”며 “(이 후보 발언이) 인터넷에서 아주 개망신”이라고 했다. 전날 페이스북에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우크라이나 국민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대신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27일 “이 후보의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사과가 아닌 윤석열 후보 비판이 목적이었다”며 “전형적 물귀신 작전으로 ‘대장동 게이트’ 책임을 윤 후보에게 전가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 부울경 찾아 내부 결집

이 후보는 경남 창원시 상남동 유세에서 “무슨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서로 누구를 누르고, 포기시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시도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남 양산 유세에서는 “더 나쁜 정권교체를 하면 뭐하나. 정권을 바꾼다고 더 나쁘게 바꾸면 정치 보복하고 남 뒤를 후벼파고 과거로 간다”며 “정권 담당자가 바뀌는 게 국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겨냥해 ‘정치개혁’을 대안으로 강조한 것.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언급하며 “더 나은 정치 발전을 만들 통합정부 국민내각 그리고 다당제를 꼭 하겠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당내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지역적 기반인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내부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양산에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훌륭하게 대통령 직무 완수하고 되돌아올 곳”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경기 지역 유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외손자와 함께 유세 차량에 오르기도 했다.

창원·부산·울산=강성휘 vol@donga.com / 윤다빈 기자

安 “공수처 폐지” 李 “역량 키워야”

공수처 개혁 해법 엿갈려

尹 “고쳐보고, 안되면 폐지”

25일 열린 선관위 주재 제2차 대선 후보 법정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혁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라도 역량을 키워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칠 만큼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폐지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 사찰’을 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수사 능력은 실망스럽고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공수처가 우리 국민들의 꿈과 기대를 갖고 만들어졌

는데 지금은 매우 부족하다”면서도 “검찰을 수사할 조직이 없어 역량을 키워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일이지 윤 후보 말처럼 메스를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역량을 보강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 말처럼 실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 보니 통신 사찰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다”며 “고칠 만큼 고쳐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윤 후보는 “공수처가 정치 권력과 너무 유착했기 때문에 탈선한 것이고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이라며 “공수처·검찰·경찰이 서로 수사 과정에서 불법·권력 남용에 대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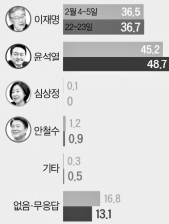
김은중 기자

대선 표심 어떻게 변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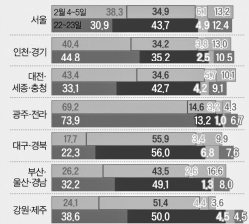
단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 심상정 정의당 후보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월 22-23일 1009명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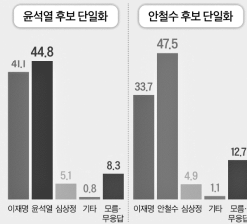
당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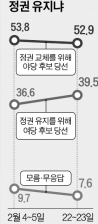
지역별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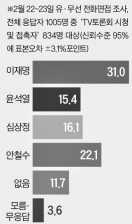
단일화 가상대결



정권 교체나 정권 유지나



TV토론 잘한 후보



중도층 표심은 이재명 35% vs 윤석열 39% ... 인천·경기는 이 앞서

TV토론은 지지율이 큰 영향 못줘 "선택한 후보 바꿀 생각 없다" 9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중도층·수도권의 표심을 두고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자신의 이번 선택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층 가운데 35.3%가 이 후보를, 39.1%가 윤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4-5일 실시한 'D-30'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 38.4%, 윤 후보 33.4%였다. 윤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이 57%포인트 상승한 건 이번이 2년여 만에 내 접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13.1%로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도층은 31.6%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윤 후보에게 중도층이 소구할 차별화 포인트가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 투표일 3일 내에 지지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가 전체의 14.8%였다. 수도권에서도 혼전 양상이 나타났다. 서울 지지율은 윤 후보가 43.7%로 이 후보(30.9%)를 12.8%포인트 앞섰다. 인천·경기는 이 후보 지지율이 44.8%, 윤 후보 지지율이 35.2%였다.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았던 대전·세

종·충청에선 윤 후보가 42.7%, 이 후보가 33.1%의 지지를 받았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적극적 투표층의 지지율은 이 후보 41.0%, 윤 후보 42.6%로 큰 차이가 없었다. "TV토론 시점 후 지지 후보 변경 의향"에 대해서는 91.6%가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바꿀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은 6.9%, 모름·무응답은 1.5%였다. "바꿀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이 96.3%로 가장 높았고, 이 후보 지지층 92.4%, 안 후보 지지층 81.8%, 심 후보 지지층 68.4%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60세 이상(94.3%), 지역별로는 부산·울산·

경남(92.9%)이 가장 높았다. "TV토론을 잘한 후보"로는 이 후보(31.0%)를 꼽은 이가 많았다. 이어 안 후보 22.1%, 심상정 정의당 후보 16.1%, 윤 후보 15.4% 순이었다. 잘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11.7%였다. 지지층별로 때때로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1위로 꼽았다. 이 후보 지지층은 이 후보(66.2%)를, 윤 후보 지지층은 윤 후보(36.6%)를, 안 후보 지지층은 안 후보(59.2%)를, 심 후보 지지층은 심 후보(56.6%)를 각각 가장 잘한 후보로 꼽았다. 특히 지지를 양강인 이·윤 후보 지지층은 서로 눈에 띄게 바뀐 평가를 내렸다. 이 후보 지지층에서 '토론을 잘한 후

보'로 윤 후보를 꼽은 비율은 0.6%에 불과했고, 윤 후보 지지층에서도 이 후보를 택한 이는 3.0%에 그쳤다. 김형준 교수는 "TV토론은 지지 후보를 바꾸게 하는 '전환 효과'보다 기존 인식을 더 고착화하는 '강화 효과'에 특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지금까지 박빙인 선거에서 1-2%의 지지율도 중요한 만큼 토론의 영향력을 간과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선까지 네 후보가 맞붙을 TV토론은 25일과 3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두 차례의 법정 토론이 남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한겨레

2022년 03월 03일 목요일 003면 종합



20대 대선 최후의 토론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초청 3차 토론 회에 앞서 각 당 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동취재사진

The JoongAng

2022년 03월 03일 목요일 005면 종합

이 “특검에 동의하나” 압박에 윤 “이거 보세요”

(대장동)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 설전

2일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뜨겁게 충돌한 건 막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때였다.

이 후보의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를 지적하며 포문을 연 윤 후보는 이어 대장동 의혹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으로 물이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특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는 제안에 동의하나”라고 역공을 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네 차례나 연속해서 “동의하십니까”라고 압박하자 윤 후보가 “이거 보세요!”라고 하면

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둘의 격한 대결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느냐”며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저희가 지난해 9월부터 특검하자고 했는데 다수당이 채택하지 않고 왔다가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하자고 한다”며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상대의 질문 내

용과 관계없이 발언 시간 상당 부분을 본인의 정책·입장 소개에 할애하는 전략을 썼다.

특히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선 시작부터 “저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 많은 분이 상처 입고 그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면서 “오늘 여성정책에 관한 질의, 토론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거친 설전 윤석열 국민의원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토론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가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인지”라고 말하자, 윤 후보는 “거짓말의 달인이다 보니 못하는 말씀이 없다”고 받아쳤다. MBC 캡처

후보 간 차별성 보였으나 깊이는 아쉬웠던 3차 TV토론

대선 후보 4인의 마지막 법정 TV토론회가 2일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원,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3차 토론에서 복지·저출생·젠더·노동 등 사회 분야 현안을 두고 120분간 논쟁을 벌였다. 토론 초반 이·윤 후보 간에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네거티브성 공방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후보 간 차별성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다만 시간과 형식의 제약으로 심도있는 논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됐다. 심 후보는 “각당 후보들이 정책 공약 집을 내면서 재정 계획을 안 냈다”며 “증세 없는 공약은 허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양강’인 이·윤 후보는 증세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여 대비했다. 인구절벽 대응 방안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페미니즘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피졌다. 윤 후보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라는 답변으로 피해나갔다. 노동 이슈를 적극적으로 꺼낸 것은 심 후보였다. 심 후보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거론하며 위협의 외주화가 이슈화됐음에도 비정규직의 직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 이슈를 각 후보에게 물어 주목받았다.

이날 토론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젠더 이슈였다. 이·심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n번방 방지법 반대’ 등의 입장을 밝힌 윤 후보를 협공했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구조적 성 차별은 없다”는 발언의 진의를 다시 캐묻자, 윤 후보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모호한 답으로 피해갔다. 윤 후보의 ‘성인지 예산 30조로 복핵 위협을 막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 별도 예산이 아닌, 예산운용의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여전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3차 토론은 대선 후보 4인이 서로 공약에 대해 직접 따지고 자신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였다. 토론을 보고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고자 했던 유권자들에게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길증과 아쉬움이 컸을 법하다. 여야 후보들은 그동안 자신이 내놓았던 공약이 토론을 통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부적절하거나 비현실적 공약이 있다면 바로잡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선이 이제 몇새 남았다. 후보들은 남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소상하게 설득하며 정당당당한 승부를 펼칠 길 바란다.



이, 심·안 질의 맨 경청 모드... 윤 후보와는 고성 오가기도

제3지대에 통합정부 제안 후 후보들 간 미묘한 구도 형성 심이 윤 비판할 때는 미소도

여야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2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감정 섞인 실정을 보였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마지막까지도 타협의혹을 두고 거친 말은 주고받았다. “예의가 아니다” “이거 보세요” 등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후보가 추진하던 이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고, 이 후보가 제3지대 후보들에게 통합정부를 제안한 상황에서 후보들 간 미묘한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KBS에서 열린 다섯번째 TV 토론이 끝나갈 무렵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거

론하며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나라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건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 아니냐”고 직공했다. 이 후보는 “벌써 몇 번째 우려먹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이러면 예의가 아니다”라며 대선 후 특검 수사 억제안으로 맞받았다. 윤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후보는 “동의하십니까”라고 세 번 말하며 응수했다.

이 후보는 통합정부를 제안한 윤 후보나 심 후보에게는 우회적 태도를 취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나 심 후보가 질의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하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가 “지방 발전의 핵심은 민간기업 유치”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윤 후보를 비판할 때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심 후보가 안정정 전 총남 지사 성폭력 2차 가해 문제를 언급하자 “전화나 문자 하나 달라고 말했다. 아권 단일화 무산 이후 처음 공식 석상에서 만난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낯을 세운 지난 3차 TV 토론과 달리 서로 정중한 태도로 대했다.

심 후보는 “증세론”으로 거대 양당 후보를 추궁했다. 심 후보는 증세 계획을 끈질기게 물어 이 후보를 받아냈다. 윤 후보에게는 복지 공약에 재원 추계가 없다면서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아무 말이나 하는데 어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몰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야구장에서 서로 키가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그림이 그려진 스탠뎀을 들었다. 그는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러 하는데, 산술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주면 결과적으로 키 작은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면서 “반대어이쪽을 보면 키 높이에 맞게 돼 있다. 이것이 행정이자 공평함”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패션을 선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받은 넥타이를 매고 왔다. 남색 바탕에 빨강, 노랑, 피랑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둘 다 빨간 넥타이를 매고 왔다. 빨간색은 국민의힘 상징색이다. 심 후보는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 블라우스를 입었다. 김윤아영 기자

rayoung@kyunghyang.com

끝까지 난타전... 李 “진짜 몸통” 尹 “거짓말 달인”

(이재명)

(윤석열)

마지막 토론서도 ‘대장동 총물’

尹 “대장동 설계하고 수사 덮어”
李 “몇 번째 우려먹는지 모르겠다”

李 “당선후 특검하자” 4차례 질문
尹 “대선이 국민학교 반장선거나”
기본소득-젠더이슈 놓고도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시회 본야를 주제로 열린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검찰 수사를 덮었다”며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얘기하고 느름 가치를 얘기하는 건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니냐”고 비판했다. 즉각 이 후보는 “벌써 몇 번째 우려먹는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내 대통령 당선에도 책임지자”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선 후 특검 수사에 대해 윤 후보에게 “동의하십니까”라고 연이어 네 차례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내선이 국민학교 반장 선거나, 정확히 수사하지 않고 덮지 않았느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



2일 열린 3·9대선의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오른쪽) 사친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기본소득 공약, 페미니즘 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해도 책임지자”고 했고 윤 후보는 “정확히 수사하지 않고 덮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최영수 호민 기자



두 사람은 페미니즘 등 젠더 이슈를 두고도 부딪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성인지 예산 삭감 공약과 관련해 “(성인지 예산)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별들을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예산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이나 행정에 대해 모르고 마구 말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과거 이 후보가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 “여성 인권을 짓밟으면서 페미니즘을 운운하는 분이 지도자가 된다면 이이

가 진짜 몸통인지”라고 하자, 윤 후보는 “거짓말 달인이라 못하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를 이를 앞둔 이날까지도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두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에서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였다. 모두 발언에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페미니즘 등 젠더 이슈를 두고도 부딪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성인지 예산 삭감 공약과 관련해 “(성인지 예산)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별들을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예산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이나 행정에 대해 모르고 마구 말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과거 이 후보가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 “여성 인권을 짓밟으면서 페미니즘을 운운하는 분이 지도자가 된다면 이이

냥고 싶은 나라가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대장동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부정부패, 주기조작 이런 거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윤 후보가 특검에 동의하지 않는 것 보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수당이 (특검을)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유언무치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라고 맞받았다.

김지현 hbs@donga.com · 조아리 기자
▶A4면에 관련기사

尹 “몰래 정치보복, 대상 누구냐” 추 “내가 보복한다는 게 아니다”

■ 대장동·도덕성 등 공방

尹, 모녀살인 변호·친형 입원 명령 “女 인권 깰법으로 페미니즘 운운” 추 “페미니즘 무관, 피해자엔 사죄” 대장동 의혹 놓고도 격하게 충돌尹 “檢 수사 말야” 추 “우려먹기” 서로 “거짓말” 고상·노력보고도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0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양강인이 재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앞서 토론에서 서로 거칠게 공방을 주고받았던 대장동 의혹 사건을 놓고 한층 더 격하게 충돌했다. 이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윤 후보와 관련된 도덕성 문제를 질문하지 않았지만 윤 후보는 자신의 손에서 적심한 뜻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이슈와 더불어 모녀살인 심판과 변호,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이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면서 고상치 않고 서로를 노려보는 현안쟁점이 판문점 열렸다.

정치개혁과 재경조달 안, 재출산 문제 등을 놓고 ‘저강도 신장관’을 이어 갔었던 두 후보의 도덕성 공방은 이 후보의 모녀살인 심판과 변호 논란부터 시작됐다. 윤 후보는 마지막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조카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사탄악귀 반 헬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믿어서 데이브레이크, 심심마이이라고 하고, 말이 보이는 앞에서 엄마를 회갈로 난지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심마이, 심심상이라고 변호하셨는데 이렇게 여성인권을 무장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신다. 만약에 이런 분이 아니라지도 자가 되신다면 과연 결혼이들이 이의를 넣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아예 4명 대선후보들이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토론을 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윤석열 국민의힘·김영춘 새누리당·김영국 새민기자

이 후보를 겨냥해 “조카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사탄악귀 반 헬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믿어서 데이브레이크, 심심마이이라고 하고, 말이 보이는 앞에서 엄마를 회갈로 난지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심마이, 심심상이라고 변호하셨는데 이렇게 여성인권을 무장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신다. 만약에 이런 분이 아니라지도 자가 되신다면 과연 결혼이들이 이의를 넣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상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승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수사를 덮었다. 하지만 많은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제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것이라는데 민주당 사임 특혜 의혹 사건의 ‘귀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이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 ‘100여원만 있으면 대장동 이드 워드 관심 없다’는 취지도 말했다. 이는 ‘정열적 녹취록’ 등을 언급하며 “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후보가 이어 키우고 싶은 나라 이야기하고, 노동자지를 이야기하고, 나라 미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총우

아에 윤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상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승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수사를 덮었다. 하지만 많은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제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것이라는데 민주당 사임 특혜 의혹 사건의 ‘귀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이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 ‘100여원만 있으면 대장동 이드 워드 관심 없다’는 취지도 말했다. 이는 ‘정열적 녹취록’ 등을 언급하며 “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후보가 이어 키우고 싶은 나라 이야기하고, 노동자지를 이야기하고, 나라 미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총우

아에 윤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상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승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수사를 덮었다. 하지만 많은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제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것이라는데 민주당 사임 특혜 의혹 사건의 ‘귀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이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 ‘100여원만 있으면 대장동 이드 워드 관심 없다’는 취지도 말했다. 이는 ‘정열적 녹취록’ 등을 언급하며 “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후보가 이어 키우고 싶은 나라 이야기하고, 노동자지를 이야기하고, 나라 미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총우

로서 수사에 의미하고, 대통령 선거가 국민 앞에 반장 선거인가, 정화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덮지 않았습니까”라고 했고 이 후보는 “그래서 특권 하시고요.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에 따라, 담당하면 동의에 따라”고 또다시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족는다고 했었다는 녹취록 발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인용을 안 하느냐, 김사장을 그렇게 해 왔느냐”고 역공을 퍼기도 했다.

이후 두 후보는 “국민 여론 한번 보시고, 누가 진짜 꼼꼼한지”(이 후보), “거짓말이 워낙 달안이다 보니”(윤 후보)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두 후보는 정치보복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의 대장동 쟁점에 이어 “지난 2월 27일 이 후보께서 출산해서 정치보복은 숨겨 줬다가 나중에 밝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보복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자 이 후보는 “제가 드는 말은 대장동 고 정치보복이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할 마음이 있으면 숨겨 놓고 하는 것 이라는 거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법 문제인 정부 차제에 최소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이 후보는 “아무튼 대장동 말할 수 있느냐는 뜻”이라고 했다.

추 “기본소득, 최소 소득 보장”尹 “현금 복지 성장 위축”

■ 복지정책·인구절벽 해법

沈,尹 향해 “증세 없는 복지 허구”安 “좋은 일자리로 저출생 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현금성 사회복지 정책인 ‘기본소득’ 등을 두고는 정을 벌였다. 후보들 간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도 치열했다.

이 후보는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안정망 구축을 제시하며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탈세를 확실하게 잡는 것,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 성장을 위축하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들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이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증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복지 공약) 보니 5년간(소요 재원) 266조원인데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도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원이 남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시양도세를 5년간 60조원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지출 구조조정과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들을 합치면 재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원”이라고 하자, 심 후보는 말을 끊으며 “거짓말”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근거 없이 말하지 마라. 자료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서도 “국정공약 300조원에서 350조원, 지방공약은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증세 얘기를 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따가)에 발언할 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지어낸다”고 쓰아붙였다.

인구절벽 문제 해법은 각기 달랐다. 이 후보는 “육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지만, 윤 후보는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 개선”을 꼽았다. 안 후보는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심 후보는 “주거·고용·육아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희영·김기현 기자

막판까지 막말 난무, 국민 분열 부추긴 대선후보 TV토론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이번 토론은 4~5일 진행된 사전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TV토론으로,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못 정한 무동충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토론 또한 지난 4차례 토론 때처럼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했다. 현 정권 들어 쪼개질 대로 쪼개진 우리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고민이나 해법도 없었다.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도 막말과 비방으로 상대를 헐뜯고 국민 분열을 부추긴 후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토론회에서선 이재명 후보의 살인범 조카 변호와 대장동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 여자친구와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심심마약으로 변호하면서 여성 인권을 짓밟았다"며 "이런 사람이 나라 지도자가 되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겠느냐"고 독살을 퍼부었다. 윤 후보는 또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양육과 노동까지, 나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변호사 직업 자체가 범죄를 변호하는 일이라 페미니즘과는 상관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대장동을 벌써 몇 번째 우려먹느냐"며 "대선이 끝나도 특검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라"고 역공을 폈다. "주가조작 후보는 안 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골뎠건 자체였다.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후보들이 토론 막판까지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 불신을 키우는 구태를 일삼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더구나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마저 금지돼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어야는 이제라도 사생활단식 비방 정전을 멈추고 누가 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국민통합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책임자인지를 놓고 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만 일주일이지만.

20대 대선 후보들의 티브이(TV) 토론이 2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사회 분야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4명의 후보들이 참여하는 2시간짜리 토론이 후보간 변별성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 시선도 있었지만, 방송사 주관 토론을 포함해 모두 5차례 이어진 토론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준비 정도, 기본 소양과 자질을 비교 검증하는 데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생중계를 통해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의 자세와 태도를 직접 확인한 것도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막 내린 TV 토론,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옥석 가려야

20대 대선 후보들의 티브이(TV) 토론이 2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사회 분야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4명의 후보들이 참여하는 2시간짜리 토론이 후보간 변별성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 시선도 있었지만, 방송사 주관 토론을 포함해 모두 5차례 이어진 토론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준비 정도, 기본 소양과 자질을 비교 검증하는 데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생중계를 통해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의 자세와 태도를 직접 확인한 것도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회 분야 토론에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현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에 인식 차가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 복지 정책의 경우 청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비롯해 일자리, 고령화와 저출생, 성평등, 의료 보장, 지방 소멸 등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정책이나 방법론을 두고는 적잖은 의견 차를 보였고,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티브이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이 한자릿수에 그칠 만큼, 주요 선거에서 티브이 토론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유권자의 확증 편향 강화도 작용했을 것이다. 후보자 간 기회의 공정과 형평성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심층적인 토론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오히려 큰 대우행 국면에서 대규모 장외 유세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티브이 토론에 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선거일까지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최악의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선거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도록 각 후보와 정당들은 남은 기간 비전과 정책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티브이 토론을 통해 확인한 후보들의 자질과 준비 정도, 그동안 제시한 정책 공약과 삶의 행적을 꼼꼼히 살피 누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사전 인터뷰 생략... 시종일관 난타전

토론회 이모저모

李, 文이 선물만 넉타이 매 눈길
沈, 양강후보 무차별 질문 공세
安, 질문보다 공약 설명에 집중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어야 주요 대선 주자 4인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시종일관 난타전을 벌였다.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으로 치러진 '공개설산'인 만큼, 토론 열기가 지난 1, 2차 때보다 더 뜨거웠다.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별도 사전 인터뷰 없이 곧바로 토론을 시작했다. '양강' 주자이자 선거 중반전까지 초박빙 구도를 형성 중인 이, 윤 후보는 고성이 섞인 날 선 발언을 수차례 주고받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후보는 토론 중 두 차례 "저도 장애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소년공 시절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산업재해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고. 심 후보는 이, 윤 후보에게 질문 세

례를 퍼부으며 진땀을 빼게 만들었다. 안 후보는 질문보다는 자신의 복자·저출산 등 관련 정책 공약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넉타이를 메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정부의 출범도 정권교체'라는 발언으로 문재인정부와 선 구기를 시도했던 그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마지막 토론회에서 또 다시 한 번 넉타이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 주황색 사선 무늬의 넉타이를 착용한 것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후보는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 후보는 "재지 지출이 지난 대선 절반인 3% 수준이다. 솔직히 지지를 3배 더 받아 10% 남기고 싶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도덕성, 둘째는 능력"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하나같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태 공약 '인구재양' 못 막아, 대선 후보들 발상 전환 시급

국내 25~54세 핵심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2047년 국내 핵심노동인구 비중이 31.3%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60년에는 26.9%까지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봤다. 2020년 기준 국내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45.3%로 유럽부르크에 이어 회원국 중 2위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 핵심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재양'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경고음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분야 TV토론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보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주고,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주고, 경력단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안정,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가 필요하다"며 3.0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식 전일 보육 국가책임제 시행을 공약했다. 기존 저출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원의 전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출산율은 외려 뒷걸음질쳤다. 기존 방식으로는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없으니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실패한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부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약들이다. 그제 TV 토론에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야 한다",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이 제시됐지만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다.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인구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9일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는 발등의 불이 될 것이다. 저출산은 취업, 교육, 주거 등이 복잡하게 얽힌 난제인 만큼 기존 처방으로는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인구 재양에 대응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22년 03월 04일 금요일 04면 종합

한 방 없이 '대장동 의혹' 충돌 李 '우크라이나' 尹 '청약' 헛발질

대선 TV토론회 결산

마지막 토론회 신경전 최고조
심상정 '1분 마무리 발언 화제'

4당 대선후보가 5회(예정 토론 3회) 맞붙은 대선 TV토론회가 '한 방' 없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토론마다 '대장동 의혹'으로 맞붙었고, 지난 2일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고성이 난무하며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후보는 첫 TV토론회(2월 3일)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나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군필자 청약 5점 가점 공약을 내놓고도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이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질문에 "40점으로 알고 있다"는 오답을 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논란도 정치권을 달궜다. 이 후보가 첫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RE100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RE100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진 EU태소노미(녹색분류체계) 관련 질문에는 윤 후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도 윤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OO를 아느냐"는 질문에 "가르쳐 달라"는 반응을 자주 했다.

기축통화국 논란도 화제를 모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토론회에서 국제 관련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 비판이 거세져서 민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전경련이 곧바로 "특별인출권(SDR) 편입 희망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언급한 윤 후보는 매 토론

TV토론 결산...후보들 말말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나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가 아니다" (2월 3일)
"RE100, EU태소노미 무르나" (2월 21일)
"나는 공의 함수 설계 국민의회 비리 설계" (2월 11일)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매우 높다" (2월 21일)
"대장동, 벌써 몇 번째 우리 학나" (3월 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상위 안의 40점으로 알고 있다" (2월 3일)
"과목기 싸움할 때도 영구리, 다리, 북부 머리 다 떨어야 해야" (2월 11일)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 나와" (2월 21일)
"장년 내내 국민권 지원금만 얘기하다 신기 되니 말하면" (2월 21일)
"제미니늄은 유머니움" (3월 2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특기 세력 결합 공방"이나, 황문 당한 '무능'이나" (2월 3일)
"배우자 의견은 이재명 후보 자격의 문제" (2월 11일)
"MIB(이명박) 안부터 경제 갖고 미래 열 수 있느냐" (2월 21일)
"윤석열, 마성 정책 코멘트 이종석밖에 없다" (3월 2일)
"지지를 10%를 넘기고 싶다" (3월 2일)

회에서 집중 공세를 받았고 "격투기 할 때도 영구리, 다리, 북부, 머리 다 방어야 한다"는 비유를 내놨다. 이 후보의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는 발언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번졌다. 결국 이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1분 마무리 발언'도 화제가 됐다. 심 후보는 1분 남짓으로 주어진 마무리 발언에 장안인 이동권 보장,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촉구에 했다.

법원의 제도와 민주당-국민의힘의 협상 결렬로 양강 후보의 양자 토론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윤 후보는 설 연휴(1월 26일) 양자 토론을 추진했으나 안-심 후보가 각각 방송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지상파 중계 토론을 불허한 뒤 양당이 유튜브 중계 토론을 추진했으나 주제의 자료 지참 여부를 두고 싸우다 결렬됐다.

손지은-강윤혁기자



한국경제

2022년 02월 24일 목요일 A08면 정치

허경영 “18세 이상 1억… 결혼 땀 3억” 김경재 “日과 핵무기 공동개발할 것”

군소정당 대선후보 TV토론
김동연·조원진 “불공정” 불참

군소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지난 22일 서울 삼삼동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이색 공약을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엔 오준호 기본소득당-허경영 국가혁명당-이백운 노동당-육은호 새누리당-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김재연 진보당-이경희 통일한국당-김민찬 한류연합당 등 총 8명의 후보자(기호순)가 참여했다.

허경영 후보는 다수의 현금성 공약을 내걸었다. 허 후보는 “빚더미에 앉은 국민들에게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

원씩, 대통령 당선 두달 안에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작 후 지금까지의 피해와 임대료, 종업원 월급 등을 100% 보상해드리겠다”고 했다. 2030세대를 향해선 “결혼하면 축하금 1억원과 무이자 주택 대출 2억원 등 총 3억원을 지원하고 출산하면 500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허 후보는 이 밖에 △18세 이상 매달 150만원 국민배당금 △65세 이상 노인 수당 70만원 추가 △자녀 1인당 100만원 육아수당(10년) 등 공약을 제시했다. 필요한 재원은 “남비되고 있는 국가 예산을 절감해 마련하겠다”며 “국방예산 50조원에 맞먹는 45조원 규모 저출산 예산, 32조원 남비 성인지 예산을 없애겠다”고 했다. 유일한 원내 정당인 기본소



군소 정당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 삼삼동 MBC스튜디오에서 열렸다. 김민찬 한류연합당(왼쪽부터), 이경희 통일한국당, 허경영 국가혁명당, 육은호 새누리당,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이백운 노동당, 김재연 진보당,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병연 기자

독당의 오준호 후보도 “매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우파 성향인 김경재 후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폐지하고, 현행 최대 27.5%인 법인세는 19%로, 45%인 개인소득세는 20%로 각각 하향하겠다”며 “기업과 가진 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일본과 핵무기 공동개발 △일본 오키스카 항에 주둔 중인 미국 함대의 제주도 이전 △유엔 아시아본부의 비무장지대(DMZ)

유지 등 파격적인 안보 공약도 내세웠다. 친노동 성향인 이백운 후보와 김재연 후보는 노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수 제안했다. 육은호 후보는 별도로 정책을 제안하지는 않고 2020년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토론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불참했다. 중앙선거위에 대선 후보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최동욱 기자

기타

국민일보

2022년 03월 04일 금요일 008면 종합

10명 중 8명 “TV 토론 이후 지지 후보 바꾸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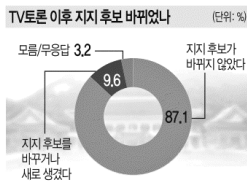
李·尹 초박빙 상황 중요 변수 못돼
‘가장 잘한 사람’ 李·‘신뢰감’은尹

이번 TV토론에서는 각종 이슈를 놓고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그러나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은 TV토론 이후 지지 후보가 바뀌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일보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KSOD)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1%는 ‘TV토론 이후 지지 후보가 바뀌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3일 조사됐다.

반면 응답자의 9.6%는 TV토론 결과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새로 생겼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다섯 번째 TV토론(3월 2일) 실시 직전 이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박빙 대권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TV토론 결과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네 차례 대선 후보 간 TV토론에서 누가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25.5%의 응답을 받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6.6%로 2위를 차지했다.

‘윤 후보가 TV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16.0%로 기록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13.6%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후보는 TV토론에서

가장 신뢰감을 줬던 후보로 꼽혔다.

진실 공방이 치열했던 TV토론에서 ‘어느 후보의 주장이나 발언이 더 신뢰가 가는가’라는 질문에서 윤 후보가 29.3%의 응답을 얻었다. 이 후보를 꼽은 비율은 24.7%였다. 안 후보는 16.5%, 심 후보는 8.3%를 각각 기록했다.

TV토론에서 ‘잘했다’와 ‘신뢰도’가 다르게 인식됐던 셈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외과 교수는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진실성이 있었으나 정치 신인이다 보니 토론의 스킬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반대로 이 후보는 말을 잘해 전달력은 있었지만 진실이 없었다고 유권자가 인식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최진대 통일리더십연구원은 “이 후보처럼 달변이면서 임기응변에 능하고, 순발력이 있는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이게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kmpaper@kmb.co.kr

'사회통합 잘할 후보' 李 32% 尹 31%... '경제'는 李 45% 尹 27%

'외교안보 잘할 후보' 李 39% 尹 35%
'TV토론 잘할 후보' 李-沈-尹-安 순

들어일보가 1, 2일 실시한 4차 대선 여론조사 결과 각종 정책을 잘 추진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 '사회 통합'과 '외교안보' 분야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였고, '경제'와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분야에선 이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통합을 잘 이룰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와 윤 후보로 답한 비율은 각각 32.1%와 31.4%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정책을 잘 추진할 후보'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 후보는 39.3%, 윤 후보는 34.5%를 얻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반면 경제 정책에선 이 후보가 44.8%를 얻어 윤 후보(27.0%)보다 17.8%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잘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도 이 후보는 34.8%를 얻어 21.8%의 윤 후보를 13.0%포인트 앞섰다. 지난달 25일까지 네 차례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과 관련해 'TV토론을 잘한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34.3%,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1%를 기록했다. 이어 윤 후보 16.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소수자·인권 의제도 실종... "거대양당 힘 대결로 끝나"

후보들, 장애인·이주노동자 문제 차별금지법 등 진지한 논의 없어
'양자토론 등 형식 바뀌어' 지적도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법정토론은 대선을 앞둔 마지막 토론회였다. 주제가 사회 분야여서 소수자·인권 의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했던 이들은 "거대 양당 후보의 힘 대결에 그친, 사회적 합의가 실종된 토론"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토론 형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전체 국민의 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린 다섯번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장애

인'이 언급된 시간은 단 몇분밖에 되지 않았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힘 대결을 위한, 강자들을 위한 토론회에 그쳤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 분야 대선 토론에서 끝내 장애인 이동을 언급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오는 24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의제를 외면하는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와 농장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다. 대선 후보들이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겠

다'는 공약을 내면 오히려 농민들 표를 잃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건지 정당 등 진보정당 외에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이번 토론은 정책이나 의제가 빠진 게 아니라 '시민'이 빠졌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권리 등 시민들의 요구가 과연 기성 정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다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을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2시간 동안 4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으로는 필요한 의제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 차라리 양자 토론 형식으로 두명의 후보가 번갈아가면서 토론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이런 TV토론 언제까지... 전문가들 "타운홀 방식 도입 시급"

"지금 방식은 토론의 질 저하 전문가·시민 등도 참여하고 3회뿐인 토론 횟수도 늘려야"

■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대선 후보 법정 TV토론이 높은 시청률과 함께 유권자들의 후보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줬지만, 네거티브로 점철됐다 부정부패 평가가 지배적이다. 20대 대선 TV토론은 대장동 '그분'으로 시작해 '몸통' 논란으로 끝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는 '타운홀 방식' 도입 등 방식 변화와 토론 횟수의 증가 등 개선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양승환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통화에서 "각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제로 하는 소위 '주도권 토론'에서 네거티브에 집중하는데 사회자가 개입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며 "(토론 방식 등에 있어) 토론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객관성을 담보하는 전문가가 패널로 나와 해당 분야에 심도

있는 질문을 후보자와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후보 4명 외에도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민과 전문가 등 청중이 토론에 참여하는 타운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방식 개선과 함께 토론 횟수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태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단 3번의) 선관위 주관 TV토론으로는 부동층의 감정을 전혀 풀어주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두 후보 간의 갑정싸움은 TV토론 내내 반복됐다. 전남

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정면 충돌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해 5차례나 윤 후보에게 "동의하십시오"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2차례에 걸쳐 "이기 보세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3차 TV토론의 시청률은 33.2%에 그쳤다. 선거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론인 터라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1차(34.3%)보다 약간 낮고, 2차(33.0%)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윤정선·서충민 기자



문화일보

2022년 03월 03일 목요일
004면 종합

“지지 후보 결정하는데 TV토론 영향” 67.0% “영향력 없다” 31.3% 응답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4~5일)를 하루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대선 후보 TV 토론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한 영향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층과 40대, 학생 및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일보 3월 여론조사 결과 대선 후보 TV 토론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67.0%로 ‘영향이 없다’ (31.3%)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해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이 후보 지지층(82.9%)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51.8%)보다 더 높았다. 세대별로는 40대(80.9%)·20대 이하(75.4%)·30대(72.4%) 순으로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55.5%)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79.0%)과 화이트칼라(73.8%)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7.0%가 대선 후보 TV 토론이 ‘영향이 있다’고 답한 데 비해 보수층에선 58.3%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9.9%)과 민주당(38.6%)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당 모두 1월 조사에 비해 2.7%포인트씩 상승했다. 초박빙 관세 속에 막판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2.3%로 긍정평가(44.3%)보다 높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대(64.6%)와 광주·전라(74.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평가는 60대 이상(63.9%)과 대구·경북(76.9%)에서 높았다. 남성의 부정평가는 56.4%로 긍정평가(40.8%)보다 크게 높았던 반면 여성은 긍정(47.7%)·부정(48.3%)이 비슷했다. 정철순 기자

5.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공직선거법」

개정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5.8.13., 2022. 1. 2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1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3. 삭제 <2004.3.12.>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 ⑦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⑧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4.30.>
- ⑨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제목개정 2000.2.16.]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07.1.3., 2008.2.29., 2009.7.31., 2010.1.25.>

- ②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 ③ 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제목개정 2000.2.16.]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 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 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 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2018. 4. 6.>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증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22. 1. 21.>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 8. 4., 2022. 1. 21.>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0.12.29.>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4.6., 2022.1.18.>



【별표 3】 - (규칙 제143조제2항 관련) <개정 2022·1·26>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3의5.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 3·법 제82조의2제4항	1,000	가. 매회 : 1,000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022. 1. 26. 중선거관규칙 제5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2조의2(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 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26.]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등”이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12. 23., 2022. 1. 26.〉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등과 관련기관·단체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2018.1.19.>

②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 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등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26.>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 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 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 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6조의2(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도토론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 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간 합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 1. 26.]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 1.25.>

②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9.11.22., 2022.1.26.>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등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등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14조(위원회의)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각급 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간사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토론기획팀, 방송토론팀, 토론문화팀을 둔다. <개정 2018.1.19.>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2018.1.19.>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홍보과장을 두지 아니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1.19.>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11.25., 2018.1.19.>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② 간사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선거과장 또는 선거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과장 또는 선거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2019. 11. 22., 2021.10.22.>

③ 간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2018.1.19.>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8.1.19.]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토론회의 진행 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2016.1.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초청 외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2019.11.22.〉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8.4.6.〉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1.1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등은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 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22.1.26.>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등과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 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2022.1.26.>

1. 삭제 <2022.1.26.>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2021. 9.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6항에 따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토론회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토론자(후보자, 해당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 또는 그 관계자와 토론회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9.23.)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 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초청대상 정당의 변경 또는 토론자의 불참 통보 등으로 참석 예정인 토론자 수가 달라지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진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④ 제3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



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참석대상 후보자·정당(이하 “후보자·정당”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등 기타 토론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개정 2021.9.23.>

② 토론회장은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공평하게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③ 토론위원회는 후보자·정당이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정당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개정 2021.9.23.>
-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토론자가 법 제68조의 선거운동용 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선전구호 등을 게재한 표시물(소속 정당의 배지를 제외한다)을 착용·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1.9.23.>

제9조(참고자료의 사용<개정 2017.1.23.>)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1.23., 2018.1.12.>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 토론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종류,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9.12.24.>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 “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개정 2021.9.23.>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③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녹화방송으로 방영하는 경우 방영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자막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12조(재방송 및 다시보기(개정 2019.12.24.))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하거나,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토론회의 재방송 및 다시보기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4.>
[전문개정 2019.12.24.]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삭제 <2021.9.23.>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인 쇄 : 2022년 6월

발 행 : 2022년 6월

발행처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

전화: 02-3299-3830

팩스: 0505-058-1173

[http: //www.debates.go.kr](http://www.debates.go.kr)

디자인·인쇄 : 케이엠커뮤니케이션(주)(031)478-5700)